

지역노동시장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

정인수*

지역노동시장 활성화가 현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실업대란 시기의 중앙에서의 획일적인 대책이 지역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며,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경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노동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게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된 정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우리 실정을 보면,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대한 총론적인 필요성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부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제시는 미진한 현실이다. 지역노동시장의 탈중앙화 선진국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 및 OECD 국가들의 지역노동시장 탈중앙화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노동시장의 탈중앙화가,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 MBO)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목적에 의한 관리란 ‘새로운 공공관리’의 한 형태로서 “행정적 문화(administrative culture)”를 “관리 문화(management culture)”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노동시장 정책이 수립 집행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적 욕구에 노동시장정책이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18군데¹⁾ 지역공공고용서비스(PES) 조직 중 10군데가 MBO를 활용하고 있다.

지역 행정에서 유연성(flexibility)을 높이려는 새로운 경향을 추구함에는 유연성 증대에 따르는 책임(accountability)소재의 불분명이라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의 탈중앙화를 위한 제도로서 지역파트너십의 역할이 중요한데, OECD 국가들의 지역파트너십을 활용한 중요한 두 가지 대표적 사례로서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를 들 수 있다.

아일랜드는 목적에 의한 관리(MBO) 유형의 대표적 사례로서, 지역 공공고용안정서비스(PES)를 거점으로 지역파트너십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insoojeong@kli.re.kr).

1)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역의 공공고용안정기구, 프랑스, 독일,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등이다.

제개발 협력을 이루어내는 나라이다. 아일랜드는 지역적 파트너십을 사용하여 중앙정부가 실업자들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기획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국가적인 협약(Framework Agreement)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고용주,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운용 조직을 결성한다. 첫번째 단계의 시도는 경험적인 토대 위에서 작동되며, 지역의 고용안정기구(PES)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네트워크와 PES간의 협력은 지역 차원에서 발전되도록 하였으며, 정책입안자들은 PES로 하여금 공동체의 이니셔티브를 작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도이다.

이탈리아 사례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기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한 지역협정과 파트너십을 이루어내고 있는 사례이다. 노동시장 활성화보다는 지역경제개발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는 점이 아일랜드 사례와의 차이점이다.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방식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라고 지적된다. 첫째, 지역위원회가 국가발전기금과 유럽발전기금을 받기 위해서 ‘지역 협약(territorial pacts)’을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 두 개의 특별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는 지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탈리아 사례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기금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이용함으로써 ‘정직한 브로커(honest brokers)’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나타난 공공 고용안정서비스를 통한 지역파트너십의 확산을 꾀하는 방식을 노동부에서 받아들여 지역노동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일랜드 및 이탈리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적 사회협약”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자금지원 및 업무위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제정도 필요하다. 둘째, 초기 단계에서는 가능한 사업 목록을 중앙에서 예시하여 지역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파트너십 사례(Best Practice) 중심으로 실시하여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선진국 사례는 현장답사와 연구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선진국 성공사례를 직접 방문하여 인쇄된 자료/Documents)를 받아 구체적인 사업내용, 선정방법과 경로, 계약내용 등에 대해 알아야만 실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아일랜드 및 이탈리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은 결국 유럽기금(EU Fund)이다. 우리나라로서도 지역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탈리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방식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기대된다. [11]

2005년 상반기 노사분규의 통계적 특징*

김 정 우**

I. 머리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이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일단락되면서 올해 노사분규도 대체로 정리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물론 아직 완성차 노조들의 파업이 진행 중에 있고, 노동부 장관 퇴진, ILO 아태지역 총회 불참 등을 둘러싸고 경색되어 있는 노정관계, 그리고 향후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고려할 때, 그러한 판단은 성급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의 중앙교섭이 이미 타결되었고, 완성차 업종의 노동조합이 장기간의 전면파업을 수행하기에는 ‘귀족노동자론’, ‘취업비리 문제’ 등 반노조적인 여론의 동향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1997년 노동법 개정 저지 투쟁’ 때와 같은 장기간의 연대파업을 조직하기에는 현장의 동력이 그때만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올 하반기에 대규모의 반전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사분규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올해 현재까지 나타난 노사분규의 통계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 이 글은 2005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의 파업과 관련하여 매일 3~5만일 가량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 책이 출판되는 시점의 수치는 8월 29일과 비교하여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파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이 글의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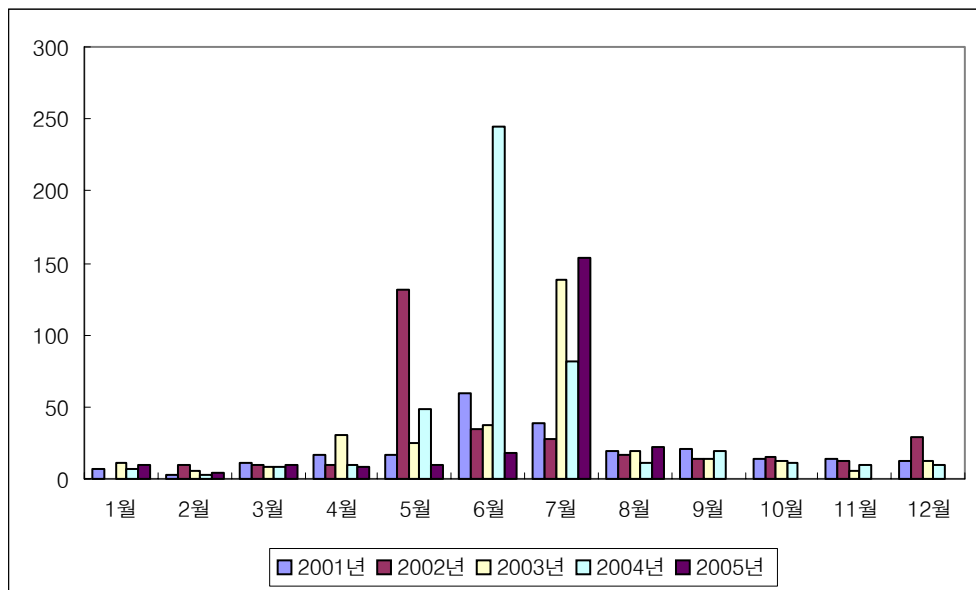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kjw@kli.re.kr).

II. 파업건수와 노동손실일수의 변동현황

[그림 1]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추이를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주로 쟁의가 발생하는 시기는 5월에서 8월 사이로, 특히 6월과 7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의 경우 전체 분규건수 중 25.6%가 6월에 발생했고, 2002년은 42.7%가 5월에, 2003년은 43.1%가 7월에 발생했다. 특히 2004년에는 전체 분규건수 중 53.0%에 해당하는 245건이 6월에 발생했는데 이는 이 시기 산별교섭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파업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05년 8월 24일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35건이고 이 중 65.5%가 7월에 발생했다. 지난 5년간의 사례를 보면, 2002년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분규발생은 매년

[그림 1] 연도별/월별 노사분규 신규 발생건수 추이(2001~2005)



주: 1) 해당월에 신규로 발생한 분규건수를 의미함. 단, 2005년 8월은 29일까지의 수치임.

2) 교섭단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분규건수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 2004년의 분규건수 증가는 해당시기 산별파업에 따른 영향(산별노조의 불연속적 파업발생시 파업에 참가한 단위노조들이 파업건수 산정에 포함되었음)을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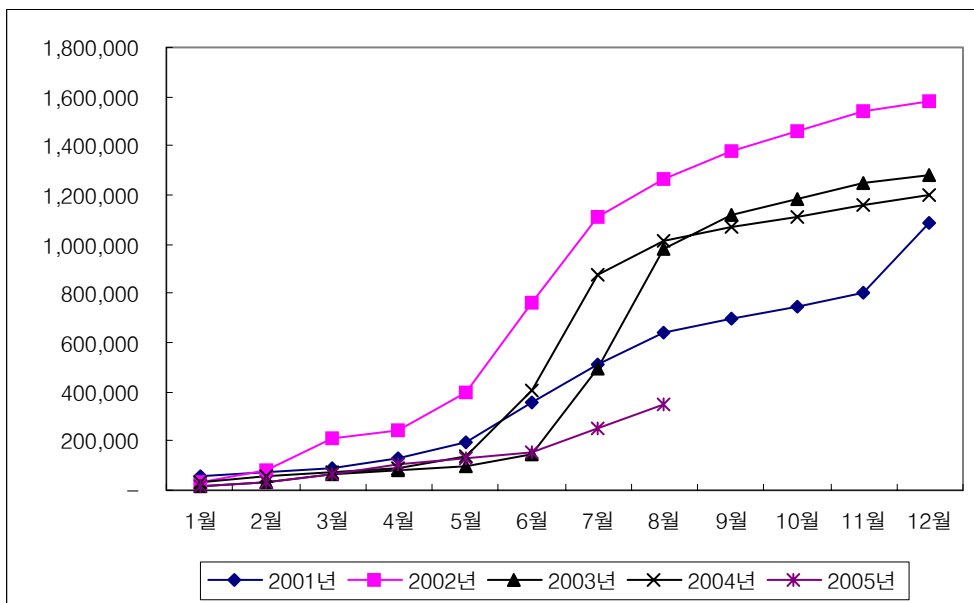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임·단협 시기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크게 줄어들었고 그 이후는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림 2]는 200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노동손실일수의 변동을 월별 누적수치로 살펴본 것이다.¹⁾ 분규발생건수와 마찬가지로 노동손실일수의 변동은 대략 5월에서 8월까지의 임·단협 기간 동안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완만한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5년 8월 29일 현재 노동손실일수는 350,248일로 작년 같은 기간의 노동손실일수 1,004,398일의 34.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기간 중 가장 분규가 많았던 2002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27% 수준에 불과하다. 즉 파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림 2] 연도별 노동손실일수 누적수치 변동추이(2001~2005)



주: 해당 월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누적치임. 단, 2005년 8월은 29일까지의 수치임.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1) 분규건수, 분규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라는 세 가지 분규통계 기준 중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동손실일수라 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의 각종 노사분규 통계수치는 이 글 맨 뒤의 <부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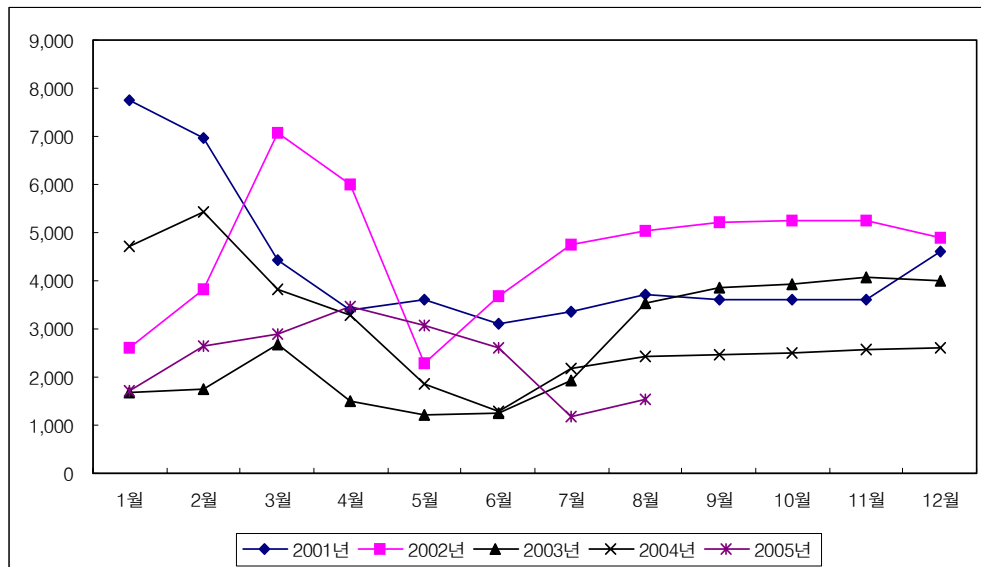
III. 파업강도와 파업성향의 변동현황

2000년대 들어 노사분규에서 나타나는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비교적 분규당 발생하는 노동손실일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월의 (누적)노동손실일수를 (누적)노사분규 발생건수로 나눈 것이다. 편의상 이 수치를 파업강도라 부르겠다. 파업강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교섭단위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한 건당 노동손실일수가 크다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분규참가자가 많거나, 분규지속기간이 길거나 한 경우이다. 즉 장기간, 대규모 분규가 많은 경우 이 수치(파업강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나듯이 연말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파업강도는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말의 파업강도는 2,591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기간 중 파업강도가 가장 높았던 2002년 말 4,908일의 52.8% 수준이다.

여기서 주목해 볼만한 것은 파업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매년 5월에서 8월 사이의 파업강도이다. 물론 이 시기 파업강도 역시 추세적으로는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의

[그림 3] 연도별 파업강도(분규당 노동손실일수)의 변동추이(2001~2005)



주: 해당 월말을 기준으로 (누적)노동손실일수를 (누적)분규발생건수로 나눈 수치임. 단, 2005년 8월은 29일까지의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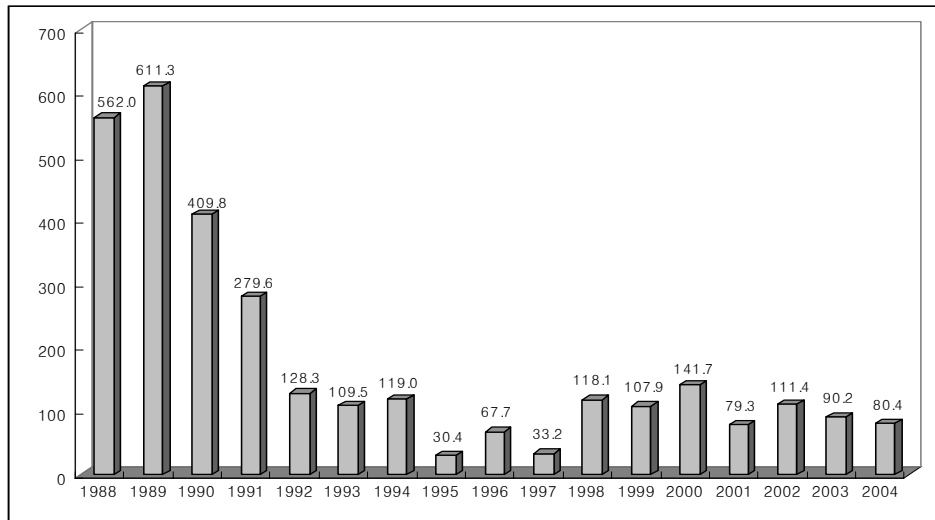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정도가 대체로 미미하고 특히 2005년의 경우에는 파업강도가 오히려 임·단협 시기인 5~7월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올해 현재까지 임·단협을 둘러싼 분규가 장기간의 대규모 분규의 양상으로 번져나가지 않았다는 의미로, 금속노조, 보건 의료노조와 같은 산별노조의 집중파업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났다는 사실과도 부합된다.

파업의 수준을 비교적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파업성향이다. 파업성향은 해당 연도의 노동손실일수를 임금근로자수로 나누어 구해진다. [그림 4]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파업성향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이 1987년 7·8·9월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온전한 의미에서 한국의 파업역사는 그 시기부터 2005년 현재까지 18년 남짓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이후 2004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1988년에서 1991년까지의 초기 3~4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파업성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5년에서 1997년까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파업성향을 보였다(1996년은 노동법 개정 저지 총파업 관계로 조금 상승). 이상으로 볼 때 세간에 알려진 인식과는 달리, 사실 우리나라의 노사분규는 점점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2001년 이후, 통상적으로 볼 때 8월 말까지의 노동손실일수는 연말의 최종 노동손실일수의 최소 60% 수준에서 최대 80%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005년 7월 말의 임금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올해 8월 29일 현재의 파업성향은 22.8이다.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중인 완성차 업종의 분규가 대규모·장기화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그림 4] 우리나라의 파업성향(피용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 추이(1988~2004)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임·단협 이슈가 아닌 법·제도 및 정치적 이유로 인한 대규모 총파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통계적으로 볼 때 올해의 파업성향은 1995~1997년 사이의 수준으로까지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IV. 결론

이상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노사분규의 현황과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의 통계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규건수의 대부분은 매년 5월에서 8월 사이인 임·단협 시기에 집중되며, 올해 역시 7월에 발생한 분규건수가 지금까지 발생한 전체 분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물론 임·단협 교섭이 이때 집중되기 때문이며, 산별교섭이 진전되면서 이런 시기별 교섭 및 쟁의의 집중화 경향은 더 두드러지게 된다.

다음으로 노동손실일수를 보면 2005년 8월 29일 현재의 노동손실일수는 350,248일로 작년 같은 기간의 노동손실일수 1,004,398일의 34.9% 수준에 그칠 정도로 파업이 많이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또한 해당 월의 노동손실일수를 분규발생건수로 나눈 파업강도를 살펴보면, 점점 파업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장기간 파업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주로 중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된 금속노조나 보건의료노조의 불연속적 부분파업, 그리고 완성차 업종의 순환파업과 같은 쟁의전술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업이 줄었다고 해서 노사관계가 안정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지난 몇 년간 ‘귀족노동자론’ 등 언론매체를 통한 반노조 여론 공세가 이어진데다가, 올해 몇몇 대기업 노조의 취업비리 등으로 인해 노동계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비정규직 법안 처리문제 이후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노정관계, 그리고 노사관계 로드맵 등 앞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일방적인 역관계 속에서는 설사 파업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 잠재되고 누적된 불만은 더 큰 분규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이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완성차업종의 파업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리고 남은 하반기 동안 비정규직 법안 처리 등의 문제를 큰 무리 없이 매듭지을 수 있는가에 따라 올해 노사분규가 지난 1995~1997년 수준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가가 결정될 것이며, 그 뒤편 노사정 모두의 자세와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KLI**

〈부표〉 연도별 노사분규 관련 통계 변동추이(2001. 1~2005. 8)

	분규건수	참가자수	손실일수	건당 손실일수
2001. 1	7	280	54,344	7,763
2	10	368	69,469	6,947
3	21	1,837	92,669	4,413
4	37	4,956	125,870	3,402
5	54	8,986	195,636	3,623
6	114	31,694	354,929	3,113
7	153	59,202	511,265	3,342
8	173	61,803	643,078	3,717
9	194	65,543	697,699	3,596
10	208	70,913	746,786	3,590
11	222	72,218	799,778	3,603
12	235	88,548	1,083,079	4,609
2002. 1	12	1,272	31,160	2,597
2	21	16,615	80,394	3,828
3	30	17,531	212,450	7,082
4	40	18,021	240,565	6,014
5	172	46,148	395,669	2,300
6	207	65,334	764,817	3,695
7	234	80,245	1,110,896	4,747
8	250	82,841	1,262,183	5,049
9	264	86,089	1,380,973	5,231
10	279	89,837	1,462,300	5,241
11	292	91,664	1,537,918	5,267
12	322	93,859	1,580,404	4,908
2003. 1	11	1,168	18,445	1,677
2	17	2,382	28,041	1,649
3	25	5,214	67,195	2,688
4	56	9,211	91,460	1,633
5	81	13,954	116,564	1,439
6	118	58,478	245,832	2,083
7	256	123,144	806,964	3,152
8	276	124,205	1,084,443	3,929
9	290	126,992	1,148,515	3,960
10	302	131,363	1,215,811	4,026
11	308	131,775	1,270,270	4,124
12	320	137,241	1,298,663	4,058
2004. 1	7	20,023	32,902	4,700
2	10	20,083	54,455	5,446
3	18	21,082	69,038	3,835
4	27	28,708	88,288	3,270
5	75	35,475	138,423	1,846
6	320	128,952	406,057	1,269
7	402	171,165	876,228	2,180
8	413	168,602	1,010,149	2,446
9	433	180,940	1,068,416	2,467
10	444	182,252	1,114,833	2,511
11	453	183,263	1,160,000	2,561
12	462	184,969	1,197,201	2,591
2005. 1	9	830	15,578	1,731
2	13	1,630	34,390	2,645
3	23	11,821	66,468	2,890
4	31	12,415	107,130	3,456
5	41	13,162	126,466	3,085
6	59	16,084	161,240	2,733
7	213	33,385	253,708	1,191
2005. 8. 29	235	77,960	350,248	1,543

주: 해당연도 해당월말 기준 누적치임.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05년 금속 산별교섭의 전개과정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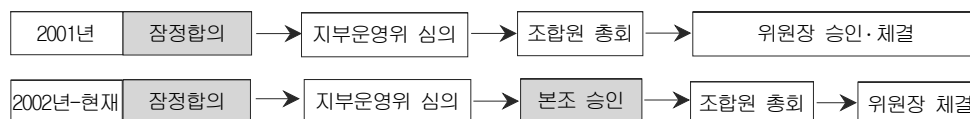
김 훈 · 주무현*

I. 문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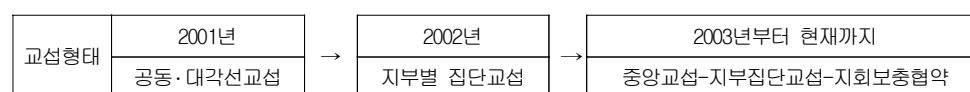
2001년 2월 출범한 금속노조는 기존의 기업별 교섭구조와는 다른 산업별 교섭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체교섭의 형태와 체결과정의 변화를 추구하여 왔다. 2001년 금속노조는 ‘사업장 단체협약의 전문에 체결주체를 금속노조로 변경’하였다. 2002년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에서 본조의 승인 규정을 추가하고,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을 변경하여 교섭의 중앙집중화 및 통제력을 강화하였다(그림 1 참조).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한 통제력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교섭형태는 2001년 공동·대각선교섭에서 2002년 지부별 집단교섭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97개 사업장 사용자가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면서 산별 중앙교섭으로 발전하였다(그림 2 참조).

2003년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실시에 따라 산별노조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기 시

〔그림 1〕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체결과정 변화



〔그림 2〕 금속노조의 교섭형태 변화



* 김훈=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oonkh@kli.re.kr), 주무현=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교수(jumuhyun@gacchuk.gsnu.ac.kr).

작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측과 함께 2002년 기본협약에 명시된 내용에 준하여 2002년 12월 20일~2003년 4월 22일에 걸쳐 노사실무협의회를 개최, 2003년 교섭원칙 및 내용과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03년 4월 22일 제7차 노사실무협의회에서 95개사의 위임장을 제출받은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대표와 금속노조 사이에 중앙교섭을 위한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한국노동연구원, 2004). 2004년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중앙교섭에서 손배·가압류 금지, 산별최저임금 보장,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등을 합의함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별교섭의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으로서 질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많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제Ⅱ장에서는 2005년 금속 산별교섭의 전개과정을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제Ⅲ장에서는 2005년 금속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나름대로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2005년 금속 산별교섭의 전개과정

1. 금속노조의 조직연혁과 현황

2004년 12월 현재 금속노조는 15개 지부, 174개 지회, 조합원 4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역별 조합원수 비중에서 부산·경남지역이 50개 지회 12,63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서울·경기지역이 47개 지회 8,141명이며, 대구·경북지역이 38개 지회 8,092명이다. 금속노조는 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호남권의 조직규모는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1970년대 이후 한국 중화학공업이 주로 동남지역 해안벨트를 중심으로 발전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부별 조합원수 비중에서 경남지부가 29개 지회 8,165명으로 가장 크고 조직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지부는 조합원 규모 2,000여명을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비슷한 조직 역량을 가지고 있다.

<표 2>에서 보면, 금속노조 소속 사업체의 종업원 대비 조합원의 비율은 평균 58%이고, 중위수는 62.6%였다. 금속노조 소속 단위 지회의 조직률을 4분위수에 따라 구분하여 전반적인 노조 조직률 수준이 파악되었다. 우선 조직률 규모별 설립시기를 보면, 조직률이 50% 이상의 단위 지회는 주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전후하여 설립되었고, 조직률이 50% 이하의 단위 지회는 1997년 이후 노동운동이 수세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을 시

기에 설립되었다. 설립시기별 평균 조직률을 보면,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조 조직률 50~70% 단위 지회가 54개(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5~49%가 30개(27.8%), 75% 이상이 19개(17.6%)로 금속노조 소속 사업체의 노조조직률은 대부분은 50% 이상이였다.²⁾

금속노조 소속 단위 지회를 기준으로 할 때 노조 조직률은 대체로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금속노조 단위 지회의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가입자 대상자만을 고려하여 노조 조직률을 추정하게 되면, 해당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조직화 영역이 금속산업 전체로 확대될 경우 사정은

〈표 1〉 금속노조 지부별 지회 및 조합원 현황

(단위: 개, 명)

권역	지부	2004년 10월		2004년 11월		2004년 12월	
		지회	조합원	지회	조합원	지회	조합원
서울	경기	18	2,265	18	2,252	18	2,262
	서울	9	1,306	9	1,422	9	1,432
	경기	15	4,787	16	4,636	16	4,636
	소계	42	8,358	43	8,310	43	8,330
부산	경남	27	8,048	27	7,930	27	8,067
	부양	9	2,380	9	2,370	9	2,375
	울산	11	1,942	11	1,931	11	1,929
	소계	47	12,370	47	12,231	47	12,371
대구	대구	11	2,267	11	2,149	11	2,247
	경주	12	1,840	12	1,874	12	1,882
	포항	13	1,873	13	1,869	13	1,872
	구미	3	2,153	3	2,149	3	2,122
	소계	39	8,133	39	8,041	39	8,123
	광전	5	2,306	6	2,338	6	2,341
	전북	5	747	5	790	5	791
	대충	6	1,475	7	1,778	8	1,723
	충남	22	3,485	22	3,480	22	3,520
	만도	4	2,347	4	2,349	4	2,349
전 체		170	39,221	173	39,317	174	39,548

자료: 금속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4

- 1) 본 연구에 사용된 「2004 금속노조실태조사」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공동으로 2003년 10월 30일 현재 금속노조 165개 단위 지회의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것이다. 조사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는 금속노조가 주관하여 단위 지회에 조사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조사지 배포방식의 낮은 회수율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독촉방법(follow up)이 동원되었다. 조사대상 금속노조 165개 단위 지회를 대상으로 조사지를 배포하였으나 109개 지회가 유효한 응답 결과를 보내와 유효 응답률은 66.1%이다. 보다 상세한 것은 주무현·이진동(2004)을 참조.

〈표 2〉 조직률 규모별 분포와 평균 조직률

(단위: 개, %)

		25% 미만	25~49%	50~74%	75% 이상	평균	중위수	표준오차
설립 시기	1987년 이전	-	2(6.7)	10(18.5)	2(10.5)	62.40	69.32	4.1412
	1987~1996년	-	13(43.3)	19(35.2)	10(52.6)	62.47	66.03	2.5430
	1997~2001년	3(60.0)	5(16.7)	7(13.0)	3(15.8)	49.34	53.94	6.1568
	2002년 이후	2(40.0)	10(33.3)	18(33.3)	4(21.1)	54.46	58.94	3.3529
	전 체	5(4.6)	30(27.8)	54(50.0)	19(17.6)	57.75	62.57	1.8916

자료: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2004 금속노조실태조사」 원시자료.

달라진다. 2002년 현재 금속산업 종업원과 생산직 노동자수가 각각 1,422천명과 958천명인 점을 감안할 때 금속노조의 조직률은 아주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³⁾ 따라서 금속산업연맹 대기업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의 조직역량 증대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 2005년 중앙교섭

금속노조는 2004년 10월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에 기초하여 요구안을 작성해 2005년 제1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중앙교섭 4대 요구안과 지부교섭 요구안(사업장 단협 통일요구안 및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4대 요구안은 ①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과 산별 고용안정화시스템 구축, ②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50% 수준의 산별 최저임금, ③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④ 우리 짝 사용 등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노무법인 C&B는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 소속 사업체의 인사노무담당 임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교섭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용자측 제시안을 작성하였다.

2005년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처음부터 난항이 예상되었다(부록 I 참조). 금속노조의 요구안별 쟁점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별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금속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은 ‘금속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 50%’를 제시하였다. 특히 금속노조는 산별 최저임금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둘째, 금속노조의 산업공동화 대책마련에 대해 사용자측은 해외공장 신설 및 증설은 경영권 사항이므로 노조와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사용자측은 해외법인 생산제품의 반입 금지, 해외현지 공장의 경영자료

3) 2002년 현재 금속산업 종업원과 생산직 노동자수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원시자료의 5인 사업체 기준에서 추산한 것이다. 금속산업 전체 노조 조직률은 금속산업연맹의 16만 명과 금속노조의 4만 명을 포함시켜 계산할 경우 이것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열람 및 복사 요구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산별 연·기금 금속노사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셋째, 금속노조의 비정규 근로자의 조합활동 보장에 대해 사용자측은 ‘사내 하청 및 비정규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의 우리 쌀 사용에 대해 사용자측은 비용 상승을 우려하면서도 ‘사내 급식제공시 우리 쌀을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2005년 중앙교섭에서 금속노조의 4대 요구안에 대한 협상보다 더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사용자단체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금속노조는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서」에서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용자단체로서 2005년 중앙교섭에 참여한다’는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중앙교섭을 진행하면서 협의 하자는 주장으로 맞서면서 중앙교섭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렇듯 노사공방으로 일관되던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는 2005년 6월 14일 제10차 교섭에서 ‘사용자단체 구성에 관한 계획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따라서 2005년 금속 산별중앙교섭은 ‘사용자단체 구성 계획’에 합의하고 난 뒤 제11차 교섭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제19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에 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단체 구성에 관한 노사의 소모적 갈등을 제외하면, 중앙교섭은 불과 9차례만에 잠정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2005년 7월 26일 금속노사는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4대 요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다(부록 I 참조). 첫째,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월 통상임금 765,060원과 통상시급 3,280원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하고, ‘금속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까지 확대 실시하며, 그 적용시기는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로 했다. 다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실행은 노사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하기로 했다. 금속노조가 그 계획의 수립시 ‘6개월 전’으로 요구한 것에서 상당부분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측은 해외공장 생산제품의 국내 반입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고, 해외공장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른바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되는데 합의하였으나 세부적인 합의안이 작성되지 않아 노사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셋째,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과 고용보장, 그리고 하청업체의 노조 설립에 따른 계약해지 금지가 합의되었으며, 불법파견 및 용역 사용금지가 합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사내급식 제공시(외주·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 사용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이것의 위반에 따른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노조가 양보하였다.

3. 2005년 지부교섭: 경주지부와 경남지부의 비교

금속노조는 2005년 단체교섭에 즈음하여 지부교섭의 타결방침을 세웠다. 지부교섭의 결과는 해당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지부·지회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이처럼 금속노조는 지부교섭의 요구사항 합의여부를 지부 자체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으나 합의사항의 체결권은 갖고 있다. 지부교섭은 지부-교섭권과 본조-체결권의 이중적 의사결정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그림 1 참조). 금속노조는 지부교섭의 각종 합의사항에 대해 중앙집중적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금속노조가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교섭 타결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의 관계를 명료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3중 교섭체계(three-tier bargaining structure)에서 지부교섭은 중요한 단층을 구성한다. 지부교섭은 지부단위의 공동요구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업장 단위의 임금인상과 단체협약까지 교섭하고 합의한다. 지부교섭 과정을 살펴보면, 지부 교섭단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집단과 ‘공동요구안’에 우선적으로 교섭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 다음 사업장 단위의 임금인상액과 단체협약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교섭을 실시한다. 이처럼 지부교섭에서 합의된 사업장 단위 임금인상액과 단체협약안은 해당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금속노조의 승인을 거친 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본 연구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부교섭은 해당 지부 소속 일부 사업장의 중앙(지부)교섭 불참과 업종 다양성 및 기업규모별 격차 구조 등에 의해서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금속노조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 현재 경기지부 등을 포함한 9개 지부에서 공동요구안이 제시되었으나, 경남지부를 포함한 나머지 6개 지부는 공동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물론 금속노조의 해당 지부가 공동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교섭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예컨대 금속노조 소속 모든 지부는 기본급 정액 127,70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집단교섭을 공히 실시하고 있으나, 단위사업장의 지불능력과 교섭능력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표 3〉 경남지부와 경주지부의 업종별 분포현황

자료출처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2004.1.31)						금속노조임금 실태조사 (2005.1.27)	
	자동차부품	기계제조	제1차 금속	조립금속	전기전자	기타	자동차	비자동차
경남	5(21.7)	7(30.4)	3(13.0)	4(17.4)	2(8.7)	2(8.7)	7(30.4)	16(69.6)
경주	11(91.7)	-	-	-	1(8.3)	-	10(100.0)	-
금속노조	45(41.7)	16(14.8)	15(13.9)	8(7.4)	13(12.0)	11(10.2)	55(50.0)	55(50.0)

자료: <표 1>과 동일.

연구자들은 금속노조의 지부 집단교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경남지부와 경주지부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경남지부는 업종 분포가 다양하고(표 3 참조),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통일중공업, 대림자동차 등과 같은 금속노조의 핵심적 전략사업장이 중앙(지부)교섭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경남지부는 2004년 중앙교섭 합의사업장을 ‘집단교섭군’, ‘집단교섭 불참사업장 교섭군’으로 구분하고, ‘집단교섭군’과 ‘집단교섭 불참사업장 교섭군’에서 ‘사업장 보충교섭군’으로 다시 편성하고 있다. 이때 사업장 보충교섭군은 지부가 단위사업장과 대각선교섭을 실시한다. 따라서 경남지부의 집단교섭은 실제적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고 대신 지회-보충협약이 주요한 교섭단계로서 자리 잡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다른 한편 경주지부는 소속 사업체의 업종 동일성으로 인해 집단교섭이 가장 용이하게 전개되는 곳이다(표 3 참조). 경주지부는 경남지부와 달리 ‘단일교섭군’을 편성하면서도 단위지회별 임금타결 편차를 열어두는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 역시 해당 지회의 교섭력과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지부 교섭구조는 금속노조가 지향하는 중앙교섭-지부교섭이 전형적으로 관철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주지부는 경남지부와 달리 지회-보충협약은 사실상 커다란 의의를 갖지 못하고, 대신 지부교섭이 중요한 교섭단계로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다.

<표 4>에서 경주지부는 공동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 경남지부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공동요구안 제출여부가 경남지부와 경주지부의 집단교섭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 예컨대 2004년 경남지부는 이른바 ‘지부 추가 전임’ 공동요구안을 제출하여 관철시켰고,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부 단위 공동요구안에 대한 합의문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교섭이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표 4〉 경주지부와 경남지부의 공동요구안 내용

지부	공동요구안	교섭결과
경주지부	(가) 협약의 유효기간 8개지회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시험 직선 임원 추가전임 인정 ① 금속노조 경주지역 관계사는 조합원이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직선 임원으로 선출되었을시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②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추가 전임자의 처우(임금 등 노동조건)는 해당 사업장 전임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소속한 사업장에서 먼저 지급한 후, 금속노조 경주지역 관계사용자들이 조합원수 비례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한다(단, 1명에 한함).	합의
경남지부	없음	

자료 : 금속노조(2005b).

III. 평가와 전망

2005년 금속 산별중앙교섭은 노사가 난항을 겪고 있던 ‘사용자단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전개되었다. 2005년 7월 26일 제19차 중앙교섭의 잠정합의안은 8월 10일에서 12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6.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서 가결되었다.⁴⁾ 중앙교섭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모두 4차례에 걸친 파업이 전개되었으나 파업일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인 단체교섭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금속 산업별 중앙교섭에 대한 평가는 합의내용, 교섭구조 및 교섭비용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금속 산별중앙교섭의 합의내용에 대한 평가는 ‘중앙교섭 4대 요구안의 합의내용’과 ‘사용자단체 구성’ 합의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앙교섭 4대 요구안의 합의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산업공동화 관련 대책에서 금속노조는 경영참여 범위 및 시기를 양보하는 대신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산별 최저임금과 노조활동 보장에 대한 사용자측의 양보를 얻어내었다. 산별협약에서 양보교섭이 부분적으로 정착되는 관행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속산업 최저임금수준이 합의되고, 그것이 비정규직·이주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되어 중앙교섭의 산별협약 기능이 정착되고 있다. 셋째, ‘우리 짝 사용’에 관한 합의는 노사협상이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금속노조의 ‘노동자·농민의 연대’전략을 넘어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산별협약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그것의 사회·경제적 구속력과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컨대 산별 최저임금수준에 대해 금속노사가 합의하였으나, 이것이 적용될 정규직 조직노동자의 비중이 높지 않고,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와 관련되는 실행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리고 산업공동화 대책이 중앙교섭에서 합의되었으나 금속노조 소속 사업체가 대부분 자동차부품생산의 중소기업

4)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2005년 중앙교섭 참여사업장 재직조합원 21,662명 가운데 17,627명(81.3%)이 참여하여 찬성 15,252표(86.5%), 반대 2,259(12.8%)로 가결되었다(금속노조 내부자료).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률은 86.7%였다.

업이기 때문에 완성차 생산업체와의 불평등한 원-하청관계가 구조적으로 극복되지 않는 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금속노사의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한 합의는 한국 노사관계의 지형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금속노사는 ‘2005년 중앙교섭 조인식 때까지 법인등록된 사용자단체 명의로 (잠정합의안을) 체결한다’⁵⁾는 확인서를 교환함으로써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한 최종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과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노사관계에서 산업별 교섭구조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만들어졌다. 2001년 출범한 금속노조는 2005년 중앙교섭에서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산업별 교섭구조를 외연적으로 완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앙교섭의 산별협약이 사용자단체의 법적 지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으로는 중앙교섭의 합의사항이 사용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사업체에 의해 거부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용자단체의 구성은 단체교섭의 방식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교섭은 사용자측으로 위임받은 법적 대리인이 ‘교섭대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까지 금속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용자측의 ‘위임방식’이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금속산업 사용자단체와 그 대표가 교섭당사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금속산업 사용자단체 구성은 형식적으로 기업별 노조체제를 넘어 산업별 교섭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행적·법률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최종적’ 합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한 업종별·기업규모별 이해관계가 내부적으로 조정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금속산업의 경우 내부의 업종별·기업규모별 격차구조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금속노조의 ‘조직화된’ 산업영역과 조직력은 아주 협소하거나 낮다. 이것은 한편에서 금속노조의 산별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다른 한편에서 사용자단체에게 ‘보호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체의 업종 다양성은 금속산업 사용자단체의 내부적 조직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특정 업종 및 사업체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금속노조는 산별협약의 교섭단위와 적용범위를 적정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금속산업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그 역할과 기능이 구체화되어감에 따라 금속노조는 사용자단체 규모와 산별협약 적용확대를 위한 장기적 전략을 조직적으로 수립해야만 할

5) 괄호 안의 ‘잠정합의안’은 ‘사용자단체 구성에 관한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연구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적으로 삽입한 것임을 지적해둔다.

것이다. 물론 금속연맹 대기업 노조의 조직형태 전환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속산업 사용자단체 역시 산업별 경쟁규칙 형성에 따른 자발적인 경쟁전략을 탐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금속노조의 3중 교섭구조가 2중 교섭구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과 교섭구조의 ‘축소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속노조의 교섭구조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중앙교섭-지부교섭-지회보충협약의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경남지부와 경주지부의 사례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업종 다양성과 노사관계의 기업별 성격에 따라 중앙교섭-지부교섭의 ‘집중화(centraliz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라는 차별화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주지부는 업종 동질성(자동차부품생산업)으로 인해 중앙교섭-지부교섭의 연결구조가 강화되는 ‘집중화’ 현상을 보여준다. 반면 경남지부는 업종 다양성과 노사관계의 기업별 성격에 의해 중앙교섭-지부교섭의 연결구조가 약화되는 ‘분권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중앙교섭-지부교섭의 분권화 현상은 중앙교섭이 자동차부품업종을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분권화’ 현상은 금속노조가 지향하는 중앙교섭-지부교섭의 2중 교섭구조(two-tier bargaining structure) 구축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유지와 사용자의 기업별 노조주의가 서로 맞물려 있는 한 중앙교섭-지부교섭의 ‘분권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중앙교섭-지부교섭-지회보충협약에서 지부교섭의 역할은 약화되면서 교섭권은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교섭비용(지부의 추가 전임자 인건비 부담과 교섭기간의 장기화 등)이 증가하면서 교섭구조 축소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중앙교섭이 사회적 의제와 임금성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앙교섭이 현장조합원의 최대 관심사인 임금성 문제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어 조합원의 이탈이 심화되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섭구조의 축소 방향은 금속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대산별 노조 내부에서 업종별 교섭을 실시하고, 사업장 단위에서 협의하는 독일식 산별 협약모델이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금속노조(2005a), 「제13차 임시대의원대회」, 금속노조 회의자료.

_____(2005b), 「중앙교섭단 자료집」, 금속노조 내부자료.

김성희 외(2004), 「대형노사분규 심층연구: 2003년 산업별 사례분석」, 한국노동교육원.

- 김재훈·이종래(2004), 『노동조합의 조직과 리더십: 금속노조의 사례』, 한울아카데미.
- 김승호(2002), 「산별노조 1년을 돌아본다」, 『노동사회』 통권 65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_____ (2003), 「금속산별교섭의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포럼 발표문.
- 김태현(2003), 「산별노조운동의 현단계」, 『노동사회』 75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박용규(2000), 「경주금속노동조합 출범」, 『노동사회』 44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박태주(2002), 「산업별 단체교섭에 대한 단상」, 『노동사회』 67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영남노동운동연구소 편(2000), 「금속산업연맹 산별교섭정책 연구사업 보고서」, 영남노동연구소.
- 윤진호(1998), 「노동조합 조직체계의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주희(2004),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임영일 외(1994), 『산별노조론』, 미래사.
- 임영일(1998), 「산별노조 조직화의 쟁점과 과제」, 『산업노동연구』 제4권 제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 _____ (2000), 「노동체제의 전환과 산별노조: 현황과 쟁점」, 『경제와 사회』 제48호.
- _____ (2004), 「시장자유주의적 노동체제에서 사회통합 가능한가」, 『노동사회』 88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정일부(2003), 「금속노조 산별교섭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78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정진상·김재훈·이종래(2003), 『금속노동자의 생활과 의식』, 한울아카데미.
- 정진상·주무현·이진동(2003), 『금속노동조합과 금속노조 지도자』, 한울아카데미.
- 조효래(2004), 「산별노조들의 조직운영과 민주주의: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산업노조의 비교」, 『산업노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 주무현·이진동(2004), 『금속노동조합의 노동과 교섭』, 한울아카데미.
- 최영기 외(2001),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2004), 『금속산업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노동부.
- Bamber, Greg and Russell Lansbury (eds.) (1998),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mployment Relations; a Study of Industrialized Market Economics*, Allen & Unwin Australia Pty, Ltd.
- Crouch, Collin and Franz Traxier (eds.) (1995), *Organized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What Future?*, Aldershot.
- Freeman, Richard and James Medoff(1991), *What Do Union Do?*(국역: 박영기, 『노동조합의 참모습』, 비봉출판사).
- Katz, Harry and Thomas Kochan(2000), *An Introduction to Collective Bargaining & Industrial Relations*, Irwin McGraw-Hill.

〈부록 1〉 2005년 금속노사 요구안(제시안)과 잠정합의안

<금속노조 요구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제시안>	<금속노사 잠정합의안>
<p>1. 산별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 보장</p> <p>【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의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p> <p>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p>	<p>1. 산별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 보장</p> <p>【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전체 금속산업 근로자 통상임금의 50%가 되도록 노력한다.</p> <p>② 제1항에 의한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다.</p>	<p>1. 금속산업 최저임금</p> <p>【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765,060원과 통상시급 3,2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p> <p>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금속사업장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p>
<p>2. 산업공동화 대책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p> <p>【해외공장】 ① 관계사용자는 해외공장 신설·증설시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p> <p>② 관계사용자는 노사합의 없이 해외공장을 신설·확대할 수 없고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p> <p>③ 관계사용자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한다.</p> <p>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즉각 열람·복사할 수 있고 관계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p> <p>【산별 연·기금 금속노사공동위원회】</p> <p>① 관계사용자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p> <p>②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는 산별고용보험 및 산별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이하 산별연·기금위원회)를 노사동수로 설치한다.</p>	<p>2. 산업공동화 대책마련</p> <p>【해외공장】 ① 관계사용자는 해외공장 신설·증설시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6개월 전에 조합과 협의한다.</p> <p>② 관계사용자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한다.</p>	<p>2.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p> <p>【해외공장】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p> <p>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p> <p>③ 금속산업 사용자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p> <p>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복사할 수 있고 금속산업 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p> <p>【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p> <p>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p> <p>② 금속노조와 금속산업 사용자는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p>

〈부록 1〉의 계속

<금속노조 요구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제시안>	<금속노사 잠정합의안>
③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는 중앙 교섭 합의 직후 한달 안에 산별 연·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산별 연·기금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실행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하여 실행한다.		③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공동으로 마련하고, 위원회는 산업공동화 대책과 재취업 훈련 등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3.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또한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비정규 노동자 및 하청업체의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원청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승계한다. ②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 노동자 및 사내하청 업체와의 계약·재계약은 조합과 합의한다.	3. 비정규 근로자의 조합활동 【비정규 근로자의 조합활동】 관계사용자는 사내 하청 및 비정규 근로자와 이주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3.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보장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불법 파견 및 용역사용 금지】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금속산업 사용자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4. 우리 쌀 사용 【우리 쌀 사용】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내 급식제공시 우리 쌀을 사용한다. 외주·위탁업체가 우리 쌀 사용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위탁계약을 30일 이내로 해지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우리 쌀 사용 【우리 쌀 사용】 관계사용자는 사내 급식제공시 우리 쌀을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 우리 쌀 사용 【우리 쌀 사용】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 급식제공시(외주·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2005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평가

은 수 미*

I. 머리말

2005년 4월부터 7월까지 16회에 걸친 산별교섭과 9회의 축조교섭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제2차 산별교섭은 조정신청 → 직권중재회부 → 3일간 파업 → 강제중재에 이르렀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중재재정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중재안을 일단 받아들이고 중재안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나머지 3개 협약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사용자측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더 이상의 산별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노조가 추석전 산별교섭 마무리를 표명하고 있으나 제2차 산별협약이 언제 종결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005년 보건의료산업의 산별교섭 및 노사분규는 전국적인 노사관계의 축소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① 기존 정규직 기업별 노사관계를 넘어선 산별체계로의 전환이 사용자단체의 구성에서부터 여타 법·제도적 정비 그리고 노동계의 광범위한 지지 등 여전한 많은 난관을 뚫고 나아가야 할 문제임이 드러났다. ② 또한 노사, 노정 그리고 노사정 간의 신뢰 부족이 보건의료에서도 장애가 되어 사회적 비용을 높였다.

그러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이 후퇴했던 것만은 아니다. 2004년 산별교섭이 속도위반이라 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일단 기업별 노조체계라는 벽을 뚫어버렸다면 2005년 산별교섭은 교섭틀과 구조, 대상과 방식 등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도 ‘산별교섭’ 및 산별적 노사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만들어내는 땅꾼이기의 시간이었다.

때문에 2005년 산별교섭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보건의료 산별교섭만이 아니라 한국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esumi@kli.re.kr).

노사관계가 맞닥뜨린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산별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글의 목적은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의 주체·구조·쟁점 및 진행경과를 추적하여 노사관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2005년 산별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안정적 노사관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보건의료 산별교섭의 추이와 쟁점

1. 2005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교섭주체와 쟁점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에 접어들어서이며 2004년에 첫 산별협약이 이루어졌다. 보건의료노조가 1998년 합법적으로 결성되었고 사용자단체가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005년에는 ‘사용자단체 구성-노무사 위임’문제로 교섭이 결렬되어 6월 22일에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파업이 거론되었다. 결국 7월 7일 직권중재회부 이후에야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7월 20일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산별파업에 돌입함으로써 7월 22일 중노위가 강제중재에 들어갔다.

가. 단체교섭의 구조 및 참여주체

우선 단체교섭의 구조를 보면 2005년 노사 산별교섭은 본조-지부의 중층적 교섭구조를 보였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산별교섭에 기초하여 지부별 교섭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서유럽 노조들은 처음부터 산별적인 질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부의 쟁의가 금지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적 질서로의 전환의 초기이고 산별교섭의 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지부별 교섭 및 파업이 이루어지는 한편, 산별교섭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측은 끊임없이 ‘이중교섭’(이중파업)에 따른 추가부담을 우려하며 노조측도 동시교섭에 따른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작년 서울대지부의 파업이 그 예이다. 또 산별과 동시에 이루어진 이번 지부별 조정신청의 경우 지부의 상당수가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산별파업에 참여한 지부들의 경우 외형상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지부들의 교섭이 타결됨으로써 더 이상 산별파업에 참여하는 형태의 지부

별 파업이 어렵게 됨으로써 사실상 산별파업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본조-지부의 동시교섭이 상승효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교섭구조는 지속적인 쟁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산별교섭이 안정화되면서 적절한 형태로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산별교섭의 참여주체에 있어 노조측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이 교섭권을 위임받았으나 사용자측은 제1회 산별 본교섭(2005년 4월 12일)이 시작될 때까지 7개 특성별 대표단과 전체 대표단을 모두 구성하지 못하였다. 이후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지부의 탈퇴와 대표단 구성 지연을 이유로 9차 산별교섭까지 불참하고, 사립대병원은 노무사 위임을 통한 대표구성 입장을 견지하였다. 때문에 사용자대표 구성과 본격적인 교섭은 7월 6일 중노위의 권고안을 사용자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졌다. 당시 중노위는 교섭틀의 구축이 급선무라면서 2004년 산별합의에 따라 책임있는 의료원장이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사용자측에 촉구하였다. 결국 사용자측의 대표단 구성은 노사외부적 요인의 힘이 컸던 것이다.

또한 2005년 산별교섭에 참여한 병원은 산별교섭대상병원 127개 중 85개로 작년 104개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9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

〈표 1〉 2005년 산별교섭 참여현황(2005년 6월 현재)

	병원 수	2004산별 협약수용	2005산별 교섭참석	참 여 병 원
국립대병원	9	9	5	경북대, 경상대,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서울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불참)
사립대병원	31	24	15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이상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중앙대병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단국대의료원, 동아대의료원, 원광대의료원, 조선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28	28	28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인천의료원, 수원의료원, 안양의료원, 이천의료원,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 금촌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천안의료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목포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김천의료원, 부산의료원, 제주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2	2	2	한국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적십자사	19	19	19	적십자본부, 동부혈액원, 서부혈액원, 남부혈액원, 중앙혈액원, 서울적십자병원, 경기적십자혈액원, 상주적십자병원, 대구적십자병원, 대구경북적십자혈액원, 경남적십자혈액원, 울산적십자혈액원, 통영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혈액원, 전북적십자혈액원, 충북적십자혈액원, 혈장분획센터
민간중소 병원	36	22	16	소화아동병원, 인천사랑병원, 울산강동병원, 광주기독병원(이상 민간중소대표단), 부평세림, 신천연합, 춘해병원, 광명성애, 울산병원, 성남중앙병원, 진주한일병원, 예수병원, 일신기독병원, 인천기독병원, 광주기독, 침례병원, 원진녹색병원
기타	2	0	0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서울아산병원
전 체	127	104	85	2005년 산별교섭대상 127개 병원 중 85개 참여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를 제외한 5개병원(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만이 교섭에 참여함으로써 작년 산별전환 과정의 후유증을 드러냈다.

나. 2005년 노사 양측의 주요 요구 및 쟁점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2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의 생활 실태 및 의식조사를 통해 산별요구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5대 산별협약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반면 사용자측은 4월 8~9일 이틀간의 연수를 통해 산별교섭에 대한 대응방침을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용자측안이 나타난 것은 본격적인 교섭이 이루어진 7월 이후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른바 산별 5대협약으로 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임금협약, 노동과정협약을 제기하였다. 반면 사용자측은 기본협약과 임금협약안을 제시하고 여타 사항, 특히 기업에 대한 사회개혁 요구 등은 산별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

〈표 2〉 2005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협약 요구안(요약)

	주요내용
기본협약	1) 협약의 우선적용 및 지부단체협약 및 기존 노동조건 저하금지 2) 법적사용자단체 구성완료 및 합의사항 이행확약과 점검을 위한 실무위 구성 3) 산별적 노조활동보장, 2004 파업피해원상회복(인사상 불이익, 무노동무임금 등)
보건의료협약	4) 의료시장화·상업화 반대(영리법인 허용반대, 당연지정제 폐지반대,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 5) 보건의료 예산확보 6) '무상의료' 사회의제화: 비급여의 급여화를 기본으로 '암환자부터 무상의료를' '차상위계층부터 무상의료를' 등의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요구 7)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병상 신·중축 억제, 관리부처 일원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 8)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 개선, 의료기관 주5일제 전면시행 대책마련 9) 다인병상 70% 확보, 1지부 1의료민주화 요구, 사회적 기여를 위해 연간 총수익의 0.1%를 사회사업비 예산으로 확보, 노사공동의료지원단 구성, 대북의료지원사업 10) 의료노사정위 본격가동: 회의구조 다양화, 지방공사·중소병원 등 분과회의 구성, 보건의료협약관련 전반적인 요구심의, 특히 4조원 예산관련 세부사업과 보건의료노사정 공동현안문제 집중논의
고용협약	1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도입제한 12) 정규직화 전까지 직접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노조활동보장' 13) 정규직 노동자의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 고용조건 변경시 노사합의
임금협약	14) 정규직 9.89% 임금인상, 비정규직 추가인상으로 격차해소, 동일지급 지향 15)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월통상임금 825,509원 요구, 적용대상, 시기, 기준 구체화 16) 보건연대기금: 통상임금 0.1% 노사정 공동조성, 기금운영방안 및 사용내역 합의
노동과정협약	17) 주5일제 확대 전면시행(토요일래근무 폐지), 정부차원 대책마련, 4시간분 인력충원, 유급생리휴가 신규까지 확대, 월소정근로시간 184시간, 휴가사용촉진 강요금지, 노동강도 강화금지, 비정규직까지 적용범위 확대 18) 노동안전보장으로 건강권 확보: 산재예방대책, 근골격계 예방교육실시, 사립대병원 재해보장제도 개선, 산재지정병원 의무화

자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2005a 요약.

장을 피력하였다. 이것은 7개 특성별 병원들의 내부 경영이나 노동조건의 차이가 커서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상과정에서는 노동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교섭하라는 중노위의 권고안을 사용자측이 수용하여 5대 협약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교섭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9차 축조교섭(2005년 7월 22일)까지 노사 양측은 산별기본협약과 보건의료협약 가운데 ▲유일교섭단체 인정 ▲산별협약 자동연장 ▲보건연대기금 조성 ▲국가재난발생시 공동의료지원 ▲의료공공성 강화 대정부 공동건의 등 24개 조항(총 55개 조항 중)에 관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반면 주요 관심사항이었던 임금인상, 생리휴가, 주5일제 실시 등 10여개 핵심사항에서는 합의가 결렬되었다.

〈표 3〉 2005년 보건의료산업 사용자측안(요약)

임금협약	임금인상	2005년 임금인상률 동결
산별 기본협약	무노무임	조합의 노무제공 없는 임금요구나 단체행동금지
	단체협약 준수	* 협약내용 성실준수 * 협약유효기간 중 개정·폐기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금지
	단체교섭 대상	* 5개 사항으로 대상제한(임금 및 근로조건, 시설 및 환경, 복리후생, 조합활동, 단체협약의 개폐) * 지부교섭은 산별교섭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한정, 산별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인사·경영권	*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의 권리 * 채용·임명·이동·승진·복직·해고·대기·상벌 등의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음 * 인수·합병·분할·매각·구조조정 등은 사용자측의 권리
	노조전임자 감축	* 노조전임자 총지원규모를 각지부별로 매년 30%씩 감축 * 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취임할 경우 무급휴직처리하되 추가전임자 불허
	유효기간	* 산별협약(임금협약) 유효기간 2년

자료 : 사립대병원회의, 2005b 요약.

〈표 4〉 2005년 교섭과정에서의 쟁점

	노	사	비고
산별 기본 협약	* 2006년 사용자단체 구성 * 산별협약 유효기간 1년 * 유일교섭단체 인정	* 사용자단체 구성 어려움 * 산별협약 유효기간 2년 * 정규직만을 대표하는 교섭단체	총 7조 15개 조항
보건 의료 협약	* 다인병상 70% 이상 * 의료노사정위원회 본격가동 및 구체적 운영	* 다인병상 50% 이상 불가 * 더 시간이 필요	총 4조 10개 조항
고용 협약	* 비정규직 고용보장 * 비정규직 노조활동보장	* 비정규직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 * 수용불가	총 4조 11개 조항
임금 협약	* 9.89% 인상 또는 +@타결, 지부교섭에서 마무리 * 비정규직 추가인상 * 최저임금제 월 82만원	* 기본급 2% 인상 * 임금은 산별교섭에서 마무리, 지부 추가 교섭과 비정규직 추가인상 불가 * 최저임금제 월 69만원	총 3조 5개 조항
노동 과정 협약	* 주5일제 전면확대시행 * 인력충원, 생리휴가, 보건수당 지급	* 토요외래진료 축소유지 * 근기법 유지	총 2조 14개 조항
전체	총 20조 55개 조항		

2. 2005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 교섭경과와 노사분규

다음으로 교섭이 결렬되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7월 7일 이전까지 3개월 동안 ‘사용자단체 구성-노무사 위임’이라는 교섭틀과 관련된 문제로 산별교섭이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7월 7일 이후 사용자

〈표 5〉 2005년 산별교섭 진행경과

	제 목	주 요 내 용
3월 31일	노조임시대의원대회	* 산별 5대협약안 확정
4월 6일	병원노사대토론회	* 사측 : 특성별교섭, 이중교섭 불가, 신중한 교섭의제 선택 * 노측 : 특성별교섭 반대, 사용자교섭대표단 구성요구, 산별 5대협약안 제기
4월8~9일	사용자연수	
4월 12일	상견례 및 1차 산별교섭	* 사측 : 대표단 구성지체(중소병원만 교섭대표 구성) 및 대표단 구성에 대한 내부의견조율 필요, 사립대측 노무사 위임고려 * 노측 : 2004 합의사항 이행요구, 노무사 위임불가->노사양측 주1회(매주 화요일 오후2시) 산별교섭, 교섭경비 노사공동부담, 노사양측 교섭간사선임 합의
4월 19일	2차 산별교섭	사용자단체 구성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부각 : * 사측-사립대병원은 전체대표단 구성불가, 노무사 위임고려, 국립대병원은 서울대 지부문제를 근거로 불참 * 노측-노무사 교섭대표 불인정, 2004년 합의사항 이행요구
4월19~29일	조합원 하루교육	서울지부 조합원들 교육 : * 2005년 상황인식 및 산별교섭 내용안내 * 2005년 산별협약요구안 교육, * 비정규직, 무상의료, 산별조직화를 주요한 과제로 제기
4월 23일~5월 24일	3~7차 산별교섭	* 사용자단체 구성-사립대의 노무사 위임문제로 교섭 결렬, 국립대는 대표 불참 * 3차에서 7차까지 사립대는 노무사+2~3개 병원장 참여, 국립대는 4차에서만 총남대 참여, 노측은 노무사 불인정
5월 31일	8차 산별교섭	노조의 산별협약요구안 발제, * 노측-사립대가 빠진 상태에서라도 사용자측안 정리를 요구, * 사측-사립대병원인 없는 상태에서 교섭진행은 무리라는 입장
6월 7일	9차 산별교섭	교섭결렬 : 사용자단체 구성과 노무사 위임건, 차기회의때 국립대병원대표의 참석가능성만 확인
6월 14일	10차 산별교섭	교섭결렬 : 사측-노무사 위임건으로 사립대병원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교섭불가라는 사측의 입장발표, 노측-주5일제 관련논의 제기, 사측을 작년 합의사항 거부 및 교섭거부로 비판
6월 21일	11차 산별교섭	교섭결렬 : 노무사 위임건으로 사립대병원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교섭불가라는 사측의 입장발표 및 일제퇴장(6월 22일 노조조정신청)
6월 28일	12차 산별교섭	사용자측 불참으로 무산
7월 5일	13차 산별교섭	교섭결렬(7월 7일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
7월 7일	14차 산별교섭	교섭대표 위임문제를 중심으로 교섭진행
7월 7~15일	1~4차 축조교섭	
7월 18일	15차 산별교섭	교섭결렬
7월 16~21일	5~8차 축조교섭	
7월 19일	16차 산별교섭	대표자간담회 개최 및 실무교섭단 구성->교섭결렬(7월 22일 중노위 중재재정)
7월 22일	9차 축조교섭	교섭결렬

단체가 구성되어 교섭들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2006년 이후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된 사항이 교섭결렬로 인해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용자단체 구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특징은 파업 등이 준비되는 것 이상으로 자율 교섭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 것

〈표 6〉 2005년 보건의료 노사분규 과정

일시	분류과정	주요내용
6월 1일	노조합동대의원대회	조정신청 결의
6월 22일	노조쟁의조정신청(113개 병원)	산별중앙협약 5대요구안에 대한 조정신청
6월 30일	중노위 1차 사전조정회의	
6월 30일~ 7월 1일	노조 파업찬반투표	81% 투표에 69.3% 찬성
7월 4일	중노위 2차 사전조정회의	* 중노위 : 사측에 교섭들을 갖출 것을 권유 * 노조 : 단체협약 불이행 및 거부를 근거로 한 고소장 제출
7월 6일	* 2차 조정회의 권고안 제기 * 28개 지방공사의료원지부 조정 신청	* 노무사가 아닌 책임있는 사립대의료원장을 포함한 교섭단 구성, * 이후 교섭은 2004년 산별합의내용에 따라 축소교섭부터 진행할 것, * 산별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 * 노조의 산별5대협약을 중심으로 성실교섭 진행할 것
7월 7일	3차 조정회의	중노위, 사측에 교섭대표 위임문제의 빠른 해결 종용, 노조측에는 조정기간 연장 권유->노조측은 불가입장 피력
7월 8일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결정	노조 7월 8일 하루파업 중단선언, 임시총회 소집
7월 11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동기자회견 및 100여 지부장회의	직권중재회부 의혹해명요구, 7월 20일 파업결의
7월 12일	노조투쟁방침관련 기자회견	직권중재철회, 자율교섭으로 타결되지 않으면 7월 20일부터 전면 총파업선언
7월 13일	노조서울본부총력투쟁결의대회	* 중노위앞, "직권중재철회, 자율교섭보장" 집회 * 전노조 직권중재철회 리본달기
7월 15일	노동부 규탄, 직권중재철회투쟁 결의대회	조합원 상경투쟁
7월 19일	중재회부결정취소청구소송	보건의료노조
7월 19일	지역본부결의대회	전국 11개 지역본부 22개 병원로비에서 결의대회 개최
7월 20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 총36개 지부 전면파업(12개 거점병원), 부분파업 등 * 양대노총 전국단위노자대표자결의대회
7월 21일		* 총39개 병원(전면·부분파업, 간부·대의원파업, 천막농성) * 사회여론화 작업, 양대노총 303명의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의 총사퇴
7월 22일		* 중노위 앞 '직권중재철회와 노사자율교섭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특성별집회
7월 22일	중재재정	* 임금협약 : 공공부문 총액기준 3% 민간부문 총액기준 5%, * 노동과정협약 :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토요일휴무(2004.7.1 기존 시행사업장은 토요일외래진료 25% 이하로 축소, 2005.7.1 시행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외래진료를 50% 이하로 축소), 월1회의 무급생리휴가 및 보건수당 지급, * 기타사항 : 산별중앙협약요구 중 나머지는 중재재정대상에서 제외
7월 22일	노조 중집·지부장회의	* 산별 총파업은 23일로 종결, * 2005년 산별교섭은 계속, * 직권중재철회 투쟁전개, * 지부교섭과 투쟁전개, * 현장탄압 및 무노동무임금 대처, * 주5일제 조직적 공동대응

이다. 노사양측은 파업중에도 본교섭, 대표자회의, 축조교섭, 실무교섭 등 다양한 틀의 교섭을 진행하였다.

파업이 예견된 것은 6월 22일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노조의 경우 작년 14일간의 산별파업으로 인한 조직피로도가 크고 서울대 지부 탈퇴에 이어 3개 국립대가 차례로 탈퇴한 데다가 서울대 지부의 공공연맹 가입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파업이 어려운 조건이었다. 또한 교섭 초기,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교섭이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이 커서 파업에 대한 준비 역시 예년에 비해 늦었다. 2005년은 교섭에 최대한 주력하겠다는 노조의 의지도 강했다. 쟁의조정신청도 최대한 늦추었으며 각종 집회도 파업준비보다는 교섭압력용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대화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용자측의 경우 직권중재 회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화와 교섭을 중시하는 입장도 존재하였다. 결국 교섭이 결렬되긴 했지만 노사 모두 마지막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 특징은 노조측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유연해졌으며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해 주력하였다는 점이다. 7월 7일 전격적인 직권중재회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7월 8일 파업을 포기하였다. 또한 응급실 등의 필수업무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였고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나가면서도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대응에 주력하였다. 사회적 여론이 보건의료노조에 불리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의료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갖으며 노사분규가 시민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은 항상 중요하다. 그것이 노사분규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정도를 높여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네 번째 특징은 직권중재에의 전격회부였다. 사실 2004년의 경우 중노위가 유사한 조건에서 조건부 직권중재를 결정해 사실상 합법적 파업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번 직권중재 결정은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자 및 노동전문가들조차 교섭해태의 책임이 노조측보다 사용자측에 더 있다는 점을 들어 노조의 파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물론 중재안이 예년과 달리 노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형태로 내려지지 않았고 사실상 마지막 교섭(9차축조교섭)에서 노조가 합의하려 했던 것보다 부분적으로는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직권중재가 노사의 자율교섭과 노사관계의 안정적 제도화에 끼치는 영향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Ⅲ 보건의료 노사분규 원인 및 대안

1. 교섭결렬 및 노사분규의 원인

2005년 교섭결렬의 직접적 계기는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따른 교섭 틀의 부재, 주5일제와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양측의 시각 차이였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보건의료산업의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가. 갈등적 노사관계와 취약한 노사관계 환경

보건의료 노사관계는 파업의 반복, 파업일수 증가, 장기투쟁 병원의 증가 등 갈등적 노사관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역시 갈등적 노사관계를 증폭시킨다. 첫째, 노조의 낮은 조직률의 문제이다. 대규모 병원이 참여하고 있긴 하나 보건의료노조의 조직률은 10%로 낮은 편이다. 때문에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병원의 수가 적은 반면 병원들 간의 규모별 차이는 커서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병원 사용자측의 경우 두 가지 딜레마에 봉착한다. 하나는 소위 B4 중 참여하지 않거나 노조가 없는 3개 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병원)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며(중소병원도 마찬가지임),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의 위치, 경영구조 및 지불능력의 차이로 단일한 협상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것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둘째, 의사중심의 결정구조와 여성 중심의 사업장이 가지는 특징이다. 병원산업은 의사의 권한이 매우 크고 의사 내에서의 서열 그리고 의사 및 여타 직종간 서열이 매우 뚜렷하다. 의사집단이 상위에 있고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사무직 및 기타 직종들이 그 아래에 있는 철저한 직종간 위계를 형성한다. 이것이 의사=남성, 간호사 및 여타직종=여성이라는 성적 분단과 결합하여 위계구조를 강화한다. 사용자측은 상대적으로 여성 중심의 노조와의 대화 및 타협에 익숙하지 않고 노조 역시 유사한 면이 있어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다양한 직종 구성의 효과이다. 병원은 서로 다른 직무를 가진 6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종들 사이에 자원배분, 업무영역권, 의사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과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 들어 하위직종들부터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넷째,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는 노사자율교섭을 통한 타결보다는 직권중재에 의존하려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조측에서는 법을 뛰어넘는 극단적 투쟁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갈등적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왔다.

나. 병원특성별 차이

경영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병원산업 내부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순이익률을 보면 2001년 병원전체가 흑자로 전환되어 2003년에는 1.7%수준에 달하나 300병상 이상과 160병상 미만은 여전히 적자상태이다. 하지만 그 추세를 살펴보면 160 병상만이 경영수지의 개선이 매우 더딜 뿐 대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의료수의 순이익률

(단위 : %)

	평균	종 합 병 원				병원
		종합전문요양 기관	300병상 이상	160~299 병상	160병상 미만	
1996	-2.0	-2.5	-3.9	-3.2	-4.5	-0.3
1997	-0.3	-3.6	-1.0	-0.8	-2.0	1.5
1998	0.8	0.2	-0.6	-0.2	1.8	2.3
1999	0.5	0.4	-0.4	-4.9	-4.0	3.1
2000	-2.7	-4.9	-4.1	1.2	-1.2	3.2
2001	2.1	-0.6	-2.1	3.3	-4.8	5.6
2002	0.3	-1.8	-3.7	-0.4	-5.2	5.7
2003	1.7	-1.6	-1.1	1.1	-1.2	5.6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4).

그러나 이와 같은 병원규모별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 산별교섭에서 사용자측 내부의 상이한 요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2003년 300병상 이상 36.8%, 160~299병상 이상 31.2%, 160병상 미만 28.9%, 병원 37.0%)과 노동생산성(2003년 300병상 이상 148.6%, 160~299병상 156.0%, 160병상 미만 120.8%, 병원 173.0%)에서도 이와 같은 규모별 차이가 확인된다. 게다가 사용자측은 단일한 교섭대표를 구성하여 대응한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특성별로 노사 갈등구조 역시 차이가 난다. 이것이 자칫 대화보다는 갈등을 보다 쉬운 선택으로 간주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다. 취약한 법·제도 및 분쟁조정시스템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추이에서 보듯이 체불임금까지 포함한 임금인상요구와 관련한

노사분규는 1995년 37.5%에서 2004년 12.1%로 그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단체협약과 관련한 노사분규는 1995년 55.7%에서 2004년 83.5%로 늘어난다¹⁾. 또한 2000년 들어 급속, 보건 등에서의 산별 전환 및 비정규직 등의 초기업별 노사관계 형성문제와 맞물려 산별교섭을 포함한 초기업별 노사관계와 관련된 단체협약 노사분규의 비중이 늘어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노사 당사자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05년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노사정위 구성을 제기한 보건의료협약이 그러하다. 더불어 산별교섭 등 초기업별 노사관계의 틀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 미흡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단체교섭의 틀, 구조, 방식 등의 매우 기초적인 것들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 결국 법·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변화된 조건에 걸맞게 노사자율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해결유형별 노사분규 발생추이를 보면 노사 직접교섭 외의 분쟁조정은 강제중재 외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라. 의료전달 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시각차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산업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주로 종합병원과 병원이다. 그런데 전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두 가지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 공공성 및 형평성을 중시하는 관점과 경쟁력 및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그것이다. 전자는 주로 보건의료노조가 주목하는 것이며 사용자측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또 민간자본 여부나 그 비중에 따라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산별교섭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주5일제 및 임금인상에서부터 노조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노사간에 그리고 각각의 내부에서도 차이를 낳는다.

2. 정책적 대응방안

2005년 산별교섭의 추이 및 주요 쟁점, 노사분규의 원인과 양상 등을 살펴볼 때 노사관계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월간노동리뷰, 통권 제8호, 2005, 130쪽 참조

가. 새로운 노사관계 틀과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조율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전환의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으며 산별적 노사관계로의 이행은 거의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보인다. 그런데 사측의 경우 이에 대해 쉽사리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제도적 정비도 미흡하다. 때문에 폭넓은 동의와 더불어 산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우선 산별적인 노사관계가 노사 양측 모두에 상생적일 수 있음이 분명해져야 한다. ①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② 공공성과 형평성은 물론 경쟁력과 효율성에서도 산별체제로의 전환이 유리하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양측의 요구안만 발표되고 토론될 것이 아니라 산별전환의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 및 동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을 넘어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준비되어 노사관계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중노위 중재안을 보면 노조의 5대 요구안 가운데 임금협약과 노동과정협약만 포함되었으며 산별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은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사항, 즉 이익분쟁만을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권리분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교섭틀 문제와 인사·경영권과 연결된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문제가 중재안에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산별체제의 조정·중재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용협약의 경우, ‘정규직 이기주의’로 비판받고 있는 정규직 노조가 주도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및 조직화 그리고 정규·비정규 격차완화를 산별교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완화의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시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것은 2005년 산별교섭의 커다란 아쉬움이다. 물론 직권중재가 노조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번에는 많이 불식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직권중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노사 양측의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있고 파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위헌성 시비나 ILO 기준과의 불일치 역시 문제로 남아있다. 노사자율교섭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 구체적인 교섭틀 및 교섭구조의 모색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모색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병원협회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후자가 주요한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또 사용자측이 중노위 권고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노무사 위임문제는 일정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사용자단체 구성은 쟁점으로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중교섭 이중쟁의 역시 향후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산별체계가 안정화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본조-지부의 중층적 교섭은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경우 본조와 지부의 교섭대상과 방식, 지부의 쟁의가능성은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조건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경험에 기초하여 적절한 교섭구조를 모색할 때이다.

다. 노사양측의 신뢰와 존중의 문화형성

노사 양측은 상호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 합의된 사항에 대한 준수가 요구된다. 합의사항의 준수가 반복적으로 경험되고 관행적으로 정착될 경우 상호간의 신뢰가 증진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대화통로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상호 대화의 메커니즘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의료전달체계의 정착’ 등 보건의료산업에서 주요한 의제들을 선정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라. 정부의 적절한 행정지도 및 조정서비스의 제공

예를 들어 주5일제는 2004년 산별합의이며 2005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입각해서도 시행해야 할 사안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 부분시행 혹은 시행선언을 하고 있는 곳은 조사대상 73개소 중 18개소(24.7%)에 불과하다. 또 7월 2일 현재 노조측 조사에 의하면 주5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병원은 작년 산별합의서를 체결한 104개 병원 가운데 10개에 불과하다.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병원 10곳 중 6곳이 이와 관련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보고되었다. 법이 준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사 산별협약 적용을 받는 병원이 전체 중소병원 850개 중 20개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사용자측이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노조가 없는 병원과 비교해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사전 지도 및 대응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산별합의 준수가 쉽지 않을 것이며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과 신뢰 확립도 어려워진다. 정부의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산별교섭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오류도 많으며 노사 당사자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도 제기된다. 노사자율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의 적절한 조정‘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사관계가 직권중재가 아니라 노사자율교섭에 의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초기 단계의 조정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IV. 결론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었을 때만해도 산별교섭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산별협약안이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2005년 보건의료 산별교섭은 더디기는 하지만 분명 진전되었다. 노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강제나 무력화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교섭이든 투쟁이든 노사가 파트너 관계로 발전할 때만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 등의 몇 부분에서 산별교섭이 노사 모두에게 동시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2005년 교섭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법·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신뢰와 존중의 규범이 정착된다면 향후 산별교섭은 경쟁력과 형평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산별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경험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별 지부의 존재가 기업별 의식을 장애하는 요소이며 이것이 끊임없이 산별적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한국 노사관계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인지되어야 한다. 지금은 노사 양측에서 시도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산별 실험을 추적하며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바른 길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KLI**

<참고문헌>

(월간)노동리뷰, 2005년 7월호.

박호순·유규수·이창은, 「의약분업전후 병원재무구조평가」, 『병원경영학회』 8(3), 2003.

보건복지부, 「2005년 보건의료정책방향」, 주40시간제 세미나 자료, 2005.

사립대병원회의, 산별교섭 News 1~23호, 2005a.

_____, 산별교섭대응자료, 2005b.

사립대학병원 노사협력팀장 협의회, 노동부 간담회 회의자료, 2005.

이주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한국의 산별운동과 산별교섭: 보건의료노조 2004 산별 교섭 평가와 2005 전망」, 『노동사회』 2월호, 2005.

이주희, 「보건의료산업 교섭실태와 개선방안」, 노동부, 200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2002년 공동요구안」, 교섭방침 설명회 및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간담회, 보건의료산업노조 노사간담회 자료집, 2002.

_____, 「2005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협약 해설집」, 2005a.

_____, 「2005 임단협 조합원 설문결과」, 2005b.

_____, 「투쟁속보」, 제1~64호, 2005c.

_____, 「2005 보건의료노조 교섭현황 및 쟁점」, 2005년 5월 19일 노동부 산별T/F 간담회자료, 2005d.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 병원경영분석』, 2004.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

- 맞벌이가구를 중심으로 -

황수경·김가을*

I. 머리말

우리나라 유배우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종종 남편의 경제적 지위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기혼여성의 자산은 남편의 은닉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조세정책이 수립되는가 하면 배우자에 대한 사회보장 수혜는 여성을 전업주부로 간주하고 논의되기 일쑤다. 성 역할(gender role)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 가부장주의가 많이 탈색되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부인은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보다는 소득원인 남편의 부양가족 혹은 보조적 소득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자료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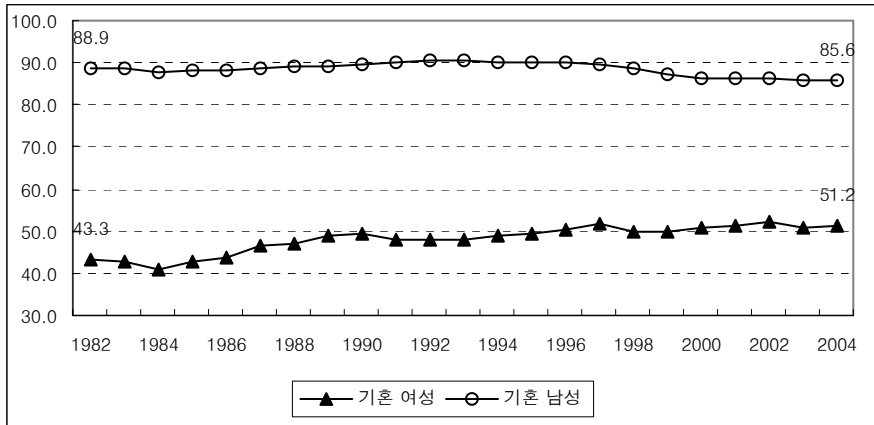
1982년 당시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3.3%에 불과하여 유배우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88.9%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유배우자 여성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이 절반을 넘어 2004년 현재 51.2%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1). 물론 유배우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70%에 달하는 선진국들에 비하면¹⁾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유배우자 남성 참가율이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증가세를 지속해옴에 따라 부인과 남편간의 경제활동 격차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 황수경=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skhwang@kli.re.kr), 김가을=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kimgayul@kli.re.kr).

1) 2000년 현재 자녀가 있는 부부 중 맞벌이 비율은 영국 70.2%, 네덜란드 67.3%, 독일 60.3%, 프랑스 64.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EU Eurostat news release STAT/02/60, 21 May 2002).

[그림 1] 기혼(유배우자)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근거는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기혼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기혼남성 월평균 임금의 58.0%에 불과하다.²⁾ 1982년 당시 이 수치가 42.3%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상당히 개선된 수준이다. 기혼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취업한 기혼여성의 임금수준도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평균적인 의미에서 부인이 남편에 비해 경제활동에서 부차적인 지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개인자료를 이용한 이 같은 통계수치는 배우자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 부인과 남편의 경제적 지위로 직접 연결지어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부의 경제활동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부인과 남편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가구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을 분석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직접적인 분석대상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부로 한정된다.³⁾ 이 중 부인의 취업을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부부 자료

2)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는 배우자 유무에 관한 정보가 없다. 한편 임금은 상여금 월할분이 포함된 월평균 급여총액으로 산출되었다.

3) 가족구성원 중 부부는 한 가구 내에서도 복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부들을 빠짐없이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 KLIPS 가구자료에서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68개)로부터 추출가능한 모든 부부 형태를 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부부 자료를 구성하였다. 한편 학력·고용·소득 관련 변수들은 KLIPS 개인자료에서 제공하므로 남편과 부인 각각의 개인정보 중 분석에 필요한 부분을 개인고유번호를 이용해 부부 자료와 결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차년도(1998)의 경우 2,863쌍 5,726명이고, 7차년도(2004)의 경우는 2,705쌍 5,410명이다.

가 사용되었고, 소득 분석에는 7차년도 부부 자료 중 맞벌이 부부이면서 소득정보에 결측치가 없는 607쌍 1,214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II. 기혼여성의 취업·소득과 남편소득간의 관계

1. 남편 소득분위별 기혼여성의 취업비율

맞벌이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소득원이 종래의 남편 1인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부부가 함께 버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구소득 수준(혹은 남편의 소득수준)과 체계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면 가구소득 분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의 기혼여성일수록 부족한 가구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면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구소득 분배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반면 결혼을 통해 ‘유유상종의 짝짓기’(positive assortive mating)가 이루어진다면 고소득 배우자를 가진 기혼여성이 인적자원 면에서 경제활동에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고 그 결과 고소득 가구에서 부인의 취업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가구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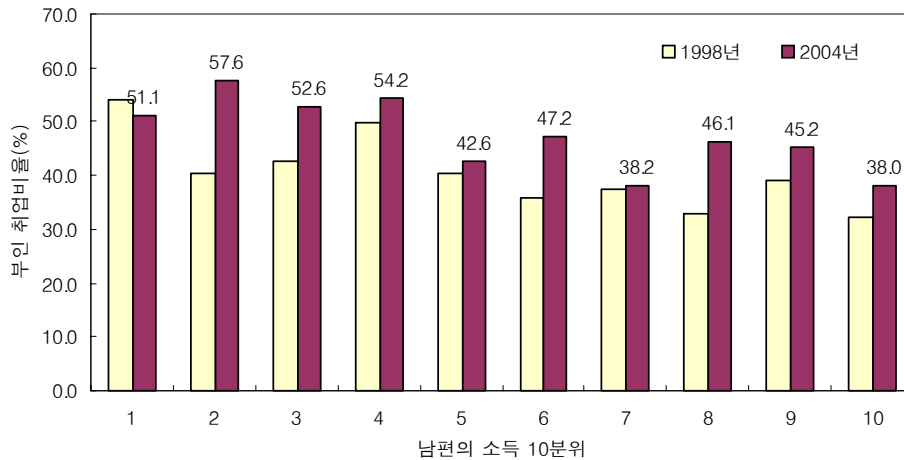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가구소득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고 있을까? <표 1>은 남편의 월평균 소득을 10분위로 범주화하여 각 분위에 속한 부인들이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2004년도 유배우자 가구 중 기혼여성의 평균 취업비율은 47.3%로서,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40.2%)에 비해 약 7% 정도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남편소득 10분위별 기혼여성 취업비율(1998, 2004)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8	총인원(명)	2,863	286	286	287	286	286	287	286	286	287	286
	취업자(명)	1,152	155	115	122	137	115	103	107	94	112	92
	비율(%)	40.2	54.2	40.2	42.5	49.9	40.2	35.9	37.4	32.9	39.0	32.2
2004	총인원(명)	2,705	270	271	270	271	270	271	270	271	270	271
	취업자(명)	1,279	138	156	142	147	115	128	103	125	122	103
	비율(%)	47.3	51.1	57.6	52.6	54.2	42.6	47.2	38.2	46.1	45.2	38.0

주: 남편의 소득 10분위는 조사년도의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7차(2004년) 원자료.

[그림 2] 남편의 소득분위에 따른 기혼여성 취업비율(1998, 2004)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저소득 가구인 1~4분위에 속한 기혼여성들의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고소득 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비율을 보이고 있다. 1998년과 비교하면 최저 소득분위인 1분위를 제외하면 여타 소득수준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고 중간소득층에서 증가폭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부분적인 굴곡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부인의 취업비율이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 고소득층 기혼여성 취업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점차 혼재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맞물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중간소득층에서보다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에서 부부간 역할관계나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더 많은 변화가 수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2. 남편 소득분위별 기혼여성의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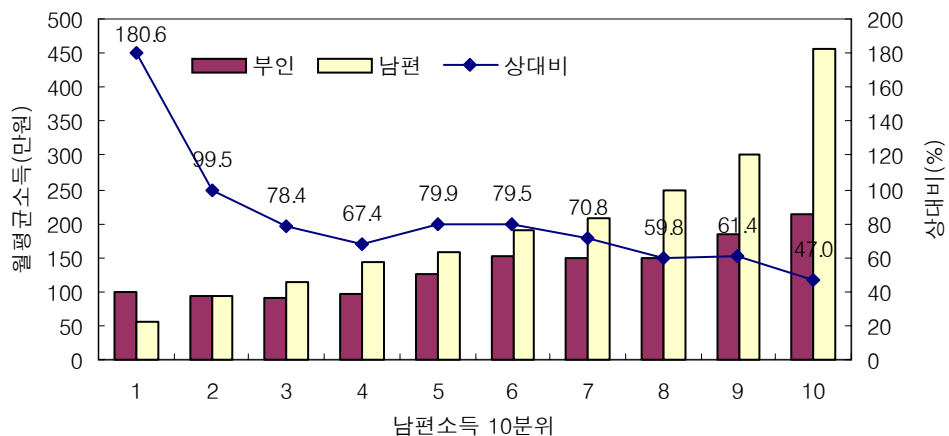
이제 관심을 소득으로 돌려보자. 기혼여성의 소득은 남편소득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부부(607쌍)만을 대상으로 하여 남편과 부인의 월평균 소득 분포를 살펴본 것이 [그림 3]이다.

2004년 현재 남편과 부인 각각의 전체 평균 월소득액은 남편의 경우 197만원, 그리고 부인은 135만원으로서 일반적인 예상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벌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소득분위별로 각 범주에 속한 부부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소득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각 구간 내에서의 소득평균치는 남편이 부인보다 높아 가정내 1차 소득자가 남편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재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부부간 소득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 이러한 전통적 개념이 고소득 가구에서 더 지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는 1분위와 2분위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 소득층인 1분위 부인들의 월평균 소득액은 남편 월평균 소득액의 180%를 상회하고 있다. 2분위에서는 이와 같은 역전은 보이지 않지만 부부간 거의 같은 수준의 소득액 분포를 보임으로써 ‘남편이 더 많이 번다’는 일반적 통념이 지지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내 남편과 부인의 역학관계나 경제적 지위를 분석함에 있어 평균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다양성을 전제로 가구 내에서의 남편과 부인의 특성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할 유인을 제공한다.

[그림 3] 맞벌이부부의 월평균 소득분포



주: 상대비는 남편소득 대비 부인소득의 비율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 원자료.

III. 맞벌이가구에서 부인의 경제적 지위

1. 부부의 학력결합과 부부합산소득

맞벌이부부 내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비교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학력이다. 개인 수준에서 볼 때, 학력은 임금과 정(+)의 관계를 갖는 대표적인 인적자본 변수이다. 따라서 부부를 단위로 소득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부인과 남편의 학력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 이를 매개로 하여 소득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표 2>는 분석대상 커플들의 학력결합과 각 결합 셀에 있어 부부합산 연소득 분포를 보여준다.

우선 맞벌이부부간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이 표에서 드러나듯이 결혼에서의 일반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유유상종의 짝짓기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졸을 제외하고는 모든 셀에서 동등한 학력결합의 백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졸 이하의 남성은 중졸 이하의 여성과, 고졸남성은 고졸여성과, 그리고 대졸 이상 남성은 대졸 이상 여성과 혼인한 비율이 가장 높다. 이들 유형의 부부가 전체 부부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진한 회색영역). 여기에 덧붙여 부부간 학력결합의 비대칭

<표 2> 맞벌이부부의 학력 분포 및 부부합산 연평균소득(N=607쌍)

부인학력 \ 남편학력	중졸 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백분율 분포(% , 빈도)				
중졸 이하	22.4 (136)	9.2 (56)	0.3 (2)	0.2 (1)
고졸	2.8 (15)	26.4 (160)	3.8 (23)	8.7 (53)
전문대졸	0.0 (0)	1.5 (9)	1.8 (11)	6.7 (38)
대졸 이상	0.0 (0)	1.0 (6)	0.8 (5)	15.2 (92)
부부의 연평균소득(만원)				
중졸 이하	2,288	2,935	3,264	3,012
고졸	2,263	3,535	3,769	4,527
전문대졸	·	5,021	4,512	4,878
대졸 이상	·	3,516	5,090	6,278

주: 연평균소득은 조사 전년도(2003년) 부부 각각의 연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 원자료.

성도 두드러진다. 즉,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진 부부의 분포는 29%(진한 회색영역의 우측 상단)를 차지하는데 반해 반대로 남편의 학력이 부인보다 낮은 경우는 6%(진한 회색영역의 좌측 하단)에 불과하다.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약 94%에 이르는 거의 모든 부부가 남편이 부인보다 학력이 높거나 같은 학력결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맞벌이부부의 경우 동등학력결합이 절반 정도(50%)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인 학력이 낮은 경우가 28%, 부인 학력이 높은 경우가 22%로 비교적 대칭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4) 우리의 경우 매우 가부장적 특성을 나타내는 학력결합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과거 여성의 교육기회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았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설사 학력의 성별 격차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저조한 경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 편중된 학력결합에 의한 가구간 소득격차의 확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부부의 학력결합 셀에 따른 연평균소득 분포를 보여주는 <표 2>의 하단부는 이러한 학력의 짝짓기 결과가 가구소득에서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기혼여성 자신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남편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연평균소득은 증가한다. 그러나 남편의 학력보다는 부인의 학력이 부부합산소득 증대에 더 확연한 효과를 미치고 있음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2. 소득분위 범주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소득분포

남편과 아내의 소득분위를 각각 5분위로 범주화하여 각 범주에 속한 맞벌이부부의 분포와 각 셀에 속하는 부부들의 연소득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3>의 상단은 남편과 부인의 소득분위 교차표인데,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가 같은 소득분위에 있는 경우가 전체의 약 31%를 차지한다.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은 소득분위에 있는 경우는 33%,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은 소득분위에 있는 경우는 36%를 차지하여 학력결합에 비해 소득결합의 편중은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표의 하단의 연평균소득 분포는 부부의 소득분위 결합이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남편의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부인의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부부합산 소득액 역시 증가한다. 다만, 남편소득이 3분위, 부인소득이 5분위인 경우 연소득이 전체적인 추이와 달리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셀의 부인 1인이 1억 2천만원이라는 정상치를 벗어난 높은 값을 갖기 때문에 평균값이 과대추정된 결과로, 이 한

4) 미국 수치는 CPS 1993년도 자료로부터 추출된 것이다. Winkle(1998)의 44쪽 참조.

사례를 제외하면 평균소득액은 5,765만원이 되어 전체적인 추이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한편, 학력결합의 결과와는 달리 소득결합의 결과에서는 남편의 소득수준이 부인의 소득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남편의 분위 상승에 의한 부부합산소득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맞벌이부부의 월평균 소득 5분위 분포 및 부부합산 연소득 분포

남편소득 부인소득	1분위 (n=121)	2분위 (n=121)	3분위 (n=121)	4분위 (n=121)	5분위 (n=121)
백분율 분포(% , 빈도)					
1분위	5.4 (33)	5.3 (32)	3.5 (21)	3.6 (22)	2.1 (13)
2분위	5.6 (34)	5.6 (34)	3.6 (22)	3.3 (20)	1.8 (11)
3분위	4.8 (29)	4.3 (26)	4.9 (30)	3.5 (21)	2.5 (15)
4분위	2.6 (16)	3.8 (23)	4.4 (27)	4.9 (30)	4.1 (25)
5분위	1.5 (9)	1.0 (6)	3.5 (21)	4.6 (28)	9.7 (59)
부부의 연소득 분포(만원)					
1분위	1,320	2,031	2,562	3,311	4,584
2분위	1,654	2,175	2,841	3,502	4,656
3분위	1,991	2,656	3,068	3,601	4,808
4분위	2,789	3,615	3,816	4,758	6,040
5분위	3,616	4,080	6,148*	5,930	7,861

주 : 1) 연소득은 조사시점의 전년도(2003년)의 연소득으로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보고한 연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2) 이 수치가 전체적인 추이와 달리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셀의 부인 1인이 정상치를 벗어난 매우 높은 값(1억 2천만원)을 갖기 때문임. 이 사례를 제외하면 평균소득액은 5,765만원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 원자료.

3. 맞벌이부부 내 부인의 상대적 소득수준

〈표 4〉는 남편과 부인 각각의 소득수준과 함께 부부간 소득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우선 남편소득을 기준으로 부인의 상대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으로는 부인소득이 남편소득의 68.7%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앞서 [그림 3]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분위별로 편차가 매우 커 저소득 분위인 1분위에서는 평균적으로 부인의 소득이 남편소득을 훨씬 초과하여 남편소득의 약 1.3배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고소득 분위인 5분위에서는 부인소득은 남편의 절반 수준인 52.5%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일반적으로 남편소득이 낮을수록 가구 내에서 부인이 경제활동에 주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가구별로 부부의 소득을 비교하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맞벌이부부 가운데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쌍은 전체의 2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전체 맞벌이 가정의 1/5 이상에서 실제로는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부인이 남편보다 25% 이상 버는 경우는 13.3%, 50% 이상 버는 경우는 7.4%, 두 배 이상 버는 경우도 3.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맞벌이부부의 월소득 비교

	전 체	남편의 월소득 분위		
		1분위	3분위	5분위
부인의 월소득 평균(천원)	1,351	965	1,379	1,987
남편의 월소득 평균(천원)	1,967	736	1,727	3,785
남편소득 대비 부인소득 비율(%)	68.7	131.1	79.8	52.5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부인(%)	20.9	47.2	19.1	8.9
남편보다 25% 이상 버는 부인(%)	15.8	43.8	14.5	4.1
남편보다 50% 이상 버는 부인(%)	9.9	31.4	8.3	1.6
남편보다 100% 이상 버는 부인(%)	5.8	20.7	5.0	0.8

주 : 소득비교에는 조사년도의 월평균소득액이 사용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 원자료.

〈표 5〉 맞벌이부부의 소득수준 비교 - 미국(1993)

	전 체	남편의 월소득 분위		
		1분위	3분위	5분위
남편소득 대비 부인소득 비율(%)	73.6	133.5	75.8	47.8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부인(%)	25.4	57.2	20.6	6.5
남편보다 25% 이상 버는 부인(%)	13.3	41.4	9.7	2.6
남편보다 50% 이상 버는 부인(%)	7.4	31.6	4.8	1.0
남편보다 100% 이상 버는 부인(%)	3.3	18.3	1.4	0.4

주 : 소득비교에는 시간당 임금이 사용됨.

자료 : Winkle(1998), 46쪽의 Table 4.

남편소득이 적을수록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여성이 많고 남편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감소한다. 1분위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인들이 남편보다 더 많이 벌고 3분위에서도 이 비율은 19.1%에 달하지만 5분위에서는 8.9%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남편이 아주 많이 버는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사회의 상당수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 면에서 뒤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표 5). Winkle(1998)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맞벌이가구의 25.4%가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소득을 갖고 있

으며 1, 3, 5분위별로 각각 57.2%, 20.6%, 6.5%의 부인이 남편보다 고소득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분위별 편차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표 6>은 기혼여성의 고용관계가 덜 안정적인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맞벌이부부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부인의 기여와 부부간 소득의 상대적 지위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6> 맞벌이부부의 연간소득 비교

	전체	남편의 연소득 분위			부부합산 연소득 분위		
		1분위	3분위	5분위	1분위	3분위	5분위
부인의 연소득 평균(만원)	1,525	966	1,599	2,312	638	1,134	3,276
남편의 연소득 평균(만원)	2,290	850	2,041	4,268	940	2,167	3,885
부부합산 연소득(만원)	3,815	1,816	3,640	6,580	1,577	3,301	7,161
남편소득 대비 부인소득(%)	66.6	113.6	78.3	54.2	67.9	52.3	84.3
부부합산소득 대비 부인소득(%)	40.0	53.2	43.9	35.1	40.5	34.4	45.7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부인(%)	19.9	43.8	18.2	7.3	26.5	12.4	28.5
남편보다 25% 이상 버는 부인(%)	13.3	31.4	14.9	2.4	18.2	8.3	19.5
남편보다 50% 이상 버는 부인(%)	8.6	25.6	7.4	0.8	14.9	4.1	14.6
남편보다 100% 이상 버는 부인(%)	5.3	18.2	4.1	-	9.9	2.5	8.1

주: 1) 소득비교에는 조사당시 전년도의 연간소득액이 사용됨.

2) 표의 중간 열에서는 남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성하였고, 우측 열에서는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성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 원자료.

대체적인 결과는 <표 4>의 패턴과 거의 유사하나, 남편소득에서 부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남편보다 소득이 많은 부인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간을 단위로 할 때 부인의 경우 남편보다는 총근로일이 적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부부소득에서 부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맞벌이가구 평균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부합산 연소득을 5분위 범주로 나누어 비교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특징들과는 다소 다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6>의 우측 세 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고소득 분위인 5분위에서 남편소득 대비 아내소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아내의 비율에서도 저소득 분위보다 고소득 분위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중간소득 분위에서는 소득에 있어 남편의 확고한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부부합산소득이 소득수준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기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소득이 가구의 소득수

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맺음말

올해 우리 사회는 여성 경제활동인구 천만 시대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사상 처음으로 마(魔)의 50%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데 가장 확실하게 기여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기혼여성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가구의 보조소득원이거나 경제적으로 부차적인 지위에만 머물지 않는다. 맞벌이가구 중 5분의 1이 남편소득보다 부인소득이 많은 가구로 특징지어지며 부인의 소득 정도에 따라 가구 전체의 소득수준 자체가 크게 변동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온전하게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평가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실의 변화를 토대로 사회적 통념이나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 Juhn, Chinhui & Kevin M. Murphy(1997), "Wage Inequality and Family Labor Supply",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5, No.1, Part 1(Jan. 1997), pp.72~97.
- Winkler, Anne E.(1998), "Earnings of Husband and Wives in Dual-Earner Families", *Monthly Labor Review*, April 1998, pp.42~48.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최적반응

– 임금조정인가 고용조정인가 –

신동균 · 전병유*

I. 머리말

일자리 창출 내지 실업과 관련된 논의에서 임금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적인 수요 이론에 따르면 노동의 한계실물생산이 체감하는 상황에서 노동의 수요는 임금과 역의 상관관계를 맺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상향조정과 같이 특정 집단을 임금상승을 통하여 돕고자 하는 어떠한 정책도 그 유효성 평가에 있어서는 임금상승에 따라 추가적으로 파괴되는 일자리를 반대급부로서 고려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정부의 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임금조정 자체가 비자발적인 실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케인지안 및 뉴케인지안(New Keynesian) 이론들은 실물시장의 변동에 실질임금이 유연하게 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한다고 믿어 왔다. 결국 임금과 고용 변동에 관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어떠한지에 따라 정부 개입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실질임금의 유연성 내지 경직성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도 매우 풍부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크게 나누면 ①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에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조정되는가와 ② Blanchflower and Oswald류의 임금곡선(wage curve)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전자의 연구들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Solon, Barsky and Parker(1994)를, 후자에 대해서는 Blanchflower and Oswald(199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편 국내연구들로서 허재준·신동균(2002)은 한국의 경우도 비록 거시시계열데이터상에서는 임금이 경직적으로 나타나나 미시데이터상에서는 임금이 실업률 변동에 매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 신동균=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dgshin@hanyang.ac.kr), 전병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bycheon@kli.re.kr).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신동균·전병유(2002)는 임금함수에 총실업률과 지역실업률을 동시에 포함시키고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지역실업률보다는 일차적으로 총실업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소개된 연구들 외에도 임금유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으나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임금유연성을 고용유연성과의 관련하에 동시에 분석하고 있지 않아서 실업 및 일자리 창출에 매우 제한적인 시사점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실질임금의 경직성 내지 유연성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접근방법은 임금변동을 고용변동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의 수요 충격(negative demand shock)에 직면하여 기업들은 고용과 임금의 하향조정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의 왕성한 활동, 정부의 규제 등을 요인으로 임금이 하방으로 경직적이라면 기업들은 원하는 수준보다 높게 유지된 임금하에서 보다 큰 고용조정을 통하여 부의 수요충격에 대응할 것이다. 이 경우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비자발적 실업을 낳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는 임금의 하향조정뿐만 아니라 고용의 하향조정까지 동시에 유발하여 임금조정과 고용조정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임금과 고용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두 변수의 변동 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임금조정과 고용조정은 기업의 전략 변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증분석도 기업단위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해 기업들이 실제로 임금과 고용 중 어느 변수를 주요 조절수단으로 사용하는가? 예를 들어 경기하강에 대한 적응수단으로 고용의 감축과 임금의 삭감 중 어느 수단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체질과 상대적으로 잘 부합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 연구에서는 기업이 수요 변동에 직면하여 임금과 근로자수(좁은 의미의 고용) 중 어느 수단을 주로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는가를 연구한다. 또한 비록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엄밀한 분석은 어렵지만 근로시간의 조정과정도 아울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기업들의 적응과정이 정의 수요충격과 부의 수요충격 사이에서 대칭적(symmetric)인가를 분석하며 나아가 산업별, 기업규모별, 그리고 노조유무별로 그 적응패턴이 상이한가를 분석한다. 제Ⅱ장에서는 분석방법과 데이터를 소개하고, 제Ⅲ장에서는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결과들이 갖는 경제학적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하며, 제Ⅳ장에서는 현 연구의 발견을 요약한다.

II. 추정 방법 및 데이터

기업이 생산량 조절시 임금과 고용 중 어느 변수를 주요 조절변수로 사용하는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추정한다.¹⁾

$$\Delta \ln Y_{ijt} = \alpha' X_i + \beta' X_j + \gamma' X_t + \delta \Delta \ln S_{ijt} + \varepsilon_{ijt} \quad (1)$$

여기서 Δ 는 $(t-1)$ 기와 t 기 사이의 변수의 차분값을 말하고, Y_{ijt} 는 j 산업에 있는 기업 i 의 t 연도에 있어서의 대응변수(평균실질임금, 고용, 혹은 근로시간)를 말하며, X 는 통제변수들을 나타낸다. S_{ijt} 는 j 산업에 있는 기업 i 의 연도 t 에서의 실질매출액 성장률을 나타내며 이는 기업단위에서의 수요 충격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계수(δ)는 탄력성으로서 기업단위의 수요변화에 임금, 고용 혹은 근로시간이 얼마나 경직적 혹은 신축적으로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 실질임금과 실질매출액을 유도함에 있어서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그 밖의 통제변수들에 대해서는 제III장에서 추정결과를 보고할 때 소개하겠다.

현 연구에서는 등식 ①을 기본 모형으로 하면서도 수요충격에 대한 임금 및 고용 면에서의 기업의 반응 정도가 다양한 집단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우선 실질매출액 성장률과 노조 더미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임금과 고용의 반응정도가 비노조기업과 노조기업 사이에 어떻게 다른가를 검토한다. 그 밖에도 기업들의 수요충격에 대한 대응방식에서의 차이를 산업별로 분석하기 위해 산업더미 변수와 매출액 성장률과의 상호작용을 포함시켜 분석하며, 나아가 이러한 조절방식이 감량 경영과 확대 경영시 다른 패턴을 보이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매출액이 증가할 때를 1로 놓고 감소할 때를 0으로 놓은 더미변수를 매출액 성장률과 상호작용시켜서 추정한다.

본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는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에서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1999, 2000, 그리고 2001년에 수집한 기업단위의 정보와 (향후 이를 한신정 데이터라 칭함) 한

1) 현 연구에서 채택한 모형은 Holzer and Montgomery(1993), Brannon(1997) 등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모형들과 같다.

국노동연구원에서 2002, 2003, 그리고 2004년도에 걸쳐 수행한 사업체패널조사이다(향후 이를 노동연 데이터라 칭함). 노동연 데이터는 사업장 단위의 데이터이므로 동일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을 소지할 경우 매출액에 대한 응답이 모호해 질 수 있다. 실제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동일기업 내에 있는 사업장들이 응답한 매출액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연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동일기업 내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들이 응답한 매출액이 모두 일치할 때에만 사용하기도 하였고 아예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표본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고려하였다.

한신정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임금, 종업원수, 매출액 성장률은 1999~2000년과 2000~2001년 두 기간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임금과 매출액 변수를 생산자 물가지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노동연 데이터의 경우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 임금성장률의 경우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01~2002년이다. 이 임금 성장률 변수는 2003년 조사에 있는 “지난 해 (2002년) 최종 임금인상률은 얼마입니까?”라는 설문 항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각 사업체는 통상임금과 총액임금 기준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신정 데이터와의 일치성을 위해 총액임금 기준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도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졌지만 계수들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에 상응한 매출액 성장률은 2002년과 2003년 조사 기준으로 작년의 매출액(즉, 2001년과 2002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불행하게도 동일한 질문을 2003년도를 제외한 어느 연도에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임금과 매출액을 디플레이트할 필요도 없었다. 본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는 고용성장률의 경우 2002~2003년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매출액은 작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데에 반해 사업장별 고용규모는 현 시점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연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임금조정 시점과 고용조정 시점은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신정 데이터와는 달리 노동연 데이터는 실제의 주당 근로시간을 보고하고 있어서 기업이 수요충격시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가를 연구할 수 있게 한다.

성장률로 표시한 각 변수들의 값은 경우에 따라 심한 극단값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400배 증가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임금과 고용증가율이 -100%인 경우도 있다. -100%의 고용증가율은 기업의 도산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수백배의 매출액 증가도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러한 극단값들은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될 표본의 규모가 대략 400~50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극단값은 평균회귀모형의 추정치들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의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모든 성장률 변수들의 값이 -70% 이하 그리고 500%

이상인 경우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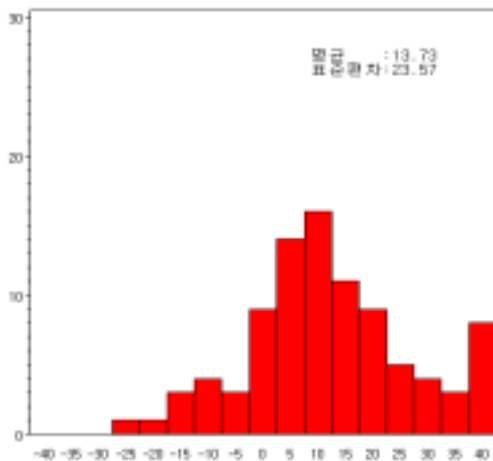
III. 추정 결과

1. 기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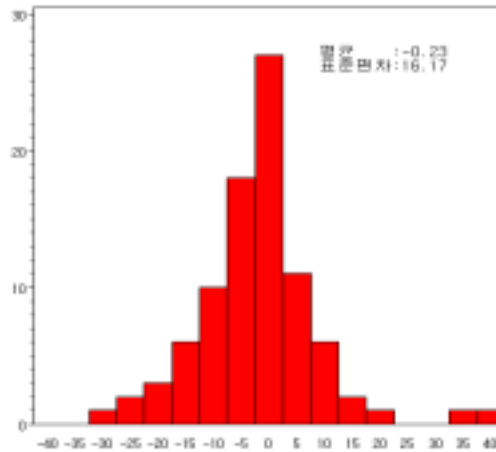
기업들이 기업단위의 수요충격시 임금과 고용 중 어느 변수를 주요 조절변수로 사용하는가를 위의 등식을 이용하여 분석하기 전에 [그림 1]부터 [그림 6]은 한신정 데이터에 근거하여 임금과 고용조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르며 정과 부의 수요충격시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를 기술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막대그래프의 구간은 5%이며 횡축의 눈금들은 각 구간의 중앙값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횡축의 값이 0이란 것은 표준화된 임금이나 고용변동률이 $-2.5 \sim 2.5\%$ 구간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그림 1]에 나타난 임금조정률의 분포를 보면 0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임금조정률이 양인 기업들이 음인 기업들보다 훨씬 많아 임금조정이 하방으로 경직적일지 모른다는 추측을 갖게 한다. 평균 임금조정률은 약 14%에 이르고 표준편차도 약 24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림 2]는 고용조정률의 분포를 그린 것이다. 평균 고용조정률은 0%를 약간 밑돌며 분산도 임금조정률의 그것보다 낮다.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임금조정률의 분포와 비교하여 고용조정률의 분포는 비교적 대칭적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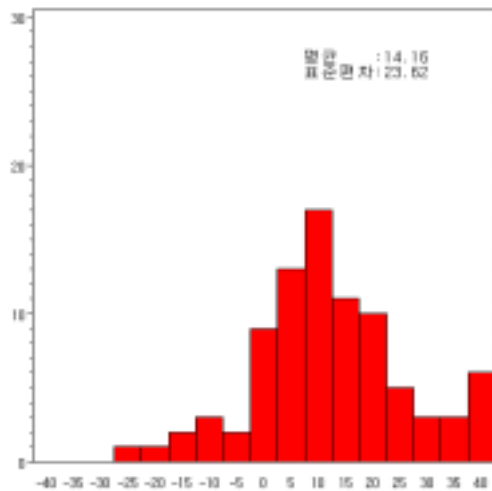
[그림 1] 임금변동률의 분포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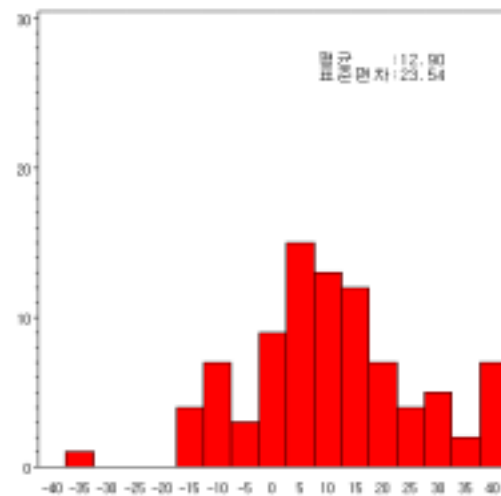
[그림 2] 고용변동률의 분포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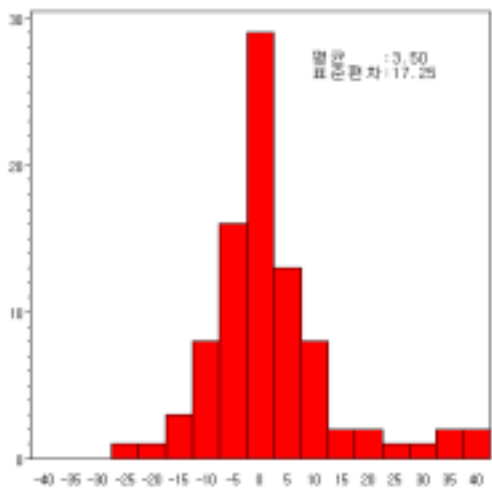
〔그림 3〕 정의 수요충격시 임금변동률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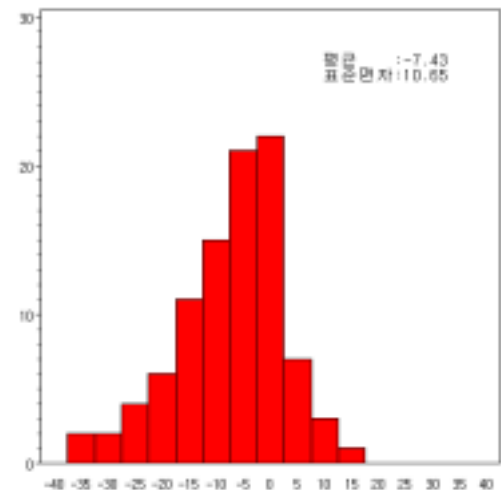
〔그림 4〕 부의 수요충격시 임금변동률의 분포



〔그림 5〕 정의 수요충격시 고용변동률의 분포



〔그림 6〕 부의 수요충격시 고용변동률의 분포



임금조정과 고용조정이 정의 수요충격(매출액 신장)과 부의 수요충격(매출액 감소)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3]과 [그림 4] 그리고 [그림 5]와 [그림 6]은 임금조정과 고용조정의 분포를 정과 부의 수요충격의 경우로 구분하여 도식화하고 있다. 우선 [그림 3]과 [그림 4]를 보면 임금조정의 비대칭성은 현저하게 관찰된다. 정의 수요충격시 임금의 평균 조정률은 약 14%에 이르고 부의 수요충격시에도 약 13%에 이르고 있다. 달리 표현하여 부의 수요충격시에도 임금은 좀처럼 하향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임금조정과는 달리 [그림 5]와 [그림 6]을 보면 고용조정은 매우 대칭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정의 수요충격시 고용조정률은 평균 3.5%에 이르고 부의 수요충격시에는 -7%를 하회하여 고용조정은 전혀 하방으로 경직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임금조정과 고용조정

이상의 논의는 임금과 고용조정의 규모와 패턴을 매출액 변동률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진행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식 (1)에 근거하여 임금과 고용조정의 크기 및 패턴을 “매출액이 1% 증가할 때”로 표준화하여 분석한다. 우선 <표 1>은 한신정 데이터와 노동연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신정 데이터에는 성장률로 표시된 각 변수의 관찰치가 2개 연도에 걸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한 연도의 관찰치들을 나타내는 연도 더미를 포함시켰으나 노동연 데이터에는 성장률로 표시된 변수들의 값을 횡단면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도 더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선 한신정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임금조정 함수에서 매출액 성장률의 계수는 0.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 수치는 매출액이 1% 변동할 경우 임금은 같은 방향으로 0.11% 변동함을 나타낸다. 전통적인 탄력성 개념으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Holzer and Montgomery(1993)은 본 연구와 같은 모형에 근거하여 미국 기업들에 대해 추정된 결과 추정치는 대략 0.05 정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고용조정 함수의 추정 결과 매출액 성장률의 계수는 약 0.31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이 수치는 임금조정의 크기를 나타내는 0.11의 약 3배에 이르는

<표 1> 임금조정과 고용조정

	한신정 데이터		노동연 데이터	
	임금조정	고용조정	임금조정	고용조정
상 수	0.1156*** (0.0127)	-0.0567*** (0.0080)	0.0605*** (0.0017)	-0.1173*** (0.0261)
매출액 증가율	0.1071** (0.0463)	0.3102*** (0.0262)	0.0151*** (0.0054)	0.1390* (0.0827)
연도 더미	-0.0101 (0.0178)	0.0422*** (0.0115)	-	-
관찰치수	479	525	416	248
조정된 결정계수	0.0074	0.2421	0.0165	0.0073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수치로서 두 계수가 같다는 가설은 1% 유의수준에서도 기각된다. 한편 Holzer and Montgomery(1993)의 연구에서 나타난 고용조정의 크기는 약 0.39 정도로 본 연구의 수치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연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매출액 증가율의 계수는 전반적으로 작아진다. 매출액이 1퍼센트 변동할 때 임금은 같은 방향으로 약 0.015퍼센트 변화여 비록 이 수치가 통계적으로는 매우 유의하지만 실질적인 중요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고용조정의 경우 매출액 성장률의 계수는 역시 양으로 10퍼센트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나 그 크기는 한신정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신정 데이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고용조정의 규모는 임금조정의 규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두 데이터 셀 모두 기업이 수요변화에 대해 임금조정보다는 고용조정을 보다 큰 전략 변수로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Holzer and Montgomery(1993)의 연구에서처럼 임금이 수요변화에 경직적(rigid)인지에 대해서는 두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차이가 난다. 비록 한신정 데이터에서는 임금이 수요충격에 다소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연 데이터상에서는 Holzer and Montgomery(199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거의 경직적이라고 할 수 있다.²⁾

3. 확대경영과 감량경영시의 비대칭성

다음으로는 수요충격에 대한 이러한 기업들의 반응이 정의 충격과 부의 충격에 대칭적일 것인가 아니면 비대칭적일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표 2>와 <표 3>에서는 각각 매출액 성장률이 양일 때와 음일 때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신정 데이터를 보면 임금조정은 정의 수요충격과 부의 수요충격에 대해 비대칭적(asymmetric)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요가 확대시에는 임금조정이 유의미하게 상향조정되나 부의 수요충격시에는 하향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의 수요충격시 매출액이 1% 증가

2) 여기서 몇 가지 계량경제학적인 이슈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변수들의 측정오차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매출액 성장률의 측정오차는 한신정 데이터든 노동연 데이터든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조정함수에서든 고용조정함수에서든 어디서나 매출액 성장률의 계수를 0의 방향으로 회석시킬 것이다(attenuation inconsistency). 따라서 이 효과를 고려하면 임금조정과 고용조정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보다 클 것이다. 한편 종속변수의 측정오차에 대한 고전적인 가정(측정오차가 임의적(random)으로 발생한다면)에 따르면 적어도 매출액 성장률 계수의 일치성은 보장된다. 그러나 만약 임금변동을 변수의 측정오차가 변동을 회석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면(mean-reverting measurement errors) 매출액 성장률의 계수는 역시 절대값 면에서 과소평가될 것이다. 특히 노동연 데이터의 경우 임금증가율을 직접 대답하였기에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노동연 데이터로 추정한 임금조정의 정도가 한신정 데이터로 추정한 임금조정의 정도보다 작게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표 2〉 임금조정과 고용조정 : 정의 수요충격시

	한신정 데이터		노동연 데이터	
	임금조정	고용조정	임금조정	고용조정
상 수	0.0974*** (0.0187)	-0.0630*** (0.0123)	0.0651*** (0.0024)	-0.1506*** (0.0446)
매출액 증가율	0.2426*** (0.0716)	0.3006*** (0.0412)	0.0011 (0.0075)	0.2719* (0.1581)
연도 더미	-0.0363* (0.0212)	0.0570*** (0.0149)	-	-
관찰치수	313	346	273	141
조정된 결정계수	0.0368	0.1784	-0.0036	0.0137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표 3〉 임금조정과 고용조정 : 부의 수요충격시

	한신정 데이터		노동연 데이터	
	임금조정	고용조정	임금조정	고용조정
상 수	0.1142*** (0.0264)	-0.0561*** (0.0145)	0.0586*** (0.0044)	-0.1173*** (0.0575)
매출액 증가율	0.1258 (0.1327)	0.2619*** (0.0663)	0.0208 (0.0143)	0.0932 (0.1618)
연도 더미	0.0422 (0.0318)	0.0125 (0.0175)	-	-
관찰치수	165	178	143	106
조정된 결정계수	0.0033	0.0741	0.0077	-0.0063

주 : ***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표 4〉 임금과 고용조정의 비선형성 : 한신정 데이터

		매출성장률	매출성장률 제곱	극값에서의 매출성장률	조정된 결정계수
임금조정	전 체	0.1990*** (0.0526)	-0.0309 (0.0841)	3.2200	0.0294
	정의 충격	-0.0819 (0.1873)	0.5874** (0.2503)	0.06971	0.0659
	부의 충격	-0.1380 (0.3161)	-0.5383* (0.3232)	-0.1282	0.0343
고용조정	전 체	0.2849*** (0.0275)	0.0912** (0.0367)	-1.5620	0.2005
	정의 충격	0.3656*** (0.1171)	-0.0484 (0.1195)	3.7769	0.1617
	부의 충격	0.2682* (0.1436)	0.1726 (0.1530)	-0.7769	0.0134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할 경우 실질임금은 약 0.24% 증가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나 부의 수요충격시 매출액이 1% 감소할 때에는 계수의 크기도 정의 수요충격시의 수치에 절반 정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없다. 즉 실질임금의 조정은 하방으로 경직되어 있다고 본다. 노동연 데이터상에서는 정과 부의 수요충격시 계수 값이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용조정의 대칭성에 대해서도 한신정과 노동연 데이터는 불일치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우선 한신정 데이터를 보면 고용조정은 정의 수요충격과 부의 수요충격 사이에서 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정의 수요충격시에는 매출액이 1% 성장함에 따라 고용이 0.3% 증가하며 부의 수요충격시에는 매출액이 1% 감소함에 따라 고용이 0.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계수가 같다는 가설은 10% 유의수준에서도 기각되지 않는다. 반면 노동연 데이터상에서는 정의 수요충격시에는 고용이 약 0.27% 증가하는 반면, 부의 수요충격시에는 약 0.09 감소하여 계수값들 만을 비교할 때에는 비대칭성이 보이거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한신정 데이터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앞서 각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연 데이터의 임금변동률 변수는 변동을 회석시키는 방향의 측정오차를 수반하고 있고, 둘째, 임금조정과 고용조정의 시점이 달라 “같은 경제상황하에서의” 기업의 전략적인 행동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4. 임금 및 고용조정의 비선형성

한편 임금조정과 고용조정의 정도가 수요충격의 정도에 따라 비선형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의 수요충격시에도 매출액이 어느 선까지 증가할 때까지는 임금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일정수준을 넘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임금이 본격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 또한 고용조정도 수요충격이 미약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다가 상당한 부 혹은 정의 수요충격이 발생할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매출액 성장률의 제곱항을 모형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재추정한 결과를 <표 3-4>에 정리하였다.³⁾ 우선 임금조정 패턴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차식의 계수는 비록 음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나 계수의 실질적인 크기에 있어서 유의하지 못하다. 하지만 이를 정의 수요충격과 부의 수요충격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의 수요충격시 이차식의 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3) <표 3-4>의 추정치들은 한신정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노동연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추정치들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아니라 그 계수도 약 0.6으로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또한 부의 수요충격시에도 이차식의 계수는 10% 유의수준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 계수의 절대값은 정의 수요충격시와 매우 유사하다. 결국 정의 수요충격시에 임금조정은 수요충격이 상대적으로 약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충격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조정‘률’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임금의 성장률은 매출액 성장률의 볼록함수이다.⁴⁾ 반대로 부의 수요충격시에도 그 충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에는 임금조정률이 미약하다가 충격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임금하락률을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⁵⁾

고용조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차항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 크기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어서 고용조정의 비선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고용조정 함수는 원점에 대해 오목함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의와 부의 수요충격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할 때에는 계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하게 추정되었다. 결국 <표 4>의 결과를 <표 2> 및 <표 3>의 결과와 종합하면 정의 수요충격시 임금조정 함수는 볼록함수이므로 수요충격의 강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야 본격적으로 임금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고용조정은 선형함수의 설명력이 더 높으므로 매출액 성장률과 비례하여 고용증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부의 수요충격시에는 임금조정의 경우 오목함수 형태를 가지므로 약간의 부의 충격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그 강도가 심해질 때에는 본격적으로 임금을 하향조정하게 되는 데에 반해 고용조정 함수는 선형함수이어서 매출액이 마이너스의 성장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고용감축을 단행하고 있다.

5. 근로시간 조정

한편 노동연 데이터의 경우 임금과 근로자수 외에도 근로시간을 아울러 보고하고 있어서 식 (1)의 종속변수에 근로시간의 변동률을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및 정의 수요충격의 경우 근로시간의 반응은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서나 계수의 크기에 있어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만 부의 수요충격시 매출액 성장률의 계수는 0.1862(표준오차=0.0867)로 나타나 매출액이 1% 하락할 경우 근로시간은 약 2% 감소함을 알 수 있다.

6. 임금과 고용조정의 기업규모별 및 산업별 차이

<표 5>에서는 한신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임금조정과 고용조정 패턴이 기업규모별로 그리고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사이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4) 제3월의 수치들은 극값에서의 매출액 성장률을 나타낸다.

5) 독자들은 부의 수요충격시 매출액 성장률은 모두 음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요약하고 있다. 우선 임금조정 함수에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 성장률과 규모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시킬 경우(제1열) 그리고 제조업 더미와 매출액 성장률과 제조업 더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할 경우(제2열) 모두 상수항을 제외한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표 1>에서 매출액 증가율의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된 것이 마치 산업이나 규모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매출액 증가율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임금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비록 보고의 간결성을 위해 생략하였지만 <표 5>의 모형에서 상호작용항들만을 제외시킬 경우 매출액 증가율 계수의 추정치는 <표 1>의 추정치와 사실상 같게 나타났다. 즉 산업이나 기업규모를 통제하여도 (상호작용항을 통제하지 않는 한) 매출액 증가율은 여전히 유의하게 임금증가율과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상호작용항에는 표현 그대로 매출액 증가율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해 둔다. 둘째, <표 5>에서처럼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통제할 경우에도 매출액 증가율의 계수는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지만 추정된 계수의 크기는 <표 1>의 그것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제3열의 추정치들을 보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수요변동과 관련이 있는 관련이 없는 고용조정의 폭은 양으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수요변동과 관련된 고용조정의 정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4열에 있는 상호작용항 계수의 추정치를 보면 매출액 변동에 따른 고용조정 강도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이의 차이는 별로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표 5〉 기업규모별 및 산업별 임금 및 고용조정 패턴 : 한신정 데이터

	임금조정		고용조정	
상수	0.1078** (0.0556)	0.1724** (0.0698)	-0.0926*** (0.0348)	-0.0217 (0.0245)
매출액 증가율	0.1242 (0.2537)	0.8849 (0.5731)	-0.0386 (0.1567)	0.2763 (0.0499)
규모	0.0012 (0.0082)		0.0049 (0.0050)	
제조업		-0.0567 (0.0699)		-0.0401* (0.0249)
연도더미	-0.0102 (0.0179)	-0.0120 (0.0179)	0.0410*** (0.0114)	0.0431*** (0.0116)
매출액 증가율* 규모	-0.0027 (0.0383)		0.0520** (0.0233)	
매출액 증가율* 제조업		-0.7812 (0.5748)		0.0420 (0.0583)
관찰치수	479	479	525	
조정된 결정계수	0.0033	0.0090	0.2507	0.2431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표 6〉 정의 수요충격시 기업규모별 및 산업별 임금 및 고용조정 패턴 : 한신정 데이터

	임금조정		고용조정	
상수	-0.1130 (0.0982)	0.2206 (0.1383)	-0.0196 (0.0649)	-0.1084** (0.0516)
매출액 증가율	1.0973*** (0.4434)	0.5253 (1.0207)	-0.4291 (0.2795)	0.4059*** (0.0864)
규모	0.0304** (0.0140)		-0.0061 (0.0092)	
제조업		-0.1247 (0.1387)		0.0517 (0.0520)
연도 더미	-0.0341* (0.0212)	-0.0384* (0.0213)	0.0541*** (0.0147)	0.0560*** (0.0150)
매출액 증가율*	-0.1244** (0.0638)		0.1070*** (0.0403)	
규모				
매출액 증가율*		-0.2787 (1.0232)		-0.1431 (0.1002)
제조업				
관찰치수	313	313	346	346
조정된 결정계수	0.0458	0.0388	0.1986	0.1785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표 7〉 임금패턴에 있어서의 노조와 비노조 차이

	전 체		정의 수요충격		부의 수요충격	
	임금조정	고용조정	임금조정	고용조정	임금조정	고용조정
상수	0.1122** (0.0469)	-0.0502*** (0.0134)	0.1205 (0.0772)	-0.0773*** (0.0227)	-0.0065 (0.0921)	-0.0415 (0.0258)
매출액 성장률	0.1415 (0.2182)	0.3731*** (0.0543)	0.2706 (0.2914)	0.4735*** (0.0906)	-1.1670 (1.1071)	0.3085** (0.1294)
연도 더미	-0.0030 (0.0392)	0.0348*** (0.0132)	-0.0643 (0.0472)	0.0388** (0.0170)	0.1408** (0.0679)	0.0225 (0.0202)
노조	-0.0263 (0.0503)	-0.0055 (0.0146)	-0.0348 (0.0825)	0.0134 (0.0254)	0.1066 (0.1007)	-0.0342 (0.0297)
노조*매출액 성장률	0.2129 (0.2383)	-0.0989† (0.0643)	0.1869 (0.3192)	-0.1607† (0.1034)	1.7817† (1.1465)	-0.2369† (0.1605)
관찰치수	125	358	79	237	45	120
Adj- R^2	0.0681	0.2568	0.1184	0.2392	0.1068	0.0299

***, **, †는 각각 1%, 5%, 15%에서 유의한 경우.

표에는 보고 되어 있지 않지만 제3열과 제4열에서 상호작용항들만을 제외시키고 재추정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 계수의 추정치는 <표 1>의 그것과 계수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에서나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지적해 둔다.

<표 6>은 <표 5>의 분석을 그대로 반복하되 기업이 매출액을 신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표 5>의 분석을 부의 수요충격에 대해 시도한 결과 모든 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보고에서는 생략하겠다). 제1열에 있는

추정치를 보면 매출액 성장률에 따른 임금의 상향조정 정도는 정의 수요충격시에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제2열의 추정치들은 비제조업과 비교하여 제조업 기업들은 정의 수요충격시 임금조정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록 추정된 계수는 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제3열과 고용조정 패턴을 보면 기업들은 정의 수요충격시 규모가 클수록 고용을 비례적으로 더 크게 상승시켜 확대경영의 주요 조절수단이 임금이 아닌 고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제4열의 수치들을 보면 제조업은 비제조업에 비해 정의 수요충격시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7. 임금 및 고용조정에 있어서의 노조기업과 비노조기업간 차이

마지막으로 임금과 고용조정 패턴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표 7>에서는 한신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앞의 분석을 그대로 답습하되 노조 더미변수와 (매출액 성장률×노조 더미)를 고려하였다. 노동연 데이터상에는 사업장 내에 노조의 존재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어서 많은 관찰치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분석결과 조정된 결정계수의 값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0.01을 밑돌고 많은 경우 음으로 나타나 모형이 무의미하므로 보고를 생략한다. 한신정 데이터를 사용할 때에도 노조 변수들의 계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대체적으로 낮다. 다만 노조 더미와 매출액 성장률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일부의 경우 1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추정된 계수의 크기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기업은 임금보다 고용이 더 경직적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제4열 및 제6열의 상호작용항 계수들을 보면 정의 수요충격시에는 노조기업들은 비노조기업들과 비교하여 고용성장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부의 수요충격시에는 고용감축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열에서 전반적인 고용조정은 매우 경직적으로 나타났다.⁶⁾ 이와는 다소 다르게 제5열의 추정치를 보면 부의 수요충격시 노조기업은 비노조기업과 비교하여 임금을 비례적으로 더 크게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 수요충격시에는 노조기업이 비노조기업보다 비례적으로 임금을 더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이상의 수치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노조기업은 비노조기업과 비교하여 수요충격에 대한 적응 수단으로 (특히 부의 수요충격시) 고용보다는 임금을 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6) 사실 고용조정의 경우 추정된 매출액 증가율 계수의 부호가 음으로까지 나타난 것은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못한 결과라고 본다. 다만 이 결과는 매출액 변동에 맞추어 고용을 신축적으로 조정한다는 주장에 대한 강한 반증, 즉 고용조정은 상당히 경직적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러한 발견은 Freeman and Medoff(1984), Pencavel(1991)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노조를 일차적으로 고용안정화를 지향하는 집단으로 보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수요충격에 대해 임금을 주요 전략변수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Freeman and Medoff(1984)에 의하면 노조임금은 상당히 경직적이라는 일반 상식과는 달리 노조들은 명목임금의 삭감을 상당한 규모로 받아들여 왔다. 반대로 노조기업은 비노조기업과 비교하여 확대 경영시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IV.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신정 데이터와 노동연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이 임금과 고용 중 주로 어느 변수를 전략변수로 하여 수요충격에 대응하는가를 연구하였다. 수요충격(demand shock)을 측정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적인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기업단위의 수요충격을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그러한 기업들의 적응과정이 정의 수요충격과 부의 수요충격 사이에서 대칭적(symmetric)인가를 분석하며 나아가 산업별, 기업규모별, 그리고 노조유무별로 그 적응패턴이 상이한가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수요충격에 대해 임금조정보다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임금이 경직적(rigid)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부의 수요충격시 임금이 하방으로 경직적(downward rigidity)이기 때문이며 정의 수요충격시에는 다소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임금조정은 정과 부의 수요충격시 비대칭(asymmetric)이다. 셋째, 추정치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서 두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차이는 다소 있지만 임금조정과 비교하여 고용조정은 정과 부의 수요충격에 대해 대체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고용조정은 매출액 변동률에 대해 선형으로 나타나는 반면, 임금조정은 비선형으로 나타난다. 정의 수요충격시 임금은 그 충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향조정의 폭도 점차 증가한다. 반대로 부의 수요충격시 임금조정은 매출액 성장률의 오목함수로 표시된다. 다섯째, 비록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가 다소 빈약하고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현 분석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조정은 수요충격과는 대체로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부의 수요충격시에는 근로시간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여섯째, 노조기업은 비노조기업과 비교하여 수요충격에 대한 적응 수단으로 (특히 부의 수요충격시) 고용보다는 임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데이터의 제약이었다. 한신정 데이터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며, 노동연 데이터의 경우 비록 실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나 각 투입변수들의 값이 두 연도에만 존재하여 전반적으로 표본의 규모가 작고 이는 추정치의 유의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노조관련 변수, 산업정보, 평균 교육연수 등 다양한 사업체 특성들을 나타내는 정보가 존재하였다면 보다 유익한 분석이 가능했으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사업체 내에서도 개별 근로자들의 패널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임금조정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사업체 내에서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추적함으로써 구성의 효과(composition effects)를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제하지 못한 현 연구결과도 기존의 모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조정을 미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편의(bias)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면들은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로 남긴다. ■■■

<참고문헌>

- 신동균 · 전병유, 「임금곡선(Wage Curve)과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 『노동경제논집』, 25(2), 2002. 6, 1~32쪽.
- 허재준 · 신동균, 「임금유연성과 실업」, 한국노동연구원, 2002.
- Blanchflower, David. G., and Andrew J. Oswald, *The Wage Curve*, MIT Press, Cambridge, MA, 1994.
- Brannon, J. Isaac, "Unions and Employment, Wage, and Hours of Work Dynamics," *Eastern Economic Journal* 23, 1997, pp.51~60.
- Freeman, Richard and James Medoff, *What Do Unions Do?*, NewYork, 1984.
- Holzer, Harry J., and Edward B. Montgomery, "Asymmetries and Rigidities in Wage Adjustments by Firm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5 (3), 1993, pp.397~408.
- Pencavel, John, *Labor Markets under Trade Unionism*, Cambridge, Mass.: Basil Blackwell, 1991.
- Solon, Gary, Robert Barsky, and Jonathan Parker, "Measuring the Cyclicalities of Real Wages: How Important Is Composition Bia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1994, pp.1~26.

실업통계 기준변경에 따른 실업자규모 변동과 의미

정 성 미*

I. 머리말

2005년 6월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뀌면서 공식실업률이 약 0.1~0.2%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이로써 IMF 체제 이후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체감실업과 지표실업 사이의 괴리로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에 대해 많은 불신을 받고 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여진다. 실업자를 산정할 때 구직활동기간을 길게 제시하게 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있던 잠재실업자들의 일부가 공식실업자로 분류되어 구직활동기간을 1주로 규정할 때의 실업자보다 늘어나게 된다. 즉, 숨어있던 실업자가 공식통계에 잡히게 되는 것이다.

2005년 상반기(1~6월)의 ‘구직기간 4주’ 기준의 공식실업자는 ‘구직기간 1주’ 기준보다 55천명이 늘어난 926천명이고 실업률은 0.2%포인트 증가한 3.9%이다. 이를 단지 구직기간의 기준 차이로 실업률 0.1~0.2%포인트의 수치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와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했던 55천명의 잠재실업자들을 어떤 계층에서 공식실업자로 더 많이 흡수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다.

본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실업통계 산정방식의 변경내용을 알아본 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산정 방식변경에 의한 실업률 상승효과와 공식 실업통계에 새로 포착된 55천명의 추가로 파악된 실업자(이하 추가실업자)가 어느 계층에 분포되어 있는지 성별·혼인상태별·연령별·학력별로 나누어 계층간의 차이와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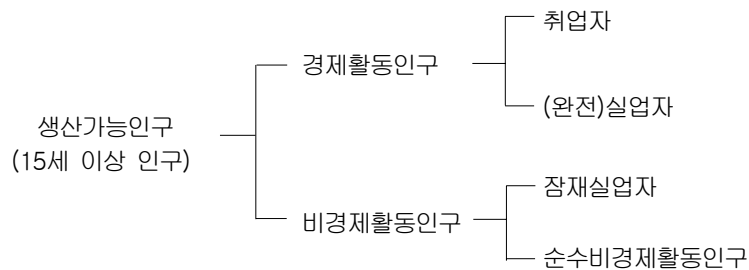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smsung@kli.re.kr).

II. 실업률 산정방식 변경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통계청에서 매월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가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산가능인구를 추계한 뒤, ILO 기준¹⁾에 근거하여 실업을 정의하고 있다. 실업을 정의하기 전에 노동력 상태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는 크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어진다. 경제활동인구란 일정연령 이상의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눈다. 취업자란 조사대상기간 중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조사대상기간은 1주일 혹은 1일로 정의되어 있다. 다음으로 실업자는 단순히 직업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대상기간 중 직업은 없으나 취업이 가능하며 실제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자로 정의된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기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로서 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그림 1 참조).

〔그림 1〕 노동력 상태의 구분



이때 실업자로 분류하기 위해서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구직활동 여부’를 질문하는 항목인 ‘조사대상기간’에서의 기간변경이 이번에 통계청에서 실업통계 기준을 변경한 내용이다. 즉, 실업통계의 기준변경 이전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 주에 직장을 구해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구해보았음’이라고 답한 경우를 실업자로 분류했다. 즉, 실업자의 판단기준으로 구직활동기간을 ‘지난 1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던 것

1) ILO 기준이란 1982년의 노동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채택된 권고안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지표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다. 그러나 ILO의 기준에는 구직활동기간이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 실업을 구하는 기준이 달라 OECD의 경우 회원국들간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를 위해 1년에 한번씩 EuroStat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기준에 의해서 표준화된 실업률을 작성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때 구직활동기간을 Eurostat의 기준에 의하여 ‘지난 4주’로 정의한 것이다. 나라별 구직활동기간을 살펴보면, 구직활동기간이 1주일인 나라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이며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이 구직활동기간을 4주로 실업자를 구분한다.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 1999년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공식실업률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구한 실업자 개념은 일정시점(stock)에서 파악되는 실업자들로 실업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실업자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실업자가 바로 이 개념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일시 중단한 경우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구직활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구직활동의 비용이 아주 높은 경우 취업의사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개념상으로는 분명히 실업자에 속하지만 통계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기는 하지만 평상상태(usual status)로 보면 유동성이 강한 실업자이며 완전실업자와 비교하여 잠재실업자로 분류할 수도 있다. 잠재실업자란 일할 의사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 1년 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거나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다양한 이유에 의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 혹은 일자리를 탐색하지 않은 자로 정의할 수 있다.

III. 구직활동기간 기준변경에 따른 실업통계의 변화

실업통계의 구직활동기간의 기준 변경에 따른 총괄적인 통계 수치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2005년 1~6월의 경제활동인구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23,616천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4,530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구직기간 1주’와 같은 22,686천명이고 공식실업자는 926천명을 기록했다. ‘구직기간 1주’ 기준의 공식실업자는 872천명으로 실업통계 기준변경으로 인해 55천명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로

이동한 셈이다. 이를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구직활동기간을 길게 제시함으로 인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의사가 있었지만 다양한 이유에 의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거나 탐색하지 않고 숨어있던 잠재실업자의 일부를 공식 실업통계에 포함시킨 것이다. <표 1>의 구직기간에 따른 전체 노동력 인구를 보면 2005년의 ‘구직기간 1주’ 기준에서 잠재실업자는 127천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0.9%를 차지하고 실업률의 15%에 달하지만 ‘구직기간 4주’로 구직활동기간의 기준을 변경하여 잠재실업자는 72천명으로 줄어들고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 실업률 0.8%로 줄어들어 실업통계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한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차이를 좁히는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구직기간 4주’로 실업통계 기준변경에 의하여 잠재실업자로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했었던 55천명의 추가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변화를 인구특성 및 계층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시 구직활동기간 기준변경으로 인한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이루어지며 취업자에서는 변화가 없으므로 취업자에 대한 언급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표 1〉 구직기간에 따른 전체 실업자

(단위 : 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6월)
1주	경제활동인구	22,069	22,417	22,877	22,916	23,370	23,558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686
	실업자	913	845	708	777	813	872
	비경제활동인구	14,118	14,162	14,086	14,424	14,347	14,585
	잠재실업자	187	131	79	99	108	127
4주	경제활동인구	22,134	22,471	22,921	22,956	23,417	23,613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686
	실업자	979	899	752	818	860	926
	비경제활동인구	14,052	14,108	14,042	14,383	14,300	14,530
	잠재실업자	122	77	36	58	61	72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먼저 <표 2>를 성별 차이에 따른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변화를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구직기간 4주’ 기준의 남성 실업자는 570천명이고, 여성 실업자는 357천명으로 ‘구직기간 1주’에 비해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32천명, 23천명의 추가실업자가 파악되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2005년 기준 남성 : 74.7%, 여성 : 49.8%)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2005년 기준 남성 : 25.3%, 여성 : 50.2%) 구직활동 기준변경으로 포착된 추가실업자는 남성

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구직활동의 유동성 또한 여성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은 취업에 미련을 버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이제 잠재실업자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5년 기준으로 남성의 잠재실업자는 전체 잠재실업자의 57.1%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0.9%(‘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 1.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즉, 구직기간 기준변경으로 약 0.7%포인트의 잠재실업자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2002년까지 감소하던 잠재실업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고용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보여진다(그림 2 참조). 반면, 여성의 잠재실업자는 전체 잠재실업자의 42.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0.3%(‘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 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남성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쳐 순수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을 시사한다.

성별 실업자에서 더 나아가 혼인상태별로 나누어 실업통계의 차이를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실업통계 기준변경으로 인하여 늘어난 남성 추가실업자 32천명 중 기혼에서 18천명, 미혼에서 14천명이 늘어났고, 여성 추가실업자 23천명 중 기혼에서 12천명 미혼에서 11천명이 증가하여 남녀 모두 기혼에서의 추가실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표 3 참조). 그리고 연도별 실업자 추이를 보면 미혼여성의 실업자가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특히 2000년에 비해서는 약 31천명이나 증가했다.

〈표 2〉 구직기간에 따른 성별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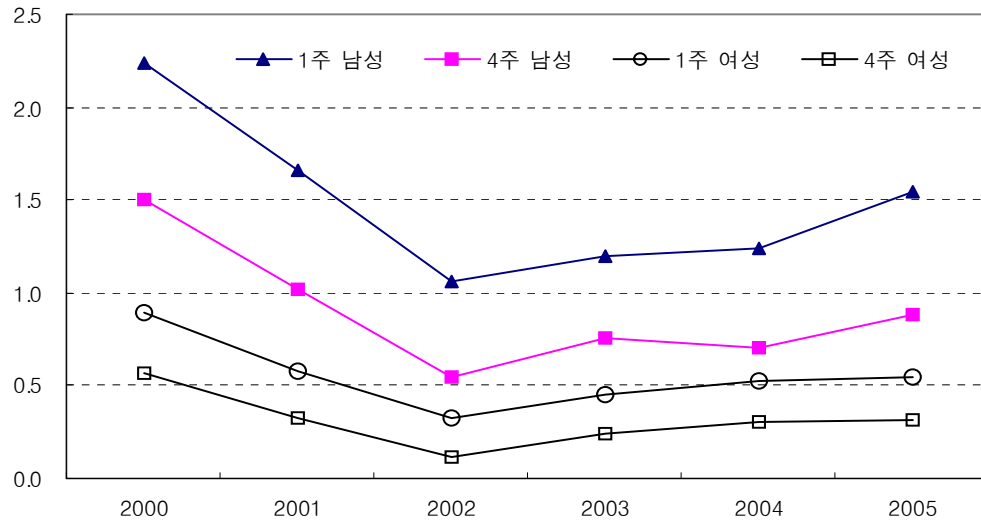
(단위 : 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6월)
남성	1주	경제활동인구	13,000	13,142	13,411	13,518	13,702	13,816
		실업자	613	561	467	487	509	538
		비경제활동인구	4,522	4,578	4,510	4,601	4,609	4,716
		잠재실업자	101	76	48	55	57	73
	4주	경제활동인구	13,034	13,172	13,435	13,539	13,727	13,848
		실업자	647	591	491	508	534	570
		비경제활동인구	4,488	4,548	4,486	4,580	4,584	4,684
		잠재실업자	67	46	24	34	32	41
여성	1주	경제활동인구	9,069	9,275	9,466	9,397	9,668	9,742
		실업자	300	284	241	289	304	334
		비경제활동인구	9,596	9,584	9,576	9,823	9,737	9,869
		잠재실업자	86	55	31	44	51	54
	4주	경제활동인구	9,101	9,299	9,486	9,418	9,690	9,765
		실업자	332	308	261	310	326	357
		비경제활동인구	9,564	9,560	9,556	9,803	9,716	9,846
		잠재실업자	54	31	11	24	29	31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 성별·구직기간별 잠재실업자 비중

(단위 : %)



주 : 잠재실업자 비중은 비경제활동인구 대비임.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 구직기간에 따른 혼인상태별 실업자

(단위 : 천명)

		남 성						여 성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 ~6월)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 ~6월)	
기 혼	1주	경제활동인구	10,101	10,183	10,358	10,574	10,661	10,775	6,854	6,995	7,109	6,985	7,159	7,204
		실업자	322	280	208	222	230	257	149	137	107	123	131	151
		비경제활동인구	1,764	1,816	1,813	1,935	1,979	2,080	7,182	7,229	7,275	7,566	7,537	7,682
		잠재실업자	69	49	29	28	32	46	64	40	21	30	36	34
	4주	경제활동인구	10,119	10,197	10,369	10,584	10,672	10,793	6,874	7,008	7,120	6,996	7,172	7,216
		실업자	340	294	219	232	240	275	168	150	118	134	143	163
		비경제활동인구	1,746	1,802	1,802	1,925	1,968	2,062	7,163	7,216	7,264	7,555	7,524	7,670
		잠재실업자	51	35	18	18	21	28	44	27	10	19	23	22
미 혼	1주	경제활동인구	2,899	2,959	3,054	2,945	3,041	3,041	2,215	2,280	2,356	2,413	2,509	2,538
		실업자	291	281	259	265	279	281	151	147	134	166	173	183
		비경제활동인구	2,758	2,761	2,697	2,666	2,630	2,636	2,413	2,355	2,301	2,257	2,201	2,187
		잠재실업자	32	27	19	27	25	27	22	15	10	14	15	20
	4주	경제활동인구	2,915	2,975	3,066	2,955	3,056	3,055	2,227	2,292	2,365	2,422	2,518	2,549
		실업자	307	296	271	276	294	295	163	158	143	176	183	194
		비경제활동인구	2,742	2,746	2,684	2,655	2,616	2,622	2,401	2,344	2,292	2,248	2,192	2,175
		잠재실업자	16	12	6	17	11	13	10	4	1	5	6	9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실업자의 변화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잠재실업자의 비중을 보면 기혼남성의 잠재실업자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는 기혼남성에서 고용시장으로의 진출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혼여성의 잠재실업자 비중이 가장 낮아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착하고 있는 기혼여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혼남성과 여성의 상반된 결과와는 다르게 미혼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잠재실업자 비중을 가지고 있고, 2000년에 비해 차이가 없어 미혼의 구직활동 유동성이 크게 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4〉 혼인상태별 잠재실업자 비중

(단위 : %)

		남 성						여 성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6월)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6월)
기혼	1주	3.9	2.7	1.6	1.4	1.6	2.2	0.9	0.6	0.3	0.4	0.5	0.4
	4주	2.9	1.9	1.0	0.9	1.1	1.4	0.6	0.4	0.1	0.3	0.3	0.3
미혼	1주	1.2	1.0	0.7	1.0	1.0	1.0	0.9	0.6	0.4	0.6	0.7	0.9
	4주	0.6	0.4	0.2	0.6	0.4	0.5	0.4	0.2	0.1	0.2	0.3	0.4

주 : 잠재실업자 비중은 비경제활동인구 대비임.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5〉는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특히 청년층(15~29세)과 중·장년층(30~49세)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구직기간 4주’ 기준의 청년층의 실업자는 추가실업자가 22천명이 증가한 412천명이었고, 30~39세는 10천명, 40~49세는 13천명의 추가실업자가 생겨나 각각 212천명, 173천명을 기록하여 청년층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청년층에서 실업통계 기준에 따른 실업자 차이가 큰 이유는 실업의 장기적 성향이 강한 30대 이상에 비해서 청년층에서의 구직활동은 단기적이고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에서의 잠재실업자 비중이 실업통계 기준의 변경으로 청년층과 30대에서는 약 0.3~0.4%포인트의 감소를 보인 반면, 40대에서는 약 0.7%포인트의 감소를 보여 통계기준 변경의 효과를 보았다. 또한 40대에서는 2002년까지 감소폭이 두드러지다가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이는 40대인 중·장년층에서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착했던 사람들이 2000년 이후 다시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욕구가 강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들의 실업자 증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5〉 구직기간에 따른 연령별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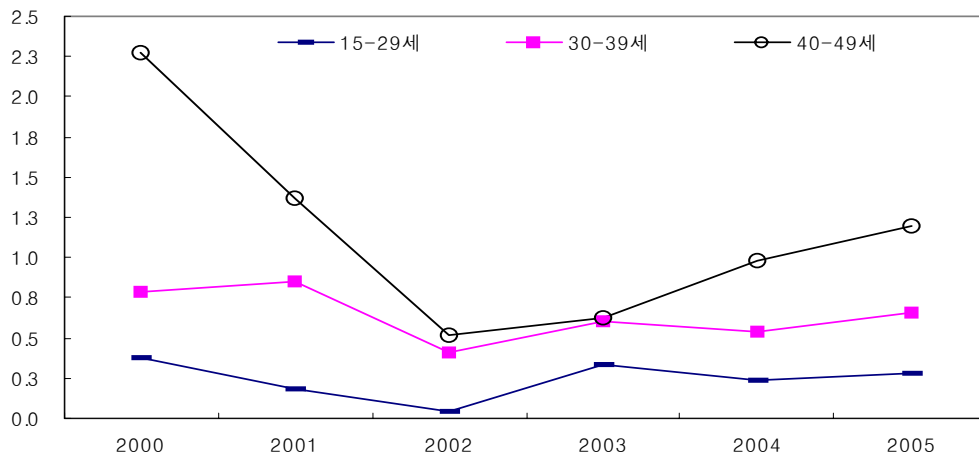
(단위 : 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6월)
15~29세	1주	경제활동인구	5,281	5,203	5,140	4,989	4,969	4,883
		실업자	402	388	341	383	391	390
		비경제활동인구	5,962	5,749	5,511	5,379	5,171	5,079
		잠재실업자	50	35	22	36	33	36
	4주	경제활동인구	5,308	5,227	5,160	5,007	4,990	4,905
		실업자	430	413	361	401	412	412
		비경제활동인구	5,934	5,725	5,491	5,361	5,151	5,057
		잠재실업자	23	11	2	18	12	14
30~39세	1주	경제활동인구	6,355	6,359	6,389	6,367	6,367	6,315
		실업자	217	193	177	182	186	202
		비경제활동인구	2,113	2,129	2,122	2,149	2,147	2,163
		잠재실업자	31	30	18	21	22	24
	4주	경제활동인구	6,369	6,371	6,398	6,376	6,377	6,325
		실업자	232	205	186	190	196	212
		비경제활동인구	2,098	2,117	2,113	2,141	2,136	2,153
		잠재실업자	17	18	9	13	11	14
40~49세	1주	경제활동인구	5,457	5,723	5,968	6,159	6,345	6,418
		실업자	180	162	111	128	139	161
		비경제활동인구	1,446	1,538	1,598	1,684	1,684	1,726
		잠재실업자	43	30	16	18	25	33
	4주	경제활동인구	5,468	5,732	5,975	6,166	6,353	6,431
		실업자	190	171	119	135	147	173
		비경제활동인구	1,436	1,529	1,591	1,677	1,675	1,713
		잠재실업자	33	21	8	10	16	20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3〕 연령별 잠재실업자 비중

(단위 : %)



주 : 잠재실업자 비중은 비경제활동인구 대비임.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6>에서는 교육수준별로 구직활동기간의 기준에 따른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구직기간 4주’ 기준의 실업자는 최종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와 고졸인 경우 각각 263천명, 388천명으로 ‘구직기간 1주’ 기준에 비해 20천명, 21천명의 새로 포착된 실업자가 늘어났다. 반면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실업자는 각각 123천명, 152천명으로 6천명, 9천명의 낮은 추가실업자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저학력 계층에서 구직기간에 대한 유동성이 강한 실업자들이 많고 고학력 계층에서는 구직기간이 긴 장기실업자가 많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직기간 4주’ 기준의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잠재실업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6> 구직기간에 따른 학력별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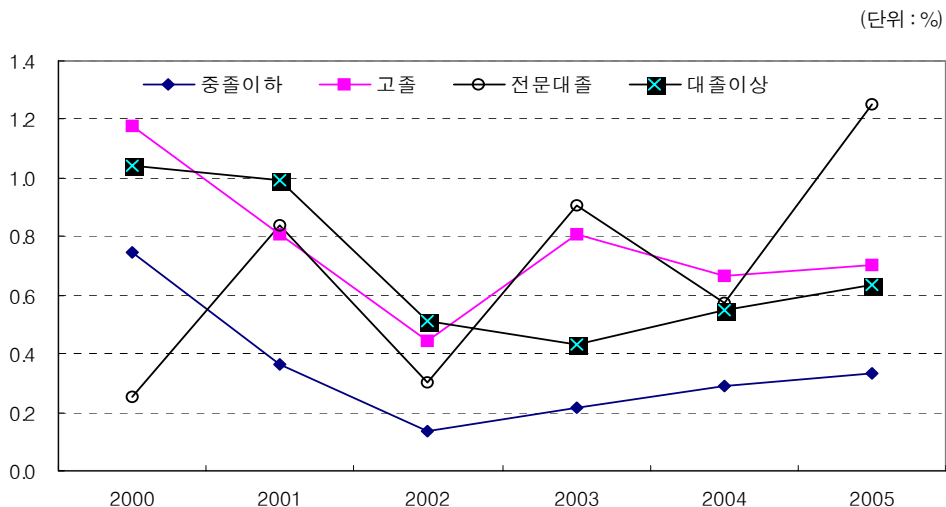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6월)
중졸이하	1주	경제활동인구	7,931	7,844	7,827	7,131	7,136	7,024
		실업자	318	279	217	217	239	243
		비경제활동인구	8,848	8,855	8,815	8,848	8,677	8,752
		잠재실업자	92	53	29	35	41	49
	4주	경제활동인구	7,957	7,865	7,843	7,147	7,152	7,044
		실업자	344	300	233	233	255	263
		비경제활동인구	8,822	8,835	8,798	8,832	8,661	8,731
		잠재실업자	66	32	12	19	25	29
고 졸	1주	경제활동인구	8,713	8,817	8,932	8,846	8,950	8,963
		실업자	379	345	280	316	334	367
		비경제활동인구	3,663	3,631	3,527	3,587	3,583	3,657
		잠재실업자	68	50	30	44	43	46
	4주	경제활동인구	8,738	8,838	8,946	8,861	8,969	8,984
		실업자	405	366	294	331	353	388
		비경제활동인구	3,637	3,610	3,513	3,572	3,564	3,636
		잠재실업자	43	29	16	29	24	25
전문대졸	1주	경제활동인구	1,679	1,831	1,992	2,081	2,248	2,372
		실업자	100	98	93	102	101	118
		비경제활동인구	494	522	536	554	630	680
		잠재실업자	9	10	6	9	8	14
	4주	경제활동인구	1,686	1,837	1,996	2,085	2,252	2,377
		실업자	107	104	98	106	105	123
		비경제활동인구	486	516	532	550	626	675
		잠재실업자	1	4	2	5	4	8
대졸이상	1주	경제활동인구	3,746	3,925	4,127	4,857	5,036	5,199
		실업자	116	123	119	141	140	143
		비경제활동인구	1,113	1,153	1,208	1,435	1,456	1,496
		잠재실업자	18	18	14	12	15	18
	4주	경제활동인구	3,753	3,931	4,135	4,863	5,043	5,208
		실업자	123	129	126	147	147	152
		비경제활동인구	1,107	1,147	1,200	1,429	1,449	1,488
		잠재실업자	12	11	6	6	8	9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잠재실업자의 수치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문대졸에서 높게 나타나고 중졸 이하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 저학력 계층에서의 순수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그리고 '구직기간 1주' 기준에서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잠재실업자의 비중 이동을 보면, 중졸 이하에서 약 0.3%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 약 0.6%포인트, 전문대졸에서 0.8%포인트의 큰 감소를 보여 전반적으로 고학력 계층에서 구직활동기간 기준변경으로 잠재실업자 감소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문대졸의 계층을 제외하고는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잠재실업자가 2000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학력별 잠재실업자 비중



주: 잠재실업자 비중은 비경제활동인구 대비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IV. 맺음말

통계청에서 공식발표하는 실업자의 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잠재실업자로 존재했던 일부분을 공식실업자로 추가시켜 실업자가 증가했다. 본 논의에서는 이같은 기준 변경에 의한 실업자들의 변화와 그 의미를 조명해 보는 시도를 하였다.

구직활동기간 변경으로 인한 가시적 변화는 2005년 상반기에 55천명의 추가실업자가

증가한 것이고 그 중 남성 추가실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잠재실업자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어 남성에서의 취업욕구가 훨씬 강해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혼인상태로 나누어 보았을 때 남녀 모두 기혼에서 추가실업자가 많이 늘었고, 기혼남성의 잠재실업자 비중이 커 남성의 고용시장 진출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청년층에서의 추가실업자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상대적으로 실업의 장기적 성향이 강한 40대 이상에서 잠재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다시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학력별로 특징을 살펴본 결과 추가실업자는 저학력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잠재실업자 비중은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게, 중졸 이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통계청에서의 공식 실업통계 기준변경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를 공식실업자로 일부 추가시켜 지표실업과 체감실업의 괴리를 어느 정도 상쇄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이 현실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취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불완전 취업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별도의 실업지표로 포착하여 정책운용의 지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KLI**

<참고문헌>

- 강순희·전재식·이계오, 『실업통계의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9. 12.
 김용현, 「유사실업률 추이를 통한 실업률 수준 평가」, 『월간 노동리뷰』, 제1호, 2005.
 정진호·남재량, 『실업통계의 개선방안 : 고용 및 임금』, 한국노동연구원, 2003.
 황수경, 「노동력 활용지표에 관한 소고 : 여성 유희인력 지표를 중심으로」, 『노동정책 연구』, 제3권 제4호, 2003.

2004년 임금교섭 실태 및 노조성취율 비교

김복순*

임금교섭은 노사간의 분배의 몫을 결정한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교섭의 결과는 기업경쟁력 제고 및 나아가 국민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임금교섭은 노사 쌍방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협상국면이 시작되어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임금교섭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섭준비→교섭진행→교섭결렬과 쟁의행위→교섭타결」 등의 단계를 거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임금교섭은 매년 실시되고 있고, 임금교섭을 제외한 단체교섭은 2년에 한번씩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임금교섭비용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¹⁾

본고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2004년 임금교섭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준비→교섭→결과)에서 나타나는 노사 양측이 요구(제시)한 임금인상률, 최종타결률을 산업별, 규모별, 상급단체소속 여부별로 비교분석한 후, 임금교섭 전과정에 대한 노사양측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저항곡선(최초임금인상요구율-타결률)과 양보곡선(타결률-최초제시율)을 도출하고 노조성취율을 추정하여 2004년도 임금교섭 결과가 노사양측 중 어느 쪽에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사양측이 요구(제시)할 2005년도 임금인상률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에 사용된 사업체패널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를 대표하는 소수표본사업체를 매년 주기적으로 심층조사함으로써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및 국제화 시대의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우리 기업의 노동수요 및 인적자원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나아가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팀 연구원

1) 안주엽 외 4인, 『2004년 임단협 및 임금체계 변화실태 종합분석』, 노동부, 2004.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사업체패널조사는 크게 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조사는 인사담당자가 응답하는 설문(전반적인 경영환경 및 인사관리, 고용현황, 교육훈련, 보상 등)과 노무담당자·근로자대표가 응답하는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이슈에 따라 부가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임금교섭, 비정규직 실태, 모성보호 등과 관련된 주제로 부가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업체는 2004년에 ‘임금교섭’ 주제로 실시된 사업체패널 부가조사 응답사업체 중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사업체와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²⁾ 노사협의회의 본연의 의미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노동조합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임금인상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임금교섭과정을 거쳐 임금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

분석대상 712개 사업체 중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사업체는 438개(61.5%)이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사업체는 274개(38.5%)이며, 제조업(57.4%)보다는 서비스업(68.0%)에서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서비스업³⁾ 분야 중에서도 유통서비스업에서의 임금교섭 의존도는 91.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임금교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대상 사업체의 산업별·규모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4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이 43.4%, 건설업이 4.9%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도 경공업과 금속자동차운송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 규모별

2) 사업체패널 조사 중 ‘임금교섭’을 주제로 실시된 부가조사는 동일한 설문문항을 노무담당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는 노무담당자 응답 사업체(1,542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다만 노사양측의 임금인상요구(제시)율,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율은 노무담당자와 근로자대표 응답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3) 개인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가사서비스업·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은 운수·통신업, 사업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교육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가 39.5%,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가 23.9%, 500인 이상 사업체가 21.2% 순으로 나타난다.

I. 임금교섭 준비: 근로자측의 임금인상요구율과 사용자측의 임금인상제사율

분석대상 사업체 중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분리 진행하여 분리 타결하는 사업체가 4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임단협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체가 41.8%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제조업(41.7%)에 비해 서비스업종(43.1%)에서의 임단협을 동시에 진행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개인서비스업(47.1%)과 사회서비스업(46.9%)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교섭만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체의 임금교섭 구조⁴⁾를 보면 기업별교섭이 81.4%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 공동교섭(8.5%), 산업별 교섭(7.1%), 대각선교섭(2.8%) 순으로 나타나 산업별 교섭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교섭 구조에서 업종별 공동교섭이나 산업별 교섭 등 공동교섭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종에서의 업종별 공동교섭이나 산업별 교섭이 활발하며, 유통서비스업에서의 업종별 공동교섭이 전산업 중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임금교섭은 기업별 교섭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산업별 교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사업체들이 여전히 기업별 교섭을 가장 바람직한 교섭구조로 여기고 있는 반면, 업종별 공동교섭이나 산업별 교섭을 선호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당해연도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사업체의 거의 대부분(91.7%)이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나타났으며 최장 4년까지 유효한 사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응답사업체의 43.7%가 2년, 31.2%가 1년으로 나타났으며 최장 5년까지 유효한 사업체도 있어 산업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이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단체협약의 유효

4) 단체교섭은 노사간의 교섭력을 배경으로 하는 거래와 협상으로서 단체교섭의 유형은 노조의 조직형태, 산업구조,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 등에 따라 상이하며, 여기에는 기업별 교섭, 산업별 교섭,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등이 있다.

〈표 1〉 2004년 임금교섭 구조

(단위: 개, %)

	표본 사업체	응답 사업체	기업별 교섭	업종별 공동교섭	산업별 교섭	지역별 공동교섭	대각선 교섭
전 체	712	435	81.4	8.5	7.1	0.2	2.8
산업별 분포							
광공업	355	202	91.1	3.5	4.5	0.0	1.0
제조업	352	200	91.0	3.5	4.5	0.0	1.0
경공업	106	72	88.9	6.9	4.2	0.0	0.0
화학공업	66	36	97.2	2.8	0.0	0.0	0.0
금속자동차운송업	106	63	88.9	0.0	7.9	0.0	3.2
전기전자정밀업	74	29	93.1	3.4	3.4	0.0	0.0
서비스업	309	209	70.3	13.9	10.5	0.5	4.8
개인서비스업	73	34	85.3	5.9	2.9	0.0	5.9
유통서비스업	89	81	59.3	32.1	3.7	1.2	3.7
사업서비스업	81	51	74.5	0.0	17.6	0.0	7.8
사회서비스업	66	43	74.4	2.3	20.9	0.0	2.3
건설업	35	12	91.7	8.3	0.0	0.0	0.0
기타	16	14	100.0	0.0	0.0	0.0	0.0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17	6	100.0	0.0	0.0	0.0	0.0
30~99인	170	70	85.7	10.0	4.3	0.0	0.0
100~299인	281	167	80.2	10.8	4.8	0.6	3.6
300~499인	93	70	80.0	10.0	8.6	0.0	1.4
500인 이상	151	122	80.3	4.1	11.5	0.0	4.1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매년 임금교섭 시기가 되면 노사단체(한국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는 당해연도 임금인상요구율과 제시율을 발표한다.⁵⁾ 앞에서 살펴본 임금교섭구조를 가진 사업체들이 임금교섭과정의 첫 단추인 교섭준비단계에서 상대방측에 요구(제시)할 임금인상률을 산정한다.

사업체패널조사에 의한 2004년도 근로자측이 사용자측에 요구한 최초임금인상요구율은 통상임금 기준 10.3%(총액임금 기준 9.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자동차운송업과 사회서비스업이 각각 1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통서비스업(10.7%), 건설업(1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측에서 임금동결을 요구한 사업체도 4.4%를 차지했으며 이 중 25.5%가 유통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급단체에 소속된 사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은 상급단체소속 여부에 따라 임금인상요구율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2004년 임금인상요구율은 한국노총 10.7%, 민주노총 10.5%이었으며, 한국경총의 임금인상제시율은 3.8%(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이었다.

〈표 2〉 근로자측의 최초임금인상요구율

(단위: 개, %)

	표본 사업체	응답 사업체	평균	요구율 분포			상급단체 소속 여부	
				동결	10% 미만	10% 이상	무소속	상급단체
전 체	712	546	10.3	4.4	26.6	69.0	8.6	11.0
산업별 분포								
광공업	355	277	10.3	3.2	24.5	72.2	8.8	11.1
제조업	352	275	10.3	3.3	24.7	72.0	8.8	11.0
경공업	106	85	9.9	5.9	21.2	72.9	6.7	10.7
화학공업	66	48	10.2	0.0	29.2	70.8	8.7	10.9
금속자동차운송업	106	90	11.1	1.1	24.4	74.4	10.1	11.6
전기전자정밀업	74	52	9.6	5.8	26.9	67.3	8.6	10.7
서비스업	309	235	10.1	5.5	30.2	64.3	8.5	10.7
개인서비스업	73	54	9.2	7.4	33.3	59.3	7.6	10.6
유통서비스업	89	69	10.7	8.7	23.2	68.1	11.2	10.6
사업서비스업	81	63	9.4	3.2	39.7	57.1	8.4	9.8
사회서비스업	66	49	11.1	2.0	24.5	73.5	8.9	12.0
건설업	35	21	10.6	9.5	19.0	71.4	8.3	13.2
기타	16	15	12.1	0.0	13.3	86.7	12.5	12.0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17	11	7.5	9.1	63.6	27.3	7.2	7.8
30~99인	170	105	10.1	3.8	31.4	64.8	9.2	11.3
100~299인	281	216	9.7	6.9	25.9	67.1	8.0	10.4
300~499인	93	80	11.1	2.5	18.8	78.8	9.6	11.4
500인 이상	151	134	11.0	1.5	25.4	73.1	8.8	11.5

〈표 3〉 사용자측의 최초임금인상제시율

(단위: 개, %)

	표본 사업체	응답 사업체	평균	제시율 분포			상급단체 소속 여부	
				동결	4% 미만	4% 이상	무소속	상급단체
전 체	712	606	4.1	28.1	17.3	54.6	5.4	3.2
산업별 분포								
광공업	355	314	4.3	22.9	15.0	62.1	5.4	3.6
제조업	352	311	4.3	23.2	14.8	62.1	5.4	3.6
경공업	106	96	2.9	38.5	15.6	45.8	5.0	2.0
화학공업	66	56	4.3	23.2	21.4	55.4	4.7	4.1
금속자동차운송업	106	93	5.1	14.0	11.8	74.2	5.3	5.0
전기전자정밀업	74	66	5.3	13.6	12.1	74.2	6.3	3.9
서비스업	309	254	3.5	35.0	20.5	44.5	5.2	2.6
개인서비스업	73	60	4.5	25.0	13.3	61.7	5.2	3.7
유통서비스업	89	67	2.4	56.7	17.9	25.4	4.6	2.1
사업서비스업	81	73	4.2	21.9	28.8	49.3	5.8	3.2
사회서비스업	66	54	3.0	37.0	20.4	42.6	4.5	1.9
건설업	35	28	5.8	28.6	3.6	67.9	6.9	4.0
기타	16	13	3.8	7.7	46.2	46.2	5.9	3.4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17	14	3.6	14.3	42.9	42.9	3.6	3.8
30~99인	170	139	5.1	20.1	12.2	67.6	6.0	3.5
100~299인	281	236	3.9	33.1	13.1	53.8	5.2	3.1
300~499인	93	80	4.3	22.5	25.0	52.5	6.2	3.8
500인 이상	151	137	3.1	32.1	22.6	45.3	4.4	2.7

한편,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최초임금인상제시율은 통상임금 기준 4.1%(총액임금 기준 3.9%)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이 5.8%로 가장 높은 반면, 유통서비스업(2.4%), 경공업(2.9%)이 가장 낮은 제시율을 보이고 있다. 임금동결을 제시한 사업체도 28.1%로 나타났으며, 10% 이상의 임금인상을 제시한 사업체도 8.3%를 차지하였다. 또한 임금삭감을 제시한 사업체도 4개 사업체로 최대 25.4%까지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제시한 사업체도 있었다.

근로자측에서 <표 4>에 정리된 최초임금인상요구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물가상승률(48.8%)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종업종 임금상승률(15.2%), 상급단체 지침(14.3%), 생산성 증가(6.8%), 생활급적 요소(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단체 지침에 의존하는 비중이 금속자동차운송업, 사회서비스업,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사단체가 발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지닌 임금지침이 개별 기업 또는 업종별 공동교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임금인상제시율의 주된 결정요인으로는 물가상승률이 2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업의 기대수익 상승(23.8%), 생산성 증가(1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급단체 지침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4〉 노사양측의 산업별 임금인상요구율 및 제시율 결정요인

(단위: 개, %)

	표본 사업체	응답 사업체	물가 상승률	생산성 증가	기업의 기대수 익상승	동종업종 임금 상승률	전년도 임금 상승률	생활급 적 요소	노동시 장상황	상급단체 지침
최초임금인상요구율 결정요인										
전 체	712	512	48.8	6.8	4.9	15.2	3.3	6.1	0.6	14.3
제조업	352	258	45.7	7.8	3.9	15.9	5.0	5.4	0.8	15.5
서비스업	309	218	50.9	6.0	6.4	15.1	1.8	6.9	0.5	12.4
건설업	35	21	61.9	9.5	0.0	19.0	0.0	4.8	0.0	4.8
기타	16	15	53.3	0.0	6.7	0.0	0.0	6.7	0.0	33.3
최초임금인상제시율 결정요인										
전 체	712	560	28.6	16.3	23.8	15.7	3.8	2.0	5.2	4.8
제조업	352	285	28.8	21.4	18.6	16.8	4.2	1.4	6.3	2.5
서비스업	309	236	28.8	10.6	29.7	14.8	3.8	3.0	3.0	6.4
건설업	35	27	29.6	18.5	18.5	18.5	0.0	0.0	7.4	7.4
기타	16	12	16.7	0.0	41.7	0.0	0.0	0.0	16.7	25.0

앞에서 살펴본 임금교섭 시작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준비한 임금인상률간의 격차는 6.5%포인트로 나타났으며, 제조업(6.2%포인트)에 비해 서비스업종(6.9%포인트)에서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을 통해서 노사양측이 요구(제시)한 최초임금인상률 격차는 제조업의 경우 경공업이, 서비스업의 경우 사회서비스업과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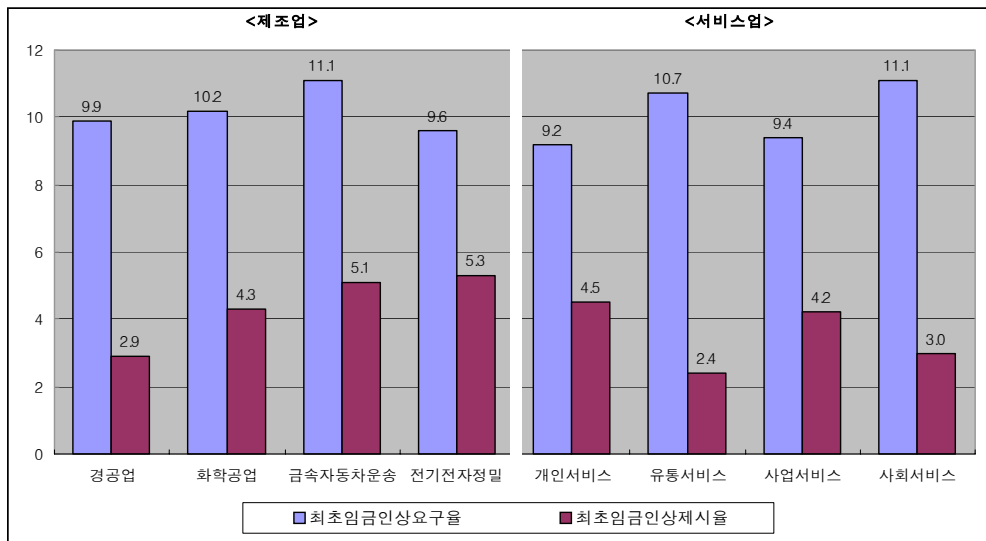
서비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급단체소속 여부에 따라 노사양측이 요구(제시)한 임금인상률 격차는 7.7%포인트로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체의 3.6%포인트보다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최초임금인상요구율과 최초임금인상제시율의 격차는 어떤 형태로든 노사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2004년 정부는 노사정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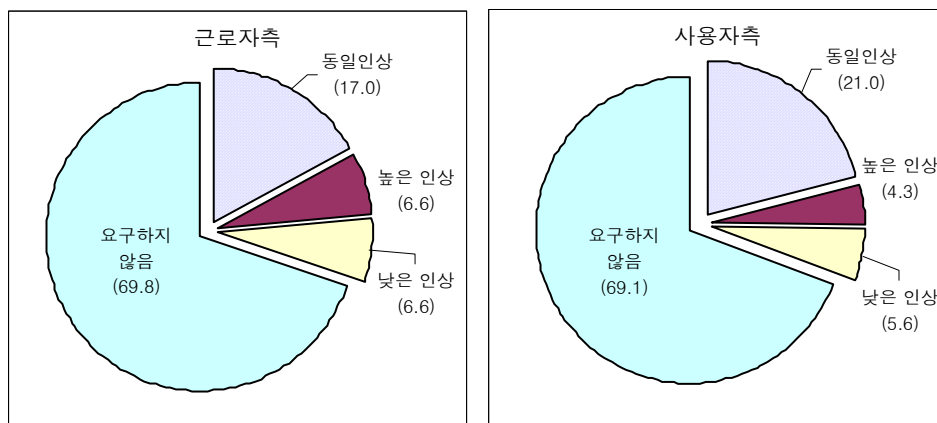
[그림 1] 산업별 최초임금인상요구율과 최초임금인상제시율 격차

(단위 : %)



[그림 2] 임금교섭시 비정규근로자 고려여부

(단위 : %)



를」의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연내처리가 유보되어 2005년 입단협에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교섭시 노사양측에서 비정규근로자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근로자측의 경우 임금교섭시 비정규근로자를 고려하는 사업체는 비정규활용사업체(305개) 중 30.2%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측의 경우 비정규활용사업체(324개) 중 30.9%로 나타났다. 즉 임금교섭시 비정규근로자를 배제하는 사업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교섭이 주류인 우리나라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I. 임금교섭과정: 임금교섭횟수와 교섭기간

임금교섭과정은 현상적으로 임금인상률의 결정과정이지만 노사관계의 성격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장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임금교섭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섭비용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임금교섭횟수와 임금교섭기간, 노사분쟁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응답사업체의 임금교섭횟수는 평균 7.4회로 나타났으며,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교섭횟수가 상대적으로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노총소속 사업체의 임금교섭횟수는 평균 9.1회로 한국노총소속 사업체의 6.8회 보다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에서의 교섭횟수가 더 많고, 금속자동차운송업은 11.1회로 전산업 중 가장 많은 교섭횟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교섭횟수 또한 많아지고 있다.

임금교섭과정의 또다른 지표인 임금교섭기간은 평균 59.2일로 나타났으며, 상급단체소속 사업체, 특히 민주노총소속 사업체의 교섭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교섭기간이 73.8일로 가장 오랫동안 임금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교섭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양측이 요구(제시)한 최초임금인상률의 격차가 클수록 임금교섭횟수가 잦고, 임금교섭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산업별 교섭을 하는 사업체가 여타 다른 임금교섭 구조를 가진 사업체에 비해 임금교섭횟수(14.2회)와 임금교섭기간(119.7일)이 긴 것으로 나타나 교섭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다.⁶⁾ 이러한 임

6) 2003년 사업체패널 ‘임금교섭’ 부가조사에서는 산업별 교섭이 3.6%로 나타나 산업별 교섭구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 교섭으로의 전환을 정부는 교섭력 증가에 따른 파업

〈표 5〉 교섭횟수 및 교섭기간

(단위: 개, %)

	응답 사업체	교섭횟수					교섭기간				
		평균교 섭횟수	상급단체소속 여부				평균교 섭기간	상급단체소속 여부			
			무소속	상급단체		무소속		상급단체			
				한국 노총	민주 노총			한국 노총	민주 노총		
전 체	438	7.4	4.8	7.6	6.8	9.1	59.2	48.2	59.8	58.4	62.5
산업별 분포											
광공업	204	8.0	5.3	8.0	6.9	11.2	54.6	37.0	55.0	53.4	59.3
제조업	202	8.0	5.3	8.1	6.8	11.4	54.5	37.0	54.9	53.4	58.9
경공업	73	6.7	3.0	6.8	7.0	5.6	60.9	23.0	61.5	66.8	33.7
화학공업	36	5.9	8.0	5.9	5.0	8.4	51.2	55.0	51.1	46.4	64.1
금속자동차운송업	63	11.1	6.0	11.2	9.4	13.6	56.0	30.0	56.4	49.6	65.8
전기전자정밀업	30	7.0	4.0	7.1	4.5	16.7	39.1	40.0	39.1	31.1	67.0
서비스업	210	6.9	4.6	7.1	6.8	7.6	64.3	44.4	66.0	66.1	65.7
개인서비스업	34	6.8	3.0	6.9	6.2	10.2	60.8	20.0	62.1	61.2	66.8
유통서비스업	81	6.8	5.2	7.0	6.9	7.2	65.5	56.8	66.1	67.9	56.6
사업서비스업	52	6.0	3.3	6.2	6.5	5.9	59.6	26.8	62.4	62.0	62.7
사회서비스업	43	8.4	5.4	8.8	8.7	8.9	70.7	51.0	73.4	77.3	72.0
건설업	12	6.8	5.0	7.0	3.0	7.9	73.8	150.0	66.8	62.5	67.8
기타	14	6.6	0.0	6.6	6.3	7.2	39.7	0.0	39.7	35.5	46.4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6	3.5	3.0	3.6	5.0	2.7	40.3	20.0	44.4	45.0	44.0
30~99인	71	5.7	3.5	6.0	5.7	6.6	59.6	49.6	60.9	68.8	47.7
100~299인	168	6.7	5.0	6.7	6.6	7.1	56.7	51.3	56.9	56.7	57.6
300~499인	71	6.9	12.0	6.8	6.6	7.4	57.5	109.0	56.8	57.1	55.9
500인 이상	122	9.9	5.3	10.1	8.2	12.1	64.3	38.8	65.6	57.0	74.2

주: 분석대상 사업체 중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교섭을 하는 사업체에 한함.

금교섭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교섭비용(임금교섭횟수와 교섭기간)에 대해 노사양측 모두 적정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한편, 임금교섭과정 중 노사분쟁이 일어나 파업에 이른 사업체는 30개 사업체로 이 중 제조업이면서 500인 이상 사업체가 21개로 70.0%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파업기간은 16.1일이었으며, 건설업의 경우 최장 135일까지 파업을 한 사업체도 있었다.

이와 같은 임금교섭과정 전반에 나타난 노사양측의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근로자측의 경우 사용자측의 태도가 ‘보통이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39.5%로 나타났다. 사용자측의 경우 근로자측의 태도가 ‘합리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53.8%)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보통이었다’가 35.2%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양측은 임금교섭과정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기업은 이중교섭으로 교섭비용의 증가라는 부작용 때문에 소극적이지만, 교섭의 집중화, 이로 인한 교섭당사간의 거시적인 안목으로 교섭에 임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의 자신들의 태도가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III. 임금교섭 결과: 임금인상타결률

임금교섭을 통해 노사협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조건은 근로자측의 제안보다 못하고 사용자측의 최초 제안보다 나은 것이 보통이다. 즉 단체교섭과정에서 근로자측의 요구는 하향조정되고 사용자측의 제안은 상향조정되게 된다.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파악된 임금교섭과정의 결과물인 임금인상타결률은 통상임금 기준 5.5%(총액임금 기준 5.2%)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5.9%)이 서비스업(4.9%)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비스업에서

〈표 6〉 임금인상타결률

(단위: 개, %)

	표본 사업체	응답 사업체	평균 인상률	동결	상급단체소속 여부			
					무소속	상급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 체	712	710	5.5	17.5	5.8	5.1	5.4	4.7
산업별 분포								
광공업	355	354	5.9	14.7	5.8	6.0	6.0	6.0
제조업	352	351	5.9	14.8	5.8	6.0	6.0	6.0
경공업	106	105	4.7	23.8	4.4	5.1	5.4	3.0
화학공업	66	66	5.6	15.2	5.3	6.2	6.6	5.0
금속자동차운송업	106	106	7.1	4.7	7.1	7.2	6.9	7.7
전기전자정밀업	74	74	5.9	16.2	6.2	5.4	5.4	5.5
서비스업	309	308	4.9	21.8	5.5	4.3	4.7	3.6
개인서비스업	73	73	5.4	16.4	5.2	5.6	5.5	5.9
유통서비스업	89	89	4.5	33.7	5.0	4.3	4.6	2.0
사업서비스업	81	80	4.9	17.5	5.7	3.8	3.6	4.1
사회서비스업	66	66	5.0	16.7	6.2	3.7	4.9	3.3
건설업	35	35	6.9	14.3	6.9	6.9	10.3	6.1
기타	16	16	5.6	0.0	7.7	4.6	4.5	5.0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17	16	4.3	12.5	4.1	4.8	5.0	4.5
30~99인	170	170	5.9	19.4	6.1	5.2	6.3	3.8
100~299인	281	281	5.5	19.6	6.0	4.9	5.2	4.0
300~499인	93	93	5.9	18.3	6.6	5.6	6.0	4.2
500인 이상	151	150	4.9	11.3	4.4	5.1	4.8	5.5

7) 임금교섭과정에서 나타난 상대측의 태도를 평가하는 유효사업체는 사용자측의 근로자측 평가는 688개, 근로자측의 사용자측 평가는 488개 사업체이다.

의 임금인상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자동차운송업(7.1%)이 가장 높은 임금인상률을 보였으며, 건설업(6.9%)이 그 다음으로 높은 편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임금인상률이 중소기업의 사업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사업체의 상급단체소속 여부에 따라 임금인상타결률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민주노총소속 사업체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4.7%로 한국노총소속 사업체에 비해 0.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교섭과정에서 파악된 교섭횟수와 교섭기간을 고려해 볼 때 상급단체소속 사업체가 임금교섭횟수와 임금교섭기간이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많은 반면, 임금인상타결률은 낮은 편이어서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에서 비효율적인 임금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임금교섭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가는 임금타결률 자체보다는 교섭준비단계에서 요구(제시)한 노사측의 최초인상률과 타결률의 차이를 보는 것이 더 의미있을 것이다. <표 7>에서의 저항곡선은 노동조합이 최초에 제시한 요구율을 임금교섭과정에서 낮추어 타결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며, 양보곡선은 사용자측이 임금교섭과정에서 최초에 제시한 제시율을 올리며 타결에 이르는 과정을 요약한 곡선이다. 즉, 근로자측에서는 저항곡선을 낮출수록, 양보곡선을 높일수록 임금교섭과정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노조성취율은 통상적으로 노조요구율 대비 임금인상타결률의 비율을 사용하지만 본고에서는 사용자측의 제시율로부터 얼마나 더 높은 인상률로 타결했느냐가 임금교섭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임금인상타결률-사용자측 최초임금인상제시율)/(근로자측 최초임금인상요구율-사용자측 최초임금인상제시율)*100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서의 노조성취율은 임금측면에서 노조가 성취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은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산정한 근로자측의 저항곡선과 사용자측의 양보곡선, 노조성취율을 정리한 것이다. 저항곡선인 최초임금인상요구율과 임금인상타결률과의 차이는 4.8%포인트로 나타났으며,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1.7%포인트 높음을 알 수 있다. 양보곡선인 임금인상타결률과 최초임금인상제시율의 차이는 1.7%포인트로 나타나 사용자측의 최초임금인상제시율에다 1.7%포인트 높아진 임금인상률에서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양보곡선을 통해서만 임금교섭 결과를 보면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2.2%포인트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근로자측에서 더 효과적인 임금교섭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조성취율을 통해서 볼 때 최종타결된 인상률은 평균적으로 사용자측의 최초임금인상제시율에서 29.7%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측보다는 사용자측에 유리한 임금교섭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임금교섭 결과에 대한 사용자측의 평가는 응답사업체의 25.8%만이 임금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58.7%가 ‘불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수(불만족+매우 불만족 71.3%)가 임금교섭 결과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유통서비스업(81.6%)과 경공업(80.8%), 사업체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임금인상타결률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임금교섭 타결 이후 노사관계 변화를 보면, 노사양측 모두 임금교섭 이후 노사관계가 ‘변화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고, 노사관계가 ‘좋아졌다(너무 좋아짐+좋아짐)’는 비중이 노사 각각 31.4%, 31.6%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자측의 경우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하여 사용자측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저항곡선·양보곡선·노조성취율

(단위: %포인트, %)

	저항곡선					양보곡선					노조성취율				
	전체	상급단체소속 여부				전체	상급단체소속 여부				전체	상급단체소속 여부			
		무소속	상급단체				무소속	상급단체				무소속	상급단체		
			한국 노총	민주 노총				한국 노총	민주 노총				한국 노총	민주 노총	
전 체	4.8	3.8	5.5	5.3	6.1	1.7	1.2	2.2	2.3	2.0	29.7	33.7	26.8	28.5	23.2
산업별 분포															
광공업	4.4	3.9	4.9	5.1	4.5	1.7	1.1	2.4	2.5	2.3	33.9	38.3	30.2	30.7	28.8
제조업	4.4	3.9	4.9	5.0	4.3	1.7	1.1	2.4	2.4	2.4	34.0	38.3	30.4	30.7	29.4
경공업	5.1	4.3	5.6	5.8	4.4	2.0	1.1	2.7	2.7	2.7	34.5	38.8	31.8	31.8	31.7
화학공업	4.1	3.7	4.3	4.1	5.2	1.5	0.7	2.6	2.9	1.6	32.4	28.8	35.7	38.8	23.1
금속자동차운송업	4.2	4.2	4.2	4.4	3.8	1.9	1.5	2.4	2.2	2.7	28.8	29.4	28.2	27.5	29.5
전기전자정밀업	3.9	3.0	5.2	5.2	5.1	1.2	0.8	1.8	1.8	1.7	45.0	62.1	26.2	24.1	32.0
서비스업	5.2	3.9	6.1	5.6	6.9	1.7	1.4	2.0	2.1	1.8	25.2	26.9	24.2	26.0	21.4
개인서비스업	4.0	2.7	5.5	5.0	7.7	1.5	1.3	2.0	1.7	2.9	27.0	23.7	30.4	30.4	30.5
유통서비스업	6.1	5.3	6.4	6.3	6.5	2.5	2.6	2.5	2.6	1.9	31.3	39.5	28.0	28.9	22.2
사업서비스업	4.2	3.8	4.6	4.0	5.0	1.1	1.0	1.1	1.1	1.1	19.6	23.2	16.8	15.4	18.1
사회서비스업	6.6	4.6	7.8	6.2	8.3	1.8	1.3	2.1	2.2	2.1	22.4	23.6	21.7	22.3	21.5
건설업	4.1	2.3	6.1	2.3	7.0	1.5	0.6	3.1	7.8	2.0	31.8	37.7	25.9	68.3	8.9
기타	6.3	5.3	6.7	6.1	8.3	1.0	0.0	1.2	1.3	0.9	11.7	0.0	12.8	13.8	10.0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2.7	2.2	3.8	3.0	4.5	0.7	0.6	1.1	1.6	0.5	17.5	11.8	26.9	35.4	10.0
30~99인	4.3	3.5	6.3	6.0	6.7	1.4	1.1	2.2	2.6	1.7	38.1	39.6	34.9	44.7	21.4
100~299인	4.4	3.4	5.2	5.1	5.3	1.8	1.2	2.4	2.6	1.7	31.8	37.6	27.5	29.0	20.5
300~499인	4.9	4.5	5.1	4.8	5.8	1.7	1.4	1.8	2.0	1.2	26.4	24.9	27.0	29.0	21.4
500인 이상	5.9	5.5	6.2	5.9	6.4	1.9	1.2	2.2	1.9	2.6	23.4	23.6	23.3	21.2	25.5

주: 저항곡선=최초임금인상요구율-임금인상타결률

양보곡선=임금인상타결률-최초임금인상제시율

노조성취율=(임금인상타결률-최초임금인상제시율)/(최초임금인상요구율-최초임금인상제시율)*100

IV. 2005년 노사양측의 임금인상요구(제시)율 전망

2005년도는 비정규직 확대, 불안정 노동 및 임금격차 심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4년도에 해결하지 못한 노사정 각 주체간에 비정규직 등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주40시간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무원, 지자체 등에서 시행되므로 임금 및 휴일, 휴가 보전을 둘러싼 노사간의 교섭이 임단협의 주요 핵심과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표 8>은 이러한 현실에서 2005년 임금교섭에서 노사양측이 요구(제시)할 임금인상률 예상치를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상급단체 여부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2005년 임금교섭 시작 전에 근로자측이 요구할 임금인상률은 평균 8.2%로 2004년 최초임금인상요구율에 비해 2.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에 소속된 사업체

<표 8> 2005년 임금교섭시 노사양측의 임금인상요구(제시)율 전망

(단위 : 개, %)

	표본 사업체	평균요구율						평균제시율					
		응답 사업체	평균 요구율	무소 속	상급단체			응답 사업체	평균 제시율	무소 속	상급단체		
					한국 노총	민주 노총					한국 노총	민주 노총	
전 체	712	569	8.2	7.7	8.6	8.6	8.7	539	3.8	3.9	3.7	3.8	3.6
산업별 분포													
광공업	355	292	8.2	7.7	8.6	8.5	9.2	278	3.9	4.1	3.6	3.9	2.7
제조업	352	289	8.1	7.8	8.5	8.4	9.0	276	3.9	4.1	3.6	3.9	2.6
경공업	106	85	7.6	7.2	7.9	7.8	8.4	84	3.2	3.4	3.1	3.4	1.2
화학공업	66	51	7.7	7.9	7.5	7.5	7.4	51	4.0	4.7	3.0	3.3	1.8
금속자동차운송업	106	95	8.7	8.2	9.2	8.9	9.8	87	4.2	3.8	4.7	4.9	4.4
전기전자정밀업	74	58	8.4	7.7	9.6	9.8	9.0	54	4.4	5.0	3.2	4.0	1.0
서비스업	309	240	8.1	7.5	8.6	8.8	8.1	226	3.6	3.3	3.8	3.6	4.2
개인서비스업	73	56	7.6	6.6	9.5	9.8	8.0	58	3.3	3.1	3.6	4.2	1.0
유통서비스업	89	75	8.9	9.2	8.8	9.1	7.0	67	3.4	4.1	3.1	2.9	4.1
사업서비스업	81	60	7.6	8.0	7.1	7.6	6.7	58	3.8	3.3	4.5	5.5	3.5
사회서비스업	66	49	7.9	6.7	8.8	6.8	9.5	43	3.7	2.6	4.6	2.4	5.3
건설업	35	25	8.9	8.0	10.0	10.5	9.9	26	4.8	5.3	3.7	6.3	2.8
기타	16	15	10.0	10.9	9.6	8.9	11.5	11	3.4	0.0	3.7	2.7	6.1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17	11	7.3	6.4	9.7	10.0	9.5	11	2.7	2.4	3.7	6.0	2.5
30~99인	170	117	8.2	8.3	8.0	8.3	7.8	129	3.9	4.0	3.6	3.9	3.2
100~299인	281	231	8.0	7.3	8.8	8.9	8.1	214	3.9	4.0	3.8	3.7	4.2
300~499인	93	80	8.3	8.3	8.3	8.7	7.0	75	4.2	4.4	4.2	4.2	4.1
500인 이상	151	130	8.5	7.8	8.9	7.9	10.0	110	3.3	3.1	3.4	3.5	3.3

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임금인상요구율이 0.9%포인트 높은 8.6%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유통서비스업(8.9%)과 건설업(8.9%)에서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용자측이 근로자측에 제시할 임금인상률 또한 평균 3.8%로 2004년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의 임금인상제시율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4.8%)과 전기전자정밀업(4.4%), 금속자동차운송업(4.2%) 순으로 임금인상제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 임단협교섭에서 사용자측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임금·고용 이외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3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용안정(27.8%), 임금인상(25.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측이 2005년 임금교섭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절반 이상의 사업체에서 고용안정(51.5%)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임금인상(25.8%), 임금·고용 이외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16.4%)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자측은 임금인상을 포함한 근로조건보다는 고용안정(job security)에 더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2004년 임금교섭 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사업체의 대다수가 기업별 교섭을 하는 와중에 산업별 교섭 등 공동교섭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별 교섭에 대응하는 교섭기관과 교섭당사자, 협약의 효력과 구속력 등에 대한 법제도적인 정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사양측이 요구(제시)한 임금인상률은 각각 통상임금 기준 10.3%, 4.1%였으며, 임금교섭과정을 거쳐 타결된 최종임금인상률은 5.5%로 분석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노사양측의 요구(제시)임금인상률 격차가 클수록 교섭비용인 교섭횟수가 잦아지고 교섭기간이 장기화되고,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일수록 격차가 심하여 교섭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조성취율을 통해 2004년 임금교섭 결과가 사용자측에 효과적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즉, 최종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사용자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 4.1%에서 29.7%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측보다는 사용자측에 유리한 임금교섭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의 노조성취율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임금교섭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임금교섭은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상생하는 협조적 노사관계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는 임금교섭시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능력의 증대가 향후 합리적인 임금교섭 관행의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활한 임금교섭을 위한 외부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수준

- 여기에서는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의 조세 및 사회보장 기여에 대한 국민의 부담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함.
-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명목GDP대비 조세(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으로,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임.
 - 국민부담률은 총조세에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제보험과 연금)을 합한 국민부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text{조세부담률}(\%) = (\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명목GDP} \times 100$$

$$\text{국민부담률}(\%) = (\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사회보장기여금}) / \text{명목GDP}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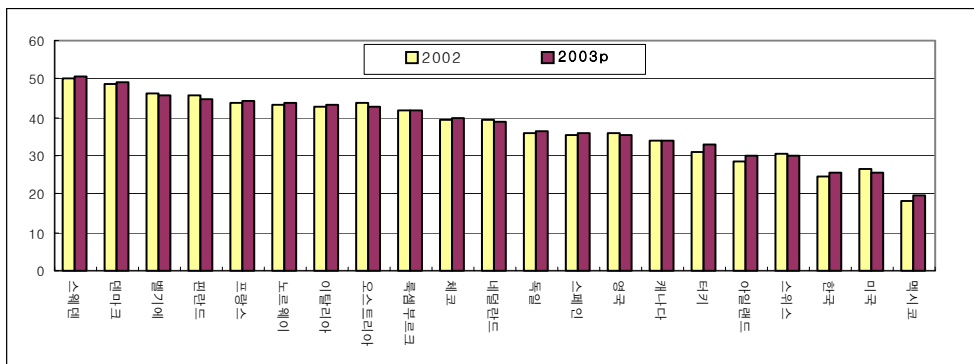
-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명목GDP대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200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멕시코(19.5%)와 미국(25.4%)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5.5% 수준임. 이는 OECD 국가 평균(36.3%, 2002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민부담률이 높은 스웨덴(50.8%), 덴마크(49.0%)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
 - ※ 일본의 경우, 2002년 기준 국민부담률(25.8%)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24.4%)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현재 GDP대비 5.0%로 캐나다(5.2%), 아일랜드(4.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체코, 프랑스, 스웨덴의 GDP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15%대 이상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여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0년에 17%대에서 시작하여 2003년 현재 20.5%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1990년 이후 조세부담률의 감소세를 나타내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결과임.

－ 덴마크(47.3%), 스웨덴(36.1%), 핀란드(32.9%) 등의 유럽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 멕시코는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은 개별 국가의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단순 평균치일 뿐 그 자체로 적정수준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선진 복지국가의 수준으로 사회보장의 양·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패널**

〈OECD 주요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단위 : %)



〈OECD 주요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p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p
오스트리아	40.4	41.6	43.4	45.2	44.0	43.0	27.1	26.5	28.6	30.4	29.3	28.4
벨기에	43.2	44.8	45.7	45.9	46.4	45.8	28.9	30.1	31.6	31.5	31.7	31.3
캐나다	35.9	35.6	35.6	35.0	33.9	33.9	31.5	30.6	30.7	29.9	28.7	28.7
체코	-	39.8	39	38.5	39.3	39.9	-	23.3	21.8	21.6	21.9	22.6
덴마크	47.1	49.4	49.6	49.9	48.9	49.0	45.7	47.9	47.3	47.7	47.2	47.3
핀란드	44.3	46	48	46	45.9	44.9	32.9	31.8	35.9	33.6	33.7	32.9
프랑스	43.0	43.9	45.2	44.9	44.0	44.2	24.1	25.3	29.0	28.7	27.7	27.5
독일	35.7	38.2	37.8	36.8	36.0	36.2	22.3	23.3	23.0	22.2	21.5	21.5
헝가리	-	42.4	39.0	39.0	38.3	-	-	27.3	27.6	27.4	26.7	-
아일랜드	33.5	32.8	32.2	30.1	28.4	30.0	28.5	28.1	27.9	25.8	24.1	25.5
이탈리아	38.9	41.2	43.2	43	42.6	43.4	26.1	28.2	30.8	30.7	30.1	30.5
일본	30.2	27.8	27.1	27.4	25.8	-	21.5	17.7	17.2	17.1	15.9	-
한국	18.1	19.4	23.6	24.1	24.4	25.5	17.1	18.0	19.7	19.7	19.8	20.5
룩셈부르크	40.8	42.3	40.2	40.7	41.8	41.6	29.8	31.1	30.3	29.8	30.6	30.1
멕시코	17.3	16.7	18.5	18.8	18.1	19.5	15.0	13.9	15.5	15.6	14.9	16.2
네덜란드	42.9	41.9	41.2	39.8	39.2	38.8	26.9	24.3	25.2	25.4	25.3	24.7
노르웨이	41.5	41.1	43.2	43.4	43.5	43.9	30.6	31.4	34.3	34.2	33.6	34.0
폴란드	-	37.0	32.5	31.9	32.6	-	-	25.7	23.0	22.3	23.1	-
포르투갈	29.2	33.6	36.4	35.6	33.9	-	21.3	23.5	25.5	24.6	24.7	-
스페인	33.2	32.8	35.2	35.0	35.6	35.8	21.4	20.9	22.9	22.5	23.0	23.2
스웨덴	53.2	48.5	53.8	51.9	50.2	50.8	38.7	35.1	39.0	36.6	35.1	36.1
스위스	26.0	27.8	30.5	30.0	30.3	29.8	19.9	20.3	23.1	22.3	22.5	22.2
터키	20.0	22.6	32.3	35.1	31.1	32.9	16.1	19.9	26.2	27.5	25.0	26.1
영국	36.5	35.0	37.4	37.2	35.8	35.3	30.3	28.8	31.1	30.9	29.7	28.9
미국	27.3	27.9	29.9	28.9	26.5	25.4	20.4	21.0	23.0	21.9	19.6	18.6
OECD 전체	34.8	35.9	37.2	36.8	36.3	-	26.6	26.6	27.9	27.4	27.0	-
EU 15개국	39.4	40.3	41.8	41.2	40.6	-	28.3	28.5	30.3	29.6	29.2	-

주 : 1) 2003년도는 추정치임.

2)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의 비중은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차이로 구할 수 있음. 사회보장기여금의 항목구성은 국가별로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용자(employee), 고용주(employers), 자영업자(self-employed)의 연금 및 건강(의료), 실업보험 등의 기여금이 여기에 해당됨. 일반적으로 자발적 사회보장기여금의 참여는 정부수입으로 간주되지만, Revenue Statistics에서는 제외시키고 있음.

자료 : OECD, Database Revenue statistics.

노동시장 동향

경제일반

◆ 생산·소비는 증가, 투자는 감소

○ 2005년 6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1%, 4.4% 증가하였고, 도·소매 판매는 3.0% 증가하였으나, 투자는 2.8% 감소하였음.

－ 6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14.5%), 자동차(19.6%), 영상음향통신(5.8%)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2/4분기로는 전년동분기대비 4.0% 증가하였음. 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자동차 및 통신기계 등에 대한 투자감소로 2.8% 감소, 2/4분기로는 1.5% 증가(표 1 참조).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등 다른 업종에서는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2/4분기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분기대비 2.4% 증가(그림 2 참조).

－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 및 연료소매 모두 증가하여 3.0% 증가, 2/4분기로는 2.7% 증가(전월대비 2.3% 증가).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보다 0.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향후의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1.6%로 전월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하였음(그림 3 참조).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생산	광공업 생산	11.2	6.1	3.1	3.0	7.7	11.3	12.7	12.9	11.4	6.7	3.8	4.0	4.1
	제조업 생산	11.2	5.7	2.9	3.0	8.0	11.9	13.2	13.3	11.6	7.0	3.5	3.9	4.1
	출 하	10.8	4.4	2.8	2.5	6.7	10.0	10.8	11.0	10.1	5.8	3.5	3.5	4.4
	수 출	12.2	7.3	9.9	11.2	17.6	21.9	23.4	20.7	20.4	15.0	10.9	6.7	8.2
	내 수	10.0	2.8	-0.7	-2.1	0.9	3.7	3.8	5.4	4.1	0.3	-1.2	1.4	2.0
	서비스업 생산	8.0	1.9	0.9	0.5	0.6	2.1	0.9	1.6	-0.5	-0.2	0.7	2.4	2.6
소비	도소매 판매	7.1	1.7	-1.5	-2.3	-2.0	-0.2	-0.6	1.2	-1.1	-1.4	-1.0	2.7	3.0
투자	설비투자	13.8	2.6	0.2	-6.4	-5.3	-2.0	3.2	7.5	3.8	0.1	4.0	1.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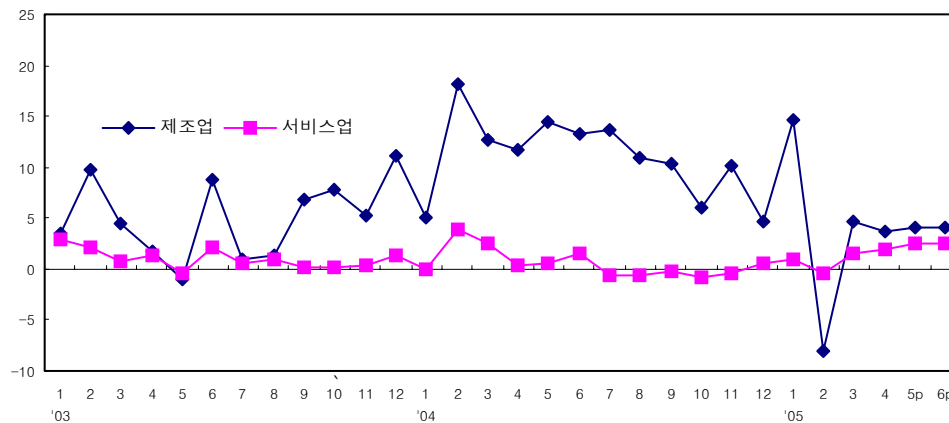
주: p는 잠정치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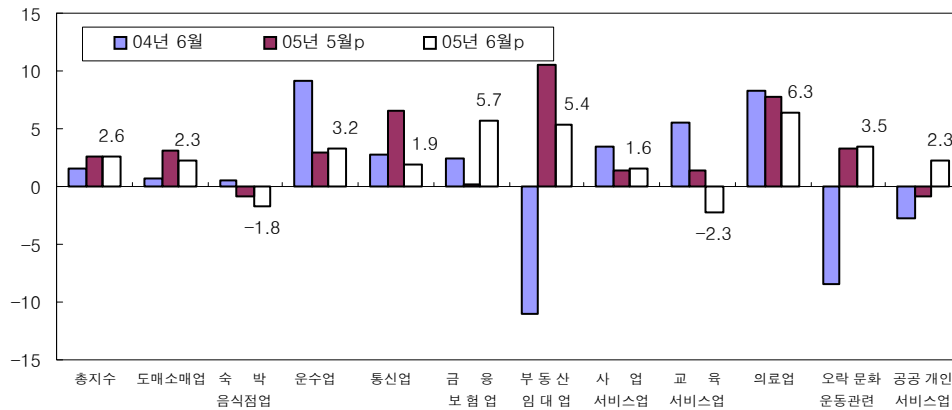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5년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2005. 7.

____, 『2005년 6월 및 2/4분기 서비스업활동동향』, 2005. 7.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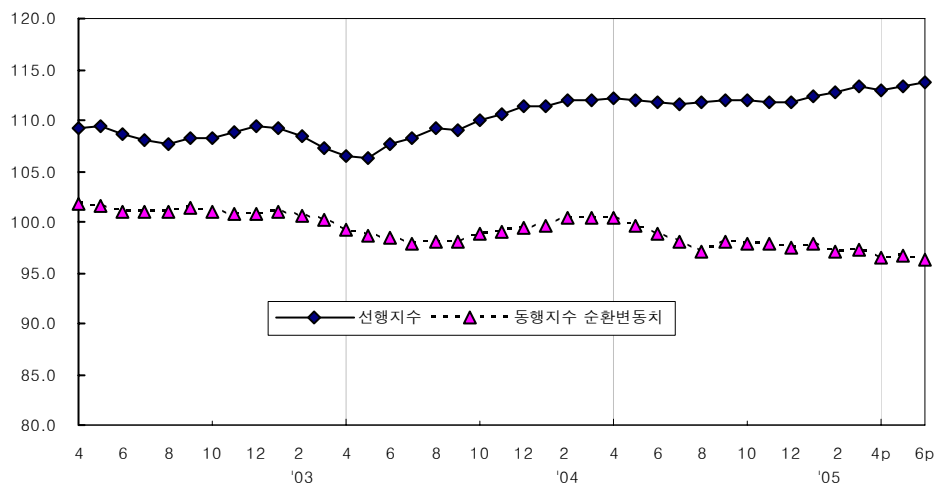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단위 : 2000=100)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 둔화

- 2005년 7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0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7천명(1.9%)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061천명으로 251천명(1.8%)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011천명으로 206천명(2.1%) 증가함.
- 2005년 7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75.3%)이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50.7%)은 0.2%포인트 상승으로 여성의 증가율이 두드러짐.
- 2005년 7월 중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증가
 - 남성의 고용률은 72.3%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49.1%로 0.2%포인트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고용률 역시 증가세가 지속됨(그림 4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3/4분기
경제활동인구	23,035 (2.5)	23,576 (2.1)	23,482 (1.7)	23,616 (1.4)	23,575 (1.8)	23,221 (0.8)	24,004 (1.8)	24,051 (2.0)	24,123 (1.8)	24,072 (1.9)
참가율	61.3	62.6	62.2	62.6	62.3	61.1	62.7	62.8	62.9	62.7
취업자	22,104 (2.2)	22,744 (2.0)	22,647 (1.6)	22,750 (1.3)	22,733 (1.8)	22,247 (0.6)	23,126 (1.7)	23,199 (2.0)	23,246 (1.9)	23,184 (1.9)
고용률	58.8	60.4	60.0	60.3	60.1	58.5	60.4	60.6	60.6	60.4
실업자	931	831	835	865	842	975	878	852	878	888
실업률	4.0	3.3	3.6	3.7	3.6	4.2	3.7	3.5	3.6	3.7
비경제활동인구	14,542 (-1.2)	14,097 (-0.8)	14,289 (0.0)	14,128 (0.3)	14,273 (-0.3)	14,789 (1.7)	14,271 (1.2)	14,223 (0.9)	14,245 (1.1)	14,33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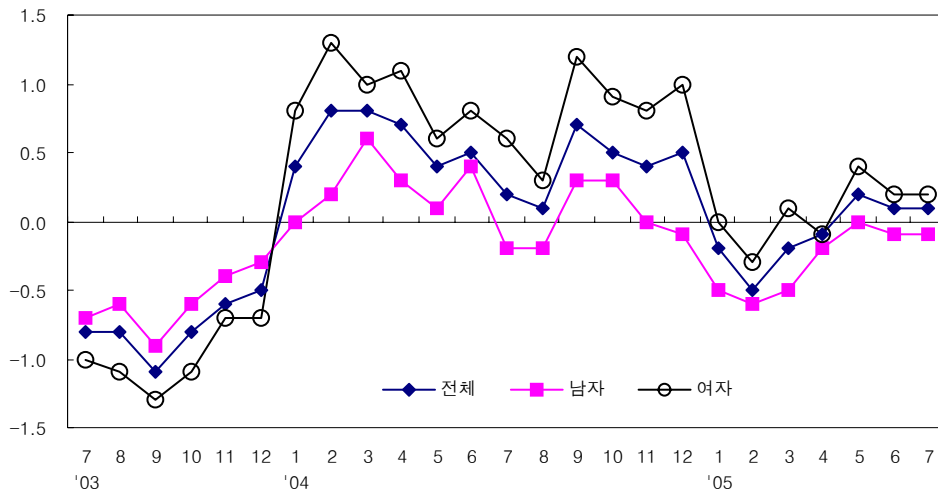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 통계청, 『2005년 7월 고용동향』, 2005. 8.

[그림 4] 고용률 변화

(단위: %포인트,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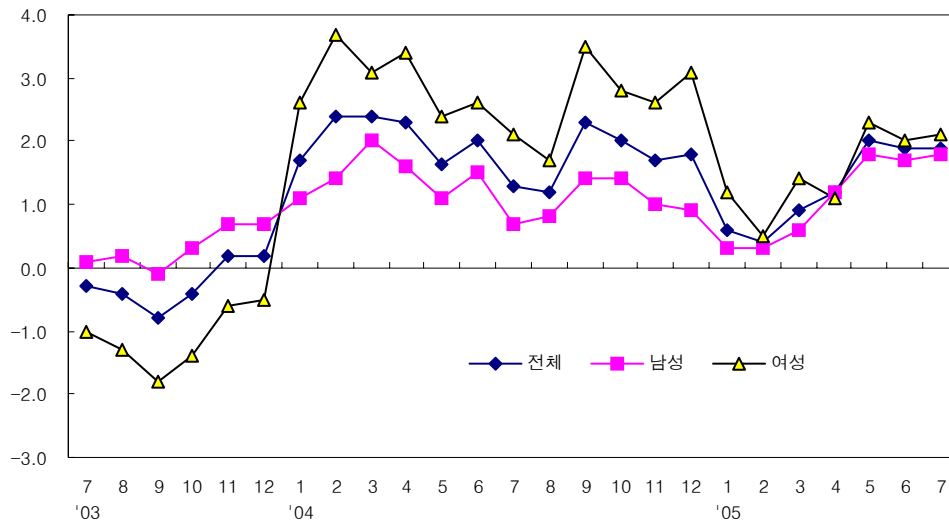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2005년 7월 중 취업자는 23,1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4천명(1.9%)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취업자는 13,4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6천명(1.8%), 여성취업자는 9,69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8천명(2.1%)이 증가하여 여성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짐(그림 5 참조)
 - 2005년 2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7월 중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짐.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39세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반면, 50~59세의 취업자 증가가 계속됨.
 - 2005년 7월 중 실업자는 8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2.6%)이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함.
 - 남성실업자는 567천명(14천명, 2.6%), 여성실업자는 321천명(8천명, 2.7%)이 증가함.
 - 실업률은 남자와 여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동일함(남성: 4.0%, 여성: 3.2%).
 - 2005년 7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4,3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1.4%) 증가
 -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는 14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천명 증가로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어가며 2001년 2월(149천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
- ※ 구직단념자 추이: 109천명(2004. 7) → 135천명(2005. 2) → 109천명(2005. 3) → 103천

명(2005. 4)→114천명(2005. 5)→114천명(2005. 6) →141천명(2005. 7)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

- 2005년 7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41천명, 5.1%), 건설업(84천명, 4.7%), 농림어업(81천명, 4.2%),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천명, 2.3%)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79천명, -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7천명, -0.8%) 등에서는 감소함.
 - － 2005년 2월 이후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짐(그림 6 참조).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고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4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004년 7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3/4분기
전 산 업	22,104 (2.2)	22,744 (2.0)	22,647 (1.6)	22,750 (1.3)	22,733 (1.8)	22,247 (0.6)	23,126 (1.7)	23,199 (2.0)	23,246 (1.9)	23,184 (1.9)
농림어업	1,609 (-5.3)	1,967 (-7.5)	1,933 (-7.5)	1,924 (-8.5)	1,789 (-4.9)	1,525 (-5.2)	2,018 (2.5)	2,061 (4.0)	2,056 (3.4)	2,005 (4.2)
제조업	4,278 (2.6)	4,308 (1.7)	4,278 (2.7)	4,311 (2.2)	4,296 (1.2)	4,260 (-0.4)	4,257 (-1.2)	4,249 (-0.9)	4,251 (-1.5)	4,233 (-1.8)
건설업	1,762 (1.6)	1,864 (0.6)	1,790 (-1.7)	1,786 (-3.1)	1,864 (0.6)	1,692 (-4.0)	1,897 (1.8)	1,909 (2.7)	1,931 (3.5)	1,870 (4.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12 (-0.1)	5,866 (0.5)	5,819 (0.2)	5,887 (0.1)	5,853 (0.0)	5,835 (-1.3)	5,796 (-1.2)	5,791 (-1.2)	5,806 (-1.0)	5,840 (-0.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6,362 (7.3)	6,542 (8.0)	6,617 (5.8)	6,627 (6.3)	6,711 (6.1)	6,714 (5.5)	6,907 (5.6)	6,938 (5.9)	6,950 (5.6)	6,968 (5.1)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163 (-0.2)	2,182 (0.2)	2,197 (2.6)	2,202 (2.1)	2,205 (2.4)	2,202 (1.8)	2,233 (2.3)	2,231 (2.0)	2,235 (1.9)	2,253 (2.3)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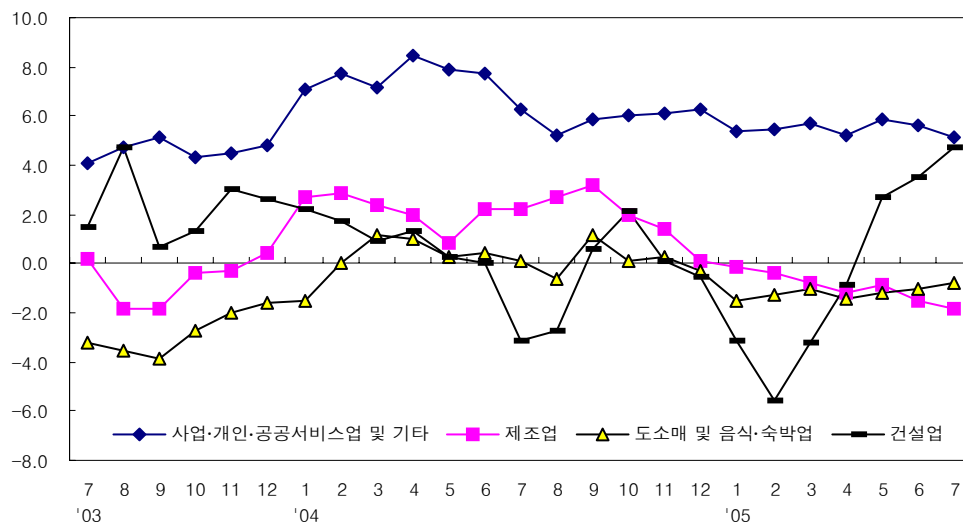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5년 7월 고용동향』, 2005. 8.

〈그림 6〉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증가세 지속, 36시간 미만 취업자 감소

- 2005년 7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812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24천명(1.6%)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3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0천명(2.1%) 증가
 - 임금근로자가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2005년 2월 이후 일용근로자의 증가가 대폭 상승함(그림 7 참조).
 - 두달 연속 비임금근로자가 증가하였고, 이는 자영업주의 증가에서 기인함.
 - 상용직 중심으로의 근로자 이동이나 임시근로자의 계속된 감소는 좋은 현상이나 일용근로자의 증가로 고용의 질 문제가 우려되며 감소된 임시근로자가 비경제활동 동인구나 일용근로자로 축적되는 현상은 경계해야 함.
- 2005년 7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6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9천명(-8.6%)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232천명으로 759천명(3.9%) 증가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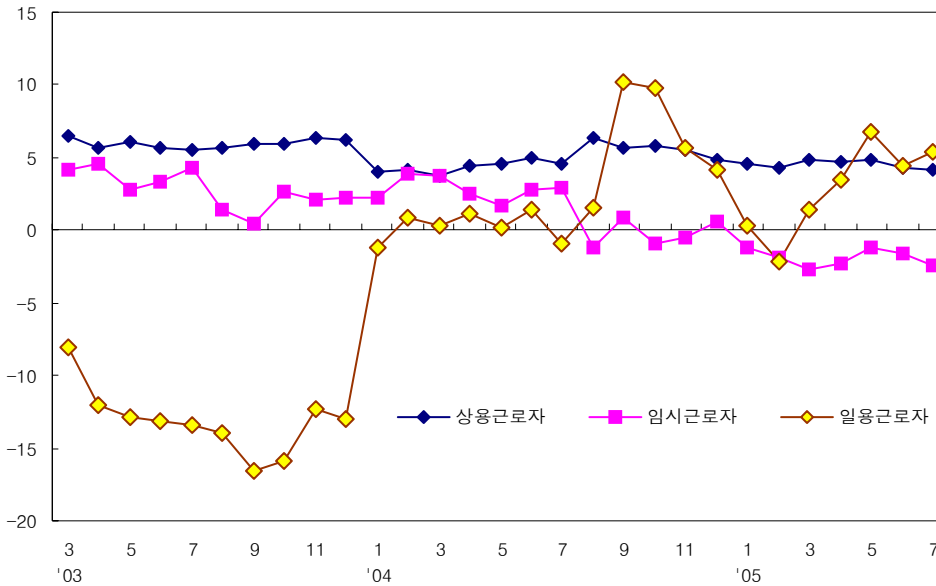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3/4분기
								7월		7월
전 체	22,104 (2.2)	22,744 (2.0)	22,647 (1.6)	22,750 (1.3)	22,733 (1.8)	22,247 (0.6)	23,126 (1.7)	23,199 (2.0)	23,246 (1.9)	23,184 (1.9)
비임금근로자	7,490 (0.3)	7,762 (-0.4)	7,769 (-2.1)	7,688 (-2.1)	7,631 (-1.5)	7,391 (-1.3)	7,772 (0.1)	7,798 (0.0)	7,844 (1.0)	7,812 (1.6)
자영업주	6,001 (2.3)	6,136 (1.9)	6,177 (0.1)	6,111 (0.5)	6,126 (0.2)	6,022 (0.4)	6,210 (1.2)	6,221 (1.1)	6,261 (2.0)	6,246 (2.2)
무급가족 종사자	1,489 (-7.0)	1,626 (-8.2)	1,593 (-9.9)	1,577 (-11.3)	1,505 (-8.0)	1,368 (-8.1)	1,562 (-3.9)	1,577 (-3.9)	1,583 (-2.5)	1,566 (-0.7)
임금근로자	14,614 (3.2)	14,983 (3.3)	14,878 (3.6)	15,063 (3.2)	15,102 (3.6)	14,856 (1.7)	15,354 (2.5)	15,401 (3.1)	15,401 (2.3)	15,372 (2.1)
상용근로자	7,460 (4.0)	7,586 (4.6)	7,671 (5.5)	7,569 (4.6)	7,781 (5.4)	7,803 (4.9)	7,936 (4.6)	7,971 (4.9)	7,931 (4.3)	7,889 (4.2)
임시근로자	5,067 (3.3)	5,199 (2.3)	5,035 (0.9)	5,303 (2.9)	5,026 (-0.3)	4,968 (-2.0)	5,112 (-1.7)	5,107 (-1.2)	5,144 (-1.6)	5,173 (-2.4)
일용근로자	2,087 (0.0)	2,197 (0.9)	2,172 (3.5)	2,191 (-0.9)	2,295 (6.5)	2,085 (-0.1)	2,306 (4.9)	2,323 (6.8)	2,326 (4.5)	2,310 (5.4)
36시간 미만	2,587 (0.8)	2,509 (27.9)	2,687 (-10.0)	2,887 (-3.4)	2,501 (5.5)	2,757 (6.7)	2,411 (-3.6)	2,389 (3.3)	2,326 (0.7)	2,638 (-8.6)
36시간 이상	19,125 (0.8)	20,004 (-0.8)	19,563 (3.6)	19,473 (1.7)	20,000 (1.4)	18,783 (-1.8)	20,473 (2.3)	20,572 (1.8)	20,666 (2.0)	20,232 (3.9)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5년 7월 고용동향』, 2005. 8.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30대, 중졸 이하 실업률 감소

- 2005년 7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22천명(-0.3% 포인트)이 감소했으나 다른 연령계층에서는 모두 증가
 - 청년층(19~29세) 실업률은 8.3%(0.4%포인트)로 대폭 증가하였고 다른 연령계층에서는 소폭 상승
 - 7월 중 교육정도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중졸 이하 14천명이 감소했고 실업률도 2.5%로 0.3%포인트 감소했으나, 고졸은 24천명이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0.2%포인트 증가한 4.7%를 기록하였으며, 대졸 이상은 12천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동일함.
- 2005년 7월 중 전체 실업자 888천명을 전직유무별로 보면 신규실업자는 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하나 전직실업자는 840천명으로 23천명 증가
 - 전직실업자 중 이직한지 1년이 안된 실업자는 6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이직한지 1년 이상 된 전직실업자는 173천명으로 28명이 증가함.

〈표 5〉 연령별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3/4분기 7월
전 체	931(4.0)	831(3.5)	835(3.6)	865(3.7)	842(3.6)	975(4.2)	878(3.7)	852(3.5)	878(3.6)	888(3.7)
15~29세	472(9.3)	402(8.1)	374(7.5)	405(7.9)	400(8.1)	448(9.0)	377(7.8)	360(7.4)	376(7.8)	416(8.3)
30~39세	193(3.0)	186(2.9)	204(3.2)	203(3.2)	201(3.2)	224(3.6)	200(3.2)	196(3.1)	191(3.0)	181(2.9)
40~49세	159(2.5)	138(2.2)	152(2.4)	149(2.3)	141(2.2)	182(2.9)	165(2.5)	162(2.5)	167(2.5)	164(2.5)
50~59세	79(2.4)	77(2.2)	78(2.3)	79(2.3)	78(2.2)	94(2.7)	94(2.5)	88(2.4)	96(2.5)	90(2.4)
60세이상	28(1.4)	29(1.2)	27(1.2)	28(1.2)	23(1.0)	23(1.3)	42(1.6)	46(1.8)	48(1.8)	37(1.5)
중졸이하	155(2.7)	141(2.3)	153(2.6)	165(2.8)	144(2.4)	169(3.1)	161(2.7)	162(2.7)	164(2.7)	151(2.5)
고 졸	495(4.9)	423(4.2)	443(4.3)	468(4.5)	478(4.7)	528(5.2)	444(4.3)	425(4.1)	460(4.5)	492(4.7)
대졸이상	280(3.9)	268(3.6)	239(3.3)	233(3.2)	220(3.0)	277(3.7)	273(3.5)	265(3.4)	254(3.3)	245(3.2)
신규실업자	86	52	32	48	40	60	41	37	36	48
전직실업자	845	779	803	817	803	915	837	815	841	840
1년 이상	158	141	129	145	144	175	179	182	183	173
1년 미만	687	638	674	672	659	740	658	633	658	667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 통계청, 『2005년 7월 고용동향』, 2005. 8.

임금 동향

◆ 2005년 5월 임금상승률, 전년보다 낮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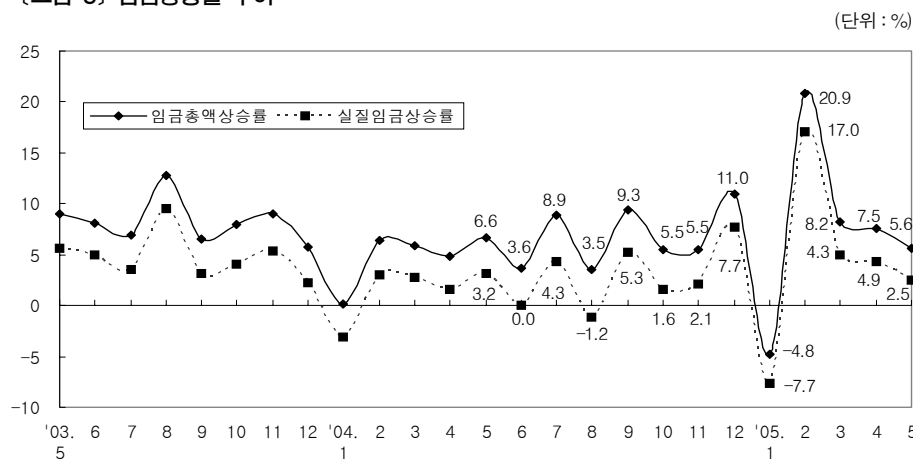
○ 2005년 5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101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6% 상승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6.6%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임.
- 1~5월 임금총액은 2,28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1% 상승
- 2005년 5월 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정액 급여 및 초과급여 상승률은 전년보다 상승한 반면, 특별급여 상승률이 -7.3%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낮은 임금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규모별로는 100~2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 등이 주요 원인임.

○ 실질임금은 2.5% 상승

- 2005년 5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2.5% 상승함.
- 1~5월의 실질임금은 1월 실질임금이 7.7% 하락한 영향이 지속되어 임금총액 상승률보다는 낮은 3.8%의 상승률을 기록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원/월, 2000=100.0,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1~5월	
						3월	4월	5월		
임 금 총 액	2,255 (6.0)	2,185 (3.9)	2,115 (5.0)	2,324 (7.3)	2,399 (7.7)	2,348 (7.5)	2,248 (8.2)	2,268 (7.5)	2101 (5.6)	2,283 (7.1)
정 액 급 여	1,636 (6.8)	1,599 (7.0)	1,613 (6.6)	1,643 (6.9)	1,690 (6.7)	1,726 (8.0)	1,724 (7.4)	1,722 (7.7)	1735 (7.4)	1,727 (7.8)
초 과 급 여	137 (1.7)	132 (3.1)	138 (2.5)	137 (2.5)	143 (-1.0)	142 (7.8)	148 (12.8)	150 (10.3)	151 (6.6)	145 (8.0)
특 별 급 여	482 (4.6)	455 (-5.4)	364 (-0.5)	544 (9.8)	566 (13.3)	480 (5.7)	375 (9.9)	397 (5.7)	215 (-7.3)	410 (4.1)
실 질 임 금 지 수	117.9 (2.3)	115.5 (0.6)	111.1 (1.6)	120.5 (2.9)	124.5 (4.1)	120.3 (4.2)	114.4 (4.9)	115.4 (4.3)	107.0 (2.5)	116.7 (3.8)
소 비 자 물 가 지 수	114.7 (3.6)	113.4 (3.3)	114.2 (3.3)	115.6 (4.3)	115.5 (3.4)	117.0 (3.2)	117.8 (3.1)	117.9 (3.1)	117.7 (3.1)	117.3 (3.2)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5년 7월, 협약임금 인상률 및 진도율은 전년보다 낮게 진행

○ 협약임금 인상률, 전년동기보다 0.8%포인트 낮게 나타남.

- 2005년 7월 31일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7%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5.5%보다 0.8%포인트 하락
- 이 중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전년동기의 5.7%보다 하락하였으나 공공부문은 4.0%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2.9%에 비해 상승
- 전년보다 낮은 협약임금 인상률은 2005년 7월 이후 주 40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전년보다 낮게 타결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7〉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5년 7월 31일 현재)

(단위: 개소, %)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6,228 (5,909)	2,250 (2,380)	36.1 (40.3)	4.7 (5.5)
민간부문	6,024 (5,727)	2,211 (2,338)	36.7 (40.8)	4.7 (5.7)
공공부문	204 (182)	39 (42)	19.1 (23.1)	4.0 (2.9)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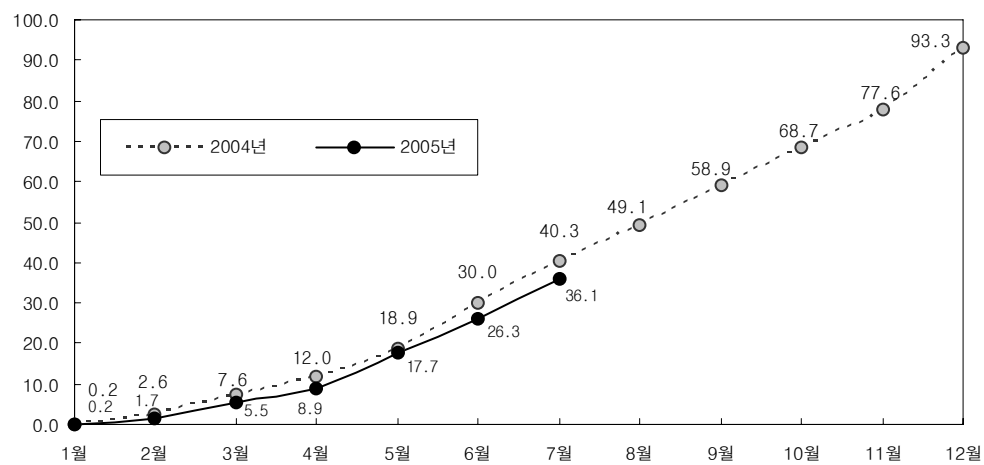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 임금교섭은 전년보다 느리게 진행 중

- 2005년 7월 31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228개소 중 2,250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전년동기(40.3%)보다 낮은 36.1%의 진도율을 기록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36.7%로 6,024개소 중 2,211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204개소 중 39개소가 타결되어 19.1%의 진도율을 기록

[그림 9] 임금교섭 진도를 월별 추이(2004, 2005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노사관계 동향

노사분규 동향

◆ 노사분규 전년동기대비 대폭 감소

○ 2005년 8월 22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함(표 1 참조).

- 분규발생건수는 223건, 분규참가자수는 33,834명, 근로손실일수는 278,261일로 각각 전년동기 수치인 412건, 168,595명, 982,767일보다 크게 감소
- 이는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임.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개소, 명, 일)

	2003. 8. 22	2004. 8. 22	2005. 8. 22
노사분규발생건수(개소)	272	412	223
분규참가자수(명)	122,451	168,595	33,834
근로손실일수(일)	1,059,578	982,767	278,261

주: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
자료: 노동부.

노동정책 동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확정

- 퇴직연금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와 관련하여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이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사변 등의 경우를 포함함.
 - 확정급여형의 적립금 수준을 60/100 이상으로 하되 과거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는 60/100 이하의 범위에서 현행 퇴직적립금의 적립현황, 법인세제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은 재무건전성과 인적·물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함.
 - 확정급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며,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 함.
 - 적립금 운용방법은 은행의 예·적금, 보험계약 또는 특정신탁계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운용방법으로 함.
 - 운용방법별 기준은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를 두고(DC형의 경우 직접 주식투자는 불가), 위험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40% 이하만 위험자산에 투자하도록 함.
 -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자료제출, 보고명령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긴급조정 결정 관련 노사정 공방

- 노동부는 7월 17일부터 파업중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쟁의에 대해 8월 10일부로 긴급조정을 결정
 - 장관은 ‘아시아나항공이 갖는 국민경제적 위상과 공익사업장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섭지원과 자율타결을 독려해 왔지만 노사가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

을 좁히지 못해 부득이하게 긴급조정을 발동하게 되었음’을 설명

- 또한 ‘파업으로 인한 매출손실뿐 아니라 항공기 결항에 따른 수출품 처리 지연, 국민생활의 불편도 누적, 정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조종사들의 운행시간 증가에 따른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전체 국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언급함.

○ 경총, 긴급조정 결정 환영

- 경총은 성명을 통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긴급조정 결정을 환영함’을 밝힘.
- 경총은 이미 7월 18일과 25일 성명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 중단과 정부의 긴급조정 발동을 주장해 왔으며, 항공산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구한 바 있음.

○ 양대노총, 긴급조정 결정 규탄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자율에 의한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노사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법인 긴급조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향후 총파업 조직, ILO 아시아 총회 전면거부 등의 투쟁 일정을 밝힘.
- 한국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민간항공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저지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은 위법적 행위이며, 권한남용의 소지가 많은 현행 제도는 철폐되어야 함’을 주장함.
-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긴급조정 결정 이후, 현업에 복귀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 수락거부로 중재회부가 결정됨(향후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성하게 될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 ILO 아태지역총회 관련 노사정 공방

○ 양대노총은 노동정책의 전면수정 등을 요구하며 ILO 아태지역총회의 불참을 통보

-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억압적 노동정책 수정과 노정관계 복원이 전제되지 않은 ILO 아태지역총회 개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노동부장관 퇴진 등 정부의 가시적 조치를 요구’함.
- 양대노총은 8월 22~23일, 양노총 사무총(처)장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ILO(국제노동기구) 본부 및 ICFTU(국제자유노련) 본부 등에 파견하여 개최반대 입장을 설명한 바 있음.

- 경총, 양대노총의 ILO 아태지역총회 불참 철회 요청
 - 경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계는 국가적 위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고, 삼자주의와 대화의 정신을 존중하여 세계 각국 노사정을 실망시키는 ILO 아태지역총회 불참결정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요구’함.
- 노동부, 양대노총에 노사정 대화 제안
 - 노동부는 8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가 정부의 대화·설득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문제를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인 ILO 아태지역총회의 연기 및 개최지 변경을 제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
 - 노동부는 8월 24일, 노사정대표가 직접 만나 ILO 아태지역총회의 원활한 개최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를 제안한 바 있음.
- ※ 한편 ILO는 올해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14차 아태지역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 회원국 노사정에 통보하였음.

주요노동일지

(2005. 7. 21~8. 21)

년·월·일	노동정책	노사단체	기업 및 노동조합
2005. 7. 21		· 보건의료노조: 6개 병원 파업계속, 5개소 추가 파업 돌입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전면파업 계속(7. 17~)
7. 26			·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중노위 조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가결
7. 27			· 한진중공업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 현대미포조선노조: 임금교섭 잠정합의
7. 28			· 대우자동차노조: 임금교섭 관련 노조내부 이견으로 집행부 사퇴
7. 29			· 금속노조 만도지부: 임단협 재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8. 3	· 노동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분류 관련 입장 발표	· 보건의료노조: 소속 28개 지방공사의료원 중앙교섭 잠정합의 · 금융노조: 금융산업 아웃소싱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임단협 결렬도 중노위 조정신청 · 도시철도공사노조: 8대 위원장 선거, 김남일 후보 당선
8. 5			· 대우자동차노조: 임금교섭 관련 사측 최종안 찬반투표 가결
8. 9	·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고용허가제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민주노총: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 관련 결의대회 개최	· 해태제과식품(주)노조: 단협 결렬로 파업 계속(6. 28~)
8. 10	· 노동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관련 긴급조정 결정	· 민주노총: 현 노동사안에 대한 기자회견 및 긴급조정 규탄 결의대회 개최	· 쌍용자동차노조: 임금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조정신청
8. 12		· 양대노총: ILO 아태지역총회 불참 선언 기자회견 개최 · 금속노조: 4기 임원선거 일정공고	· 현대자동차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로 중노위 조정신청
8. 14		· 양대노총: 노동탄압 분쇄, 재벌해체 결의대회 및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준비위 노동본부 발족식	
8. 16		·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탄압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8. 17		· 금속연맹: 8월 정치파업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8. 18			·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단체협약 잠정합의 도출
8. 19			· 아시아나항공(일반)노동조합: 임금교섭 잠정합의

〈표 1-1〉 주요 거시경제지표(200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최 종 소비지출	총 고 정 자본형성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 ¹⁾		
실 질 민 생	1997	523,034.7	544,131.5	115,274.3	53,667.3	10,778.6	257,324.0	363,911.2	192,033.8
	1998	487,183.5	499,004.0	106,173.0	48,295.2	10,742.0	247,182.1	325,361.8	147,991.7
	1999	533,399.3	545,970.1	129,287.5	44,458.6	11,708.4	263,424.6	357,016.3	160,336.3
	2000	578,664.5	576,160.0	151,243.0	42,926.7	13,212.5	279,605.0	382,398.2	179,907.7
	2001	600,865.9	592,408.5	154,503.3	45,279.0	14,169.1	293,128.9	401,191.4	179,576.3
	2002	642,748.1	633,842.1	166,242.9	46,529.4	15,258.0	316,104.8	431,484.2	191,464.6
	2003	662,654.8	645,787.6	175,417.0	50,548.7	15,981.3	321,011.9	430,077.0	199,047.9
	2004	693,424.0	670,056.8	195,410.4	51,410.5	16,954.4	325,120.4	430,769.0	202,927.5
	2000. 2/4	144,171.4	142,942.8	37,838.2	11,681.4	3,200.3	69,542.9	93,900.6	47,819.5
	3/4	144,350.1	143,441.3	38,088.3	11,338.5	3,320.7	69,825.0	94,829.4	46,053.3
	4/4	156,759.7	155,274.2	39,207.9	12,238.6	3,222.7	72,334.8	99,709.9	47,895.1
	2001. 1/4	138,047.3	136,026.1	37,329.3	7,800.4	4,000.4	70,831.8	96,068.8	36,714.4
	2/4	149,503.6	146,555.5	39,382.8	11,828.2	3,326.2	72,580.0	97,856.4	46,148.2
	3/4	149,311.5	147,117.0	38,085.9	12,316.5	3,437.0	73,284.1	100,245.4	45,842.2
	4/4	164,003.6	162,710.0	39,705.2	13,333.9	3,405.5	76,432.9	107,020.9	50,871.6
	2002. 1/4	147,076.1	145,751.7	39,253.9	8,360.7	4,190.9	75,744.3	105,129.6	39,528.2
	2/4	159,990.3	156,554.3	41,828.8	12,145.1	3,567.2	78,628.4	106,140.3	49,501.8
	3/4	159,407.1	157,215.8	40,909.0	11,724.1	3,771.1	79,708.3	107,562.3	46,947.6
	4/4	176,274.6	174,320.2	44,251.1	14,299.5	3,728.8	82,023.9	112,652.0	55,487.0
	2003. 1/4	152,625.0	147,451.2	41,523.2	9,055.0	4,490.1	77,205.0	106,432.5	41,374.9
	2/4	163,536.1	158,724.4	43,222.9	13,214.4	3,868.7	79,210.4	105,490.4	51,558.9
	3/4	163,003.9	159,972.0	42,624.0	12,652.3	3,790.7	80,622.2	106,526.2	48,225.6
	4/4	183,489.9	179,640.0	48,046.9	15,627.1	3,831.9	83,974.3	111,627.9	57,888.6
	2004. 1/4	160,658.2	154,399.5	46,585.1	9,501.5	4,773.0	78,372.3	105,849.7	42,283.4
	2/4	172,588.5	166,220.0	49,155.5	13,699.3	4,123.7	80,565.9	105,877.1	53,792.9
	3/4	170,629.1	165,752.0	47,757.9	12,926.9	4,070.9	81,674.4	106,437.4	49,680.1
	4/4	189,548.2	183,685.2	51,911.8	15,282.8	3,997.8	84,508.1	112,604.7	57,171.1
	2005. 1/4	165,645.7	155,145.2	49,064.4	9,213.3	5,075.6	80,106.1	107,655.2	42,305.4
	2/4	178,256.3	-	51,769.1	13,917.8	4,423.8	82,526.7	109,011.9	54,890.5
성 장 률	1997	4.7	2.7	4.9	2.8	10.0	5.1	3.2	-2.3
	1998	-6.9	-8.3	-7.9	-10.0	-0.3	-3.9	-10.6	-22.9
	1999	9.5	9.4	21.8	-7.9	9.0	6.6	9.7	8.3
	2000	8.5	5.5	17.0	-3.4	12.8	6.1	7.1	12.2
	2001	3.8	2.8	2.2	5.5	7.2	4.8	4.9	-0.2
	2002	7.0	7.0	7.6	2.8	7.7	7.8	7.6	6.6
	2003	3.1	1.9	5.5	8.6	4.7	1.6	-0.3	4.0
	2004	4.6	3.8	11.4	1.7	6.2	1.3	0.2	1.9
	2000. 2/4	9.4	6.1	17.7	-3.1	14.3	6.7	8.7	14.8
	3/4	8.2	6.1	19.2	-2.2	11.8	4.4	5.8	10.8
	4/4	4.3	1.0	8.1	-2.7	7.6	4.5	4.0	3.5
	2001. 1/4	3.5	1.1	3.4	1.7	15.3	4.3	2.2	-3.7
	2/4	3.7	2.5	4.1	1.3	3.9	4.4	4.2	-3.5
	3/4	3.4	2.6	0.0	8.6	3.5	5.0	5.7	-0.5
	4/4	4.6	4.8	1.3	8.9	5.7	5.7	7.3	6.2
	2002. 1/4	6.5	7.1	5.2	7.2	4.8	6.9	9.4	7.7
	2/4	7.0	6.8	6.2	2.7	7.2	8.3	8.5	7.3
	3/4	6.8	6.9	7.4	-4.8	9.7	8.8	7.3	2.4
	4/4	7.5	7.1	11.4	7.2	9.5	7.3	5.3	9.1
	2003. 1/4	3.8	1.2	5.8	8.3	7.1	1.9	1.2	4.7
	2/4	2.2	1.4	3.3	8.8	8.5	0.7	-0.6	4.2
	3/4	2.3	1.8	4.2	7.9	0.5	1.1	-1.0	2.7
	4/4	4.1	3.1	8.6	9.3	2.8	2.4	-0.9	4.3
	2004. 1/4	5.3	4.7	12.2	4.9	6.3	1.5	-0.5	2.2
	2/4	5.5	4.7	13.7	3.7	6.6	1.7	0.4	4.3
	3/4	4.7	3.6	12.0	2.2	7.4	1.3	-0.1	3.0
	4/4	3.3	2.3	8.0	-2.2	4.3	0.6	0.9	-1.2
	2005. 1/4	2.7	0.5	5.3	-3.0	6.3	2.2	1.7	0.1
	2/4	3.3	-	5.3	1.6	7.3	2.4	3.0	2.0

주 : 1) 서비스업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1-2〉 생산지수, 대외거래, 환율 및 물가지수

(2000=100.0)

(단위: 백만달러, 원)

	생산지수		국제수지			대미 기준환율	물가지수	
	산업	서비스	경상수지	수출(FOB)	수입(CIF)	평균자료	생산자	소비자
2000	100.0	100.0	12,250.8	172,268	160,481	1,130.6	100.0	100.0
2001	100.7	106.1	8,032.6	150,439	141,098	1,290.8	99.5	104.1
2002	108.8	116.1	5,393.9	162,471	152,126	1,251.2	99.2	106.9
2003	114.2	117.2	11,949.5	193,817	178,827	1,191.9	101.4	110.7
2004	126.1	117.9	27,612.8	253,845	224,463	1,144.9	107.6	114.7
2001. 4/4	104.4	111.4	442.2	36,349	34,342	1,291.8	98.1	104.5
2002. 1/4	103.6	111.2	1,400.6	35,656	33,788	1,319.6	98.3	105.5
2/4	109.0	116.9	1,569.7	40,252	37,192	1,270.7	99.7	106.9
3/4	106.2	115.9	547.2	41,255	38,884	1,196.3	99.2	107.4
4/4	116.1	120.3	1,876.4	45,307	42,262	1,221.0	99.7	107.9
2003. 1/4	109.9	113.3	-1,556.4	43,036	44,223	1,201.1	101.2	109.8
2/4	112.4	118.0	2,572.9	46,053	41,711	1,209.8	101.0	110.5
3/4	109.4	116.5	3,669.7	47,828	42,971	1,175.8	101.1	110.8
4/4	125.0	121.0	7,263.3	56,900	49,922	1,181.3	102.3	111.7
2004. 1/4	122.3	115.7	6,130.5	59,299	52,798	1,171.9	105.5	113.4
2/4	126.7	119.1	7,030.4	63,975	55,270	1,161.9	107.3	114.2
3/4	121.9	115.9	7,098.4	61,634	54,709	1,155.2	108.5	115.6
4/4	133.4	120.8	7,353.5	68,937	61,688	1,094.0	108.9	115.5
2005. 1/4	127.0	116.3	5,950.1	66,790	60,414	1,022.5	109.0	117.0
2/4	131.8	121.8	2,751.2	70,007	63,558	1,008.0	109.6	117.6
2002. 9	105.0	117.4	315.4	13,901	12,992	1,208.5	99.4	108.0
10	116.9	118.9	1,470.9	15,085	13,817	1,241.1	99.6	107.7
11	116.5	118.4	1,137.8	15,197	13,993	1,211.9	99.8	107.8
12	115.0	123.6	-732.3	15,026	14,452	1,208.9	99.8	108.3
2003. 1	109.9	113.7	-467.8	14,320	14,495	1,179.3	100.5	109.0
2	103.3	107.5	32.2	13,337	13,858	1,191.2	101.1	109.6
3	116.4	118.7	-1,120.8	15,379	15,870	1,232.4	102.1	110.9
4	113.6	118.4	-209.4	15,721	14,759	1,232.8	101.5	110.7
5	111.4	118.0	1,184.1	14,676	13,524	1,199.8	101.0	110.5
6	112.2	117.7	1,598.2	15,656	13,428	1,194.0	100.5	110.2
7	108.1	116.9	345.7	15,432	14,898	1,181.6	100.7	110.1
8	108.0	115.1	1,231.6	15,375	13,541	1,178.4	101.1	110.6
9	112.0	117.6	2,092.4	17,021	14,531	1,166.2	101.5	111.6
10	125.8	119.0	2,518.9	18,930	16,537	1,166.3	101.8	111.7
11	122.0	118.8	2,858.3	18,242	15,761	1,184.9	102.2	111.5
12	127.3	125.3	1,886.1	19,729	17,625	1,193.0	102.9	112.0
2004. 1	115.1	113.7	2,338.4	18,987	16,209	1,184.3	104.3	112.7
2	121.3	111.7	2,881.4	19,137	17,469	1,166.7	105.6	113.2
3	130.5	121.7	910.7	21,175	19,120	1,166.3	106.6	114.3
4	126.5	118.9	1,142.5	21,483	18,830	1,150.9	107.1	114.3
5	126.9	118.7	3,708.4	20,834	17,895	1,177.4	107.4	114.2
6	126.7	119.6	2,179.5	21,657	18,544	1,158.7	107.3	114.2
7	122.7	116.2	3,246.6	21,004	18,390	1,157.7	107.7	114.9
8	119.8	114.3	1,039.0	19,799	18,124	1,159.0	108.7	115.9
9	123.2	117.3	2,812.8	20,831	18,193	1,148.0	109.1	115.9
10	133.1	118.1	2,418.6	22,663	20,408	1,144.0	109.2	115.9
11	134.1	118.3	2,939.7	23,077	20,312	1,091.2	109.2	115.2
12	133.1	126.1	1,995.2	23,197	20,968	1,050.9	108.4	115.4
2005. 1	131.4	114.6	3,866.2	22,448	19,409	1,038.2	108.6	116.2
2	112.4	111.0	969.3	20,398	18,348	1,022.4	109.0	116.9
3	136.9	123.6	1,114.6	23,944	23,657	1,007.5	109.5	117.8
4	131.4	121.0	-975.7	22,922	21,199	1,010.9	110.2	117.9
5	132.2	121.6	1,437.5	23,175	21,171	1,002.2	109.6	117.7
6	131.9	122.7	2,289.4	23,910	21,188	1,010.9	109.0	117.3
7	-	-	-	23,289	21,486	1,037.4	109.9	117.8

주: 1) 경상수지는 한국은행집계(소유권 이전기준), 수출·수입은 통관기준(한국무역협회집계).

2) 대미 기준환율은 평균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생산자물가 동향」.

통계청 KOSIS, 산업활동 DB, 「소비자물가 동향」.

〈표 2-1〉 주요 노동시장 지표

(단위 : 천명, 천원, 시간,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고용률	임금근로자비율
1998	35,347	21,428	60.6	19,938	1,490	7.0	56.4	61.7
1999	35,757	21,666	60.6	20,291	1,374	6.3	56.7	62.4
2000	36,186	22,134(22,069)	61.2(61.0)	21,156	979(913)	4.4(4.1)	58.5(58.5)	63.2
2001	36,579	22,471(22,417)	61.4(61.3)	21,572	899(845)	4.0(3.8)	59.0(59.0)	63.3
2002	36,963	22,921(22,877)	62.0(61.9)	22,169	752(708)	3.3(3.1)	60.0(60.0)	64.0
2003	37,340	22,957(22,916)	61.5(61.4)	22,139	818(777)	3.6(3.4)	59.3(59.3)	65.1
2004	37,717	23,417(23,370)	62.1(62.0)	22,557	860(813)	3.7(3.5)	59.8(59.8)	66.0
2002.2/4	36,919	22,923(23,112)	62.1(62.6)	22,423	746(689)	3.3(3.0)	60.1(60.7)	63.6
3/4	37,012	22,961(23,067)	62.0(62.3)	22,416	731(652)	3.2(2.8)	60.1(60.6)	63.5
4/4	37,097	22,936(22,989)	61.8(62.0)	22,326	716(663)	3.1(2.9)	59.9(60.2)	64.4
2003.1/4	37,193	22,913(22,439)	61.6(60.3)	21,633	757(806)	3.3(3.6)	59.6(58.2)	65.5
2/4	37,297	22,868(23,055)	61.3(61.8)	22,303	805(751)	3.5(3.3)	59.2(59.8)	65.1
3/4	37,391	22,971(23,050)	61.4(61.6)	22,295	846(756)	3.7(3.3)	59.2(59.6)	64.4
4/4	37,476	23,096(23,119)	61.6(61.7)	22,325	876(794)	3.8(3.4)	59.3(59.6)	65.3
2004.1/4	37,577	23,439(22,982)	62.4(61.2)	22,104	832(878)	3.5(3.8)	60.2(58.8)	66.1
2/4	37,672	23,354(23,531)	62.0(62.5)	22,744	845(787)	3.6(3.3)	59.7(60.4)	65.9
3/4	37,771	23,369(23,434)	61.9(62.0)	22,647	880(787)	3.8(3.4)	59.5(60.0)	65.7
4/4	37,848	23,512(23,534)	62.1(62.2)	22,733	884(802)	3.8(3.4)	59.8(60.1)	66.4
2005.1/4	38,010	23,614(23,159)	62.1(60.9)	22,247	876(912)	3.7(3.9)	59.8(58.5)	66.8
2/4	38,275	23,778(23,957)	62.1(62.6)	23,126	890(831)	3.7(3.5)	59.8(60.4)	66.4
2003. 1	37,161	22,952(22,352)	61.8(60.1)	21,562	765(789)	3.3(3.5)	59.7(58.0)	65.6
2	37,193	22,907(22,320)	61.6(60.1)	21,498	747(822)	3.3(3.7)	59.6(57.8)	65.3
3	37,226	22,880(22,644)	61.5(60.8)	21,837	758(807)	3.3(3.6)	59.4(58.7)	65.6
4	37,262	22,798(22,912)	61.2(61.5)	22,156	771(756)	3.4(3.3)	59.1(59.5)	65.4
5	37,300	22,890(23,114)	61.4(62.0)	22,370	807(744)	3.5(3.2)	59.2(60.0)	64.9
6	37,330	22,916(23,138)	61.4(62.0)	22,383	837(755)	3.7(3.3)	59.1(60.0)	64.9
7	37,366	23,008(23,238)	61.6(62.2)	22,456	850(781)	3.7(3.4)	59.3(60.1)	65.0
8	37,390	22,982(22,883)	61.5(61.2)	22,126	845(756)	3.7(3.3)	59.2(59.2)	63.9
9	37,418	22,923(23,031)	61.3(61.6)	22,301	843(730)	3.7(3.2)	59.0(59.6)	64.2
10	37,448	23,026(23,218)	61.5(62.0)	22,452	875(765)	3.8(3.3)	59.2(60.0)	64.5
11	37,475	23,133(23,218)	61.7(62.0)	22,425	896(792)	3.9(3.4)	59.3(59.8)	65.2
12	37,506	23,130(22,922)	61.7(61.1)	22,096	857(825)	3.7(3.5)	59.4(58.9)	66.2
2004. 1	37,546	23,370(22,790)	62.2(60.7)	21,936	828(854)	3.5(3.7)	60.0(58.4)	66.1
2	37,577	23,476(22,906)	62.5(61.0)	22,005	833(900)	3.5(3.9)	60.3(58.6)	66.1
3	37,608	23,470(23,249)	62.4(61.8)	22,371	833(879)	3.5(3.8)	60.2(59.5)	66.1
4	37,639	23,385(23,482)	62.1(62.4)	22,673	840(809)	3.6(3.4)	59.9(60.2)	65.9
5	37,670	23,314(23,527)	61.9(62.5)	22,738	855(788)	3.7(3.3)	59.6(60.4)	65.7
6	37,707	23,364(23,585)	62.0(62.5)	22,822	840(763)	3.6(3.2)	59.7(60.5)	66.0
7	37,744	23,349(23,564)	61.9(62.4)	22,750	890(814)	3.8(3.5)	59.5(60.3)	66.2
8	37,771	23,290(23,182)	61.7(61.4)	22,382	881(801)	3.8(3.5)	59.3(59.3)	65.2
9	37,798	23,467(23,556)	62.1(62.3)	22,809	870(747)	3.7(3.2)	59.8(60.3)	65.7
10	37,825	23,491(23,673)	62.1(62.6)	22,901	880(772)	3.7(3.3)	59.8(60.5)	65.8
11	37,848	23,501(23,581)	62.1(62.3)	22,802	883(779)	3.8(3.3)	59.8(60.3)	66.3
12	37,870	23,545(23,349)	62.2(61.7)	22,495	889(855)	3.8(3.7)	59.8(59.4)	67.2
2005. 1	37,923	23,572(22,982)	62.2(60.6)	22,078	898(904)	3.8(3.9)	59.8(58.2)	67.0
2	38,011	23,579(23,011)	62.0(60.5)	22,086	867(925)	3.7(4.0)	59.7(58.1)	66.7
3	38,097	23,692(23,483)	62.2(61.6)	22,576	863(907)	3.6(3.9)	59.9(59.2)	66.6
4	38,184	23,689(23,791)	62.0(62.3)	22,934	880(857)	3.7(3.6)	59.7(60.1)	66.5
5	38,274	23,773(24,009)	62.1(62.7)	23,199	870(811)	3.7(3.4)	59.8(60.8)	66.4
6	38,368	23,870(24,071)	62.2(62.7)	23,246	919(825)	3.8(3.4)	59.8(60.6)	66.3
7	38,403	24,072(24,021)	62.7(62.5)	23,184	888(837)	3.7(3.5)	60.4(60.4)	66.3

주 :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임금근로자 비율=임금근로자/취업자×100

3)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안은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2〉 경제활동참가율(성별·연령대별)

(단위 : %)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9	74.4	50.5	95.7	93.9	85.8	50.7	47.6	41.7	53.7	63.0	53.9	29.5
2000	74.2	50.5	95.5	93.6	84.0	49.6	48.6	43.6	53.9	64.1	53.3	30.1
2001	74.3	50.3	95.1	93.6	83.6	50.5	49.3	45.4	54.4	64.0	53.9	30.0
2002	75.0	50.5	95.1	93.7	84.8	51.7	49.8	46.6	54.6	64.0	54.3	30.1
2003	74.7	49.7	95.0	94.0	85.6	48.6	49.0	47.0	53.9	63.0	52.6	27.8
2004	75.0	49.9	94.6	93.8	85.6	49.7	49.9	48.5	54.5	64.2	53.2	28.3
2001.3/4	74.9	50.4	95.2	94.0	84.4	52.6	49.9	45.3	54.0	64.1	55.1	32.7
4/4	74.7	49.9	95.2	94.2	84.2	51.5	49.8	45.8	54.8	64.1	55.0	30.5
2002.1/4	73.9	51.3	94.5	92.9	82.1	47.9	48.5	46.9	53.7	63.1	51.8	26.1
2/4	75.4	50.5	95.4	94.1	85.4	53.3	50.8	46.5	55.8	64.7	56.0	32.4
3/4	75.4	50.4	95.2	93.6	85.8	53.6	50.2	46.5	54.6	64.0	55.1	32.1
4/4	75.1	49.7	95.3	93.9	85.9	52.1	49.7	46.4	54.1	64.2	54.1	29.9
2003.1/4	74.0	50.1	94.8	93.6	84.3	45.8	47.6	47.2	53.8	61.4	49.4	24.0
2/4	75.0	49.1	95.4	94.5	86.4	49.6	49.6	46.5	54.7	63.7	54.0	29.3
3/4	74.8	49.6	94.8	94.0	85.7	49.6	49.5	47.4	53.5	62.7	53.6	29.8
4/4	75.0	50.0	95.1	93.9	85.8	49.4	49.3	46.9	53.7	63.9	53.4	28.2
2004.1/4	74.5	50.7	94.7	93.1	84.1	47.2	48.9	48.5	53.9	63.3	51.6	25.2
2/4	75.3	49.7	94.8	94.1	86.1	51.1	50.6	48.4	55.3	64.8	53.9	30.0
3/4	74.9	49.3	94.4	93.8	85.7	50.4	50.2	48.8	54.3	64.0	53.2	29.6
4/4	75.2	50.0	94.4	94.2	86.5	50.0	50.1	48.3	54.5	64.6	54.0	28.3
2005.1/4	74.1	49.8	94.2	92.8	84.3	47.1	48.8	49.3	53.5	63.1	51.9	24.5
2/4	75.3	48.7	94.8	94.3	86.5	51.8	50.8	49.1	54.6	65.0	55.0	30.4
2003. 1	73.9	50.5	94.7	93.3	84.1	45.0	47.4	47.5	53.7	60.9	48.9	23.3
2	73.9	50.4	94.6	93.5	83.6	45.2	47.1	47.5	53.2	60.8	48.3	22.8
3	74.3	49.3	95.1	93.9	85.2	47.2	48.3	46.5	54.4	62.5	51.0	25.7
4	74.8	49.2	95.3	94.2	86.1	48.9	49.2	46.1	54.5	63.5	53.5	28.2
5	75.1	49.1	95.5	94.5	86.7	49.9	49.8	46.3	54.9	64.1	54.4	29.7
6	75.1	49.0	95.4	94.6	86.5	50.1	49.9	47.0	54.7	63.6	54.3	29.9
7	75.4	51.3	95.1	94.2	85.8	49.6	50.0	48.7	54.1	62.9	54.0	29.7
8	74.5	49.3	94.5	93.7	85.3	49.0	49.0	47.4	52.7	62.0	53.1	29.3
9	74.6	48.1	94.8	94.2	86.0	50.2	49.4	46.0	53.9	63.4	53.8	30.6
10	75.1	49.1	95.2	94.2	86.3	51.1	49.8	46.3	54.0	64.3	54.5	30.6
11	75.2	49.9	95.0	94.2	86.0	50.4	49.6	46.7	54.2	64.3	53.9	29.3
12	74.8	51.1	95.1	93.5	85.1	46.9	48.4	47.9	52.9	63.3	51.8	24.7
2004. 1	74.2	51.7	94.5	92.7	83.4	45.4	48.2	48.7	53.1	62.7	51.0	23.5
2	74.2	50.6	94.6	92.9	83.4	46.8	48.7	48.8	54.1	63.0	51.4	24.2
3	75.0	49.8	95.1	93.8	85.4	49.5	49.7	48.1	54.5	64.3	52.5	27.8
4	75.2	49.4	95.0	94.1	86.1	51.0	50.6	48.0	55.6	65.1	53.8	29.8
5	75.3	49.9	94.8	94.0	85.8	51.2	50.6	48.7	55.0	64.8	53.8	29.9
6	75.4	49.8	94.7	94.2	86.4	51.2	50.6	48.6	55.4	64.4	54.0	30.3
7	75.4	51.0	94.5	94.2	85.3	50.4	50.5	50.1	54.5	64.0	53.3	29.2
8	74.4	48.2	94.3	93.4	85.5	49.9	49.3	47.8	53.3	63.1	52.3	29.4
9	74.9	48.7	94.5	93.9	86.2	50.9	50.7	48.6	55.1	65.0	53.9	30.2
10	75.4	49.8	94.3	94.4	86.7	51.5	50.7	48.0	54.8	65.0	54.7	30.7
11	75.4	50.0	94.4	94.3	86.9	50.6	50.2	48.1	54.5	64.8	54.3	29.1
12	74.9	50.2	94.5	93.9	86.1	47.8	49.4	49.0	54.3	64.1	53.0	25.3
2005. 1	73.9	50.4	94.1	92.5	83.5	46.0	48.4	49.6	53.3	62.4	51.2	23.4
2	73.8	49.9	93.9	92.5	83.7	46.3	48.3	49.4	53.2	62.8	50.6	23.6
3	74.6	49.1	94.6	93.6	85.6	48.8	49.6	49.0	53.9	64.0	53.7	26.6
4	75.2	48.7	94.7	94.0	86.7	51.1	50.4	48.9	54.4	64.7	54.5	29.3
5	75.3	48.6	94.8	94.4	86.4	52.0	51.0	49.2	54.8	65.3	55.1	30.7
6	75.4	48.9	94.7	94.5	86.4	52.3	51.0	49.0	54.5	65.2	55.4	31.1
7	75.3	50.8	94.1	93.7	85.8	50.8	50.7	50.3	54.1	64.5	54.8	29.8

주 :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3〉 경제활동참가율(성별·교육수준별)

(단위: %)

	남 자				여 자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9	57.3	79.0	93.0	88.5	42.9	48.7	64.1	56.9
2000	57.4	78.4	91.1	87.8	42.9	49.5	64.6	56.9
2001	57.1	77.9	91.7	88.3	43.4	50.7	66.0	58.5
2002	57.4	78.3	92.7	88.6	43.2	51.5	66.6	59.2
2003	55.4	77.5	92.3	89.1	40.4	51.5	67.7	58.3
2004	55.2	77.9	91.3	88.8	40.1	53.1	67.0	60.1
2001. 4/4	56.8	78.6	92.7	88.7	43.7	51.6	67.1	58.2
2002. 1/4	55.2	78.0	91.5	88.5	40.8	51.4	66.1	58.5
2/4	59.0	78.1	92.8	88.5	45.1	51.7	67.4	59.4
3/4	58.2	78.7	92.6	88.4	44.2	51.5	66.0	59.3
4/4	57.2	78.5	94.0	88.9	42.5	51.6	66.6	59.7
2003. 1/4	53.8	77.0	92.6	89.2	37.7	51.0	68.5	57.8
2/4	56.9	76.9	92.3	89.2	42.0	51.1	68.4	58.4
3/4	55.8	77.5	91.7	88.8	41.4	51.6	66.8	58.5
4/4	55.0	78.4	92.4	89.1	40.4	52.4	67.0	58.4
2004. 1/4	53.9	77.6	91.6	88.7	38.5	52.8	66.8	58.8
2/4	56.4	77.7	91.8	88.5	41.5	53.0	67.6	60.9
3/4	55.3	77.7	90.7	88.6	40.6	53.2	66.9	60.2
4/4	55.1	78.5	90.9	89.3	40.0	53.6	66.6	60.7
2005. 1/4	52.9	77.0	90.3	89.0	37.6	52.8	65.9	59.8
2/4	56.0	77.4	91.0	89.5	41.5	53.3	68.1	60.1
2002. 11	57.6	78.5	93.9	88.8	42.9	51.6	66.5	59.6
12	55.7	78.7	94.1	89.0	40.2	51.5	67.1	59.3
2003. 1	52.3	78.1	92.9	89.4	37.0	51.7	68.2	57.7
2	53.6	76.8	92.4	89.0	36.9	50.7	67.9	57.6
3	55.6	76.2	92.5	89.1	39.4	50.5	69.5	58.0
4	56.5	76.6	92.1	89.2	41.5	50.7	68.5	57.8
5	57.1	77.1	92.4	89.1	42.4	51.1	68.7	58.6
6	57.0	76.9	92.5	89.3	42.2	51.5	68.0	58.9
7	56.3	78.4	92.2	88.9	41.7	52.4	67.6	58.8
8	55.4	77.2	91.4	88.6	40.8	51.3	66.1	57.9
9	55.8	77.1	91.6	88.8	41.7	51.2	66.8	58.8
10	56.1	77.9	92.4	89.1	41.9	52.0	67.1	58.6
11	55.3	78.6	92.5	89.1	41.1	52.5	67.5	58.4
12	53.5	78.8	92.3	89.3	38.3	52.6	66.6	58.2
2004. 1	52.0	78.6	92.2	89.0	37.2	53.4	65.7	58.1
2	54.1	76.8	91.2	88.4	38.2	52.5	66.6	58.8
3	55.8	77.3	91.4	88.6	40.2	52.5	68.0	59.4
4	56.4	77.5	91.9	88.4	41.5	52.9	67.7	60.9
5	56.3	77.7	92.0	88.5	41.5	52.9	67.8	60.9
6	56.5	78.0	91.4	88.5	41.5	53.1	67.3	61.0
7	55.6	78.6	91.1	88.6	40.7	53.8	67.2	60.2
8	54.8	77.1	90.4	88.4	40.1	52.1	66.2	59.4
9	55.6	77.5	90.7	88.9	41.1	53.7	67.2	60.9
10	56.0	78.4	90.9	89.1	41.5	53.5	66.6	60.6
11	55.4	78.6	90.8	89.3	40.4	53.5	66.3	60.9
12	53.9	78.4	91.2	89.4	38.1	53.8	66.8	60.5
2005. 1	51.2	78.2	90.3	89.2	36.5	53.4	65.7	59.6
2	52.9	76.1	89.8	88.7	36.9	52.1	65.5	59.9
3	54.8	76.7	90.7	89.1	39.4	52.8	66.4	59.8
4	55.9	77.0	91.1	89.4	40.7	53.1	67.8	60.0
5	56.0	77.4	91.1	89.5	41.7	53.5	68.4	60.1
6	56.0	77.7	90.9	89.5	42.0	53.2	68.2	60.2
7	54.8	78.5	90.7	89.0	41.0	54.0	67.5	59.8

주: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4〉 산업별 취업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2,243	17	4,293	64	1,580	3,833	1,919	1,068	192	752
2001		2,148	18	4,267	58	1,585	3,931	1,943	1,114	208	760
2002		2,069	18	4,241	52	1,746	3,991	2,007	1,140	231	734
2003		1,950	17	4,205	76	1,816	3,871	1,981	1,084	249	751
2004		1,825	16	4,290	72	1,820	3,805	2,057	1,128	248	738
2001.	4/4	2,131	18	4,302	55	1,679	4,017	1,958	1,141	215	750
2002.	1/4	1,727	20	4,242	53	1,601	3,996	1,996	1,126	220	751
	2/4	2,251	19	4,258	56	1,791	3,980	2,024	1,134	230	725
	3/4	2,252	16	4,214	50	1,781	4,000	2,018	1,140	238	731
	4/4	2,046	17	4,251	50	1,812	3,988	1,989	1,159	238	729
2003.	1/4	1,699	16	4,168	74	1,734	3,972	1,947	1,085	255	754
	2/4	2,127	17	4,238	77	1,854	3,890	1,944	1,081	252	768
	3/4	2,090	17	4,166	78	1,821	3,801	2,004	1,078	243	744
	4/4	1,882	17	4,246	75	1,854	3,821	2,029	1,094	246	738
2004.	1/4	1,609	19	4,274	74	1,762	3,851	2,061	1,102	244	743
	2/4	1,967	15	4,308	73	1,864	3,811	2,055	1,129	240	740
	3/4	1,933	14	4,278	71	1,790	3,762	2,057	1,135	255	736
	4/4	1,789	15	4,296	72	1,864	3,797	2,056	1,144	255	734
2005.	1/4	1,525	18	4,260	71	1,692	3,777	2,058	1,139	263	729
	2/4	2,018	19	4,257	72	1,897	3,748	2,049	1,154	272	735
2002.	8	2,237	15	4,190	52	1,718	3,962	2,015	1,133	232	735
	9	2,270	16	4,239	46	1,807	3,994	2,002	1,139	237	732
	10	2,276	16	4,254	47	1,810	3,985	1,977	1,155	240	729
	11	2,094	18	4,257	51	1,822	3,980	1,988	1,159	236	724
	12	1,769	17	4,240	53	1,805	4,000	2,001	1,164	237	733
2003.	1	1,596	15	4,144	74	1,704	4,034	1,993	1,084	260	751
	2	1,646	15	4,152	73	1,698	3,973	1,947	1,091	254	754
	3	1,855	18	4,209	75	1,801	3,908	1,902	1,082	253	755
	4	2,076	17	4,238	74	1,844	3,910	1,907	1,084	249	771
	5	2,154	16	4,252	78	1,852	3,889	1,956	1,078	253	774
	6	2,152	18	4,225	80	1,864	3,870	1,969	1,080	255	759
	7	2,102	18	4,220	78	1,843	3,858	2,024	1,075	255	750
	8	2,078	16	4,115	78	1,799	3,768	2,004	1,073	240	741
	9	2,090	18	4,164	77	1,820	3,776	1,985	1,085	234	741
	10	2,112	17	4,236	77	1,834	3,823	1,981	1,089	235	738
	11	1,958	16	4,246	75	1,876	3,806	2,040	1,092	252	733
	12	1,575	20	4,257	73	1,851	3,836	2,066	1,100	250	744
2004.	1	1,489	20	4,254	74	1,740	3,866	2,073	1,094	249	750
	2	1,555	20	4,272	72	1,728	3,842	2,077	1,108	244	741
	3	1,781	18	4,309	75	1,817	3,845	2,033	1,105	238	738
	4	1,932	17	4,323	74	1,869	3,840	2,033	1,116	236	739
	5	1,981	16	4,286	72	1,858	3,791	2,070	1,131	240	744
	6	1,989	14	4,316	73	1,865	3,801	2,061	1,141	244	737
	7	1,924	13	4,311	71	1,786	3,789	2,099	1,141	256	735
	8	1,933	13	4,226	71	1,751	3,713	2,024	1,126	253	734
	9	1,942	15	4,297	72	1,832	3,786	2,047	1,138	256	740
	10	1,990	16	4,323	73	1,873	3,780	2,031	1,140	255	732
	11	1,829	15	4,304	71	1,877	3,814	2,049	1,139	253	732
	12	1,549	15	4,261	70	1,843	3,798	2,089	1,153	257	737
2005.	1	1,405	19	4,252	70	1,686	3,782	2,066	1,143	259	730
	2	1,462	17	4,255	70	1,632	3,779	2,060	1,128	259	728
	3	1,708	19	4,274	71	1,753	3,769	2,408	1,147	272	729
	4	1,935	21	4,271	72	1,851	3,725	2,066	1,163	263	735
	5	2,061	20	4,249	74	1,909	3,760	2,031	1,146	274	738
	6	2,056	17	4,251	71	1,931	3,758	2,048	1,152	280	733
	7	2,005	17	4,233	70	1,870	3,755	2,086	1,155	290	737

주 : 2000년부터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4〉의 계속

(단위 :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351	1,010	758	1,191	428	365	886	186	19
381	1,149	701	1,236	484	393	975	206	16
413	1,251	702	1,335	551	418	1,038	215	18
423	1,303	757	1,484	539	425	994	192	22
453	1,461	768	1,507	594	458	1,169	125	24
399	1,180	691	1,250	505	396	999	222	15
405	1,205	697	1,299	510	413	1,015	220	16
405	1,256	713	1,315	551	425	1,056	218	18
416	1,275	689	1,341	564	423	1,038	212	19
425	1,266	709	1,383	578	412	1,043	211	21
401	1,201	738	1,471	538	415	960	180	24
420	1,261	764	1,489	521	409	973	196	21
427	1,361	761	1,503	542	439	996	205	21
445	1,391	763	1,472	555	437	1,048	188	23
448	1,404	758	1,465	568	451	1,099	144	25
451	1,438	771	1,522	588	457	1,171	118	25
456	1,480	770	1,517	603	461	1,196	111	24
456	1,524	771	1,523	615	465	1,209	125	23
467	1,498	763	1,501	628	483	1,226	126	24
486	1,505	808	1,556	652	501	1,241	132	25
413	1,261	687	1,320	570	423	1,034	206	19
419	1,281	687	1,368	560	420	1,039	215	20
430	1,271	705	1,377	573	417	1,044	213	21
424	1,268	713	1,386	579	412	1,046	212	21
421	1,260	708	1,387	581	408	1,040	206	21
401	1,191	727	1,453	547	418	970	177	23
393	1,171	734	1,489	548	411	951	172	26
408	1,240	752	1,470	518	417	959	191	24
407	1,238	756	1,479	531	404	954	192	24
420	1,267	769	1,491	512	407	982	199	21
433	1,276	767	1,498	520	418	984	196	20
436	1,302	768	1,523	538	444	998	205	21
420	1,370	757	1,486	541	438	986	196	20
424	1,412	758	1,499	547	434	1,004	213	21
446	1,385	764	1,477	548	436	1,020	211	22
440	1,400	766	1,469	559	430	1,058	186	24
450	1,388	760	1,470	556	446	1,065	166	24
452	1,398	741	1,459	559	450	1,086	157	26
448	1,389	762	1,452	570	461	1,104	136	25
443	1,424	772	1,486	576	442	1,106	138	24
448	1,433	782	1,499	589	448	1,136	136	25
452	1,447	770	1,522	585	466	1,174	108	25
454	1,434	762	1,544	590	459	1,204	110	25
457	1,448	772	1,548	598	468	1,199	113	25
447	1,481	760	1,483	597	455	1,184	108	24
464	1,510	778	1,519	616	459	1,204	113	23
458	1,502	768	1,523	621	467	1,206	121	23
455	1,539	772	1,529	612	461	1,204	126	23
456	1,531	774	1,516	612	466	1,216	129	24
464	1,497	756	1,485	618	478	1,218	127	23
461	1,502	758	1,499	626	478	1,225	124	24
477	1,494	775	1,518	638	492	1,234	127	25
474	1,498	799	1,533	650	492	1,230	130	26
486	1,505	820	1,557	656	502	1,253	133	25
499	1,512	805	1,576	650	508	1,241	133	25
505	1,523	797	1,589	649	516	1,231	130	27

〈표 2-5〉 산업별 취업자(여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1,072	0	1,535	11	134	1,774	1,304	94	56	405
2001	1,016	1	1,519	14	136	1,847	1,321	98	58	417
2002	984	1	1,518	11	150	1,865	1,364	96	59	397
2003	923	1	1,475	12	148	1,832	1,349	89	78	385
2004	866	1	1,493	13	162	1,795	1,421	104	79	374
2001. 4/4	1,015	1	1,555	15	147	1,893	1,329	99	60	405
2002. 1/4	760	1	1,503	14	141	1,867	1,349	100	59	408
2/4	1,112	1	1,537	13	160	1,868	1,380	93	59	388
3/4	1,100	1	1,511	9	149	1,872	1,377	94	61	395
4/4	963	2	1,521	9	150	1,855	1,349	99	59	399
2003. 1/4	749	1	1,452	9	138	1,880	1,310	87	82	383
2/4	1,041	1	1,496	13	148	1,850	1,322	91	78	396
3/4	1,013	1	1,450	13	154	1,800	1,365	84	76	381
4/4	889	1	1,501	11	151	1,798	1,401	94	74	380
2004. 1/4	717	1	1,485	12	148	1,823	1,421	101	76	383
2/4	961	1	1,506	14	167	1,806	1,420	104	76	377
3/4	934	1	1,482	14	163	1,773	1,426	105	81	365
4/4	851	1	1,501	13	170	1,781	1,419	107	83	370
2005. 1/4	657	2	1,443	13	155	1,759	1,413	104	88	360
2/4	982	1	1,418	12	159	1,745	1,420	110	94	369
2002. 10	1,117	2	1,545	8	146	1,852	1,347	95	62	402
11	955	3	1,519	9	149	1,852	1,347	103	57	396
12	778	2	1,499	9	155	1,860	1,353	99	58	399
2003. 1	687	1	1,437	8	136	1,905	1,336	86	80	380
2	715	0	1,429	9	133	1,873	1,306	86	86	382
3	846	1	1,490	9	143	1,864	1,288	90	79	386
4	1,001	1	1,494	10	147	1,855	1,298	94	76	395
5	1,055	0	1,498	14	147	1,848	1,328	89	79	403
6	1,067	1	1,495	14	150	1,848	1,341	91	79	391
7	1,020	1	1,475	13	157	1,828	1,370	86	81	386
8	1,000	1	1,414	14	153	1,775	1,370	81	75	379
9	1,017	1	1,461	13	154	1,797	1,354	85	72	379
10	1,031	1	1,503	11	148	1,810	1,362	92	73	380
11	943	1	1,511	12	155	1,783	1,408	93	74	379
12	694	2	1,489	10	150	1,800	1,432	96	76	381
2004. 1	639	2	1,471	11	144	1,833	1,423	99	77	386
2	682	1	1,480	12	151	1,821	1,429	103	78	382
3	829	1	1,502	14	149	1,814	1,410	100	74	381
4	931	1	1,518	14	168	1,818	1,411	103	75	382
5	971	1	1,497	14	165	1,801	1,422	106	77	379
6	981	1	1,502	15	168	1,800	1,427	103	76	370
7	923	1	1,497	15	157	1,788	1,456	106	82	367
8	932	1	1,446	13	156	1,740	1,403	102	79	362
9	948	1	1,504	13	176	1,789	1,418	107	81	367
10	981	1	1,524	13	173	1,768	1,399	107	83	371
11	880	1	1,502	12	170	1,791	1,409	106	83	368
12	691	1	1,477	12	166	1,783	1,448	107	82	371
2005. 1	591	1	1,442	12	159	1,771	1,420	105	85	363
2	607	2	1,438	13	151	1,764	1,405	101	86	358
3	774	2	1,449	12	155	1,741	1,412	107	93	359
4	926	2	1,435	13	159	1,729	1,439	108	89	362
5	1,011	1	1,414	13	158	1,753	1,406	111	94	367
6	1,008	0	1,404	12	161	1,753	1,424	111	98	377
7	959	1	1,400	12	152	1,769	1,437	113	97	377

주: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5〉의 계속

(단위: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8	321	223	730	304	135	389	183	1
111	365	205	768	349	146	419	200	2
127	402	199	844	394	158	438	212	3
129	399	188	956	385	156	410	188	7
139	451	213	991	419	173	540	121	7
116	389	192	776	370	141	428	217	2
120	398	191	809	366	152	424	217	2
121	406	207	830	397	164	452	215	3
131	399	194	846	401	159	435	208	3
137	405	206	892	413	157	442	208	4
121	371	176	927	384	150	393	176	7
130	388	190	957	380	151	396	191	7
130	414	196	980	384	161	407	201	7
133	422	190	960	393	161	444	184	6
131	428	194	950	401	166	489	141	6
137	445	209	1,006	417	172	543	115	6
145	458	226	998	425	175	560	108	7
143	474	224	1,010	434	179	569	121	7
139	484	216	993	456	188	569	121	7
156	499	243	1,044	485	199	581	128	7
142	407	206	884	407	160	440	210	3
137	405	209	896	414	158	442	210	3
133	402	202	896	417	155	444	203	4
117	373	175	907	387	155	396	173	7
118	356	175	933	389	148	392	169	7
129	386	178	942	375	147	392	186	7
126	385	183	948	388	147	386	186	7
132	389	195	958	374	148	404	196	7
131	389	191	964	378	158	397	192	5
130	398	200	988	385	164	402	201	6
130	412	196	968	382	163	408	193	6
130	431	194	984	384	156	410	208	7
135	423	193	969	389	157	417	206	6
130	423	190	953	397	159	451	183	6
134	419	187	957	393	168	463	164	6
135	420	184	945	394	166	483	155	6
132	425	198	933	403	169	493	134	6
128	440	199	973	405	164	493	134	6
133	443	208	990	417	170	518	132	6
138	451	210	1,007	413	177	546	105	6
140	441	209	1,021	420	169	565	107	6
144	446	220	1,019	421	174	563	109	6
142	460	217	970	419	172	549	105	6
148	467	241	1,004	436	180	567	110	7
148	458	230	1,009	436	177	566	119	7
143	482	223	1,016	429	181	571	122	7
140	483	220	1,006	438	178	571	124	8
136	486	208	977	439	183	570	122	7
132	485	213	986	458	185	564	119	7
149	480	226	1,018	472	197	572	123	7
152	478	239	1,032	483	198	575	125	7
157	505	251	1,045	493	202	586	129	7
159	513	239	1,055	479	199	583	130	7
160	526	239	1,057	479	205	576	126	7

〈표 2-6〉 직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 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 업 및 어업숙 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 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2000		465	1,403	2,074	2,512	2,675	2,826	2,115	2,688	2,292	2,107
2001		524	1,498	2,079	2,671	2,723	2,933	2,035	2,638	2,332	2,138
2002		570	1,577	2,115	2,822	2,843	2,952	1,964	2,697	2,373	2,255
2003		598	1,702	2,140	3,172	2,735	2,835	1,834	2,407	2,387	2,329
2004		576	1,731	2,324	3,188	2,895	2,749	1,700	2,455	2,490	2,449
2001.	2/4	525	1,520	2,065	2,702	2,726	2,936	2,247	2,658	2,322	2,138
	3/4	526	1,504	2,096	2,704	2,728	2,950	2,256	2,639	2,321	2,176
	4/4	562	1,506	2,082	2,714	2,764	2,980	2,004	2,700	2,372	2,240
2002.	1/4	573	1,519	2,112	2,764	2,803	2,963	1,644	2,629	2,334	2,170
	2/4	581	1,579	2,107	2,807	2,864	2,943	2,126	2,749	2,381	2,286
	3/4	571	1,598	2,131	2,815	2,859	2,964	2,151	2,709	2,377	2,239
	4/4	555	1,612	2,111	2,902	2,847	2,938	1,937	2,699	2,401	2,324
2003.	1/4	604	1,702	2,029	3,184	2,639	2,918	1,603	2,346	2,380	2,228
	2/4	585	1,707	2,109	3,212	2,696	2,834	2,001	2,437	2,379	2,343
	3/4	601	1,713	2,190	3,160	2,771	2,792	1,976	2,393	2,365	2,333
	4/4	600	1,684	2,234	3,132	2,833	2,798	1,756	2,453	2,424	2,411
2004.	1/4	580	1,697	2,271	3,154	2,873	2,818	1,501	2,110	2,441	2,329
	2/4	580	1,744	2,329	3,181	2,891	2,765	1,827	2,476	2,494	2,457
	3/4	580	1,729	2,330	3,213	2,881	2,712	1,817	2,432	2,508	2,445
	4/4	565	1,754	2,364	3,205	2,933	2,701	1,655	2,474	2,519	2,563
2005.	1/4	567	1,755	2,365	3,214	2,952	2,675	1,437	2,348	2,532	2,403
	2/4	580	1,832	2,357	3,256	2,980	2,653	1,874	2,469	2,581	2,544
2003.	1	611	1,707	1,968	3,205	2,654	2,996	1,508	2,332	2,372	2,209
	2	600	1,715	2,037	3,168	2,640	2,924	1,558	2,308	2,383	2,165
	3	601	1,683	2,081	3,179	2,624	2,835	1,742	2,399	2,384	2,309
	4	580	1,702	2,090	3,183	2,641	2,837	1,965	2,436	2,384	2,339
	5	583	1,710	2,105	3,234	2,721	2,839	2,027	2,452	2,375	2,324
	6	591	1,709	2,133	3,220	2,726	2,825	2,010	2,425	2,379	2,365
	7	594	1,726	2,179	3,220	2,802	2,822	1,981	2,397	2,377	2,359
	8	605	1,704	2,184	3,132	2,756	2,772	1,973	2,362	2,354	2,285
	9	605	1,710	2,208	3,130	2,756	2,782	1,973	2,419	2,365	2,354
	10	606	1,695	2,211	3,142	2,767	2,805	1,980	2,430	2,412	2,404
	11	608	1,687	2,231	3,123	2,837	2,787	1,817	2,489	2,414	2,432
	12	586	1,671	2,260	3,131	2,896	2,800	1,470	2,438	2,445	2,398
2004.	1	580	1,683	2,263	3,150	2,875	2,843	1,409	2,407	2,425	2,301
	2	579	1,690	2,246	3,177	2,891	2,816	1,451	2,421	2,438	2,296
	3	581	1,718	2,304	3,135	2,853	2,794	1,644	2,491	2,460	2,391
	4	579	1,731	2,321	3,161	2,878	2,798	1,794	2,498	2,476	2,436
	5	576	1,754	2,326	3,186	2,906	2,753	1,847	2,468	2,485	2,436
	6	580	1,744	2,329	3,181	2,891	2,765	1,827	2,476	2,494	2,457
	7	580	1,751	2,333	3,235	2,926	2,722	1,808	2,417	2,514	2,464
	8	584	1,711	2,303	3,172	2,825	2,694	1,834	2,396	2,496	2,367
	9	576	1,725	2,354	3,232	2,892	2,720	1,809	2,482	2,513	2,505
	10	568	1,749	2,361	3,211	2,896	2,697	1,843	2,490	2,525	2,562
	11	562	1,770	2,367	3,199	2,925	2,703	1,690	2,475	2,517	2,594
	12	565	1,743	2,363	3,205	2,979	2,703	1,433	2,457	2,514	2,533
2005.	1	565	1,727	2,352	3,194	2,953	2,701	1,330	2,340	2,522	2,395
	2	569	1,748	2,370	3,210	2,946	2,671	1,386	2,304	2,515	2,367
	3	567	1,790	2,373	3,239	2,956	2,652	1,595	2,399	2,558	2,446
	4	579	1,812	2,351	3,238	2,991	2,641	1,809	2,432	2,588	2,495
	5	573	1,836	2,372	3,278	2,959	2,666	1,911	2,485	2,570	2,547
	6	589	1,848	2,349	3,251	2,989	2,652	1,902	2,490	2,585	2,591
	7	585	1,872	2,354	3,233	2,997	2,661	1,884	2,443	2,571	2,583

주 :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7〉 직업별 취업자(여자)

(단위 : 천명)

	고위임 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 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수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 능 종사자	장치/기 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00	23	615	587	1,285	1,815	1,549	984	623	305	983
2001	31	632	627	1,382	1,873	1,618	935	590	308	994
2002	32	669	670	1,476	1,965	1,613	907	540	302	1,051
2003	35	777	729	1,496	1,852	1,535	829	436	305	1,116
2004	40	786	756	1,582	2,006	1,493	764	424	345	1,168
2001. 2/4	30	635	626	1,384	1,887	1,622	1,061	597	312	996
3/4	30	624	633	1,390	1,872	1,628	1,078	576	308	997
4/4	33	638	631	1,425	1,910	1,634	924	597	306	1,054
2002. 1/4	35	644	654	1,440	1,922	1,620	698	558	295	1,016
2/4	35	667	667	1,476	1,987	1,613	1,019	555	298	1,089
3/4	30	668	679	1,475	1,982	1,621	1,027	527	306	1,030
4/4	27	695	682	1,512	1,967	1,598	885	519	312	1,070
2003. 1/4	35	785	707	1,474	1,763	1,567	674	429	303	1,060
2/4	32	790	721	1,500	1,819	1,543	934	446	301	1,138
3/4	36	779	741	1,517	1,877	1,513	921	426	297	1,111
4/4	38	754	746	1,492	1,949	1,516	784	440	319	1,155
2004. 1/4	35	756	746	1,515	1,974	1,538	625	437	335	1,112
2/4	41	796	763	1,577	2,005	1,508	846	431	346	1,169
3/4	41	790	753	1,613	2,008	1,467	841	416	351	1,165
4/4	43	803	763	1,621	2,035	1,459	746	412	349	1,226
2005. 1/4	43	804	753	1,616	2,042	1,438	587	394	340	1,150
2/4	44	861	764	1,631	2,084	1,441	865	383	351	1,228
2003. 1	39	784	690	1,481	1,768	1,601	624	421	307	1,033
2	32	791	709	1,463	1,760	1,562	648	423	297	1,018
3	35	780	722	1,478	1,761	1,536	750	444	304	1,128
4	32	790	720	1,469	1,783	1,546	904	451	301	1,132
5	31	793	712	1,512	1,834	1,547	952	448	300	1,135
6	33	786	730	1,520	1,840	1,537	947	439	302	1,148
7	35	790	742	1,540	1,885	1,525	925	429	300	1,122
8	37	770	738	1,504	1,873	1,492	917	417	292	1,078
9	37	776	742	1,506	1,872	1,520	922	432	299	1,132
10	39	762	745	1,509	1,895	1,522	927	435	309	1,164
11	37	749	744	1,490	1,953	1,509	818	452	322	1,176
12	37	752	748	1,478	1,999	1,517	607	434	326	1,124
2004. 1	34	753	744	1,498	1,976	1,558	567	427	328	1,086
2	34	749	737	1,522	1,976	1,536	596	435	340	1,106
3	38	764	757	1,526	1,971	1,520	711	449	338	1,143
4	38	777	766	1,556	1,994	1,525	815	444	349	1,173
5	41	804	760	1,584	2,004	1,504	865	428	341	1,155
6	44	805	762	1,592	2,018	1,495	858	421	348	1,178
7	41	805	758	1,616	2,045	1,478	832	411	345	1,163
8	42	774	735	1,583	1,962	1,449	849	405	349	1,130
9	40	792	767	1,639	2,017	1,474	841	433	359	1,201
10	42	799	764	1,625	2,005	1,453	865	419	355	1,242
11	43	809	764	1,619	2,027	1,459	769	411	351	1,243
12	43	800	762	1,618	2,071	1,466	603	407	351	1,192
2005. 1	43	781	756	1,602	2,041	1,465	532	393	336	1,130
2	44	800	744	1,611	2,027	1,433	548	393	335	1,139
3	43	830	759	1,634	2,058	1,417	681	396	348	1,180
4	44	842	761	1,617	2,086	1,423	824	385	358	1,198
5	43	866	770	1,646	2,072	1,454	890	389	346	1,228
6	46	873	760	1,631	2,094	1,445	882	376	350	1,257
7	42	883	756	1,640	2,096	1,471	867	372	339	1,223

주 :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1998	7,641	1,392	4,225	2,025	12,296	6,534	4,043	1,720
1999	7,628	1,351	4,351	1,925	12,663	6,135	4,255	2,274
2000	7,795	1,458	4,407	1,931	13,360	6,395	4,608	2,357
2001	7,913	1,554	4,497	1,863	13,659	6,714	4,726	2,218
2002	7,988	1,617	4,574	1,797	14,181	6,862	4,886	2,433
2003	7,736	1,629	4,413	1,694	14,402	7,269	5,004	2,130
2004	7,663	1,679	4,431	1,553	14,894	7,625	5,082	2,188
2000. 4/4	7,842	1,507	4,432	1,903	13,578	6,551	4,655	2,372
2001. 1/4	7,430	1,504	4,248	1,678	13,197	6,593	4,588	2,017
2/4	8,070	1,558	4,544	1,967	13,769	6,762	4,760	2,247
3/4	8,166	1,558	4,642	1,967	13,734	6,739	4,722	2,273
4/4	7,987	1,596	4,552	1,840	13,936	6,764	4,835	2,237
2002. 1/4	7,647	1,613	4,387	1,646	13,864	6,759	4,821	2,283
2/4	8,168	1,631	4,662	1,876	14,255	6,855	4,908	2,492
3/4	8,190	1,630	4,669	1,892	14,225	6,878	4,889	2,459
4/4	7,944	1,593	4,576	1,775	14,382	6,957	4,927	2,498
2003. 1/4	7,465	1,567	4,298	1,601	14,168	7,176	4,904	2,088
2/4	7,794	1,590	4,433	1,771	14,509	7,250	5,082	2,177
3/4	7,939	1,669	4,502	1,767	14,356	7,268	4,989	2,099
4/4	7,748	1,690	4,421	1,637	14,577	7,383	5,059	2,155
2004. 1/4	7,490	1,676	4,325	1,489	14,614	7,460	5,067	2,087
2/4	7,762	1,676	4,459	1,626	14,983	7,686	5,199	2,197
3/4	7,769	1,684	4,493	1,593	14,878	7,671	5,035	2,172
4/4	7,631	1,680	4,446	1,505	15,102	7,781	5,026	2,295
2005. 1/4	7,391	1,631	4,391	1,368	14,856	7,803	4,968	2,085
2/4	7,772	1,652	4,558	1,562	15,354	7,936	5,112	2,306
2002. 11	7,995	1,592	4,607	1,796	14,394	6,950	4,943	2,501
12	7,646	1,582	4,431	1,634	14,405	6,977	4,940	2,489
2003. 1	7,426	1,560	4,272	1,594	14,137	7,142	4,893	2,102
2	7,451	1,571	4,295	1,586	14,047	7,158	4,853	2,035
3	7,518	1,570	4,326	1,622	14,320	7,227	4,966	2,127
4	7,672	1,568	4,378	1,726	14,484	7,237	5,079	2,168
5	7,851	1,592	4,460	1,800	14,519	7,266	5,082	2,171
6	7,859	1,611	4,460	1,788	14,525	7,245	5,086	2,193
7	7,855	1,639	4,439	1,777	14,601	7,239	5,152	2,210
8	7,978	1,680	4,535	1,762	14,149	7,236	4,872	2,041
9	7,983	1,689	4,533	1,761	14,318	7,331	4,942	2,045
10	7,973	1,692	4,510	1,771	14,479	7,350	5,025	2,104
11	7,799	1,702	4,443	1,653	14,627	7,388	5,045	2,194
12	7,472	1,677	4,311	1,485	14,624	7,411	5,048	2,166
2004. 1	7,428	1,676	4,289	1,463	14,508	7,426	5,005	2,077
2	7,456	1,668	4,313	1,475	14,549	7,453	5,044	2,053
3	7,585	1,683	4,374	1,529	14,785	7,501	5,152	2,132
4	7,724	1,673	4,437	1,612	14,948	7,553	5,203	2,192
5	7,797	1,673	4,482	1,641	14,942	7,600	5,167	2,174
6	7,764	1,679	4,460	1,624	15,058	7,606	5,228	2,225
7	7,688	1,666	4,445	1,577	15,063	7,569	5,303	2,191
8	7,797	1,685	4,507	1,606	14,584	7,700	4,813	2,071
9	7,822	1,700	4,527	1,595	14,987	7,744	4,989	2,254
10	7,835	1,699	4,511	1,626	15,066	7,776	4,981	2,310
11	7,673	1,678	4,475	1,521	15,129	7,792	5,020	2,317
12	7,385	1,665	4,352	1,369	15,109	7,776	5,076	2,258
2005. 1	7,283	1,637	4,330	1,317	14,796	7,767	4,946	2,082
2	7,355	1,631	4,383	1,341	14,731	7,774	4,947	2,010
3	7,534	1,627	4,460	1,477	15,041	7,868	5,015	2,163
4	7,675	1,624	4,520	1,526	15,260	7,907	5,084	2,268
5	7,798	1,648	4,573	1,577	15,401	7,971	5,107	2,323
6	7,844	1,679	4,583	1,583	15,401	7,931	5,144	2,326
7	7,812	1,674	4,572	1,566	15,372	7,889	5,173	2,3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9〉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여자)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1998	3,345	243	1,304	1,798	4,745	1,650	2,257	839
1999	3,313	248	1,388	1,677	5,025	1,562	2,289	1,174
2000	3,372	263	1,421	1,688	5,397	1,679	2,496	1,222
2001	3,382	296	1,457	1,629	5,609	1,861	2,589	1,159
2002	3,368	304	1,482	1,582	5,857	1,968	2,682	1,207
2003	3,138	290	1,328	1,519	5,970	2,109	2,826	1,036
2004	3,127	321	1,420	1,387	6,237	2,289	2,869	1,079
2000.4/4	3,378	279	1,428	1,671	5,524	1,764	2,539	1,220
2001.1/4	3,111	287	1,359	1,465	5,413	1,802	2,523	1,088
2/4	3,493	300	1,463	1,729	5,659	1,865	2,626	1,168
3/4	3,530	294	1,520	1,717	5,606	1,869	2,574	1,163
4/4	3,394	302	1,485	1,606	5,759	1,908	2,633	1,217
2002.1/4	3,173	303	1,435	1,435	5,708	1,913	2,623	1,173
2/4	3,494	313	1,519	1,662	5,911	1,979	2,695	1,237
3/4	3,482	308	1,504	1,670	5,862	1,977	2,684	1,202
4/4	3,323	293	1,468	1,562	5,944	2,005	2,725	1,215
2003.1/4	2,969	270	1,260	1,439	5,827	2,067	2,733	1,027
2/4	3,192	283	1,309	1,600	6,033	2,070	2,894	1,069
3/4	3,252	303	1,372	1,576	5,966	2,130	2,824	1,011
4/4	3,138	304	1,372	1,463	6,055	2,169	2,851	1,036
2004.1/4	3,002	307	1,367	1,328	6,073	2,188	2,849	1,036
2/4	3,207	319	1,425	1,464	6,274	2,260	2,939	1,075
3/4	3,182	324	1,438	1,420	6,262	2,327	2,844	1,091
4/4	3,117	334	1,449	1,334	6,340	2,379	2,844	1,116
2005.1/4	2,955	326	1,424	1,204	6,211	2,368	2,801	1,041
2/4	3,207	330	1,405	1,392	6,444	2,416	2,904	1,124
2002. 11	3,357	291	1,477	1,588	5,946	2,001	2,738	1,206
12	3,122	292	1,406	1,424	5,943	2,007	2,735	1,202
2003. 1	2,942	263	1,246	1,434	5,805	2,084	2,680	1,041
2	2,951	276	1,259	1,415	5,754	2,048	2,713	993
3	3,015	273	1,275	1,467	5,923	2,068	2,807	1,048
4	3,111	269	1,277	1,564	6,017	2,054	2,900	1,062
5	3,229	285	1,316	1,628	6,036	2,080	2,894	1,062
6	3,236	296	1,333	1,606	6,047	2,075	2,889	1,083
7	3,224	296	1,343	1,585	6,069	2,085	2,911	1,073
8	3,253	307	1,380	1,566	5,866	2,133	2,762	971
9	3,278	307	1,394	1,576	5,962	2,174	2,799	989
10	3,274	302	1,386	1,586	6,032	2,173	2,848	1,011
11	3,166	307	1,379	1,480	6,085	2,164	2,858	1,063
12	2,973	301	1,350	1,322	6,048	2,170	2,846	1,032
2004. 1	2,959	303	1,358	1,298	6,015	2,168	2,827	1,020
2	2,976	303	1,358	1,315	6,055	2,177	2,837	1,042
3	3,070	314	1,384	1,372	6,148	2,219	2,882	1,046
4	3,176	314	1,411	1,451	6,262	2,248	2,934	1,079
5	3,228	320	1,430	1,478	6,257	2,265	2,930	1,062
6	3,218	323	1,433	1,462	6,302	2,267	2,952	1,082
7	3,155	322	1,424	1,409	6,336	2,262	2,989	1,086
8	3,180	323	1,430	1,427	6,096	2,348	2,708	1,040
9	3,210	327	1,459	1,424	6,352	2,373	2,834	1,146
10	3,235	333	1,462	1,439	6,336	2,376	2,828	1,132
11	3,142	332	1,458	1,352	6,353	2,381	2,845	1,127
12	2,974	336	1,427	1,211	6,330	2,380	2,860	1,090
2005. 1	2,894	326	1,410	1,158	6,184	2,357	2,781	1,046
2	2,921	325	1,424	1,172	6,153	2,356	2,786	1,011
3	3,049	328	1,440	1,282	6,249	2,392	2,837	1,065
4	3,163	324	1,472	1,368	6,376	2,391	2,877	1,108
5	3,221	327	1,487	1,407	6,482	2,422	2,927	1,133
6	3,237	340	1,497	1,401	6,475	2,434	2,909	1,133
7	3,216	336	1,500	1,381	6,474	2,427	2,925	1,12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0〉 성별·연령대별 실업자

(단위 : 천명)

		남 자						여 자					
		전 체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전 체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1998		1,005	404	258	189	120	33	486	251	106	84	35	11
1999		926	355	236	182	119	35	448	219	100	85	35	9
2000		647	258	165	129	73	22	332	172	66	61	24	7
2001		591	242	147	117	64	20	308	171	58	53	22	5
2002		491	218	130	80	45	17	261	144	56	39	16	7
2003		508	228	126	86	52	16	310	172	64	50	19	5
2004		534	235	133	90	56	20	326	177	64	57	22	7
2001.4/4		517	232	126	89	53	18	279	160	51	42	20	6
2002.1/4		570	253	142	94	60	22	329	191	63	48	18	8
2/4		478	209	126	82	44	17	256	135	57	37	19	8
3/4		456	199	123	78	39	16	236	127	52	36	14	6
4/4		459	210	130	68	37	13	222	121	51	34	13	4
2003.1/4		522	248	124	80	57	14	325	196	60	47	16	5
2/4		489	215	120	85	53	16	301	163	67	49	19	4
3/4		501	214	129	91	51	17	300	158	64	52	21	5
4/4		520	237	132	87	46	18	313	172	63	51	19	8
2004.1/4		555	255	125	96	57	21	377	216	68	63	22	8
2/4		504	225	125	79	53	21	328	176	61	59	24	8
3/4		530	219	140	95	57	19	305	155	64	57	21	8
4/4		548	241	140	91	57	19	294	158	61	50	22	3
2005.1/4		603	247	150	115	71	21	371	201	74	66	23	7
2/4		536	204	132	102	65	32	342	173	68	63	29	9
2003.	1	511	247	120	75	52	16	329	203	60	45	17	4
	2	535	260	127	81	56	12	323	201	59	45	14	4
	3	520	237	124	83	63	13	322	184	62	50	19	8
	4	488	218	118	81	53	18	305	161	71	51	19	4
	5	484	213	120	86	51	15	300	162	64	50	20	4
	6	496	215	123	89	54	16	298	167	65	45	19	3
	7	510	229	125	89	48	18	318	180	61	49	23	5
	8	507	210	131	99	52	16	303	161	63	56	20	4
	9	486	202	131	86	52	16	281	133	67	53	21	6
	10	512	225	137	85	47	17	290	142	68	50	21	9
	11	504	226	132	84	44	17	322	181	61	55	17	8
	12	543	259	128	90	47	20	327	193	60	48	19	7
2004.	1	567	278	131	87	51	20	342	200	62	53	19	8
	2	565	256	123	101	63	22	388	226	74	59	22	8
	3	532	233	120	101	59	20	400	224	68	76	25	7
	4	506	210	134	85	57	21	356	189	70	63	26	8
	5	512	234	121	81	54	23	320	179	59	59	22	7
	6	492	232	121	71	49	19	307	167	55	55	23	8
	7	552	238	143	94	56	21	313	168	60	55	23	8
	8	535	212	145	97	62	19	313	158	64	65	18	9
	9	502	208	132	94	52	18	290	139	69	51	22	8
	10	522	224	139	85	54	20	287	151	61	52	19	4
	11	542	233	137	95	56	21	277	146	57	48	23	3
	12	581	267	144	93	60	17	318	177	65	50	24	3
2005.	1	615	259	131	117	68	20	365	205	72	61	19	8
	2	612	241	154	118	78	20	377	207	78	66	19	7
	3	583	240	144	110	67	22	373	191	73	71	30	8
	4	550	206	145	107	68	25	354	190	70	59	30	5
	5	518	202	125	95	61	36	335	158	71	68	27	10
	6	540	206	127	105	66	36	338	171	64	62	30	12
	7	567	239	125	105	64	32	321	176	56	59	26	5

주 :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1〉 연령대별 · 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

	전 체	연 령 대 별					교 육 수 준 별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8	7.0	12.2	5.7	5.6	5.3	2.4	5.9	8.3	8.5	4.9
1999	6.3	10.9	5.3	5.2	5.1	2.3	5.2	7.6	7.6	4.5
2000	4.4	8.1	3.6	3.5	3.2	1.5	3.6	5.1	6.3	3.3
2001	4.0	7.9	3.2	3.0	2.8	1.2	3.0	4.6	5.7	3.3
2002	3.3	7.0	2.9	2.0	1.9	1.1	2.3	3.7	4.9	3.0
2003	3.6	8.0	3.0	2.2	2.2	1.0	2.2	4.3	5.1	3.0
2004	3.7	8.3	3.1	2.3	2.3	1.2	2.5	4.5	4.7	2.9
2002. 1/4	4.0	8.4	3.2	2.4	2.6	1.5	2.9	4.6	5.4	3.5
2/4	3.2	6.6	2.8	2.0	2.0	1.1	2.2	3.5	4.8	3.1
3/4	3.0	6.4	2.7	1.9	1.7	0.9	2.0	3.4	4.5	2.8
4/4	3.0	6.5	2.8	1.7	1.6	0.8	1.9	3.3	4.8	2.9
2003. 1/4	3.8	8.7	2.9	2.1	2.4	1.0	2.2	4.5	5.7	3.3
2/4	3.4	7.6	2.9	2.2	2.2	0.9	1.9	4.1	5.3	3.2
3/4	3.5	7.4	3.0	2.3	2.2	1.0	2.3	4.2	4.8	2.9
4/4	3.6	8.2	3.1	2.2	2.0	1.2	2.4	4.5	4.7	2.7
2004. 1/4	4.0	9.3	3.0	2.5	2.4	1.4	2.7	4.9	5.3	3.3
2/4	3.5	8.1	2.9	2.2	2.2	1.2	2.3	4.2	5.1	3.0
3/4	3.6	7.5	3.2	2.4	2.3	1.2	2.6	4.3	4.4	2.8
4/4	3.6	8.1	3.2	2.2	2.2	1.0	2.4	4.7	3.9	2.6
2005. 1/4	4.2	9.0	3.6	2.9	2.7	1.3	3.1	5.2	5.1	3.1
2/4	3.7	7.8	3.2	2.5	2.5	1.6	2.7	4.3	5.2	2.8
2003. 1	3.8	8.8	2.8	2.0	2.2	1.1	2.4	4.7	5.1	2.8
2	3.8	9.0	2.9	2.1	2.3	0.9	2.1	4.7	5.7	3.4
3	3.7	8.4	2.9	2.2	2.6	1.0	2.1	4.1	6.1	3.7
4	3.5	7.6	2.9	2.1	2.2	1.0	1.9	4.0	5.5	3.3
5	3.4	7.6	2.9	2.2	2.1	0.9	1.9	4.0	5.4	3.2
6	3.4	7.7	2.9	2.2	2.2	0.8	2.0	4.2	4.9	3.1
7	3.6	7.9	2.9	2.2	2.2	1.0	2.3	4.5	4.7	2.8
8	3.5	7.4	3.1	2.5	2.2	0.9	2.4	4.1	5.1	3.0
9	3.3	6.9	3.1	2.2	2.2	1.0	2.2	3.9	4.6	2.9
10	3.4	7.5	3.2	2.2	2.0	1.1	2.2	4.3	4.7	2.8
11	3.6	8.2	3.0	2.2	1.8	1.1	2.2	4.4	4.7	2.9
12	3.8	8.9	3.0	2.2	2.0	1.3	2.8	4.8	4.6	2.4
2004. 1	4.0	9.3	3.1	2.2	2.2	1.4	2.9	5.1	4.6	2.6
2	4.2	9.5	3.1	2.6	2.6	1.5	2.8	4.8	5.6	3.7
3	4.0	9.1	2.9	2.8	2.5	1.2	2.5	4.7	5.7	3.6
4	3.7	8.0	3.2	2.3	2.4	1.2	2.3	4.2	5.6	3.3
5	3.5	8.1	2.8	2.2	2.2	1.3	2.3	4.1	5.5	2.9
6	3.4	8.0	2.7	2.0	2.1	1.1	2.4	4.1	4.1	2.7
7	3.7	7.9	3.2	2.3	2.3	1.2	2.8	4.5	4.3	2.7
8	3.6	7.6	3.3	2.6	2.4	1.2	2.6	4.3	5.0	3.0
9	3.4	7.0	3.1	2.3	2.1	1.1	2.3	4.2	3.8	2.7
10	3.4	7.6	3.1	2.1	2.1	1.0	2.2	4.4	4.1	2.6
11	3.5	7.7	3.0	2.2	2.2	1.0	2.5	4.4	3.9	2.5
12	3.8	8.9	3.3	2.2	2.4	1.0	2.5	5.2	3.7	2.7
2005. 1	4.2	9.3	3.5	2.8	2.6	1.3	3.3	5.5	4.2	2.8
2	4.3	9.0	3.7	2.9	2.8	1.3	3.0	5.2	5.6	3.2
3	4.1	8.8	3.4	2.8	2.7	1.3	2.9	4.8	5.5	3.2
4	3.8	8.2	3.4	2.6	2.6	1.2	2.6	4.4	5.6	3.2
5	3.5	7.4	3.1	2.5	2.4	1.8	2.7	4.1	5.0	2.7
6	3.6	7.8	3.0	2.5	2.5	1.8	2.7	4.5	5.0	2.5
7	3.7	8.3	2.9	2.5	2.4	1.5	2.5	4.7	4.9	2.5

주 :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2〉 성별·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 %)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8		7.8	14.1	6.2	6.3	6.6	3.3	5.7	9.9	4.8	4.4	3.1	1.3
1999		7.2	12.8	5.7	5.8	6.5	3.3	5.1	8.8	4.5	4.2	3.0	1.0
2000		5.0	9.4	4.0	3.9	4.0	2.1	3.6	6.7	2.9	2.8	2.0	0.8
2001		4.5	9.1	3.6	3.4	3.5	1.8	3.3	6.6	2.6	2.3	1.8	0.5
2002		3.7	8.4	3.2	2.2	2.3	1.4	2.8	5.6	2.5	1.6	1.3	0.7
2003		3.8	9.2	3.1	2.3	2.6	1.3	3.3	6.8	2.8	2.0	1.5	0.6
2004		3.9	9.7	3.2	2.4	2.7	1.6	3.4	6.9	2.8	2.2	1.7	0.7
2001.4/4		3.9	8.9	3.1	2.5	2.8	1.5	3.0	6.2	2.2	1.8	1.6	0.6
2002.1/4		4.3	9.5	3.5	2.7	3.3	2.0	3.6	7.3	2.8	2.1	1.5	0.9
2/4		3.5	8.0	3.1	2.3	2.3	1.4	2.6	5.3	2.4	1.5	1.5	0.7
3/4		3.4	7.8	3.0	2.2	2.0	1.2	2.5	5.0	2.3	1.5	1.1	0.6
4/4		3.4	8.3	3.1	1.9	1.9	1.0	2.3	4.7	2.3	1.4	1.0	0.4
2003.1/4		3.9	9.8	3.0	2.2	2.9	1.3	3.6	7.6	2.7	2.0	1.4	0.7
2/4		3.6	8.8	2.9	2.3	2.6	1.3	3.2	6.5	2.9	2.0	1.5	0.4
3/4		3.7	8.7	3.1	2.4	2.5	1.3	3.2	6.2	2.9	2.1	1.7	0.5
4/4		3.8	9.6	3.2	2.3	2.3	1.4	3.3	6.9	2.8	2.0	1.5	0.8
2004.1/4		4.1	10.2	3.0	2.6	2.8	1.7	4.0	8.4	3.0	2.5	1.8	0.9
2/4		3.7	9.3	3.0	2.1	2.5	1.6	3.3	6.9	2.7	2.3	1.8	0.7
3/4		3.9	9.1	3.4	2.5	2.7	1.5	3.1	6.0	2.8	2.2	1.6	0.8
4/4		4.0	10.0	3.4	2.4	2.6	1.5	3.0	6.3	2.7	1.9	1.6	0.3
2005.1/4		4.4	10.3	3.7	3.0	3.3	1.7	3.9	7.9	3.3	2.6	1.7	0.8
		3.8	8.8	3.2	2.6	2.8	2.3	3.4	6.9	3.0	2.4	2.0	0.8
2003.	1	3.8	9.7	2.9	2.1	2.7	1.5	3.6	7.9	2.7	1.9	1.5	0.5
	2	4.0	10.2	3.1	2.2	2.9	1.1	3.6	7.8	2.6	1.9	1.2	0.6
	3	3.9	9.5	3.0	2.3	3.2	1.1	3.5	7.3	2.7	2.1	1.6	0.9
	4	3.6	8.8	2.9	2.2	2.6	1.5	3.2	6.5	3.1	2.1	1.5	0.4
	5	3.6	8.7	2.9	2.3	2.5	1.2	3.1	6.5	2.8	2.0	1.5	0.4
	6	3.6	8.8	3.0	2.4	2.6	1.3	3.1	6.6	2.8	1.8	1.5	0.3
	7	3.7	9.0	3.0	2.4	2.4	1.4	3.3	6.9	2.7	2.0	1.8	0.5
	8	3.8	8.5	3.2	2.6	2.6	1.3	3.2	6.3	2.9	2.3	1.6	0.4
	9	3.6	8.4	3.2	2.3	2.5	1.3	2.9	5.4	3.0	2.1	1.6	0.6
	10	3.7	9.2	3.3	2.3	2.3	1.3	3.0	5.8	3.0	2.0	1.6	0.8
	11	3.7	9.2	3.2	2.2	2.1	1.4	3.4	7.3	2.7	2.2	1.4	0.8
	12	4.0	10.3	3.1	2.4	2.3	1.7	3.5	7.6	2.7	1.9	1.5	0.8
2004.	1	4.2	10.9	3.2	2.3	2.5	1.7	3.7	7.7	2.8	2.1	1.6	1.0
	2	4.2	10.3	3.0	2.7	3.1	1.9	4.1	8.7	3.3	2.4	1.8	0.9
	3	3.9	9.5	2.9	2.7	2.8	1.6	4.2	8.8	3.0	3.0	2.0	0.7
	4	3.7	8.7	3.2	2.2	2.7	1.6	3.6	7.5	3.0	2.4	2.0	0.8
	5	3.7	9.6	2.9	2.1	2.6	1.7	3.3	6.8	2.5	2.3	1.7	0.7
	6	3.6	9.6	2.9	1.9	2.3	1.4	3.1	6.5	2.4	2.1	1.7	0.7
	7	4.0	9.6	3.5	2.5	2.7	1.6	3.2	6.4	2.6	2.2	1.7	0.7
	8	3.9	9.0	3.5	2.6	2.9	1.5	3.3	6.3	2.8	2.6	1.4	0.8
	9	3.7	8.7	3.2	2.5	2.4	1.4	2.9	5.5	3.0	2.0	1.7	0.8
	10	3.8	9.3	3.4	2.2	2.5	1.4	2.9	6.0	2.7	2.0	1.4	0.3
	11	3.9	9.6	3.4	2.5	2.6	1.6	2.8	5.8	2.5	1.8	1.7	0.3
	12	4.2	11.0	3.5	2.4	2.8	1.4	3.3	6.9	2.9	1.9	1.8	0.4
2005.	1	4.5	10.6	3.7	3.1	3.2	1.6	3.9	7.9	3.2	2.5	1.5	0.9
	2	4.5	10.0	3.8	3.1	3.7	1.6	4.0	8.1	3.5	2.6	1.5	0.8
	3	4.2	10.1	3.5	2.9	3.0	1.7	3.8	7.5	3.2	2.8	2.2	0.8
	4	3.9	8.8	3.5	2.8	3.0	1.8	3.6	7.6	3.1	2.2	2.1	0.5
	5	3.7	8.7	3.0	2.4	2.7	2.5	3.3	6.2	3.1	2.6	1.9	0.9
	6	3.8	8.8	3.1	2.7	2.9	2.5	3.4	6.8	2.8	2.3	2.0	1.0
	7	4.0	9.9	3.1	2.7	2.8	2.3	3.2	6.8	2.5	2.3	1.7	0.4

주 :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3〉 성별·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

	남 자				여 자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8	8.1	8.9	8.7	5.0	3.9	7.3	8.2	4.8
1999	7.3	8.1	8.1	4.7	3.4	6.8	6.9	4.1
2000	4.9	5.4	7.0	3.3	2.4	4.7	5.6	3.1
2001	4.3	4.8	6.0	3.4	1.9	4.3	5.2	2.9
2002	3.1	3.9	5.1	3.1	1.5	3.3	4.6	3.0
2003	2.8	4.5	5.1	2.8	1.7	4.1	5.0	3.6
2004	3.3	4.7	4.4	2.7	1.8	4.1	5.0	3.4
2002. 1/4	2.9	4.6	5.4	3.5	4.0	4.7	5.3	3.5
2/4	2.2	3.5	4.8	3.1	3.0	3.8	4.9	3.2
3/4	2.0	3.4	4.5	2.8	2.8	3.7	4.8	2.7
4/4	1.9	3.3	4.8	2.9	2.6	3.6	5.6	3.0
2003. 1/4	2.2	4.5	5.7	3.3	2.8	4.7	5.3	3.0
2/4	1.9	4.1	5.3	3.2	2.6	4.2	5.3	2.9
3/4	2.3	4.2	4.8	2.9	2.9	4.3	4.9	2.8
4/4	2.4	4.5	4.7	2.7	2.9	4.7	4.9	2.5
2004. 1/4	2.7	4.9	5.3	3.3	3.5	4.9	4.7	2.9
2/4	2.3	4.2	5.1	3.0	2.9	4.4	4.5	2.7
3/4	2.6	4.3	4.4	2.8	3.6	4.6	4.3	2.7
4/4	2.4	4.7	3.9	2.6	3.3	5.1	4.0	2.4
2005. 1/4	3.1	5.2	5.1	3.1	4.1	5.4	4.8	2.8
2/4	2.7	4.3	5.2	2.8	3.6	4.3	5.3	2.6
2003. 1	2.8	4.8	5.2	2.5	2.0	4.6	5.0	3.5
2	2.8	4.8	5.4	3.1	1.3	4.4	6.1	4.3
3	2.7	4.4	5.4	3.3	1.6	3.7	6.9	4.7
4	2.5	4.0	5.6	3.1	1.4	4.0	5.4	3.8
5	2.5	4.2	5.5	2.8	1.4	3.7	5.3	4.1
6	2.9	4.3	5.0	2.8	1.3	4.1	4.7	3.7
7	2.9	4.5	4.8	2.7	1.7	4.4	4.5	3.1
8	3.2	4.3	4.9	2.9	1.7	3.9	5.2	3.3
9	2.7	4.1	5.0	2.9	1.8	3.6	4.2	2.8
10	2.7	4.5	5.2	2.7	1.7	3.8	4.1	3.1
11	2.7	4.6	4.6	2.5	1.8	4.1	4.9	3.7
12	3.4	5.0	4.9	2.3	2.2	4.5	4.4	2.8
2004. 1	3.6	5.3	4.9	2.5	2.2	4.9	4.2	2.8
2	3.7	4.9	4.6	3.0	1.9	4.6	6.8	5.4
3	3.0	4.6	4.7	3.1	2.0	4.8	6.9	4.8
4	2.7	4.4	4.8	2.8	1.9	3.9	6.6	4.4
5	2.9	4.4	4.9	2.8	1.8	3.7	6.3	3.2
6	3.2	4.2	3.7	2.6	1.7	3.9	4.5	3.0
7	4.0	4.7	4.0	2.7	1.7	4.2	4.6	2.7
8	3.6	4.5	5.0	2.8	1.8	4.0	5.0	3.4
9	3.2	4.4	4.0	2.6	1.6	3.9	3.6	2.7
10	3.1	4.7	4.3	2.5	1.5	3.8	4.0	2.8
11	3.4	5.0	4.1	2.3	1.7	3.5	3.6	2.9
12	3.3	5.7	3.6	2.4	1.7	4.4	3.8	3.2
2005. 1	4.3	5.8	4.0	2.6	2.3	5.0	4.6	3.2
2	4.2	5.5	5.0	2.8	2.0	4.8	6.3	4.0
3	3.8	4.9	5.5	3.0	2.0	4.8	5.6	3.7
4	3.6	4.3	5.7	3.0	1.8	4.5	5.4	3.6
5	3.4	4.2	5.1	2.5	2.0	4.0	5.0	3.0
6	3.7	4.5	5.1	2.3	1.8	4.3	5.0	2.9
7	3.6	4.9	5.0	2.4	1.6	4.4	4.7	2.5

주 :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4〉 주요 노동이동지표

(단위 : 천명, %)

	당월입직(입직률)	신규채용(신규채용률)	당월이직(이직률)	퇴직 및 해고 (퇴직 및 해고율)
1998	86.4 (1.78)	64.9 (1.34)	129.7 (2.68)	103.4 (2.13)
1999	155.7 (2.75)	129.9 (2.29)	142.3 (2.51)	105.0 (1.85)
2000	165.6 (2.89)	144.1 (2.52)	152.4 (2.66)	120.6 (2.10)
2001	138.1 (2.34)	123.0 (2.08)	150.4 (2.55)	122.3 (2.07)
2002	152.2 (2.52)	137.0 (2.27)	151.1 (2.50)	122.0 (2.02)
2003	153.5 (2.39)	139.9 (2.18)	158.7 (2.47)	142.8 (2.22)
2001. 1/4	157.6 (2.65)	134.6 (2.26)	165.8 (2.79)	127.1 (2.14)
2/4	137.7 (2.32)	122.5 (2.07)	148.7 (2.51)	120.9 (2.04)
3/4	133.7 (2.27)	121.3 (2.06)	147.6 (2.51)	122.6 (2.08)
4/4	123.4 (2.11)	113.5 (1.94)	139.5 (2.39)	118.5 (2.03)
2002. 1/4	161.3 (2.68)	142.5 (2.37)	158.4 (2.63)	130.7 (2.17)
2/4	156.1 (2.59)	140.3 (2.32)	158.3 (2.62)	123.9 (2.05)
3/4	149.5 (2.48)	134.2 (2.22)	146.8 (2.43)	116.5 (1.93)
4/4	142.1 (2.35)	131.2 (2.17)	140.8 (2.33)	116.9 (1.94)
2003. 1/4	187.2 (2.90)	167.5 (2.60)	186.3 (2.89)	165.0 (2.56)
2/4	154.8 (2.40)	139.7 (2.17)	165.2 (2.56)	146.9 (2.28)
3/4	137.6 (2.14)	126.6 (1.97)	144.0 (2.24)	130.8 (2.04)
4/4	134.6 (2.11)	125.8 (1.97)	139.4 (2.18)	128.4 (2.01)
2004. 1/4	171.6 (2.73)	152.0 (2.42)	172.0 (2.73)	150.6 (2.39)
2/4	132.5 (2.11)	118.4 (1.88)	147.0 (2.34)	130.7 (2.08)
3/4	124.1 (1.99)	109.0 (1.75)	135.3 (2.17)	117.7 (1.89)
4/4	113.2 (1.82)	100.1 (1.61)	123.7 (1.99)	107.5 (1.73)
2002. 8	145.7 (2.41)	128.5 (2.13)	153.3 (2.54)	121.5 (2.01)
9	142.5 (2.36)	128.6 (2.13)	139.0 (2.30)	113.0 (1.87)
10	151.2 (2.51)	139.0 (2.30)	153.0 (2.53)	126.6 (2.10)
11	150.3 (2.49)	140.0 (2.32)	138.1 (2.29)	116.6 (1.93)
12	124.8 (2.06)	114.7 (1.90)	131.3 (2.17)	107.6 (1.78)
2003. 1	180.7 (2.80)	160.4 (2.49)	177.2 (2.67)	146.6 (2.27)
2	168.4 (2.61)	148.2 (2.30)	179.7 (2.78)	158.9 (2.46)
3	212.4 (3.29)	193.9 (3.01)	207.1 (3.21)	189.5 (2.94)
4	175.6 (2.72)	154.1 (2.39)	170.5 (2.64)	148.0 (2.29)
5	143.6 (2.22)	129.8 (2.01)	169.6 (2.63)	148.0 (2.29)
6	145.1 (2.26)	135.3 (2.10)	155.7 (2.42)	144.5 (2.25)
7	144.9 (2.26)	132.8 (2.07)	146.1 (2.27)	131.8 (2.05)
8	134.9 (2.10)	124.1 (1.93)	146.8 (2.29)	133.4 (2.08)
9	132.9 (2.07)	122.9 (1.92)	139.0 (2.17)	127.3 (1.99)
10	147.2 (2.30)	137.4 (2.15)	154.8 (2.42)	143.0 (2.23)
11	128.9 (2.02)	120.6 (1.89)	139.9 (2.19)	128.1 (2.00)
12	127.7 (2.00)	119.4 (1.87)	123.5 (1.98)	114.2 (1.79)
2004. 1	158.1 (2.51)	140.1 (2.22)	166.1 (2.63)	148.8 (2.36)
2	165.8 (2.63)	145.8 (2.32)	171.5 (2.72)	144.7 (2.30)
3	190.8 (3.03)	170.3 (2.71)	178.5 (2.84)	158.4 (2.52)
4	143.5 (2.28)	128.9 (2.05)	155.8 (2.47)	136.3 (2.16)
5	127.6 (2.03)	116.6 (1.85)	145.2 (2.31)	127.7 (2.03)
6	126.2 (2.01)	109.8 (1.75)	140.2 (2.23)	128.1 (2.04)
7	131.3 (2.10)	115.6 (1.85)	142.6 (2.28)	123.5 (1.97)
8	123.7 (1.98)	106.9 (1.71)	140.6 (2.25)	122.5 (1.96)
9	117.3 (1.88)	104.6 (1.68)	122.7 (1.97)	107.2 (1.72)
10	120.2 (1.93)	106.7 (1.71)	133.3 (2.14)	113.2 (1.82)
11	113.4 (1.83)	100.0 (1.61)	126.3 (2.03)	111.3 (1.79)
12	106.0 (1.71)	93.7 (1.51)	111.4 (1.80)	97.9 (1.58)
2005. 1	128.6 (2.03)	109.8 (1.74)	120.6 (1.91)	104.3 (1.65)
2	127.1 (2.01)	102.2 (1.61)	155.2 (2.45)	130.3 (2.06)
3	209.2 (3.32)	163.9 (2.68)	196.9 (3.12)	160.7 (2.55)
4	170.4 (2.70)	144.9 (2.29)	171.4 (2.71)	144.4 (2.29)
5	149.7 (2.37)	133.2 (2.11)	150.3 (2.38)	137.1 (2.17)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15〉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단위 : %)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6규모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1999	3.39	3.02	3.15	2.93	3.18	2.73	2.72	2.51	1.91	1.85	1.59	1.60
2000	3.22	2.85	3.25	3.10	3.18	2.94	2.86	2.65	2.05	2.13	2.03	1.72
2001	2.80	2.71	2.76	2.87	2.51	2.83	2.23	2.62	1.54	2.19	1.38	1.56
2002	2.89	2.84	2.90	2.91	2.95	2.84	2.36	2.40	1.93	1.97	1.27	1.28
2003	2.65	2.73	2.96	2.96	2.61	2.84	2.12	2.31	2.13	2.15	1.39	1.31
2001. 1/4	3.23	2.92	3.20	3.01	2.70	2.98	2.41	2.75	1.65	3.18	1.76	2.00
2/4	2.86	2.70	2.81	2.96	2.47	2.80	2.05	2.54	1.42	1.94	1.42	1.36
3/4	2.66	2.67	2.53	2.89	2.56	2.77	2.31	2.71	1.73	2.06	1.23	1.34
4/4	2.48	2.55	2.49	2.60	2.30	2.76	2.16	2.47	1.37	1.55	1.11	1.54
2002. 1/4	3.09	2.91	2.86	2.83	3.14	3.03	2.61	2.54	2.04	2.31	1.54	1.61
2/4	2.91	3.02	3.16	3.23	2.86	2.84	2.36	2.51	1.88	2.02	1.37	1.21
3/4	2.82	2.74	2.80	2.84	3.02	2.82	2.31	2.34	1.89	1.82	1.15	1.17
4/4	2.73	2.67	2.77	2.74	2.77	2.68	2.15	2.21	1.89	1.72	1.01	1.12
2003. 1/4	3.30	3.27	3.42	3.47	3.07	3.27	2.65	2.50	2.68	2.52	1.90	1.70
2/4	2.87	2.92	3.04	2.99	2.61	3.11	2.10	2.42	1.96	2.18	1.24	1.17
3/4	2.16	2.58	2.64	2.65	2.39	2.49	1.92	2.22	2.01	1.90	1.36	1.19
4/4	2.28	2.15	2.74	2.74	2.38	2.47	1.80	2.08	1.85	2.01	1.08	1.17
2004. 1/4	2.84	2.98	3.23	3.36	2.77	2.81	2.44	2.45	2.33	2.18	2.13	1.79
2/4	2.41	2.72	2.37	2.64	2.32	2.53	1.88	2.18	1.81	2.01	1.37	1.43
3/4	2.12	2.38	2.25	2.49	2.00	2.26	1.86	2.18	1.89	1.88	1.56	1.35
4/4	2.01	1.88	2.01	2.18	2.07	2.20	1.58	1.92	1.66	1.86	1.27	1.61
2002. 11	3.09	2.44	2.81	2.62	2.98	2.77	2.26	2.18	1.84	1.68	1.06	1.17
12	2.22	2.49	2.54	2.63	2.29	2.49	2.03	1.94	1.85	1.63	0.88	1.02
2003. 1	3.05	3.12	3.47	3.26	2.62	2.93	2.84	2.40	2.80	2.23	1.84	1.48
2	2.98	3.27	3.13	3.21	2.78	3.11	2.33	2.55	2.35	2.49	1.66	1.62
3	3.87	3.42	3.66	3.93	3.80	3.77	2.79	2.56	2.89	2.84	2.21	2.01
4	3.32	3.17	3.34	3.10	2.95	3.08	2.39	2.46	2.10	2.30	1.54	1.22
5	2.69	2.78	2.69	3.03	2.43	3.35	2.09	2.51	1.94	2.09	1.09	1.21
6	2.59	2.80	3.09	2.85	2.45	2.89	1.80	2.28	1.86	2.16	1.10	1.06
7	2.25	2.33	2.91	2.83	2.39	2.49	1.94	2.23	2.16	1.96	1.49	1.29
8	2.01	2.78	2.58	2.63	2.42	2.48	1.88	2.32	1.88	1.90	1.37	1.21
9	2.22	2.63	2.44	2.49	2.35	2.49	1.94	2.11	1.99	1.85	1.22	1.05
10	2.58	2.67	3.09	2.88	2.48	2.75	1.94	2.38	1.78	2.27	1.22	1.18
11	2.02	1.94	2.61	2.92	2.40	2.55	1.77	1.98	1.69	2.03	1.01	1.14
12	2.23	1.85	2.53	2.43	2.26	2.12	1.68	1.88	2.09	1.73	1.00	1.18
2004. 1	2.77	3.04	2.93	3.29	2.55	2.73	2.19	2.23	2.20	2.08	1.90	1.58
2	2.82	2.61	3.33	3.63	2.61	2.63	2.41	2.58	2.02	2.23	1.76	1.80
3	2.92	3.30	3.44	3.15	3.15	3.07	2.72	2.54	2.78	2.24	2.72	2.00
4	2.52	2.88	2.59	2.60	2.56	2.75	2.06	2.49	1.89	2.03	1.44	1.54
5	2.43	2.56	2.26	2.80	2.13	2.46	1.84	2.03	1.78	2.16	1.35	1.35
6	2.27	2.71	2.27	2.52	2.27	2.39	1.73	2.01	1.75	1.83	1.32	1.40
7	2.49	2.58	2.24	2.72	2.11	2.17	1.97	2.22	1.98	2.04	1.60	1.53
8	1.95	2.28	2.36	2.59	1.94	2.51	1.83	2.37	1.96	1.81	1.62	1.30
9	1.93	2.28	2.15	2.16	1.95	2.10	1.79	1.94	1.72	1.80	1.46	1.23
10	2.00	2.05	2.26	2.25	2.14	2.19	1.67	1.81	1.69	2.23	1.38	2.30
11	2.15	1.86	1.91	2.31	2.25	2.41	1.55	1.99	1.45	1.70	1.13	1.37
12	1.88	1.73	1.85	1.98	1.82	2.00	1.52	1.96	1.84	1.65	1.29	1.15
2005. 1	1.53	1.76	1.85	1.04	2.17	2.05	2.14	2.08	2.00	1.85	2.56	1.61
2	1.90	2.41	2.44	2.44	2.09	2.94	1.82	2.52	1.56	2.10	1.62	1.81
3	3.89	3.28	3.70	3.56	3.42	3.56	3.02	2.92	2.42	2.42	2.53	2.03
4	3.41	2.90	2.81	3.32	2.97	2.89	2.36	2.62	2.02	2.22	1.93	1.53
5	2.36	2.49	3.08	2.94	2.41	2.64	2.15	2.32	1.76	2.01	1.61	1.15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이며, 1규모: 5~9인, 2규모: 10~29인, 3

규모: 30~99인, 4규모: 100~299인, 5규모: 300~499인, 6규모: 500~999인을 의미.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16〉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단위 : 천명)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6규모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1999	26.2	23.3	41.0	38.2	40.0	34.4	25.0	23.1	5.5	5.3	17.9	18.0
2000	24.3	21.5	43.0	41.0	43.2	39.9	29.1	26.9	5.7	6.0	20.3	17.2
2001	24.9	24.0	39.4	41.0	34.8	39.3	21.6	25.3	3.9	5.6	13.5	15.2
2002	27.0	26.5	43.8	44.0	41.3	39.8	22.7	23.1	5.8	5.9	11.7	11.8
2003	25.2	21.9	44.9	44.9	38.0	41.3	22.8	24.8	7.7	7.8	15.0	14.0
2001. 1/4	28.4	25.7	45.9	43.2	38.0	42.0	23.7	27.0	4.3	8.3	17.3	19.6
2/4	25.4	23.9	40.5	42.8	34.4	39.1	20.0	24.8	3.6	4.9	13.8	13.2
3/4	23.7	23.8	36.1	41.3	35.4	38.3	22.2	26.1	4.3	5.2	12.0	13.1
4/4	22.1	22.7	35.2	36.7	31.6	37.9	20.5	23.5	3.4	3.8	10.7	14.9
2002. 1/4	28.8	27.1	43.3	42.8	43.8	42.2	25.2	24.5	6.1	6.9	14.2	14.8
2/4	27.3	28.3	47.8	48.9	40.0	39.7	22.8	24.2	5.6	6.0	12.6	11.2
3/4	26.4	25.7	42.3	42.8	42.3	39.5	22.3	22.5	5.7	5.4	10.6	10.8
4/4	25.6	25.0	41.8	41.4	39.1	37.8	20.6	21.2	5.7	5.1	9.3	10.3
2003. 1/4	31.4	31.1	51.9	52.7	45.2	48.2	28.7	27.1	9.8	9.2	20.2	18.1
2/4	27.4	27.8	46.0	45.3	38.2	45.5	22.7	26.2	7.2	8.0	13.3	12.5
3/4	20.5	24.5	40.1	40.2	34.5	35.9	20.6	23.8	7.3	6.9	14.6	12.7
4/4	21.4	20.2	41.6	41.6	34.2	35.6	19.1	22.1	6.7	7.3	11.6	12.6
2004. 1/4	28.9	30.3	51.1	53.1	39.4	39.9	24.5	24.7	7.5	7.1	20.1	16.9
2/4	24.4	27.5	37.4	41.7	32.9	35.9	18.9	21.9	5.9	6.5	13.0	13.6
3/4	21.3	23.9	35.2	38.9	28.2	31.9	18.5	21.7	6.1	6.1	14.8	12.9
4/4	20.0	18.8	31.2	33.9	29.0	30.9	15.6	19.0	5.3	6.0	12.0	15.3
2002. 11	28.9	22.8	42.4	39.5	42.0	39.0	21.6	20.9	5.5	5.0	9.8	10.8
12	20.9	23.5	38.3	39.7	32.4	35.2	19.5	18.6	5.5	4.9	8.1	9.4
2003. 1	29.0	29.7	52.7	49.4	38.7	43.3	30.6	25.9	10.2	8.1	19.5	15.7
2	28.4	31.1	47.5	48.8	41.0	45.8	25.2	27.6	8.6	9.1	17.6	17.3
3	36.7	32.5	55.6	59.7	55.9	55.4	30.2	27.7	10.6	10.4	23.5	21.4
4	31.7	30.2	50.5	46.9	43.4	45.2	26.0	26.7	7.7	8.4	16.5	13.1
5	25.7	26.6	40.8	46.0	35.7	49.2	22.7	27.3	7.1	7.6	11.7	13.0
6	24.7	26.7	46.7	43.1	35.7	42.1	19.4	24.6	6.8	7.9	11.8	11.3
7	21.4	22.2	44.1	42.9	34.7	36.1	20.9	24.0	7.8	7.1	16.0	13.8
8	19.1	26.4	39.1	39.9	35.0	35.8	20.2	24.8	6.8	6.9	14.7	13.0
9	20.9	24.8	37.0	37.7	33.9	35.9	20.7	22.5	7.2	6.7	13.1	11.3
10	24.2	25.1	46.8	43.7	35.8	39.8	20.7	25.4	6.5	8.3	13.1	12.7
11	19.0	18.2	39.6	44.3	34.5	36.7	18.8	21.0	6.1	7.4	10.9	12.3
12	21.0	17.4	38.4	36.8	32.4	30.4	17.8	19.9	7.5	6.2	10.7	12.7
2004. 1	28.3	30.9	46.5	52.3	36.3	38.8	22.0	22.5	7.1	6.7	17.9	14.9
2	28.7	26.5	52.6	57.4	37.0	37.3	24.3	26.0	6.5	7.2	16.7	17.1
3	29.7	33.6	54.3	49.6	44.8	43.6	27.3	25.5	9.0	7.3	25.7	18.9
4	25.6	29.2	40.9	41.1	36.5	39.1	20.7	25.1	6.1	6.6	13.7	14.7
5	24.6	25.9	35.7	44.3	30.3	34.8	18.5	20.4	5.8	7.0	12.8	12.8
6	22.9	27.4	35.6	39.7	32.1	33.8	17.3	20.2	5.7	5.9	12.5	13.3
7	25.0	25.9	35.2	42.6	29.8	30.7	19.7	22.2	6.4	6.6	15.2	14.6
8	19.6	22.9	36.9	40.5	27.3	35.5	18.2	23.6	6.3	5.8	15.4	12.4
9	19.3	22.9	33.5	33.6	27.3	29.5	17.7	19.2	5.6	5.8	14.0	11.8
10	19.9	20.5	35.2	35.1	29.9	30.7	16.5	17.9	5.5	7.2	13.2	22.0
11	21.4	18.5	29.8	35.9	31.5	33.8	15.3	19.6	4.7	5.5	10.7	13.0
12	18.8	17.3	28.7	30.7	25.4	28.0	14.9	19.3	5.9	5.3	12.2	10.8
2005. 1	15.8	18.1	28.8	30.2	31.8	30.0	21.5	20.9	6.7	6.2	24.2	15.2
2	19.5	24.7	38.0	37.8	30.6	43.0	18.4	25.4	5.2	7.0	15.4	17.2
3	39.7	33.4	57.5	55.4	49.7	51.6	30.2	29.1	8.1	8.0	24.1	19.3
4	34.9	29.7	43.7	51.6	43.0	41.8	23.6	26.2	6.7	7.3	18.4	14.6
5	24.3	25.7	47.7	45.5	34.9	38.3	24.4	23.2	5.8	6.7	15.5	11.0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규모: 5~9인, 2규모: 10~29인, 3규모: 30~99인, 4규모: 100~299인, 5규모: 300~499인, 6규모: 500~999인을 의미.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17〉 주요 업종 노동이동

(단위 :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1998	1.79	2.90	2.55	3.33	1.87	3.36	1.35	3.15	1.71	2.04	1.38	2.18	2.32	3.07
1999	2.75	2.47	3.38	2.87	3.22	3.06	3.62	3.28	2.33	2.02	2.20	2.06	3.19	3.20
2000	2.88	2.59	3.44	3.36	3.29	3.18	3.16	3.18	2.64	2.13	2.02	2.05	3.81	3.43
2001	2.14	2.45	2.91	3.28	2.82	2.86	2.94	3.15	2.14	2.49	1.76	2.04	3.44	3.27
2002	2.56	2.54	2.93	2.87	2.65	2.70	3.46	3.41	2.26	2.25	1.89	1.84	3.33	3.29
2003	2.38	2.52	2.76	2.68	2.48	2.72	3.11	3.20	1.97	2.31	1.75	1.73	3.36	2.83
2001. 1/4	2.28	2.52	3.08	3.98	3.28	2.93	3.33	3.63	2.10	2.68	2.47	2.65	4.08	3.50
2/4	2.20	2.50	2.96	3.47	2.81	2.86	3.07	3.04	2.08	2.38	1.49	1.85	3.23	3.32
3/4	2.07	2.35	2.82	3.10	2.68	2.88	2.33	3.04	2.19	2.50	1.82	1.98	3.33	3.21
4/4	2.00	2.45	2.75	2.55	2.52	2.79	3.04	2.90	2.17	2.38	1.25	1.66	3.14	3.05
2002. 1/4	2.39	2.59	3.33	3.29	2.65	2.62	3.37	3.03	2.53	2.21	2.12	2.02	3.62	3.24
2/4	2.56	2.66	3.22	3.18	2.62	2.85	3.67	3.19	2.36	2.28	2.05	1.91	3.46	3.27
3/4	2.57	2.42	2.53	2.66	2.70	2.59	3.40	3.77	2.24	2.31	2.11	1.85	3.21	3.42
4/4	2.53	2.43	2.73	2.48	2.66	2.49	3.12	3.47	2.09	2.13	1.37	1.69	3.18	3.20
2003. 1/4	2.76	2.92	3.35	3.18	3.01	2.95	3.19	2.92	2.28	2.25	2.33	2.47	3.67	3.84
2/4	2.42	2.66	2.70	2.73	2.57	2.98	2.83	3.26	1.99	2.50	1.84	1.81	3.53	3.31
3/4	2.15	2.22	2.45	2.39	2.00	2.58	3.15	3.62	1.81	2.07	1.45	1.50	3.58	3.24
4/4	2.18	2.28	2.56	2.43	2.34	2.36	3.27	2.99	1.78	2.42	1.39	1.14	3.15	3.11
2004. 1/4	2.55	2.49	3.21	3.23	2.87	3.07	3.62	1.92	2.09	2.37	2.55	3.17	3.40	3.40
2/4	2.13	2.38	2.54	2.87	2.24	2.39	2.86	3.69	1.81	2.16	1.68	1.51	1.86	2.37
3/4	2.03	2.07	2.60	2.39	2.01	2.16	2.69	3.40	1.64	1.91	1.54	1.91	1.76	2.31
4/4	1.93	2.15	2.37	2.09	1.83	2.13	2.63	3.11	1.49	1.60	1.02	1.05	1.73	1.93
2003. 1	2.63	2.71	3.58	2.89	3.34	2.98	2.15	2.79	2.21	2.07	2.51	2.56	4.15	3.77
2	2.50	2.83	3.32	3.21	3.01	2.64	3.12	2.87	2.06	2.36	2.35	2.30	3.61	3.54
3	3.16	3.23	3.15	3.43	2.69	3.23	4.30	3.09	2.56	2.31	2.14	2.55	3.27	4.20
4	2.69	2.66	3.18	3.40	3.12	3.46	3.23	3.44	2.42	2.25	2.64	2.02	3.32	3.27
5	2.22	2.70	3.01	2.89	2.03	2.95	2.73	3.43	1.74	3.03	1.69	2.12	3.36	3.33
6	2.34	2.64	1.92	1.91	2.55	2.54	2.53	2.90	1.82	2.22	1.20	1.30	3.90	3.32
7	2.25	2.19	2.91	3.03	2.28	2.63	2.69	3.40	1.86	2.28	1.59	1.59	3.78	3.33
8	2.15	2.30	2.24	1.95	1.80	2.79	2.81	3.37	1.75	1.91	1.58	1.73	3.85	3.34
9	2.05	2.15	2.19	2.18	1.93	2.30	3.95	4.10	1.80	2.02	1.17	1.17	3.10	3.05
10	2.36	2.49	2.23	2.36	2.94	2.73	2.93	2.75	1.90	2.85	1.85	1.36	3.12	3.04
11	2.20	2.36	2.42	2.36	1.98	2.43	2.52	2.81	1.76	2.37	1.27	1.20	3.67	3.53
12	1.98	2.00	3.02	2.56	2.09	1.91	4.35	3.41	1.67	2.02	1.06	0.88	2.65	2.75
2004. 1	2.29	2.36	3.40	3.80	2.93	3.27	2.48	3.12	1.90	2.19	2.04	2.07	2.85	2.80
2	2.53	2.60	3.13	3.07	3.58	2.50	1.60	4.37	1.92	2.08	2.72	2.96	3.03	5.18
3	2.84	2.50	3.08	2.83	2.12	3.43	4.13	3.37	1.93	2.00	2.34	2.61	3.65	2.19
4	2.30	2.38	2.42	2.92	2.29	2.65	2.92	3.35	2.13	2.68	2.10	2.01	1.67	2.28
5	1.95	2.42	2.41	2.76	2.37	2.05	3.02	4.52	1.76	1.98	1.51	1.27	2.15	3.04
6	2.13	2.32	2.78	2.93	2.07	2.47	2.63	3.20	1.55	1.83	1.42	1.25	1.77	1.79
7	2.12	2.15	2.75	2.81	1.77	2.25	3.25	2.62	1.83	2.10	1.73	2.32	1.92	2.19
8	2.02	2.14	2.65	2.56	2.23	2.10	2.21	3.69	1.49	1.84	1.99	2.42	1.61	2.62
9	1.95	1.93	2.42	1.81	2.04	2.12	2.60	3.88	1.60	1.79	0.90	1.00	1.75	2.14
10	2.06	2.42	1.80	1.96	2.28	2.35	2.83	3.03	1.31	1.78	1.06	1.08	2.11	2.03
11	2.00	2.24	2.55	1.93	1.74	2.29	2.63	3.24	1.46	1.45	1.08	1.15	1.71	2.15
12	1.73	1.78	2.75	2.37	1.47	1.74	2.42	3.07	1.69	1.57	0.92	0.91	1.36	1.60
2005. 1	1.99	1.89	2.37	2.71	2.00	2.11	2.29	2.60	1.75	1.64	1.84	1.39	1.72	2.13
2	1.98	2.44	2.81	3.15	1.76	2.09	1.87	2.63	1.81	2.15	2.21	2.21	1.73	2.30
3	3.02	3.07	4.50	4.15	2.84	2.84	4.16	3.82	2.47	2.37	2.54	2.36	2.14	2.31
4	2.40	2.76	3.97	3.34	2.73	2.81	4.01	4.17	2.56	2.04	2.02	2.16	2.37	2.67
5	2.32	2.53	3.57	3.27	2.68	2.68	3.28	3.11	1.77	1.79	1.75	1.41	2.38	2.20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1999~2001년 6차 산업분류, 2002년 8차 산업분류. 도소매는 1999~2001년에는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수리업, 2002년 이후에는 도매 및 소매업을 의미. 부동산임대는 1999~2001년에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002년 이후에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의미.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1〉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전산업)

(단위: 천원/월, %)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9		1,544 (-)	1,102 (-)	117 (-)	325 (-)
2000		1,668 (8.0)	1,182 (7.2)	133 (14.1)	352 (8.5)
2001		1,752 (5.1)	1,257 (6.3)	131 (-1.6)	365 (3.4)
2002		1,948 (11.2)	1,408 (2.1)	126 (-3.9)	413 (13.4)
2003		2,127 (9.2)	1,532 (8.8)	135 (7.3)	460 (11.4)
2004		2,255 (6.0)	1,636 (6.8)	137 (1.7)	482 (4.6)
2003.	1	2,384 (35.3)	1,502 (9.0)	128 (10.9)	754 (181.1)
	2	1,962 (-2.7)	1,467 (9.0)	124 (11.3)	371 (-33.8)
	3	1,962 (8.7)	1,514 (9.1)	131 (6.3)	317 (7.8)
	4	2,012 (8.1)	1,503 (8.6)	131 (4.1)	379 (7.5)
	5	1,866 (9.0)	1,519 (8.5)	138 (8.0)	209 (13.5)
	6	2,168 (8.1)	1,520 (8.4)	137 (7.7)	511 (7.3)
	7	2,072 (6.9)	1,531 (8.3)	128 (0.2)	414 (3.8)
	8	2,144 (12.8)	1,536 (8.9)	134 (4.8)	475 (30.5)
	9	2,282 (6.6)	1,543 (8.6)	139 (9.3)	600 (1.1)
	10	2,034 (7.9)	1,545 (8.2)	148 (10.1)	341 (5.9)
	11	1,939 (9.0)	1,553 (9.0)	143 (9.7)	243 (8.6)
	12	2,710 (5.7)	1,652 (9.7)	143 (5.8)	915 (-0.9)
2004.	1	2,388 (0.2)	1,619 (7.8)	131 (2.0)	639 (-15.3)
	2	2,088 (6.4)	1,571 (7.1)	134 (7.7)	383 (3.3)
	3	2,078 (5.9)	1,605 (6.1)	131 (-0.2)	341 (7.8)
	4	2,109 (4.8)	1,598 (6.3)	136 (4.2)	375 (-1.0)
	5	1,989 (6.6)	1,616 (6.4)	142 (3.1)	232 (10.7)
	6	2,247 (3.6)	1,624 (6.9)	137 (0.1)	486 (-4.9)
	7	2,256 (8.9)	1,639 (7.0)	133 (4.0)	484 (17.1)
	8	2,220 (3.5)	1,638 (6.6)	136 (1.8)	447 (-5.9)
	9	2,495 (9.3)	1,652 (7.0)	141 (1.6)	702 (17.1)
	10	2,145 (5.5)	1,653 (7.0)	148 (0.0)	344 (0.9)
	11	2,045 (5.5)	1,659 (6.8)	142 (-1.0)	245 (0.8)
	12	3,007 (11.0)	1,757 (6.4)	140 (-2.1)	1,110 (21.3)
2005.	1	2,273 (-4.8)	1,752 (8.2)	140 (6.9)	382 (-40.2)
	2	2,524 (20.9)	1,701 (8.3)	138 (3.7)	684 (78.4)
	3	2,248 (8.2)	1,724 (7.4)	148 (12.8)	375 (9.9)
	4	2,268 (7.5)	1,722 (7.7)	150 (10.3)	397 (5.7)
	5	2,101 (5.6)	1,735 (7.4)	151 (6.6)	215 (-7.3)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2〉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제조업)

(단위: 천원/월, %)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9		1,443 (-)	963 (-)	179 (-)	301 (-)
2000		1,568 (8.6)	1,024 (6.4)	205 (14.6)	338 (12.4)
2001		1,659 (5.8)	1,095 (6.9)	204 (-0.6)	361 (6.7)
2002		1,857 (11.9)	1,266 (15.6)	197 (-3.4)	395 (9.4)
2003		2,018 (8.7)	1,372 (8.4)	205 (4.2)	441 (11.7)
2004		2,209 (9.5)	1,485 (8.3)	219 (6.6)	505 (14.6)
2003.	1	2,315 (41.4)	1,348 (10.1)	198 (10.8)	769 (227.3)
	2	1,831 (-5.6)	1,294 (8.9)	187 (9.8)	351 (-39.7)
	3	1,808 (9.2)	1,369 (10.1)	201 (0.6)	237 (12.5)
	4	1,882 (8.0)	1,341 (8.5)	201 (0.6)	340 (10.7)
	5	1,713 (6.9)	1,354 (7.7)	213 (4.9)	146 (2.3)
	6	2,033 (7.2)	1,356 (7.9)	205 (3.3)	472 (6.8)
	7	1,966 (4.9)	1,364 (7.6)	190 (-4.7)	412 (1.1)
	8	2,059 (12.9)	1,376 (8.5)	202 (0.0)	482 (35.2)
	9	2,146 (5.9)	1,385 (7.9)	208 (6.6)	553 (1.1)
	10	1,963 (6.9)	1,395 (7.0)	228 (8.7)	341 (5.0)
	11	1,781 (10.8)	1,391 (8.5)	216 (6.9)	174 (41.8)
	12	2,722 (3.2)	1,495 (8.5)	213 (4.0)	1,015 (-3.8)
2004.	1	2,307 (-0.3)	1,466 (8.8)	199 (0.1)	642 (-16.5)
	2	2,041 (11.5)	1,410 (9.0)	205 (9.7)	426 (21.5)
	3	1,975 (9.2)	1,469 (7.3)	210 (4.4)	296 (24.6)
	4	2,035 (8.1)	1,449 (8.0)	221 (10.0)	366 (7.4)
	5	1,863 (8.8)	1,464 (8.2)	230 (8.1)	169 (15.7)
	6	2,175 (7.0)	1,470 (8.4)	218 (6.4)	487 (3.2)
	7	2,239 (13.9)	1,474 (8.1)	211 (10.8)	554 (34.4)
	8	2,131 (3.5)	1,483 (7.8)	218 (8.2)	430 (-10.8)
	9	2,441 (13.8)	1,507 (8.8)	227 (9.3)	707 (27.9)
	10	2,088 (6.4)	1,510 (8.3)	238 (4.5)	340 (-0.1)
	11	1,916 (7.6)	1,511 (8.6)	227 (5.0)	178 (2.3)
	12	3,311 (21.6)	1,612 (7.9)	221 (3.9)	1,478 (45.6)
2005.	1	2,200 (-4.7)	1,606 (9.5)	232 (16.8)	362 (-43.7)
	2	2,607 (27.7)	1,539 (9.2)	224 (9.2)	844 (98.1)
	3	2,143 (8.5)	1,577 (7.4)	243 (15.7)	322 (9.1)
	4	2,273 (11.7)	1,577 (8.9)	251 (13.5)	445 (21.7)
	5	2,001 (7.4)	1,588 (8.5)	250 (9.0)	163 (-3.8)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3〉 산업별 임금총액 추이

(단위 : 천원/월)

	전 산업		제 조 업		건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1998	1,427	276	1,284	234	1,502	166	-	-	
1999	1,544	325	1,443	301	1,576	245	-	-	
2000	1,668	352	1,568	338	1,701	274	-	-	
2001	1,752	365	1,659	361	1,687	221	-	-	
2002	1,948	413	1,857	395	1,859	251	1,714	305	
2003	2,127	460	2,018	441	2,072	278	1,861	349	
2004	2,255	482	2,209	505	2,130	274	1,932	339	
2003.	1	2,384	754	2,315	769	2,312	591	2,014	563
	2	1,962	371	1,831	351	1,947	264	1,700	238
	3	1,962	317	1,808	237	1,918	166	1,746	264
	4	2,012	379	1,882	340	1,925	174	1,735	257
	5	1,866	209	1,713	146	1,826	78	1,640	142
	6	2,168	511	2,033	472	2,061	266	1,887	371
	7	2,072	414	1,966	412	2,048	258	1,772	265
	8	2,144	475	2,059	482	2,067	254	1,923	409
	9	2,282	600	2,146	553	2,313	461	2,017	490
	10	2,034	341	1,963	341	1,976	127	1,773	246
	11	1,939	243	1,781	174	1,979	100	1,677	144
	12	2,710	915	2,722	1,015	2,501	593	2,453	797
2004.	1	2,388	639	2,307	642	2,368	453	1,986	419
	2	2,088	383	2,041	426	2,102	218	1,752	229
	3	2,078	341	1,975	296	1,971	177	1,883	326
	4	2,109	375	2,035	366	2,030	225	1,772	211
	5	1,989	232	1,863	169	1,924	76	1,718	135
	6	2,247	486	2,175	487	2,102	256	1,938	349
	7	2,256	484	2,239	554	2,160	308	1,970	379
	8	2,220	447	2,131	430	2,019	167	1,825	221
	9	2,495	702	2,441	707	2,428	575	2,230	625
	10	2,145	344	2,088	340	1,980	115	1,828	219
	11	2,045	245	1,916	178	1,964	113	1,765	152
	12	3,007	1,110	3,311	1,478	2,508	602	2,529	819
2005.	1	2,273	382	2,200	362	2,024	181	1,874	247
	2	2,524	684	2,607	844	2,235	410	2,064	440
	3	2,248	375	2,143	322	2,048	233	1,925	276
	4	2,268	397	2,273	445	1,972	153	1,938	284
	5	2,101	215	2,001	163	1,891	70	1,755	123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4〉 사업체 규모별 임금추이(비농 전산업)

(단위 : 천원/월)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1999		1,192 (59.0)	1,376 (68.1)	1,439 (71.3)	1,561 (77.3)	1,794 (88.8)	2,019 (100.0)
2000		1,274 (58.0)	1,497 (68.2)	1,567 (71.4)	1,713 (78.0)	1,973 (89.9)	2,195 (100.0)
2001		1,344 (58.1)	1,606 (69.4)	1,680 (72.6)	1,785 (77.2)	2,135 (92.3)	2,313 (100.0)
2002		1,466 (53.9)	1,705 (62.7)	1,856 (68.3)	2,067 (76.0)	2,357 (86.7)	2,718 (100.0)
2003		1,543 (50.7)	1,808 (59.4)	2,005 (65.9)	2,230 (73.3)	2,474 (81.3)	3,043 (100.0)
2004		1,642 (49.3)	1,945 (58.5)	2,124 (63.9)	2,387 (71.8)	2,683 (80.7)	3,327 (100.0)
2003.	1	1,648 (43.5)	1,939 (51.2)	2,252 (59.5)	2,363 (62.4)	2,671 (70.5)	3,786 (100.0)
	2	1,424 (49.2)	1,677 (58.0)	1,761 (60.9)	2,061 (71.3)	2,351 (81.3)	2,892 (100.0)
	3	1,455 (54.1)	1,748 (65.0)	1,884 (70.1)	2,027 (75.4)	2,161 (80.4)	2,689 (100.0)
	4	1,450 (51.8)	1,695 (60.5)	1,880 (67.1)	2,204 (78.7)	2,448 (87.4)	2,802 (100.0)
	5	1,441 (60.9)	1,687 (71.3)	1,827 (77.2)	1,966 (83.1)	2,111 (89.2)	2,366 (100.0)
	6	1,547 (49.6)	1,800 (57.7)	2,037 (65.3)	2,322 (74.5)	2,589 (83.0)	3,119 (100.0)
	7	1,581 (56.5)	1,798 (64.3)	2,002 (71.6)	2,168 (77.5)	2,362 (84.5)	2,797 (100.0)
	8	1,543 (50.0)	1,820 (59.1)	2,010 (65.2)	2,253 (73.1)	2,515 (81.6)	3,082 (100.0)
	9	1,672 (51.3)	1,953 (60.0)	2,173 (66.7)	2,337 (71.8)	2,621 (80.5)	3,257 (100.0)
	10	1,495 (51.5)	1,694 (58.3)	1,901 (65.5)	2,162 (74.4)	2,418 (83.2)	2,905 (100.0)
	11	1,482 (59.6)	1,712 (68.8)	1,864 (74.9)	2,112 (84.9)	2,233 (89.7)	2,488 (100.0)
	12	1,781 (41.1)	2,180 (50.3)	2,468 (56.9)	2,797 (64.5)	3,221 (74.3)	4,338 (100.0)
2004.	1	1,767 (51.4)	2,068 (60.1)	2,327 (67.6)	2,484 (72.2)	2,816 (81.9)	3,440 (100.0)
	2	1,525 (48.1)	1,798 (56.8)	1,907 (60.2)	2,197 (69.3)	2,576 (81.3)	3,168 (100.0)
	3	1,559 (53.4)	1,845 (63.2)	2,008 (68.7)	2,186 (74.8)	2,343 (80.2)	2,921 (100.0)
	4	1,560 (51.8)	1,785 (59.3)	1,993 (66.2)	2,314 (76.8)	2,635 (87.5)	3,012 (100.0)
	5	1,548 (60.6)	1,838 (72.0)	1,925 (75.4)	2,132 (83.5)	2,287 (89.6)	2,553 (100.0)
	6	1,628 (50.1)	1,926 (59.3)	2,133 (65.7)	2,434 (75.0)	2,707 (83.4)	3,247 (100.0)
	7	1,699 (51.4)	1,941 (58.7)	2,144 (64.9)	2,329 (70.5)	2,694 (81.5)	3,304 (100.0)
	8	1,584 (49.2)	2,016 (62.6)	2,040 (63.3)	2,331 (72.4)	2,680 (83.2)	3,221 (100.0)
	9	1,809 (50.1)	2,161 (59.9)	2,404 (66.6)	2,635 (73.0)	2,892 (80.1)	3,610 (100.0)
	10	1,555 (49.6)	1,836 (58.6)	2,018 (64.4)	2,296 (73.2)	2,629 (83.9)	3,135 (100.0)
	11	1,541 (56.9)	1,839 (67.9)	1,984 (73.3)	2,205 (81.4)	2,440 (90.1)	2,708 (100.0)
	12	1,926 (34.3)	2,295 (40.9)	2,617 (46.7)	3,117 (55.6)	3,504 (62.5)	5,610 (100.0)
2005.	1	1,710 (51.5)	2,043 (61.6)	2,152 (64.9)	2,295 (69.2)	2,570 (77.5)	3,317 (100.0)
	2	1,833 (46.4)	2,150 (54.4)	2,283 (57.8)	2,650 (67.1)	2,981 (75.5)	3,949 (100.0)
	3	1,703 (53.5)	1,973 (61.9)	2,170 (68.1)	2,318 (72.8)	2,648 (83.1)	3,186 (100.0)
	4	1,703 (51.9)	1,954 (59.5)	2,125 (64.7)	2,437 (74.2)	2,683 (81.7)	3,283 (100.0)
	5	1,670 (61.0)	1,905 (69.6)	2,045 (74.7)	2,194 (80.1)	2,463 (89.9)	2,738 (100.0)

주 :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500인 이상 대비 임금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5〉 성별·내역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월)

		남 자		여 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남성=100)	정액급여 (남성=100)
1998		1,579	1,157	1,006	(63.7)	755 (65.2)
1999		1,735	1,226	1,090	(62.8)	808 (65.9)
2000		1,885	1,320	1,178	(62.5)	870 (65.9)
2001		1,976	1,400	1,257	(63.6)	940 (67.2)
2002		2,193	1,574	1,393	(63.5)	1,035 (65.8)
2003		2,406	1,715	1,501	(62.4)	1,119 (65.3)
2004		2,558	1,830	1,579	(61.8)	1,201 (65.6)
2003.	1	2,684	1,683	1,711	(63.7)	1,095 (65.1)
	2	2,226	1,642	1,369	(61.5)	1,073 (65.4)
	3	2,220	1,697	1,381	(62.2)	1,101 (64.9)
	4	2,278	1,683	1,418	(62.3)	1,099 (65.3)
	5	2,100	1,701	1,342	(63.9)	1,111 (65.3)
	6	2,450	1,701	1,534	(62.6)	1,114 (65.5)
	7	2,334	1,713	1,485	(63.6)	1,123 (65.6)
	8	2,433	1,718	1,495	(61.4)	1,126 (65.6)
	9	2,576	1,726	1,619	(62.8)	1,133 (65.7)
	10	2,298	1,728	1,441	(62.7)	1,133 (65.5)
	11	2,188	1,737	1,379	(63.0)	1,139 (65.6)
	12	3,094	1,857	1,843	(59.6)	1,189 (64.0)
2004.	1	2,704	1,817	1,686	(62.3)	1,179 (64.9)
	2	2,371	1,757	1,458	(61.5)	1,157 (65.8)
	3	2,353	1,800	1,464	(62.2)	1,173 (65.2)
	4	2,389	1,788	1,487	(62.2)	1,174 (65.7)
	5	2,234	1,807	1,444	(64.6)	1,189 (65.8)
	6	2,542	1,818	1,587	(62.4)	1,193 (65.6)
	7	2,555	1,832	1,589	(62.2)	1,208 (65.9)
	8	2,529	1,832	1,532	(60.6)	1,204 (65.7)
	9	2,827	1,848	1,753	(62.0)	1,213 (65.6)
	10	2,418	1,846	1,534	(63.4)	1,222 (66.2)
	11	2,298	1,852	1,479	(64.4)	1,226 (66.2)
	12	3,477	1,970	1,949	(56.1)	1,276 (64.8)
2005.	1	2,562	1,964	1,623	(63.3)	1,274 (64.9)
	2	2,868	1,901	1,749	(61.0)	1,252 (65.8)
	3	2,538	1,926	1,595	(62.9)	1,273 (66.1)
	4	2,569	1,922	1,595	(62.1)	1,272 (66.1)
	5	2,358	1,938	1,523	(64.6)	1,278 (65.9)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6〉 월평균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전산업, 노동부 조사)

(단위: 시간/월)

	전 체	정 상	초 과
1999	206.6 (-)	184.0 (-)	22.6 (-)
2000	204.8 (-0.9)	181.4 (-1.4)	23.4 (-3.5)
2001	202.4 (-1.2)	182.1 (0.4)	20.4 (-12.8)
2002	199.6 (-1.4)	181.6 (-0.3)	18.0 (-11.8)
2003	198.2 (-0.7)	180.6 (-0.6)	17.6 (-2.2)
2004	197.2 (-0.5)	180.5 (-0.1)	16.7 (-5.1)
2003. 1	200.0 (-3.1)	182.4 (-3.4)	17.6 (1.7)
2	187.2 (8.5)	170.8 (7.1)	16.4 (2.5)
3	200.8 (-0.4)	182.9 (-0.2)	17.9 (-3.2)
4	202.7 (-0.2)	185.3 (0.3)	17.5 (-5.4)
5	197.9 (-5.8)	179.6 (-6.3)	18.3 (0.0)
6	196.1 (1.4)	178.4 (1.8)	17.7 (-2.2)
7	202.1 (-0.6)	185.4 (0.2)	16.8 (-8.7)
8	193.8 (-3.1)	176.7 (-2.8)	17.1 (-6.0)
9	186.0 (-1.8)	168.7 (-1.7)	17.3 (-1.7)
10	206.7 (-0.5)	187.6 (-0.6)	19.0 (0.5)
11	199.3 (-3.7)	181.3 (-3.9)	18.0 (-1.1)
12	205.8 (2.7)	188.1 (3.4)	17.6 (-4.9)
2004. 1	182.5 (-8.8)	166.4 (-8.8)	16.1 (-8.5)
2	191.7 (2.4)	175.2 (2.6)	16.5 (0.6)
3	204.8 (2.0)	188.1 (2.8)	16.7 (-6.7)
4	198.6 (-2.0)	181.7 (-1.9)	16.9 (-3.4)
5	191.9 (-3.0)	174.3 (-3.0)	17.6 (-3.8)
6	204.4 (4.2)	187.7 (5.2)	16.7 (-5.6)
7	202.0 (0.0)	185.9 (0.3)	16.1 (-4.2)
8	197.3 (1.8)	180.9 (2.4)	16.3 (-4.7)
9	184.3 (-0.9)	167.8 (-0.5)	16.5 (-4.6)
10	199.9 (-3.3)	182.4 (-2.8)	17.5 (-7.9)
11	203.4 (2.1)	186.8 (3.0)	16.6 (-7.8)
12	205.4 (-0.2)	189.2 (0.6)	16.3 (-7.4)
2005. 1	197.1 (8.0)	180.0 (8.2)	17.0 (5.6)
2	166.1 (-13.4)	150.3 (-14.2)	15.8 (-4.2)
3	203.1 (-0.8)	185.3 (-1.5)	17.8 (6.6)
4	195.9 (-1.4)	178.0 (-2.0)	17.9 (5.9)
5	198.0 (3.2)	179.9 (3.2)	18.2 (3.4)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7〉 월평균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제조업, 노동부 조사)

(단위: 시간/월)

	전 체	정 상	초 과
1999	216.0 (-)	182.7 (-)	33.3 (-)
2000	213.1 (-1.3)	179.8 (-1.6)	33.3 (0.0)
2001	208.7 (-2.1)	178.9 (-0.5)	29.8 (-10.5)
2002	206.4 (-1.1)	177.7 (-0.7)	28.7 (-3.7)
2003	205.9 (-0.2)	177.9 (0.1)	28.0 (-2.4)
2004	205.0 (-0.4)	177.3 (-0.3)	27.7 (-1.1)
2003. 1	207.3 (-2.0)	179.3 (-3.1)	28.0 (6.1)
2	194.0 (9.4)	168.0 (10.1)	26.0 (5.3)
3	209.5 (0.4)	180.6 (1.2)	28.8 (-4.3)
4	211.8 (0.0)	183.8 (1.2)	28.1 (-6.3)
5	206.5 (-5.1)	177.2 (-5.7)	29.3 (-1.0)
6	204.9 (1.6)	177.1 (2.5)	27.7 (-3.8)
7	207.0 (-1.3)	180.8 (0.2)	26.2 (-10.6)
8	197.8 (-3.0)	170.8 (-2.3)	27.0 (-6.9)
9	193.5 (-0.9)	166.2 (-0.7)	27.3 (-1.8)
10	215.7 (0.4)	184.9 (0.2)	30.8 (1.7)
11	208.9 (-3.2)	180.0 (-3.5)	28.9 (-0.7)
12	214.0 (2.6)	186.3 (3.8)	27.7 (-4.8)
2004. 1	189.4 (-8.6)	163.6 (-8.8)	25.9 (-7.5)
2	199.5 (2.8)	172.9 (2.9)	26.6 (2.3)
3	213.4 (1.9)	185.2 (2.5)	28.3 (-1.7)
4	207.5 (-2.0)	178.8 (-2.7)	28.8 (2.5)
5	201.9 (-2.2)	172.0 (-2.9)	29.9 (2.0)
6	212.1 (3.5)	184.3 (4.1)	27.8 (0.4)
7	209.5 (1.2)	182.7 (1.1)	26.8 (2.3)
8	200.2 (1.2)	173.0 (1.3)	27.2 (0.7)
9	193.1 (-0.2)	165.4 (-0.5)	27.6 (1.1)
10	208.4 (-3.4)	178.8 (-3.3)	29.7 (-3.6)
11	212.3 (1.6)	184.5 (2.5)	27.8 (-3.8)
12	213.0 (-0.5)	186.3 (0.0)	26.7 (-3.6)
2005. 1	205.6 (8.6)	177.4 (8.4)	28.2 (8.9)
2	171.4 (-14.1)	145.8 (-15.7)	25.7 (-3.4)
3	211.1 (-1.1)	181.6 (-1.9)	29.5 (4.2)
4	206.5 (-0.5)	176.4 (-1.3)	30.1 (4.5)
5	207.1 (2.6)	176.9 (2.8)	30.2 (1.0)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8〉 산업별 취업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통계청 조사)

(단위: 시간/주)

		전산업	제 조 업	건설업	서비스업
1999		50.4 (-)	50.6 (-)	47.5 (-)	52.2 (-)
2000		50.6 (0.4)	51.0 (0.8)	48.3 (1.7)	52.0 (-0.4)
2001		50.4 (-0.4)	50.6 (-0.8)	48.7 (0.8)	51.7 (-0.6)
2002		49.8 (-1.2)	50.0 (-1.2)	48.2 (-1.0)	51.2 (-1.0)
2003		49.1 (-1.4)	49.6 (-0.8)	47.2 (-2.1)	50.3 (-1.8)
2004		48.7 (-0.8)	49.6 (0.0)	45.7 (-3.2)	49.8 (-1.0)
2003.	1	48.8 (-0.4)	50.7 (0.4)	47.1 (2.0)	50.5 (-0.6)
	2	49.1 (-1.3)	50.6 (-0.1)	47.1 (0.8)	50.9 (-1.6)
	3	49.6 (-1.9)	50.8 (-0.9)	47.7 (-3.0)	51.3 (-1.9)
	4	50.1 (-1.7)	50.6 (-1.3)	48.0 (-4.2)	51.4 (-1.8)
	5	50.8 (-0.8)	50.6 (-1.1)	49.5 (0.4)	51.4 (-1.7)
	6	50.6 (0.8)	50.2 (2.7)	48.8 (-0.9)	51.4 (0.6)
	7	47.4 (-2.2)	46.6 (-2.2)	43.9 (-5.5)	48.8 (-1.8)
	8	45.2 (-2.6)	44.8 (-3.8)	43.9 (-0.5)	45.8 (-3.7)
	9	49.3 (-2.2)	49.4 (-2.1)	47.0 (-5.1)	50.3 (-2.4)
	10	50.1 (-1.6)	50.2 (-1.4)	49.1 (-1.2)	50.8 (-1.9)
	11	49.4 (-1.4)	50.0 (-1.4)	47.5 (-3.8)	50.8 (-1.6)
	12	49.0 (-1.0)	50.1 (0.0)	46.8 (-2.9)	50.7 (-1.7)
2004.	1	48.2 (-1.2)	50.2 (-1.0)	45.5 (-3.4)	49.8 (-1.4)
	2	48.5 (-1.2)	49.9 (-1.4)	45.5 (-3.4)	50.0 (-1.8)
	3	49.4 (-0.4)	50.2 (-1.2)	46.4 (-2.7)	50.9 (-0.8)
	4	47.8 (-4.6)	47.5 (-6.1)	45.9 (-4.4)	48.8 (-5.1)
	5	49.6 (-2.4)	49.9 (-1.4)	46.4 (-6.3)	50.4 (-1.9)
	6	49.6 (-2.0)	49.9 (-0.6)	46.2 (-5.3)	50.4 (-1.9)
	7	47.3 (-0.2)	47.6 (2.1)	42.1 (-4.1)	48.8 (0.0)
	8	47.7 (5.5)	49.3 (10.0)	44.2 (0.7)	48.5 (5.9)
	9	49.1 (-0.4)	50.7 (2.6)	45.6 (-3.0)	49.9 (-0.8)
	10	49.6 (-1.0)	50.4 (0.4)	47.2 (-3.9)	50.1 (-1.4)
	11	48.9 (-1.0)	49.9 (-0.2)	46.8 (-1.5)	50.0 (-1.6)
	12	48.5 (-1.0)	49.7 (-0.8)	45.8 (-2.1)	50.0 (-1.4)
2005.	1	47.0 (-2.5)	49.1 (-2.2)	42.9 (-5.7)	48.6 (-2.4)
	2	47.3 (-2.5)	49.5 (-0.8)	41.7 (-8.4)	49.1 (-1.8)
	3	48.3 (-2.2)	50.0 (-0.4)	44.3 (-4.5)	49.8 (-2.2)
	4	49.1 (2.7)	50.2 (5.7)	46.8 (2.0)	50.0 (2.5)
	5	49.6 (0.0)	50.1 (0.4)	47.3 (1.9)	50.0 (-0.8)
	6	49.7 (0.2)	50.2 (0.6)	47.8 (3.5)	50.1 (-0.6)

주: 1)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에 대한 평균임.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서비스업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1〉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노 동 조합원수
	노동조합수	총연합단체	산별연맹 (노 조)	지 부	분 회	
				(단위노조)		
1963	2,150	1	16	313	1,820	224,420
1964	2,463	1	16	341	2,105	271,579
1965	2,634	1	16	362	2,255	301,523
1966	2,735	1	16	359	2,359	336,974
1967	3,022	1	16	386	2,619	377,576
1968	3,134	1	16	385	2,732	412,906
1969	3,373	1	16	417	2,939	444,783
1970	3,500	1	17	419	3,063	473,259
1971	3,525	1	17	446	3,061	497,221
1972	3,409	1	17	430	2,961	515,292
1973	3,286	1	17	403	2,865	548,054
1974	3,802	1	17	432	3,352	655,785
1975	4,091	1	17	488	3,585	750,235
1976	4,389	1	17	517	3,854	845,630
1977	4,598	1	17	538	4,042	954,727
1978	4,875	1	17	552	4,305	1,054,608
1979	4,965	1	17	553	4,394	1,088,061
1980	2,635	1	16	2,618		948,134
1981	2,158	1	16	2,141		966,738
1982	2,208	1	16	2,191		984,136
1983	2,255	1	16	2,238		1,009,881
1984	2,382	1	16	2,365		1,010,522
1985	2,551	1	16	2,534		1,004,398
1986	2,675	1	16	2,658		1,035,890
1987. 6. 30	2,742	1	16	2,725		1,050,201
1987. 12. 31	4,103	1	16	4,086		1,267,457
1988	6,164	1	21	6,142		1,707,456
1989	7,883	1	21	7,861		1,932,415
1990	7,698	1	21	7,676		1,886,884
1991	7,656	1	21	7,634		1,803,408
1992	7,527	1	21	7,505		1,734,598
1993	7,147	1	26	7,120		1,667,373
1994	7,025	1	26	6,998		1,659,011
1995	6,606	1	26	6,579		1,614,800
1996	6,424	1	26	6,397		1,598,558
1997	5,733	1	40	5,692		1,484,194
1998	5,560	1	42	5,517		1,401,940
1999	5,637	2	43	5,592		1,480,666
2000	5,698	2	44	5,652		1,526,995
2001	6,150	2	43	6,103		1,568,723
2002	6,506	2	41	6,463		1,538,499
2003	6,257	2	43	6,112		1,549,949

주 : 1)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동조합수는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단위노동조합, 지부, 분회 및 연합단체를 모두 합한 수치임.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동단체는 통계에서 제외되었음.

2) 1980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종전의 지부 및 분회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통합되었음.

자료 : 노동부.

〈표 4-2〉 산별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2003년 12월말 현재)

(단위: 개소, 명)

연맹별		조합수	조합원수		
			전체	남자	여자
총계		6,257	1,549,949	1,223,330	326,619
한국노동총연맹	소계	3,951	831,660	664,981	166,679
	한국노동조합총연맹(직할노조)	63	3,891	2,935	956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175	34,457	15,938	18,519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23	5,576	5,283	293
	전국전력노동조합	3	14,421	12,640	1,781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43	20,016	14,587	5,429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58	14,521	12,330	2,191
	전국항공노동조합연맹	59	29,539	28,242	1,297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64	27,833	27,670	16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1	84,083	58,285	25,798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4	6,469	5,556	913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664	87,585	68,185	19,40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653	113,538	88,919	24,619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638	77,599	60,642	16,957
	전국출판노동조합연맹	60	3,448	2,504	94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556	80,797	79,425	1,372
	전국관광노동조합연맹	155	16,680	10,181	6,499
	전국체신노동조합	3	22,535	16,984	5,55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503	95,958	94,939	1,019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16	8,159	6,965	1,194
	전국철도산업노동조합연맹	4	2,170	1,494	676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39	16,657	11,226	5,431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40	1,054	975	79
	전국공공건설노동조합연맹	18	7,087	5,691	1,396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22	16,016	14,502	1,514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11	4,527	1,257	3,270
	전국에너지노동조합연맹	23	2,568	1,720	848
	한국교원노동조합	1	25,060	9,960	15,100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52	9,416	5,946	3,470
민주노동총연맹	소계	1,332	673,880	523,419	150,4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직할노조)	131	11,122	7,017	4,105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214	69,393	46,808	22,585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56	19,491	18,261	1,230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16	42,522	12,616	29,90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217	136,868	119,243	17,625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188	30,883	27,222	3,661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	13	4,150	3,813	337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30	1,291	1,146	145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72	26,493	26,359	134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172	175,730	167,605	8,1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95,000	45,600	49,400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20	2,894	253	2,64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106	33,469	32,063	1,406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86	12,243	6,194	6,049
	전국대학노동조합	8	9,848	6,736	3,112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1	1,633	1,633	0
	한국비정규노동조합	1	850	850	0
	상급단체 미가입	974	44,409	34,930	9,479

주: 1) 조합수에는 지부·분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할노조는 산업별 연맹에는 가입하지 아니하고 노총·민노총 지역본부에만 직접 가입한 노조임.

2) 비가맹노조란 산별연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위노조를 지칭함.

자료: 노동부.

〈표 4-3〉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조 직 률(A)			조 직 률(B)			조직률(C)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1970	20.0	20.1	19.7	12.6	13.1	11.5	-
1971	19.7	20.0	18.7	12.7	12.9	11.9	-
1972	20.4	20.5	20.1	12.9	12.9	12.9	-
1973	20.4	20.4	20.5	13.2	13.0	13.6	-
1974	22.1	21.4	23.9	14.8	14.2	16.2	-
1975	23.0	21.4	27.4	15.8	14.5	19.3	-
1976	23.3	21.7	27.1	16.5	15.2	19.5	-
1977	24.3	22.7	28.5	16.7	15.6	19.5	-
1978	24.0	22.8	26.8	16.9	15.9	21.2	-
1979	23.6	22.8	25.4	16.8	16.2	18.1	-
1980	20.1	18.5	23.6	14.7	13.6	17.0	-
1981	19.6	18.5	21.8	14.6	13.9	16.3	-
1982	19.1	18.6	20.1	14.4	13.8	15.7	-
1983	18.1	17.8	18.5	14.1	14.2	13.9	-
1984	16.8	16.6	17.2	13.2	13.5	12.8	-
1985	15.7	15.9	15.2	12.4	13.1	11.1	16.9
1986	15.5	16.2	14.2	12.3	13.2	10.5	16.8
1987. 6. 30	14.7	15.6	12.9	11.7	13.0	9.5	15.7
1987. 12. 31	17.3	18.5	15.0	13.8	15.3	11.1	18.5
1988	22.0	23.9	18.1	17.8	20.1	13.7	19.5
1989	23.3	25.8	18.5	18.6	21.8	13.4	19.8
1990	21.5	24.4	16.3	17.2	20.5	12.0	18.4
1991	19.1	21.9	13.8	15.4	18.5	10.4	17.2
1992	17.8	21.1	11.8	14.6	17.9	9.1	16.4
1993	16.9	20.2	11.0	14.0	17.2	8.7	15.6
1994	16.1	19.6	9.9	13.3	16.6	7.9	14.5
1995	15.1	18.5	9.2	12.5	15.7	7.3	13.8
1996	14.5	18.2	8.3	12.1	15.5	6.6	13.3
1997	13.3	17.3	6.9	11.1	14.7	5.5	12.2
1998	13.7	17.6	6.8	11.4	15.2	5.3	12.6
1999	14.7	18.4	8.3	11.7	15.4	6.1	11.9
2000	14.3	18.3	7.6	11.4	15.3	5.7	12.0
2001	14.2	18.5	7.1	11.5	15.7	5.4	12.0
2002	13.5	17.9	6.7	10.8	14.9	5.1	11.0
2003	13.0	17.1	6.8	10.8	14.5	5.5	11.0

주: 조직률 A=조합원수÷비농가상시고×100

조직률 B=조합원수÷임금근로자×100

조직률 C=1987년 이전은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88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99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과 국공립교원은 제외)×100

조직률 C는 노동부 집계방식.

1991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 조정에 따라 수치를 보정함.

자료: 노동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4〉 주요 노사분규 지표

	발생건수(건수)	분규참가자수(명)	노동손실일수(일)
1991	234	175,089	3,271,334
1992	235	105,034	1,527,612
1993	144	108,577	1,308,326
1994	121	104,339	1,484,368
1995	88	49,717	392,581
1996	85	79,495	892,987
1997	78	43,991	444,720
1998	129	146,065	1,452,096
1999	198	92,026	1,366,281
2000	250	177,969	1,893,563
2001	235	88,548	1,083,079
2002	322	93,859	1,580,404
2003	320	137,241	1,298,663
2004	462	184,969	1,197,201
2002. 6	207	65,334	764,817
7	234	80,245	1,110,896
8	250	82,841	1,262,183
9	264	86,089	1,380,973
10	279	89,837	1,462,300
11	292	91,664	1,537,918
12	322	93,859	1,580,404
2003. 1	11	1,324	18,445
2	17	2,382	28,041
3	25	5,214	67,195
4	56	9,211	91,460
5	81	13,954	116,564
6	118	58,478	245,832
7	256	123,144	806,964
8	276	124,205	1,084,443
9	290	126,992	1,148,515
10	302	131,363	1,215,811
11	308	131,775	1,270,270
12	320	137,241	1,298,663
2004. 1	7	20,023	32,902
2	10	20,083	54,455
3	18	21,082	67,267
4	27	28,708	88,288
5	75	35,475	138,423
6	337	136,632	408,628
7	402	151,703	876,228
8	413	168,602	1,010,149
9	433	180,940	1,065,694
10	444	182,252	1,114,833
11	453	183,263	1,160,000
12	462	184,969	1,197,201
2005. 1	9	830	15,578
2	13	1,630	34,390
3	23	11,821	66,468
4	31	12,415	107,130
5	41	13,052	126,466
6	73	16,084	161,240
7	213	33,385	253,708
8	238	105,577	434,199

주 : 모든 수치는 당해 연도의 누적치이며, 분규참가자수는 분규발생업체의 발생당시 분규참가 인원수임.
 자료 : 노동부.

〈표 4-5〉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 건)

	전 체	체불임금	임금인상	해 고	단체협약	기 타
1995	88(100.0)	-(0.0)	33(37.5)	1(1.1)	49(55.7)	5(5.7)
1996	85(100.0)	1(1.2)	19(22.4)	-(0.0)	62(72.9)	3(3.5)
1997	78(100.0)	3(3.8)	18(23.1)	-(0.0)	51(65.4)	6(7.7)
1998	129(100.0)	23(17.8)	28(21.7)	3(2.3)	57(44.2)	10(7.8)
1999	198(100.0)	22(11.1)	40(20.2)	-(0.0)	89(44.9)	47(23.7)
2000	250(100.0)	7(2.8)	47(18.8)	2(0.8)	167(66.8)	27(10.8)
2001	235(100.0)	6(2.6)	59(25.1)	-(0.0)	149(63.4)	21(8.9)
2002	322(100.0)	2(0.6)	44(13.7)	8(2.5)	249(77.3)	19(5.9)
2003	320(100.0)	5(1.6)	43(13.4)	-(0.0)	249(77.8)	23(7.2)
2004	462(100.0)	3(0.6)	56(12.1)	-(0.0)	386(83.5)	17(3.7)

주 : ()안은 구성비임.
자료 : 노동부.

〈표 4-6〉 사업체규모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 건, %)

	전 체	100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1995	88(100.0)	21(23.9)	27(30.7)	28(31.8)	12(13.6)
1996	85(100.0)	13(15.3)	25(29.4)	23(27.1)	24(28.2)
1997	78(100.0)	19(24.4)	26(33.3)	19(24.4)	14(17.9)
1998	129(100.0)	27(20.9)	35(27.1)	34(26.4)	33(25.6)
1999	198(100.0)	44(22.2)	55(27.8)	38(19.2)	61(30.8)
2000	250(100.0)	72(28.8)	58(23.2)	65(26.0)	55(22.0)
2001	235(100.0)	83(35.3)	66(28.1)	52(22.1)	34(14.5)
2002	322(100.0)	105(32.6)	110(34.2)	64(19.9)	43(13.4)
2003	320(100.0)	94(29.4)	124(38.8)	61(19.1)	41(12.8)
2004	462(100.0)	187(40.5)	150(32.5)	69(14.9)	56(12.1)

주 : ()안은 구성비임.
자료 : 노동부.

〈표 4-7〉 산업대분류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건, %)

	전 산 업	제 조 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기타 산업
1995	88(100.0)	57(64.8)	8(9.1)	9(10.2)	5(5.7)	9(10.2)
1996	85(100.0)	56(65.9)	8(9.4)	5(5.9)	9(10.6)	7(8.2)
1997	78(100.0)	42(53.8)	14(17.9)	4(5.1)	11(14.1)	7(9.0)
1998	129(100.0)	72(55.8)	37(28.7)	8(6.2)	9(7.0)	3(2.3)
1999	198(100.0)	116(58.6)	26(13.1)	21(10.6)	22(11.1)	13(6.6)
2000	250(100.0)	121(48.4)	25(10.0)	28(11.2)	54(21.6)	22(8.8)
2001	235(100.0)	117(49.8)	38(16.2)	17(7.2)	43(18.3)	20(8.5)
2002	322(100.0)	136(42.2)	72(22.4)	23(7.1)	81(25.2)	10(3.1)
2003	320(100.0)	167(52.2)	66(20.6)	29(9.1)	41(12.8)	17(5.3)
2004	462(100.0)	140(30.3)	165(35.7)	32(6.9)	99(21.4)	26(5.6)

주: ()안은 구성비임.
자료: 노동부.

〈표 4-8〉 해결유형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건, %)

	전 체	노사 직접교섭	노동위원회			노조 자체종결	기 타	미해결
			알선	조정	중재			
1995	88(100.0)	76(86.4)	-(0.0)	-(0.0)	2(2.3)	7(8.0)	1(1.1)	2(2.3)
1996	85(100.0)	79(92.9)	-(0.0)	-(0.0)	2(2.4)	2(2.4)	-(0.0)	2(2.4)
1997	78(100.0)	55(70.5)	-(0.0)	-(0.0)	-(0.0)	20(25.6)	2(2.6)	1(1.3)
1998	129(100.0)	81(62.8)	-(0.0)	-(0.0)	-(0.0)	37(28.7)	3(2.3)	8(6.2)
1999	198(100.0)	147(74.2)	-(0.0)	-(0.0)	-(0.0)	46(23.2)	1(0.5)	4(2.0)
2000	250(100.0)	189(75.6)	-(0.0)	-(0.0)	1(0.4)	37(14.8)	8(3.2)	15(6.0)
2001	235(100.0)	154(65.5)	-(0.0)	-(0.0)	-(0.0)	57(24.3)	12(5.1)	11(4.7)
2002	322(100.0)	235(73.0)	-(0.0)	-(0.0)	-(0.0)	66(20.5)	11(3.4)	10(3.1)
2003	320(100.0)	200(62.5)	-(0.0)	-(0.0)	1(0.3)	93(29.1)	9(2.8)	17(5.3)
2004	462(100.0)	394(85.3)	-(0.0)	-(0.0)	3(0.6)	46(10.0)	4(0.9)	15(3.2)

주: ()안은 구성비임.
미해결은 연도말 현재 분류지속 중인 사업장임.
자료: 노동부.

〈표 4-9〉 주요 임금교섭 동향

(단위 : 개소,%)

	대상업체수	타결업체수	진도율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임금총액 기준(2002년부터)	
1997	5,754	5,281	91.8	4.3	4.2
1998	5,476	5,156	94.2	-2.7	0.0
1999	5,097	4,744	93.1	2.1	2.1
2000	5,116	4,798	93.8	7.6	7.2
2001	5,218	4,857	93.1	6.0	6.0
2002	5,401	4,991	92.4	6.7	-
2003	5,751	5,292	92.0	6.4	-
2004	5,909	5,514	93.3	5.2	-
2002. 1	5,401	74	1.4	7.4	-
2	5,401	154	2.9	7.0	-
3	5,401	420	7.8	5.5	-
4	5,401	630	11.7	6.1	-
5	5,401	1,435	26.6	6.6	-
6	5,401	2,103	38.9	6.7	-
7	5,401	2,887	53.5	6.9	-
8	5,401	3,517	65.1	6.9	-
9	5,401	4,161	77.0	6.9	-
10	5,401	4,377	81.0	6.9	-
11	5,401	4,655	86.2	6.8	-
12	5,401	4,991	92.4	6.7	-
2003. 1	5,751	107	1.9	5.0	-
2	5,751	214	3.7	5.9	-
3	5,751	413	7.2	6.0	-
4	5,751	718	12.5	6.5	-
5	5,751	1,306	22.7	6.7	-
6	5,751	1,856	32.3	6.7	-
7	5,751	2,491	43.3	6.7	-
8	5,751	3,372	58.6	6.6	-
9	5,751	4,503	78.3	6.5	-
10	5,751	4,700	81.7	6.5	-
11	5,751	4,958	86.2	6.5	-
12	5,751	5,292	92.0	6.4	-
2004. 1	5,909	12	0.2	4.4	-
2	5,909	152	2.6	4.7	-
3	5,909	445	7.5	5.1	-
4	5,909	706	11.9	5.3	-
5	5,909	1,117	18.9	5.1	-
6	5,909	1,770	30.0	5.4	-
7	5,909	2,380	40.3	5.5	-
8	5,909	2,901	49.1	5.5	-
9	5,909	3,482	58.9	5.5	-
10	5,909	4,061	68.7	5.5	-
11	5,909	4,587	77.6	5.5	-
12	5,909	5,514	93.3	5.2	-
2005. 1	6,228	13	0.2	2.3	-
2	6,228	107	1.7	4.4	-
3	6,228	344	5.5	4.0	-
4	6,228	554	8.9	4.6	-
5	6,228	1,105	17.7	4.8	-
6	6,228	1,635	26.3	4.7	-
7	6,228	2,250	36.1	4.7	-

자료 : 노동부.

〈표 4-10〉 산업재해 발생추이

(단위: 개소, 명, 건수, %)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건수	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965	289	161,150	9,470	-	-	-	-
1966	594	222,456	13,096	-	-	-	-
1967	1,142	336,159	18,207	-	-	-	-
1968	2,389	488,628	22,959	-	-	-	-
1969	3,696	683,377	31,705	-	-	-	-
1970	5,583	779,053	37,752	35,389	15.50	3.20	48.46
1971	7,799	833,441	44,545	43,090	15.44	3.73	53.45
1972	9,375	987,856	46,603	45,673	15.87	3.67	47.18
1973	13,924	1,166,650	59,367	58,485	15.12	2.84	50.89
1974	17,551	1,353,167	70,142	68,864	15.11	2.30	51.84
1975	21,369	1,836,209	81,641	79,819	16.76	3.29	44.46
1976	28,445	2,269,796	97,716	94,847	16.16	2.46	43.05
1977	38,829	2,646,506	118,011	117,077	16.21	2.72	44.60
1978	49,957	3,105,757	139,242	138,182	16.63	2.74	44.83
1979	55,763	3,607,595	130,307	128,457	13.52	2.89	36.12
1980	63,100	3,752,975	113,375	112,111	11.12	2.58	30.21
1981	59,029	3,456,746	117,938	116,698	12.38	2.72	34.12
1982	54,159	3,464,977	137,816	136,952	14.49	2.80	39.77
1983	60,213	3,941,152	156,972	156,116	14.00	2.66	35.99
1984	64,704	4,384,589	157,800	156,479	13.09	2.58	39.83
1985	66,803	4,495,185	141,809	140,218	11.57	2.68	31.55
1986	70,865	4,749,342	142,088	140,404	10.89	2.79	29.92
1987	83,536	5,356,546	142,596	141,495	9.77	2.90	26.62
1988	101,445	5,743,970	142,329	141,517	9.26	2.52	24.78
1989	118,894	6,687,821	134,127	128,138	7.47	2.19	20.06
1990	129,687	7,542,752	132,893	126,966	6.70	2.30	17.62
1991	146,284	7,922,704	128,169	125,755	6.35	2.34	16.18
1992	154,820	7,058,704	107,435	105,330	6.02	2.89	15.22
1993	163,152	6,942,527	90,288	88,817	5.18	2.73	13.01
1994	172,872	7,273,132	85,948	84,480	4.69	2.93	11.82
1995	186,021	7,893,727	78,034	76,388	3.90	2.82	9.89
1996	210,226	8,156,894	71,548	70,188	3.49	2.19	8.77
1997	227,564	8,236,641	66,770	65,732	3.28	2.32	8.11
1998	215,539	7,582,479	51,514	50,561	2.79	2.29	6.79
1999	249,405	7,441,160	55,405	54,534	2.92	2.11	7.45
2000	706,231	9,485,557	68,976	67,930	2.89	1.88	7.27
2001	909,461	10,581,186	81,434	80,433	3.13	2.12	7.70
2002	1,002,263	10,571,279	81,911	80,755	3.19	2.13	7.75
2003	1,006,549	10,599,345	94,924	92,697	3.68	2.35	8.96
2004	1,039,208	10,473,090	88,874	-	-	-	8.49

주: 1) 도수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2) 강도율 = $\frac{\text{총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3) 천인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

4) 2004년의 수치는 노동부 1차집계 자료로서 재해건수, 도수율 및 강도율은 2005년 9월경에 발표될 예정임.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4-11〉 산업별 천인을 산업재해 발생추이

	전산업	광 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1972	47.18	144.96	34.74	50.60	14.11	59.89
1973	50.89	115.99	41.55	48.27	12.53	69.90
1974	51.84	126.84	43.92	45.49	12.03	70.66
1975	44.46	134.09	41.76	38.45	21.25	59.94
1976	43.05	110.29	41.01	42.75	8.55	57.94
1977	44.60	102.31	44.50	34.98	11.32	72.56
1978	44.83	94.37	47.00	37.17	18.62	58.59
1979	36.12	96.55	36.70	31.38	14.58	45.61
1980	30.21	109.92	29.60	24.18	13.82	45.23
1981	34.12	129.23	31.99	33.72	17.72	43.31
1982	39.77	119.60	36.56	53.51	15.59	42.44
1983	39.83	113.40	38.93	47.47	17.57	36.14
1984	35.99	104.49	35.88	37.92	9.79	36.83
1985	31.55	119.77	31.51	31.41	7.52	31.60
1986	29.92	118.97	30.31	28.09	8.73	30.37
1987	26.62	111.21	27.80	22.74	7.75	28.56
1988	24.78	108.77	26.71	20.64	6.38	23.93
1989	20.06	113.99	23.26	14.18	6.05	22.42
1990	17.62	115.53	18.67	15.38	4.88	19.76
1991	16.18	113.18	16.86	16.10	4.01	18.74
1992	15.22	89.91	14.76	18.97	3.84	17.07
1993	13.01	89.82	13.48	14.38	2.84	15.45
1994	11.82	66.71	12.98	12.27	2.46	14.60
1995	9.89	53.53	11.81	10.06	2.83	12.53
1996	8.77	48.57	11.28	8.06	2.29	12.75
1997	8.11	51.69	10.17	7.19	2.52	12.07
1998	6.79	47.63	8.99	7.33	2.53	7.94
1999	7.45	60.40	11.38	6.05	2.59	7.87
2000	7.27	45.11	12.13	6.06	2.67	8.70
2001	7.70	73.52	12.15	6.88	2.57	8.76
2002	7.75	73.16	12.22	7.19	2.88	7.44
2003	8.96	104.53	14.16	8.61	2.82	8.72
2004	8.49	141.87	12.83	9.40	2.55	7.79

주 : 2004년의 수치는 노동부 1차집계 자료임.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5-1〉 산업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단위: 개소, 명)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1996	43,723	4,330,885	248	12,564	194	18,417	17,976	2,158,958	175	52,811
1997	47,427	4,280,430	241	11,423	185	15,990	18,305	2,057,249	180	53,493
1998	400,000	5,267,658	1108	16,579	784	17,670	97,044	2,224,705	575	53,625
1999	601,394	6,054,479	1,466	18,003	908	17,856	137,659	2,470,361	768	55,170
2000	693,414	6,747,263	1,799	19,705	1,002	17,985	159,200	2,648,856	841	55,440
2001	806,962	6,908,888	2,234	20,567	1,041	16,703	174,510	2,616,162	857	56,545
2002	825,531	7,171,277	2,452	19,667	1,060	16,148	177,064	2,647,553	871	57,148
2003	845,910	7,203,347	2,706	20,391	1,113	16,364	179,713	2,642,385	891	58,697
2004	1,002,638	7,576,856	5,292	26,949	1,281	16,250	195,337	2,733,536	1,333	60,975
2002. 9	803,596	7,085,202	2,394	19,524	1,035	16,208	174,364	2,629,125	871	57,768
10	810,158	7,102,108	2,412	19,716	1,043	16,218	175,358	2,627,182	868	57,318
11	817,460	7,141,024	2,425	19,859	1,055	16,145	176,368	2,635,128	868	57,286
12	825,531	7,171,277	2,452	19,667	1,060	16,148	177,064	2,647,553	870	57,148
2003. 1	824,212	7,158,507	2,450	19,066	1,059	16,107	177,379	2,648,260	882	57,167
2	818,388	7,159,428	2,453	19,369	1,066	16,112	177,055	2,646,988	882	57,493
3	815,022	7,181,595	2,486	19,961	1,067	16,147	177,371	2,646,460	870	57,657
4	809,520	7,215,625	2,511	20,344	1,077	16,179	176,283	2,649,987	876	57,808
5	810,752	7,222,142	2,536	20,618	1,089	16,236	176,145	2,646,065	881	57,824
6	814,244	7,185,525	2,531	20,331	1,078	16,215	176,274	2,633,018	877	57,956
7	813,811	7,160,796	2,562	20,301	1,086	16,341	176,006	2,628,942	871	58,050
8	818,455	7,156,950	2,590	20,429	1,087	16,357	176,355	2,625,852	871	58,406
9	820,612	7,151,033	2,615	20,370	1,093	16,368	176,685	2,621,955	877	58,525
10	832,490	7,158,207	2,648	20,391	1,104	16,315	178,322	2,625,256	890	58,418
11	839,192	7,180,015	2,695	20,564	1,115	16,325	179,198	2,634,020	888	58,505
12	845,910	7,203,347	2,706	20,391	1,113	16,364	179,713	2,642,385	891	58,697
2004. 1	846,735	7,217,414	2,776	20,607	1,134	16,538	179,756	2,646,821	884	58,597
2	848,709	7,293,529	2,909	22,499	1,137	16,669	179,962	2,655,668	896	59,021
3	859,230	7,357,988	3,296	23,670	1,137	16,667	179,776	2,667,087	1,020	59,295
4	870,872	7,418,084	3,656	24,663	1,140	16,712	178,978	2,681,971	1,187	59,421
5	889,094	7,460,088	3,881	24,181	1,144	16,671	178,097	2,688,085	1,345	59,595
6	908,689	7,486,494	4,205	24,796	1,139	16,793	178,358	2,694,667	1,389	59,844
7	922,954	7,489,061	4,562	25,199	1,148	16,773	178,623	2,697,323	1,411	60,310
8	936,690	7,492,299	4,803	25,963	1,148	16,697	179,398	2,700,007	1,427	60,693
9	962,217	7,508,316	5,265	26,421	1,205	16,738	183,967	2,709,152	1,419	61,035
10	1,010,183	7,523,984	5,669	26,963	1,230	16,730	189,583	2,713,010	1,498	61,205
11	1,039,943	7,550,835	6,105	27,646	1,248	16,387	192,188	2,723,940	1,557	60,992
12	1,002,638	7,576,856	5,292	26,949	1,281	16,250	195,337	2,733,536	1,333	60,975
2005. 1	993,772	7,580,688	4,716	26,419	1,278	16,211	196,571	2,740,270	1,217	61,457
2	999,232	7,629,678	4,907	27,345	1,297	16,164	196,552	2,748,254	1,158	61,707
3	1,032,408	7,759,829	5,263	30,172	1,282	16,243	196,277	2,768,242	1,129	62,142
4	1,019,888	7,695,612	5,132	28,499	1,296	16,226	196,783	2,760,506	1,152	61,820
5	1,061,719	7,812,982	5,290	29,118	1,300	16,365	197,104	2,772,440	1,199	62,475
6	1,051,427	7,876,467	5,649	29,973	1,301	16,429	197,196	2,780,008	1,170	62,534

주: 1) 2004년 1월부터 산업분류 바뀜.

2) 고용보험제도 시행초기(1995.7.1)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며, 이후 10인 이상(1998.1.1), 5인 이상(1998.3.1), 1인 이상(1998.10.1)으로 적용확대됨.

3) 기타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

〈표 5-1〉의 계속

(단위: 개소, 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1996		10,101	235,617	2,368	271,405	591	67,061	3,487	486,924	1,699	394,563
1997		12,280	233,198	2,635	278,482	625	66,566	3,566	488,499	1,753	394,015
1998		48,528	364,757	91,968	508,659	30,523	105,923	12,242	529,171	6,971	378,494
1999		68,282	467,226	150,054	637,669	58,604	150,405	16,789	552,243	7,639	385,299
2000		85,996	509,958	166,125	724,676	55,348	167,565	21,102	586,293	7,388	389,633
2001		108,707	529,913	194,997	775,666	70,613	177,902	24,059	578,825	7,619	377,860
2002		128,295	574,347	195,035	831,718	59,288	175,449	24,726	581,865	8,029	386,099
2003		138,982	563,120	196,897	827,384	54,044	159,854	25,569	559,901	8,077	386,536
2004		193,504	576,152	224,123	786,078	61,665	162,020	28,547	569,276	8,756	383,511
2002.	9	120,969	552,008	190,591	812,940	57,794	176,240	24,172	580,680	7,861	384,215
	10	122,381	559,649	191,876	817,066	58,660	176,736	24,361	581,037	7,948	383,565
	11	125,035	569,346	193,315	824,242	58,821	175,465	24,528	581,593	8,001	285,750
	12	128,295	574,347	195,035	831,718	59,288	175,449	24,726	581,865	8,029	386,099
2003.	1	128,138	571,046	194,621	830,890	58,260	174,788	24,748	582,924	8,020	385,249
	2	124,918	567,163	193,789	832,741	56,808	172,529	24,760	581,358	8,021	386,286
	3	121,370	567,049	193,456	832,734	55,885	171,777	24,796	580,599	8,025	387,546
	4	123,498	572,106	190,691	835,156	53,249	171,212	24,677	580,029	7,970	387,255
	5	124,967	573,190	190,533	836,985	52,274	170,495	24,705	578,092	7,978	386,283
	6	126,799	569,109	191,051	828,318	52,669	164,905	24,783	574,778	8,000	385,453
	7	129,423	562,592	189,830	823,770	51,559	160,340	24,739	571,354	7,939	385,320
	8	132,193	560,176	190,528	823,804	51,274	160,385	24,816	568,319	7,932	385,009
	9	132,589	557,206	190,773	820,840	51,262	159,568	24,923	566,216	7,942	386,555
	10	136,497	557,725	193,344	820,266	52,128	159,551	25,194	559,397	7,987	385,907
	11	138,747	559,543	194,780	823,318	52,510	159,598	25,384	559,685	8,024	385,387
	12	138,982	563,120	196,897	827,384	54,044	159,854	25,569	559,901	8,077	386,536
2004.	1	138,360	564,737	183,954	764,730	54,072	160,173	25,645	561,137	8,085	383,941
	2	139,640	569,625	183,458	772,631	53,298	160,792	25,756	562,399	8,040	384,640
	3	150,884	570,856	182,442	776,878	52,035	161,478	25,751	562,708	7,993	384,702
	4	167,522	572,797	179,736	780,977	50,682	162,413	25,642	564,206	7,902	384,249
	5	185,961	574,166	179,916	783,262	50,681	163,590	25,646	564,959	7,830	384,583
	6	198,800	573,100	181,476	783,513	52,428	164,669	25,744	565,506	7,873	385,059
	7	211,324	573,137	181,477	782,559	52,430	164,161	25,794	565,077	7,860	383,194
	8	222,380	571,849	181,979	778,417	52,369	162,024	25,903	566,405	7,858	384,754
	9	228,433	569,957	187,814	778,582	55,373	161,395	26,652	566,354	8,068	385,083
	10	238,641	569,108	204,457	779,829	59,101	162,190	27,553	566,322	8,456	384,562
	11	250,865	570,039	212,282	781,525	60,973	162,811	27,953	567,319	8,595	383,472
	12	193,504	576,152	224,123	786,078	61,665	162,020	28,547	569,276	8,756	383,511
2005.	1	182,473	560,971	224,591	786,587	61,667	160,179	28,663	573,336	8,737	380,397
	2	186,347	561,523	224,611	793,263	61,638	160,465	28,843	575,800	8,723	382,997
	3	218,572	569,709	222,275	808,105	59,735	163,074	28,886	580,459	8,592	380,219
	4	203,571	565,512	224,309	799,825	61,266	161,181	28,926	578,775	8,690	380,419
	5	238,125	572,798	225,282	817,565	61,844	164,397	29,301	584,202	8,727	380,359
	6	226,985	576,360	225,148	832,544	61,482	171,516	29,384	582,328	8,725	380,939

〈표 5-1〉의 계속

(단위: 개소, 명)

	부동산 및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 개인서비스업		기타사업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1996	4,099	395,955	322	12,387	1,063	122,232	1,277	90,372	114	11,273	
1997	4,697	434,448	325	13,287	1,134	127,369	1,364	94,141	134	12,110	
1998	41,218	617,919	20,290	62,335	31,401	217,833	16,982	149,094	365	20,894	
1999	58,947	751,283	33,344	96,408	37,529	247,929	28,896	182,980	509	21,647	
2000	75,022	905,435	43,832	146,150	40,272	270,642	30,922	209,583	4,565	95,342	
2001	87,848	976,486	48,259	161,251	44,911	299,916	36,325	224,315	4,982	96,777	
2002	94,072	1,030,529	47,201	182,011	47,449	325,781	34,809	239,920	5,175	103,042	
2003	100,317	1,071,172	47,660	192,562	50,533	348,777	33,961	247,716	5,447	108,488	
2004	122,474	1,194,574	46,826	207,095	55,550	387,172	50,563	339,512	7,387	33,756	
2002.	9	91,667	1,015,620	46,037	179,191	46,515	321,944	34,201	237,932	5,125	101,807
	10	92,365	1,018,229	46,476	181,464	46,884	323,077	34,368	238,230	5,140	102,621
	11	93,229	1,026,253	46,925	182,749	47,165	324,878	34,545	239,305	5,157	103,025
	12	94,072	1,030,529	47,201	182,011	47,449	325,781	34,809	239,920	5,175	103,042
2003.	1	94,482	1,031,616	47,089	177,047	47,495	325,735	34,403	238,150	5,186	100,462
	2	94,783	1,035,574	46,912	175,558	47,611	327,938	34,122	238,813	5,208	101,506
	3	95,343	1,038,744	47,183	185,869	47,840	331,788	34,076	241,014	5,254	104,250
	4	95,143	1,048,369	46,909	190,327	48,024	336,544	33,314	244,022	5,297	105,285
2004.	5	95,586	1,054,505	46,975	191,766	48,545	340,308	33,237	244,225	5,301	105,551
	6	95,934	1,054,556	46,841	190,056	48,848	341,538	33,246	243,503	5,313	105,789
	7	95,969	1,054,518	46,561	187,431	49,020	343,147	32,897	243,261	5,349	105,429
	8	96,682	1,056,134	46,542	186,893	49,280	344,391	32,934	244,612	5,371	106,183
	9	97,304	1,057,007	46,673	190,161	49,534	343,872	32,967	244,778	5,373	107,597
	10	98,401	1,063,269	47,206	192,333	50,038	345,220	33,327	245,708	5,404	108,451
	11	99,208	1,067,734	47,431	192,516	50,244	346,802	33,516	247,080	5,431	108,938
	12	100,317	1,071,172	47,660	192,562	50,533	348,777	33,961	247,716	5,447	108,488
	1	100,548	1,078,142	47,168	185,450	51,077	350,890	47,426	316,533	5,850	109,118
	2	101,345	1,106,147	46,984	185,195	51,345	354,563	47,456	323,155	6,483	120,525
	3	102,008	1,124,546	46,741	195,592	51,924	361,016	47,318	328,058	6,888	125,435
	4	101,749	1,142,249	46,370	201,698	52,275	366,940	46,890	331,557	7,143	128,231
2005.	5	101,823	1,156,767	46,087	205,574	52,738	372,018	46,670	334,648	7,275	131,989
	6	103,448	1,168,561	46,098	207,363	53,291	376,448	47,122	336,004	7,318	130,171
	7	104,053	1,174,192	45,899	204,083	53,647	379,544	47,179	335,534	7,547	127,975
	8	104,630	1,174,283	45,889	201,722	53,887	380,660	47,344	336,824	7,675	132,001
	9	106,754	1,173,744	46,560	204,256	54,406	382,734	48,394	337,028	7,907	135,837
	10	114,043	1,178,421	47,048	207,165	54,957	384,278	49,916	336,831	8,031	137,370
	11	116,898	1,185,393	47,206	208,074	55,314	386,079	50,707	328,408	8,052	148,750
	12	122,474	1,194,574	46,826	207,095	55,550	387,172	50,563	339,512	7,387	133,756
	1	123,361	1,201,456	46,665	199,881	55,874	386,127	50,601	338,183	7,358	149,214
	2	123,763	1,209,049	46,647	199,819	56,266	388,828	50,805	342,134	7,675	162,330
	3	124,585	1,229,095	47,058	221,822	59,847	412,023	50,790	351,836	8,117	166,688
	4	124,456	1,219,286	47,299	212,486	58,257	400,752	51,037	347,186	7,714	163,157
2005.	5	126,249	1,242,395	47,032	225,140	60,618	418,898	51,339	356,295	8,309	170,535
	6	126,643	1,257,399	46,757	227,640	61,174	424,253	51,363	360,530	8,450	174,014

〈표 5-2〉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단위 :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 득	상 실
1996	1,519,322	1,395,985
1997	1,345,231	1,392,542
1998	2,963,828	1,975,706
1999	3,330,353	2,499,662
2000	3,695,723	2,981,558
2001	3,435,154	3,234,745
2002	3,692,771	3,404,669
2003	3,449,449	3,394,502
2004	3,764,995	3,364,005
2002. 1/4	955,178	873,050
2/4	941,291	848,816
3/4	867,023	844,678
4/4	929,273	838,125
2003. 1/4	941,635	925,890
2/4	911,252	900,868
3/4	804,214	832,783
4/4	792,348	734,961
2004. 1/4	1,011,402	859,906
2/4	993,762	858,013
3/4	876,309	842,534
2003. 1	294,107	305,396
2	280,359	277,536
3	367,169	342,958
4	341,374	304,880
5	294,602	286,199
6	275,276	309,789
7	305,675	327,997
8	253,373	255,305
9	245,166	249,481
10	287,135	278,796
11	261,507	239,025
12	243,706	217,140
2004. 1	253,211	240,080
2	344,590	272,524
3	413,601	347,302
4	357,811	298,822
5	317,828	272,703
6	318,123	286,488
7	328,403	320,855
8	279,683	272,460
9	268,223	249,219
10	300,352	281,374
11	300,518	269,970
12	282,652	252,208
2005. 1	342,843	335,304
2	279,543	226,848
3	450,474	379,335
4	404,128	335,720
5	380,026	320,779
6	375,210	307,536

주 : 1) 취득자는 신규, 경력, 기타 취득자의 합.

신규취득자: 학교, 훈련원 등을 졸업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처음으로 신규 채용된 피보험자.

경력취득자: “신규취득자” 이외의 신규채용(경력직).

기타취득자: 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신분이 바뀐 근로자, 새로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 80시간(주당 18시간) 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등임.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

〈표 5-3〉 고용보험사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사업				
	금액	신청자	인정자	인원	금액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인원	금액	신규수급	인원	금액
1997	12275	50,991	50,774	199,880	58,873	-	-	-	-	-	-
1998	97449	438,465	434,199	588,006	257,670	-	-	-	-	-	-
1999	184304	327,929	325,220	1,029,156	418,184	-	-	-	-	-	-
2000	113809	260,407	258,727	1,379,987	396,433	-	-	-	-	-	-
2001	129233	349,245	347,388	2,154,046	380,222	-	-	-	-	-	-
2002	90052	299,215	297,109	2,313,973	457,717	22,711	22,601	3,763	-	3,087	-
2003	91573	379,600	375,561	2,228,566	440,114	32,133	33,522	6,816	-	10,576	-
2004	-	471,158	467,362	-	-	38,541	41,570	9,304	-	20,803	-
2002. 9	6,160	21,890	21,767	160,133	29,979	2,251	2,228	409	926	377	-
10	8,464	26,769	26,447	185,047	32,954	2,294	2,266	394	997	415	-
11	8,352	26,359	26,027	215,508	32,209	2,222	2,225	424	989	446	-
12	5,024	23,262	22,954	574,707	56,869	2,231	2,251	454	1,045	497	-
2003. 1	7,861	32,796	32,484	202,576	28,967	2,433	2,469	433	1,072	516	-
2	6,731	27,863	27,569	166,251	60,696	2,165	2,219	435	1,038	553	-
3	5,970	30,693	30,383	265,354	32,206	2,495	2,574	520	1,199	712	-
4	7,375	30,931	30,582	217,954	32,129	2,427	2,478	535	1,225	762	-
5	8,223	30,523	29,963	175,974	32,414	2,791	2,876	547	1,237	738	-
6	4,874	30,395	30,078	223,774	27,563	3,123	3,256	575	1,384	850	-
7	8,339	36,711	36,338	206,442	33,255	3,116	3,270	695	1,629	1,011	-
8	9,840	30,800	30,487	210,073	62,869	2,636	2,768	583	1,530	935	-
9	7,428	27,874	27,568	201,230	31,234	2,596	2,759	591	1,644	1,039	-
10	8,757	35,976	35,686	170,583	27,268	2,702	2,842	642	1,797	1,185	-
11	8,736	32,692	32,377	179,328	27,243	2,655	2,822	592	1,648	1,098	-
12	7,443	32,346	32,046	261,472	50,584	2,994	3,189	668	1,845	1,178	-
2004. 1	6,618	36,737	36,486	144,309	19,674	2,625	2,801	519	1,675	1,053	-
2	10,067	40,252	39,917	207,285	26,680	3,189	3,435	591	1,749	1,149	-
3	6,469	42,646	42,247	220,649	26,143	3,262	3,458	779	2,016	1,433	-
4	7,379	38,857	38,451	182,010	29,511	2,954	3,128	735	1,922	1,499	-
5	8,613	36,613	36,297	297,161	36,389	3,392	3,679	782	2,027	1,596	-
6	6,999	37,585	37,270	235,509	38,440	3,776	4,006	884	2,283	1,819	-
7	7,566	42,864	42,556	165,070	31,700	3,209	3,464	782	2,229	1,660	-
8	8,661	37,778	37,487	222,542	32,290	3,133	3,398	736	2,375	1,860	-
9	7,690	34,832	34,550	207,158	30,933	2,839	3,088	844	2,463	1,921	-
10	8,064	37,304	37,001	164,117	28,879	3,008	3,271	803	2,717	2,152	-
11	8,983	40,773	40,488	266,992	37,113	3,431	3,761	870	2,840	2,157	-
12	9,898	44,917	44,612	265,917	56,313	3,723	4,081	979	3,143	2,504	-
2005. 1	8,461	60,357	60,039	185,749	25,602	3,274	3,572	800	2,948	2,189	-
2	9,368	39,879	39,640	210,286	25,068	2,842	3,152	706	2,698	1,960	-
3	9,693	56,169	55,908	222,380	27,379	3,744	4,097	946	3,224	2,573	-
4	11,866	49,656	49,390	182,292	34,087	3,189	3,514	836	2,907	2,185	-
5	17,375	48,825	48,515	265,773	37,601	3,751	4,143	1,013	3,269	2,452	-
6	13,471	44,320	44,046	237,073	39,358	3,814	4,205	917	3,299	2,330	-

주: 1) 실업급여사업관련 시계열 자료에는 2004년 1월부터 일용직이 포함.

2) 2004년 통계 완전히 수집되지 않음.

3) 연도별 실적은 매년 말일 기준의 실질지원금액이므로 사업에 따라 12개월간의 월별 지원금액을 합산한 수치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출력조건, 기준시점 등의 사유로 인해 타기관 수치와 다를 수 있음.

4) 고용안정사업의 시계열을 일치시키기 위해 위의 표에서는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서 고령자·여성재 고용장려금을 빼서 따로 보고하였음.

5) 고용안정사업의 2001년의 경우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175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6) 고용안정사업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 및 지원요건이 변경됨.

7) 모성보호급여사업의 금액은 신규수급인원을 포함한 해당기간의 총수급인원에 대한 지급금액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